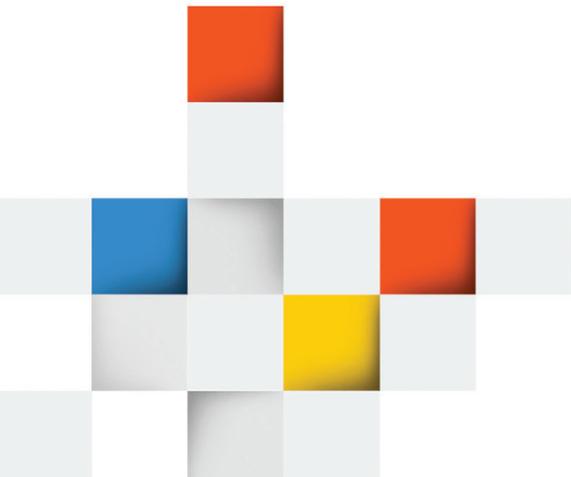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4 2014
<http://sri.kostat.go.kr>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4
<http://sri.kostat.go.kr> 2014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을 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 국민 생활의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에 이어 일곱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는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총 11개 영역의 주요 변화와 주제(issues)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주제는 우리 사회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쟁점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가용한 사회지표와 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통계를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풀이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향(trends) 보고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시계열 비교는 물론 국제비교와 인구특성별 집단 비교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 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수준에 와있으며, 우리 삶의 질적 수준과 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는 우리 사회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각 영역별 원고 작성을 맡은 집필자 여러분들과 편집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통계개발원장

박경세

목 차

I	인구 Population	
01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20
02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계봉오 국민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35
03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이희연 서울대학교	43
04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진광희 충남대학교	52
II	가족과 가구 Family & Household	
01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서울대학교	62
02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한경혜 서울대학교	73
03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한경혜 서울대학교	80
04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7
III	건강 Health	
01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96
02	흡연을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조홍준 울산대학교	107
03	의약품 사용양상 변진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115
04	사회자본과 건강 조병희 서울대학교	122
IV	교육 Education	
01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132
0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김경근 고려대학교	143
03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1
V	노동 Labor	
01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160
02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9
03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176



VI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01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184
	02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195
	03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홍석철 서강대학교	202
VII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01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212
	02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이훈 한양대학교, 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2
	03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229
VIII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01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손경환 안양대학교	240
	02 전월세시장의 변화 정의철 건국대학교	250
	03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박천규 국토연구원	258
	04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김회경 동아대학교	267
IX	환경 Environment	
	01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72
	02 미세먼지와 건강 권호장 단국대학교	281
	03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88
X	안전 Safety	
	01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이재열 서울대학교	300
	02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9
	03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316
XI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01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324
	02 노년층의 사회통합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337
	03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44
부록	용어해설	355

표 목차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0	22
표 I-2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0-2015	26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0	28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3	30
표 I-5	이동인구와 이동률, 1966-2010	44
표 I-6	시도별 출생지 거주비율, 2010	44
표 I-7	교육수준별 이동인구와 이동률, 2010	46
표 I-8	수도권 순이동인구, 1971-2013	46
표 I-9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에 따른 인구이동 유형화	48
표 I-10	남한과 북한의 추계인구, 1950-2015	53
표 I-11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요인, 1950-2010	54
표 I-12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북한 인구의 구성비, 1950-2015	57
표 I-13	남북한 인구의 부양비 구조, 1950-2015	58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가구원수와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63
표 II-2	한부모가구 비율과 가구주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1990-2010	64
표 II-3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혼인 비율, 1990-2013	66
표 II-4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2002-2013	67
표 II-5	영유아가구의 낮 시간 주된 자녀 보육자, 2012	69
표 II-6	영유아가구 부모의 평일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2012	70
표 II-7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주체, 2002-2012	72
표 II-8	취업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일-가족 우선성, 2013	74
표 II-9	미취학 자녀 가정의 이상적인 가정-직장생활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 2012	76
표 II-10	주요 국가의 미취학 자녀 가정의 이상적인 가정-직장생활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 2012	77
표 II-11	사회경제적 특성별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2013	79
표 II-12	임금근로자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일-가족양립 지원제도 인지도, 2013	84
표 II-13	사업체 규모 및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평균사용일수별 사업체 비율, 2013	86
표 II-14	주요 가족문제에 대한 부부간 의사결정방식, 2010	89
표 II-15	성인 남녀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 가사노동시간, 2012	90
표 II-16	주요 국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2012	91
표 II-17	기혼 남성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가사분담 실태, 2012	92
표 II-18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수와 평균사용일수, 2001-2013	93
표 III-1	2주간 유병률, 2003-2012	98
표 III-2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3	100
표 III-3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12	101
표 III-4	비만율과 신체활동 및 걷기 실천율, 2005-2012	102
표 III-5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2	102

표 III-6	의료기관수, 1995-2012	103
표 III-7	예방서비스 이용률, 2005-2012	104
표 III-8	자가보고 흡연율과 코티닌 측정 흡연율, 2008	109
표 III-9	성인 남녀의 혼인상태별 흡연율, 1999-2012	110
표 III-10	성인 남녀의 교육수준별 흡연율, 1999-2012	110
표 III-11	성인 남녀의 직업별 흡연율, 1999-2012	111
표 III-12	성인 남녀의 소득수준별 흡연율, 2010, 2012	111
표 III-13	성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흡연율 교차비, 2012	112
표 III-14	효능군별 의약품 사용 금액과 비율(상위 10위), 2010, 2013	119
표 III-15	가구소득수준별 가구당 연간 일반의약품 구매비용, 2008-2011	120
표 III-16	사회경제적 특성별 일반의약품 사용률, 2011	121
표 III-17	단체/모임 활동과 건강, 2012	126
표 III-18	사회적 연결망과 주관적 건강상태, 2009	127
표 III-19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2012	128
표 IV-1	OECD 학업성취도(PISA) 점수와 순위, 2003-2012	140
표 IV-2	지역규모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0-2013	141
표 IV-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0-2013	142
표 IV-4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2013	144
표 IV-5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2012	149
표 V-1	성 및 연령별 고용률, 1990-2013	161
표 V-2	성별 비임금근로자 비율, 1990-2013	163
표 V-3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구성, 2005-2013	164
표 V-4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별 구성비율, 2003-2013	165
표 V-5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평균연령, 2003-2013	165
표 V-6	최저임금과 임금근로자의 성 및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 2003-2013	167
표 V-7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 2005-2013	168
표 V-8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2000-2013	168
표 V-9	청년층의 연령별 실업자수와 취업준비생수, 2012	178
표 V-10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별 취업시험 준비생 비율과 공공부문 시험준비자 비율, 2012	179
표 V-11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이행비율, 2009, 2012	179
표 V-12	대졸 취업 이행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율, 2009, 2012	180
표 V-13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성, 대학 및 전공계열, 가족배경적 특성, 2009	181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06-2013	186
표 VI-2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분해, 2010-2013	197
표 VI-3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2011	203
표 VI-4	실질 의료비 지출 추계, 1985-2012	205
표 VI-5	연령별 의료이용 및 진료비, 2010	206
표 VI-6	연령별 인구 비율, 1990, 2010	207

표 VI-7	의료이용 및 진료비 중 인구고령화 기여도 추정, 2010	207
표 VI-8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예측, 2020-2040	209
표 VII-1	문화예술시설수, 2005-2012	213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09-2012	213
표 VII-3	국내여행 총량 및 해외여행 출국자수, 2010, 2013	223
표 VII-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국민 1인당 여행횟수 및 여행일수, 2010, 2013	224
표 VII-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국민 1인당 연간 여행지출액, 2010, 2013	225
표 VII-6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연령별 자주 이용하는 앱 순위, 2013	235
표 VIII-1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980-2013	241
표 VIII-2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 주택수, 1980-2013	242
표 VIII-3	주택유형별 건설 주택수, 1995-2013	243
표 VIII-4	자동차 등록대수, 1990-2013	247
표 VIII-5	도로연장과 도로포장률, 1980-2013	248
표 VIII-6	지역별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배율 및 전세 주거비 비율, 2010-2013	255
표 VIII-7	보증부월세 보증금 비율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13	256
표 VIII-8	가구주 연령별 거주 주택유형, 2012	259
표 VIII-9	청년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저축가구 비율과 월평균 저축액, 2010	260
표 VIII-10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과 평균가구원수, 2006, 2012	260
표 VIII-11	가구주 연령별 2년내 이주 희망 가구 비율과 이주 희망 주택점유형태, 2012	261
표 VIII-12	가구주 연령별 주거환경 불만족 가구 비율, 2012	262
표 VIII-13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구매력, 2013	263
표 VIII-14	가구주 연령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출처, 2012	264
표 VIII-15	가구주 연령별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의 친인척 이전금액과 비율, 2012	264
표 VIII-16	미혼남녀의 연령별 결혼지원 중 주택지원에 대한 선호 비율, 2012	265
표 VIII-17	가구주 연령별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필요한 주거지원정책, 2010	266
표 IX-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0-2011	273
표 IX-2	하수,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1990-2011	274
표 IX-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1995-2012	274
표 IX-4	화학물질 배출량, 1999-2012	275
표 IX-5	1차 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 1990-2012	275
표 IX-6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1995-2012	276
표 IX-7	하천 좋은물 달성률, 2013	277
표 IX-8	거주지역 환경오염 상태에 대한 체감, 2010, 2012	278
표 IX-9	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2	278
표 IX-10	환경예산, 1995-2012	279
표 IX-11	지역별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2012	280
표 IX-12	환경보호지출, 2001-2011	280
표 IX-13	지역별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PM ₁₀) 배출량, 2010	282



표 IX-14	주요 국가의 초미세먼지(PM _{2.5}) 오염수준, 2014	285
표 IX-15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유형	286
표 IX-16	세계 대기오염 사망자의 사망원인 구성, 2012	287
표 IX-17	주요 국가의 대기오염 사망자수, 2008	287
표 IX-18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변화	289
표 IX-19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290
표 IX-20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병환자수 전망	291
표 IX-21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초과사망자수 전망	291
표 IX-22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지점별 홍수량 변동계수 전망	292
표 IX-23	기후변화에 따른 비 수량성 전망	293
표 IX-24	기후변화에 따른 고령지 배추 및 난지형 마늘 재배적지 변화 전망	293
표 IX-25	기후변화에 따른 후박나무 및 구상나무 서식지(잠재적 생육지) 변화 전망	296
표 X-1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사망실종자수 및 이재민수, 1995-2013	301
표 X-2	최근 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건수와 인명 및 재산 피해, 2004-2013	302
표 X-3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970-2012	304
표 X-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2	308
표 X-5	범죄유형별 피해자수, 피해건수 및 피해율, 2008-2012	310
표 X-6	범죄유형별 피해신고율, 2008-2012	312
표 X-7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 2008-2012	312
표 X-8	가구범죄 취약요인별 범죄피해율, 2012	315
표 X-9	개인범죄 취약요인별 범죄피해율, 2012	315
표 X-10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1950-2006	317
표 X-11	대형 재난건수, 1964-2013	318
표 X-12	인적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995-2014	319
표 XI-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참여율, 1999-2013	326
표 XI-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후원활동참여율, 2006-2013	327
표 XI-3	가구주의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2013	331
표 XI-4	가구주의 주관적 계층별 본인 및 자녀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2013	332
표 XI-5	연령별 취업자 비율, 2003-2013	338
표 XI-6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2003-2013	339
표 XI-7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03-2013	340
표 XI-8	연령별 사회적 지원 수혜율, 2011, 2013	341
표 XI-9	노년층의 성별 사회적 지원 수혜율, 2011, 2013	341
표 XI-10	노년층의 연령, 성,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별 사회통합도, 2013	342
표 XI-11	전국 자살률과 자살률 지역편차, 2004-2013	345
표 XI-12	전국 성별 자살률과 자살률 지역편차 및 성비, 2004-2013	347
표 XI-13	자살률 상하위 30개 시군구, 2008-2012년 합산	352

그림 목차

그림 I-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3	24
그림 I-2	어머니의 연령별 출산율, 1993-2013	25
그림 I-3	시군구별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 2013	29
그림 I-4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배우자 수, 1990-2013	32
그림 I-5	남한과 북한 인구의 성장추세, 1950-2015	33
그림 I-6	합계출산율과 고용률, 1990-2013	36
그림 I-7	연령별 출산율과 고용률, 1993-2013	37
그림 I-8	경제위기 전후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력의 이론적 관계	38
그림 I-9	부부의 교육수준별 경제위기 전후 총출생자녀수 비교	39
그림 I-10	주요국의 합계출산율과 실업률, 2001-2011	40
그림 I-11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제위기 전후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총출생자녀수 비교	41
그림 I-12	성 및 연령별 인구이동률, 2013	45
그림 I-13	이동건수의 이동인원별 구성비율과 평균이동인원수, 2001-2013	45
그림 I-14	시군구별 인구 전입량과 전출량의 관계, 2013	47
그림 I-15	시군구별 인구순이동률, 2013	47
그림 I-16	김포시의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 2013	49
그림 I-17	구리시의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 2013	49
그림 I-18	상주시의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 2013	50
그림 I-19	양산시 전입 및 전출 인구의 주요 전출지와 전입지, 2013	50
그림 I-20	서울시 전입 및 전출 인구의 주요 전출지와 전입지, 2013	51
그림 I-21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1950-2015	53
그림 I-22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요인 차이(남한-북한), 1950-2010	56
그림 I-23	남북한 인구의 성비, 1950-2015	56
그림 II-1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율, 2010-2035	63
그림 II-2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63
그림 II-3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3	65
그림 II-4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2	66
그림 II-5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12	68
그림 II-6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980-2013	69
그림 II-7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2-2012	71
그림 II-8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2002-2012	71
그림 II-9	여성취업에 대한 의견, 1998-2013	75
그림 II-10	여성의 바람직한 취업시기에 대한 의견, 1998-2013	75
그림 II-11	주요 국가의 미취학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의견, 2012	78
그림 II-12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1998-2013	78
그림 II-13	취업자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일-가족 영역간 부정적 전이 경험률, 2012	81
그림 II-14	주요 국가 취업자의 일-가족 영역간 부정적 전이 경험률, 2012	82

그림 II-15	가사영역별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 2012	83
그림 II-16	주요 국가의 가사영역별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 2012	83
그림 II-17	사업체의 일-가족양립 지원제도별 도입률, 2012, 2013	85
그림 II-18	남성의 연령별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 2012	88
그림 II-19	주요 국가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 2012	88
그림 II-20	주요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2012	89
그림 II-21	기혼자의 성별 부부관계 만족도와 자녀관계 만족도, 2012	90
그림 II-22	기혼 남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12	92
그림 II-23	주요 국가의 부부간 바람직한 육아유급휴가 사용방식에 대한 의견, 2012	93
그림 III-1	평균수명, 1970-2012	97
그림 III-2	OECD 국가의 평균수명, 2012	97
그림 III-3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1998-2012	99
그림 III-4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1998-2012	99
그림 III-5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1990-2013	104
그림 III-6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2012	105
그림 III-7	OECD 국가의 노인 독감 예방접종률, 2011	106
그림 III-8	주요 국가의 병원서비스 만족도, 2012	106
그림 III-9	성인 남녀의 흡연율, 1999-2012	108
그림 III-10	성인 남성의 연령별 흡연율, 1999-2012	108
그림 III-11	성인 여성의 연령별 흡연율, 1999-2012	109
그림 III-12	청소년의 학교급별 흡연율, 2005-2013	113
그림 III-13	OECD 국가의 담배규제정책 통합지수, 2010	114
그림 III-14	의약품 생산품목수와 생산액, 2001-2012	116
그림 III-15	OECD 국가의 1인당 약품비 지출과 GDP 대비 비율, 2011	116
그림 III-16	OECD 국가의 1인당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 2009-2011	117
그림 III-17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과 약품비 증가율, 2002-2013	117
그림 III-18	연령별 건강보험 약품비와 1인당 약품비, 2013	118
그림 III-19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2004-2013	118
그림 III-20	병원급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2002-2013	119
그림 III-21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1일 주요 만성질환 의약품 사용량, 2011	120
그림 III-22	일반신뢰와 건강, 2012	124
그림 III-23	정부신뢰와 건강, 2012	125
그림 III-24	기부참여와 건강, 2012	128
그림 III-25	자원봉사참여와 건강, 2012	128
그림 IV-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3	133
그림 IV-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3	134
그림 IV-3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7-2013	135
그림 IV-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7-2013	136
그림 IV-5	소득수준별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2010, 2012	136

그림 IV-6	학교급별 학교 교육내용 만족도, 2008-2012	138
그림 IV-7	학교급별 학교 교육방법 만족도, 2008-2012	139
그림 IV-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00-2013	139
그림 IV-9	다문화가정 학생수, 2009-2013	144
그림 IV-10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출신국적별 구성비율, 2013	145
그림 IV-11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 2012, 2013	146
그림 IV-1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학교공부에서 가장 큰 어려움, 2012	147
그림 IV-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2011-2013	148
그림 IV-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슬픔 또는 절망감 경험 빈도, 2012	149
그림 IV-15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적 차별경험률, 2012	150
그림 IV-16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2012	150
그림 IV-17	학교급별 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 2003-2011	153
그림 IV-18	학교급별 학생의 학습동기 수준, 2003-2011	153
그림 IV-19	부모 교육수준별 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 2003-2011	154
그림 IV-20	부모 교육수준별 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 2003-2011	155
그림 IV-21	부모 교육수준별 학생의 외재적 학습동기 수준, 2003-2011	156
그림 IV-22	OECD 주요국 학생의 부모 교육수준별 수학교과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 2003, 2012	157
그림 V-1	OECD 주요국의 고용률, 1990-2013	161
그림 V-2	OECD 주요국의 실업률, 1990-2013	162
그림 V-3	유휴청년층(NEET) 비율, 2003-2013	162
그림 V-4	취업자의 성별 종사상지위 구성, 1985-2013	163
그림 V-5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비율, 1990-2013	164
그림 V-6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별 구성비율, 2003, 2013	166
그림 V-7	저임금 근로자 비율, 1990-2012	166
그림 V-8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1990-2013	167
그림 V-9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수, 1990-2012	168
그림 V-10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990-2013	170
그림 V-11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과 고용률, 2013	170
그림 V-12	취업자의 성별 주당 근로시간, 1980-2013	170
그림 V-13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률, 2005-2013	171
그림 V-14	취업자의 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13	172
그림 V-15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주당 근로시간, 2013	172
그림 V-16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장시간근로자 비율, 2013	172
그림 V-17	업종별 임금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률, 2013	173
그림 V-18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률, 2013	173
그림 V-19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과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관계, 2013	175
그림 V-20	한국 사회 일-생활 양립의 도전 지표들	175
그림 V-21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률, 2000-2013	177
그림 V-22	청년층 취업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2000-2013	177
그림 V-23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생의 수와 비율, 2006-2013	178



그림 V-24	대출 상용직 취업 이행자의 월평균임금, 2009, 2012	180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2006-2013	185
그림 VI-2	소득 5분위 비율, 2006-2013	186
그림 VI-3	가구주 연령별 소득비, 2006-2013	187
그림 VI-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06-2013	187
그림 VI-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6-2013	188
그림 VI-6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 2006-2013	189
그림 VI-7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율, 2006-2013	189
그림 VI-8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3	189
그림 VI-9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구성, 2013	190
그림 VI-10	가구 소득분위별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 2006-2013	190
그림 VI-11	여성배우자의 직업별 구성비율, 2006-2013	191
그림 VI-12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3	191
그림 VI-13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3	192
그림 VI-14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성, 2013	192
그림 VI-15	가구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비율, 2006-2013	193
그림 VI-16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2006-2013	193
그림 VI-17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02-2013	196
그림 VI-18	OECD 국가의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3	196
그림 VI-19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 2010-2013	198
그림 VI-20	소득분위별 부채보유가구 비율, 2010-2013	198
그림 VI-21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율, 2010-2013	199
그림 VI-22	가구주 연령별 부채보유가구 비율, 2010-2013	199
그림 VI-23	가계부채의 용도별 구성비율, 2010-2013	200
그림 VI-24	가구주 연령별 부채용도, 2010-2013년 평균	200
그림 VI-25	한계가구 비율, 2010-2013	201
그림 VI-26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증가율, 1990-2011	203
그림 VI-27	인구고령화와 국민의료비 증가의 관계, 1990-2011	204
그림 VI-28	가구주 연령별 의료비 지출, 1990-2013	208
그림 VII-1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액, 2003-2013	214
그림 VII-2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03-2012	214
그림 VII-3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3	215
그림 VII-4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0-2013	216
그림 VII-5	창작발표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률과 문화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율, 2008-2012	217
그림 VII-6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3	218
그림 VII-7	스포츠 관람률, 2000-2013	219
그림 VII-8	신문 읽는 비율, 2000-2013	220
그림 VII-9	여가만족도, 1990-2013	220
그림 VII-10	소득분위별 여행 경험률, 2010, 2013	226

그림 VII-11	소득분위별 국민 1인당 연간 여행횟수, 2010, 2013	226
그림 VII-12	소득분위별 국민 1인당 연간 여행일수, 2010, 2013	227
그림 VII-13	소득분위별 국민 1인당 연간 여행지출액, 2010, 2013	227
그림 VII-14	소득분위별 여행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여가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2013	228
그림 VII-15	스마트폰 이용률, 2010-2013	230
그림 VII-16	성 및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 2013	230
그림 VII-17	지역별 스마트폰 이용률, 2013	231
그림 VII-18	연령별 TV 및 스마트폰 이용시간, 2013	231
그림 VII-19	스마트미디어 이용여부별 매체선호도, 2013	232
그림 VII-20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성별 매체선호도, 2013	233
그림 VII-21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연령별 매체선호도, 2013	233
그림 VII-22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성별 자주 이용하는 앱, 2013	234
그림 VII-23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연령별 삶의 만족도, 2013	236
그림 VII-24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 2013	236
그림 VIII-1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2001-2013	244
그림 VIII-2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구성비율, 1990-2010	245
그림 VIII-3	임차가구의 임차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251
그림 VIII-4	임차가구의 주택유형 및 임차형태별 구성비율, 2000, 2010	251
그림 VIII-5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차가구의 임차형태별 구성 비율, 1990-2010	252
그림 VIII-6	보증부월세 계약 비율, 2011, 5-2014, 5	252
그림 VIII-7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화율, 2010, 1-2014, 5	253
그림 VIII-8	지역별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 2012, 5-2014, 5	254
그림 VIII-9	지역별 전세수급지수, 2010, 1-2014, 5	254
그림 VIII-10	지역별 월세가격지수, 2010, 6-2014, 5	255
그림 VIII-11	청년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구성비율, 1985-2010	260
그림 VIII-12	임차에서 자가 전환 가구 비율, 2008-2012	261
그림 VIII-13	가구주 연령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2	262
그림 VIII-14	가구주 연령별 구매 가능 주택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2012	263
그림 VIII-15	가구주 연령별 주택보유의식, 2012	265
그림 VIII-16	자동차 등록대수와 증가율, 2002-2013	268
그림 VIII-17	승용차 배기량별 구성비율, 2002-2013	268
그림 VIII-18	자동차 배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 2014	269
그림 VIII-19	수송 및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지출, 2008-2012	270
그림 VIII-20	대중교통수단별 재정보조금, 2006-2011	270
그림 IX-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1	273
그림 IX-2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2	275
그림 IX-3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1995-2012	276
그림 IX-4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1990-2012	277
그림 IX-5	미세먼지(PM ₁₀)와 초미세먼지(PM _{2.5})의 크기 비교	282

그림 IX-6	서울시 미세먼지(PM ₁₀) 및 초미세먼지(PM _{2.5}) 농도, 2001-2012	283
그림 IX-7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₁₀) 농도, 2012	283
그림 IX-8	미세먼지(PM ₁₀) 대기환경기준치별 서울시 해당 일수, 2001-2012	284
그림 IX-9	월별 서울시 미세먼지(PM ₁₀) 및 초미세먼지(PM _{2.5}) 농도, 2012	284
그림 IX-10	세계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₁₀) 및 초미세먼지(PM _{2.5}) 농도, 2012	284
그림 IX-11	황사 관측일수, 2001-2012	285
그림 IX-12	황사 관측일수 및 특보발령일수, 2006-2012	286
그림 IX-13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계 및 인간계 영향	289
그림 IX-14	한반도 아열대 기후구 변화 전망	290
그림 IX-15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유출량 및 부족량 전망	292
그림 IX-16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배, 포도의 재배적지 변화 전망	293
그림 IX-17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과수의 작물재배선 변화 전망	294
그림 IX-18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폭과 해안침수 가능지역 전망	294
그림 IX-19	기후변화에 따른 표층수온 분포 및 고등어 어장 분포 변화 전망	295
그림 IX-20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서식지 변화 전망	295
그림 IX-21	기후변화에 따른 나비 서식지 변화 전망	296
그림 IX-22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지구 연평균 기온 변화 전망과 적응의 중요성	296
그림 IX-23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체계 및 현황	296
그림 X-1	화재 발생건수, 1985-2013	302
그림 X-2	화재 사상자수와 재산피해액, 1985-2013	303
그림 X-3	산업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 1998-2013	303
그림 X-4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2-2012	305
그림 X-5	주요 국가의 살인범죄율, 1995, 2010	305
그림 X-6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율, 2010	305
그림 X-7	범죄검거율, 2001-2012	306
그림 X-8	범죄피해율, 2008, 2010	307
그림 X-9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970-2013	307
그림 X-10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97-2013	307
그림 X-11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08-2012	313
그림 X-12	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2008-2012	313
그림 X-13	재산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액, 2008-2012	314
그림 X-14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2008-2012	314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4	325
그림 XI-2	연령별 자원봉사참여율, 1999-2013	327
그림 XI-3	주요 국가의 기부활동참여율, 2012	328
그림 XI-4	사회적 지지 수혜율, 2009, 2013	328
그림 XI-5	대인신뢰도, 2004-2012	329
그림 XI-6	주요 국가의 대인신뢰도, 2010	330
그림 XI-7	대상별 대인신뢰도, 2013	330

그림 XI-8	기관신뢰도, 2003-2012	331
그림 XI-9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12	331
그림 XI-10	집단 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3	333
그림 XI-11	부패인식지수, 2003-2013	333
그림 XI-12	영역별 사회공정성에 대한 평가, 2013	334
그림 XI-13	장애인, 이민자 및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성 수준, 2013	334
그림 XI-14	주요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관용성 수준, 2012	335
그림 XI-15	GDP 대비 공공부문 복지지출 비율, 2000-2012	335
그림 XI-16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공공부문 복지지출 비율, 2012	335
그림 XI-1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수급률, 2003-2012	336
그림 XI-18	공적연금 수급률, 2000-2012	336
그림 XI-19	OECD 국가의 노년층 고용률, 2013	338
그림 XI-20	광역시도별 자살률과 증감비, 2004-2013	346
그림 XI-21	광역시도의 성별 자살률과 증감비, 2004-2013	348
그림 XI-22	광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자살률, 2004-2013	350
그림 XI-23	광역시도별 노인인구 자살률, 2004-2013	350
그림 XI-24	시군구별 자살률, 2000-2012	351
그림 XI-25	도시와 농촌의 자살률, 2005-2012	352
그림 XI-26	도시와 농촌 자살자의 연령분포, 2010	353

머 리 말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청이 국민의 삶의 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2008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연차적 보고서이다. 국민의 삶의 질 상황은 계속해서 변한다. 따라서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 상황과 변화를 잘 파악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 이 연차적 보고서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 상황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발간하는 통계청의 주요 간행물 중의 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을 비롯한 주요 국가통계 산출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은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 사회의 주요 영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해당 영역의 주요 동향을 개관하는 논문 1편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이슈들을 설명해 주는 주제논문 2-3편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동향논문들은 해당 영역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주제논문들은 선정된 이슈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에 수록되는 주요동향논문들의 구성과 내용은 지난 보고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 동향이 크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제논문들의 이슈들과 집필진은 예년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이전 보고서까지는 동일한 이슈를 반복해서 다룬 주제논문들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게재된 주제논문들 가운데 몇 편은 이전에 다뤘던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루는 논문들이 있는데, 이는 주제논문의 선정 대상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간의 변화를 다시 중요 이슈로 삼을 수 있는 것들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머리말에 한 가지 더 특기할 점은 이번 보고서를 펴내는 데 지난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던 연구자 16분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해 논문 작성 계획 단계부터 편집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 영역별로 주요동향논문을 집필하고 주제논문들을 검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 한양대의 김두섭 교수(인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한경혜 교수(가족과 가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조병희 교수(건강 영역 담당), 고려대의 김경근 교수(교육 영역 담당),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연구위원(노동 영역 담당), 서강대의 박정수 교수(소득과 소비 영역 담당), 서울시립대의 서우석 교수(문화와 여가 영역 담당), 안양대의 손경환 교수(주거와 교통 영역 담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종호 연구위원(환경 영역 담당), 서울대의 이재열 교수(안전 영역 담당), 그리고 연세대의 한준 교수(사회통합 영역 담당)이다. 이 보고서의 편집은 서울대의 김석호 교수, 통계개발원의 이희길 사무관과 심수진 주무관, 그리고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김대훈 실장과 이상은 팀장이 하였고, 연구간사직은 동 자료원의 남혜령 연구원이 맡았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보고서의 집필과 편집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이 보고서의 개발 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형수 통계청장과 박경애 통계개발원장, 그리고 민경삼 동향분석실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2014 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인구

- | | | | |
|----|---------------------------|--------------------------|----|
| 01 |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 김두섭 한양대학교 | 20 |
| 02 |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 계봉오 국민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 35 |
| 03 |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 이희연 서울대학교 | 43 |
| 04 |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 전광희 충남대학교 | 52 |

01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지난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 오던 한국 사회의 출산 수준은 2005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로 기대수명이 선진국의 평균값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총인구는 2030년에,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에 이르러 서울의 인구는 약간씩 감소하는 단계로 반전되었으나,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해 들어오는 외국인 남녀배우자의 규모 역시 2005년 정점에 도달한 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 북한에서도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변화에서는 차별성과 아울러 일정수준의 유사성이 관찰된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인구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 한국인구의 이러한 감소 전망은 주로 초저출산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아울러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출산율과 사망률의 동향, 고령화의 추세 및 지역 편차,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변화추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북한인구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개관도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분석과 논의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UN의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인구성장과 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1980년 중반에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한국 사회가 인구변천을 마치고 곧 새로운 인구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구전문가들의 전망이었다. 그러나 출산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의 진입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규모는 2014년 현재 5,042만 명으로 세계에서 27위에 해당되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4%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2060년에 이르면 2014년 인구보다 646만 명이 줄어든 4,39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

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소년인구(0-14세)는 각각 2014년 규모의 59.4%와 62.1%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4년의 2.8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60년 한국인구의 연령구조가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정도,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1-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남녀 인구가 각각 49.7%와 50.3%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구성의 이러한 반전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사망률의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여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 남아선호의 약화로 인한 출생성비의 저하도 여자 인구의 비중 증가 추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1990-2010 (%)

	1990	2000	2010
성			
남자	50.2	50.2	49.7
여자	49.8	49.8	50.3
연령			
0-14세	25.7	21.0	16.2
15-64세	69.4	71.7	72.5
65세 이상	5.0	7.3	11.3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읍	8.3	8.1	8.6
면	17.3	12.2	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중학교	18.5	13.6	11.9
고등학교	34.0	34.6	31.2
대학 이상	14.1	26.1	36.6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유배우	59.1	60.6	57.7
사별	7.2	7.4	7.6
이혼	0.8	1.9	4.0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 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연령 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1990년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2010년 16.2%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는 그 비중이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 2010년 72.5%로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이러

한 증가 추세는 2016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후 감소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전체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2.3배에 해당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 이르면 도시인구의 비중이 74.4% 수준에 도달하였다. 도시인구의 비중은 2010년에 82.0%로 더욱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그 비중이 90.6%가 된다. 도시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8%대에서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농촌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서 2010년 9.3%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인구의 교육수준은 아직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6세 이상 내국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10년 20.3%로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0년 그 비중이 각각 11.9%와 31.2%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10년의 기간에 14.1%에서 36.6%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1.4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1>에서는 미혼자의 비중이 1990년 이후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는 연령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혼인상태의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리고 30-39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은 2010년 29.2%에 이르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1.9%, 2010년에 4.0%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45-54세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의 출산수준은 1960년대 초부터 급속히 저하하여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보다 낮은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 후 출산력이 대체수준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대부분 인구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출산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출산력의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구의 출산수준은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출산력변천이 한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유럽의 동부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등에서도 초저출산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국인구의 출산력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제1차 출산력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사망력의 저하와 도시를 향한 대규모 인구이동도 출산력 저하에 필요한 조건들을 성숙시키고 저하의 속도를 높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미국과 국제기구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아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력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아울러 인공유산의 증가와 피임도구의 보급을 제1차 출산력변천의 3대 구성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Kim, 2005).

이와 대조적으로 제2차 출산력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개념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1차 출산력변천에서와는 달리 사망력 저하와 인구이동의 영향이 크게 축소되었다. 가족계획사업 역시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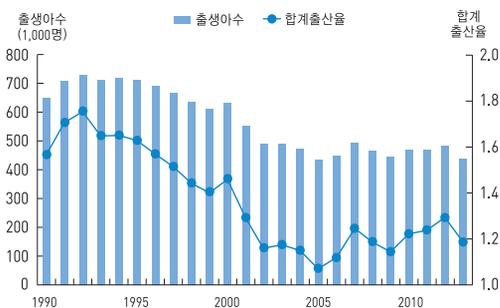
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제도가 사라지고 인구성장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 결국,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역할이 강조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을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Kim, 2005).

[그림 I-1]을 보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출산력이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만 5천 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은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림 I-1]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년 44만 8천 명, 2007년 49만 3천 명으로 반등한 후, 2009년에 44만 5천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2년 48만 5천 명, 2013년 43만 7천 명으로 소폭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 2007년 1.25, 2008년 1.19, 2010년 1.23, 2012년 1.30, 그리고 2013년 1.19로 집계되어, 2005년 1.08로 바닥을 친 후 약간씩이나마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물론, 2006년과 2007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각각 쌍춘년, 황금돼지의 해 등의 출산연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확대되고 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김두섭, 2007). 통계청의 혼인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24.8세이었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29.6세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여자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30.7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3년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20.2%로 높아졌다.

그림 I-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3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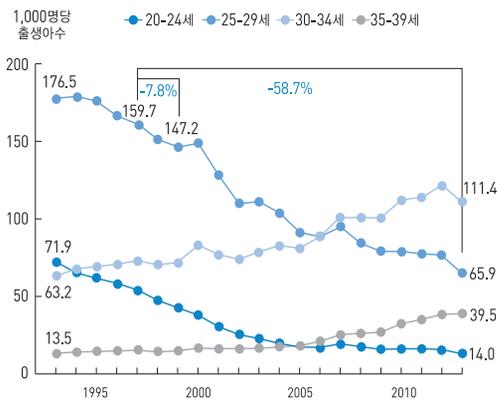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I-2]에서 여자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출산율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불과 2년 기간에 7.8%, 그리고 2013년까지 무려 58.7%가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혼인양상의 변화 역시 출산수준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1996년에 각각 43만 5천 건과 1,000명당 9.4명의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3년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감소가 지속되었다. 조혼인율은 그 후 황금돼지의 해였던 2007년에 일시적인 오름세가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1,000명당 6.4-6.6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년 1,000명당 0.6명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다 1997년의 외환 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3년 1,000명당 3.4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2013년 현재 각각 1,000명당 6.4명과 2.3명이다.

앞으로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소가족 지향의 태도와 규범들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이혼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인구의 출산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반등을 지속하고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2 어머니의 연령별 출산율, 1993-2013



주: 1) 연령별 출산율 = (산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 해당 연령의 여자 인구) × 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률은 선진국의 평균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지난 1983년의 조사망률과 사망자수는 각각 1,000명당 6.4명과 25만 5천 명이였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의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3년 1,000명당 5.3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수 역시 2006년 24만 2천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26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3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인구 모두 50대 및 70대 이상 연령집단의 사망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2>를 보면, 한국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남녀 각각 선진국 평균값의 64%와 59% 수준에 불과

하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 스웨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대수명을 비교해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모두 약 3.5년이 긴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사망률은 성별,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3년 남자 14만 7천 명, 여자 12만 명이었으며, 1,000명당 사망자수는 각각 5.9명과 4.8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이는 한국인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2013년 사망 통계에서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40세를 넘으면서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I-2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0-2015

	조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 (1,000명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세계 인구	8.1	38.6	34.8	67.8	72.3
선진국	10.4	6.1	4.9	74.3	81.1
개발도상국	7.6	42.2	38.2	66.5	70.2
아시아	7.1	31.6	30.2	69.6	73.4
한국	5.6	3.9	2.9	77.9	84.6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사망력의 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은 2013년에 경기도(5만 1천 명), 서울(4만 2천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은 사망자가 10만 5천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9.4%를 차지하였다. 조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8.6)와 경상북도(7.6) 및 전라북도(7.3)가 높고, 서울(4.2)과 경기도(4.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울산이 가장 높고, 서울, 대전, 경기도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의 주요 요인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의료시설의 개선과 건강보험 등 보건의제의 개혁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망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전염병, 기생충과 호흡기 관련 질환이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사망력이 낮은 선진사회에서는 심장병,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신생물 질환(암), 사고 및 중독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소화기 질환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각종 암, 호흡기 질환, 자살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인구의 2013년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다. 이들 3대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원인구조는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보다 자살, 운수사고, 추락사

고 등 사고에 의한 사망이 월등하게 많다. 자살과 운수사고는 10대와 20대의 연령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폐암, 간암, 위암 등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고령화 추세

저출산과 수명연장의 결과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부양비용이 늘어나고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노인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가해지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젊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수준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현재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40년대에 이르면 이 국가들을 추월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3>을 보면, 1960년에는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 비중이 각각 12.7%와 2.6%로 상승하였으며, 2060년

에는 각각 40.1%와 17.2%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령인구 내에서도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져 부양비용과 복지수요를 더욱 가중시킨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80세 이상 인구의 규모와 비중의 증가 속도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확연하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60년에 이르면 80세 이상 인구가 754만 8천 명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42.8%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05년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두 시점 사이에 전체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4%이었으며,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4%와 7.4%로 집계되었다.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0

연도	총인구 (100만 명)	고령인구 비중(%)		중위 연령 (세)	노년부양 인구비	고령화 지수
		65세 이상	80세 이상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14	50.4	12.7	2.6	40.2	17.3	88.7
2020	51.4	15.7	3.7	43.4	22.1	119.1
2040	51.1	32.3	9.4	52.6	57.2	288.6
2060	44.0	40.1	17.2	57.9	80.6	394.0

주: 1) 노년부양인구비 = [65세 이상 인구 ÷ (15 - 64세 인구)] × 100.

2)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 - 14세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중위연령은 인구의 변천단계나 고령화 수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연령이 25세 이하의 인구는 ‘어린 인구’로, 그리고 30세 이상인 인구는 ‘나이든 인구’로 간주된다. <표 I-3>에서는 중위연령의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구는 1960년 중위연령이 19.0세에 불과한 ‘어린 인구’였으나 2000년대 진입 이전에 ‘나이든 인구’가 되었다. 중위연령은 2014년 현재 40.2세로 추산되며, 2060년에는 무려 57.9세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년부양인구비와 고령화지수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14년에는 17.3으로 3배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2060년에 이르면 80.6 수준에 도달하여 15-64세 인구 1.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지수는 노년부양인구비에 비해 지난 14년간의 저출산 추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화지수 역시 1960-2014년의 기간에 12.9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2014년 현재의 4.4배 수준인 394.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편차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는 면 지역 거주자가 많고 동 지역 거주자는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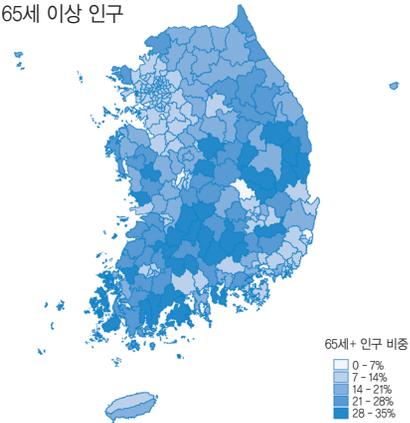
지적할 것은 고령인구는 사망력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령인구나 장수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조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I-3]은 시군구 행정구역별로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지난 2013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34.6%)과 경상북도 의성군(34.3%), 그리고 경상북도의 군위군(33.8%)이었다. 또한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경상남도 남해군(9.3%), 전라남도 고흥군(8.8%), 그리고 경상남도 의령군(8.2%)의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경상북도(의성군, 군위군, 예천군, 영양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남해군, 의령군, 합천군)과 전라북도(임실군, 진안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 곡성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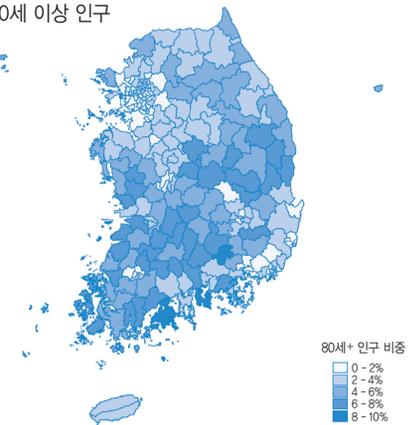
고령인구가 많아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지역들은 대체로 공기 좋고 물이 맑으며,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일상생활에서 운동량이 많거나 따뜻한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2013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수원시 영통구, 울산, 오산, 구미와 시흥 등의 도시 지역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3 시군구별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 2013

(1) 65세 이상 인구



(2) 80세 이상 인구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인구분포의 변화와 도시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2013년 도시인구의 비중이 81.6%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의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인구의 비중은 9.6%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

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97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2013년의 서울인구는 1,014만 명에 도달하였다. 이는 1960년 서울인구의 네 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의 면적은 605km²로 전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비중은 2013년 19.8%에 달한다. 또한, 서울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괄하는 수도권에는 2013년 현재 전국인구의 49.4%에 해당하는 2,526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그리고 권역별 5대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0-1970년 기간 서울인구는 245만 명에서 2.2배에 해당하는 543만 명으로 폭증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한국인구 증가의 50.7%가 서울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3

(1,000명)

연도	서울	서울 대도시권	수도권	권역별 5대도시	시(동) 부	군(읍/면) 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4,829	6,996	17,976	24,989
1970	5,433	6,327	8,730	9,239	12,709	18,172	30,882
1980	8,364	10,744	13,298	14,50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18,828	32,308	11,101	43,411
2000	9,895	19,441	21,354	18,759	36,755	9,380	46,136
2005	9,820	20,960	22,767	18,669	38,515	8,764	47,279
2010	9,794	21,875	23,836	18,633	39,823	8,758	48,580
2013	10,144	23,222	25,258	19,179	41,738	9,403	51,141

주: 1)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3) 권역별 5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구를 포함함.
 4) 각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5) 1960-2010년의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이고, 2013년 통계는 주민등록자료에서 계산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201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이에 따라 196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들이 정체상태에 빠지거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였다.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공업도시가 만들어지고, 청주, 강릉, 진주, 천안 등의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진입한 이후였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을 향한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3%와 4.2%에 달하였다.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10년의 기간에 82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537만 명과 525만 명이 증가하였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 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부터 2010년 기간에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7.4배가 되었다.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3.9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10년 3,98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가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에 1,798만 명에서 절반 이하인 87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도시화의 특징

은 도시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2년 이후에는 다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현상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서울대도시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결혼 추이와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이 강조되던 한국 사회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외국인 배우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였다. 예를 들면, 1990-2013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루어진 혼인의 누적규모는 50만 건에 달한다. 또한 2013년 현재 전체 혼인에 대한 외국 여자의 혼인 점유율이 15%가 넘는 시군구 지역이 34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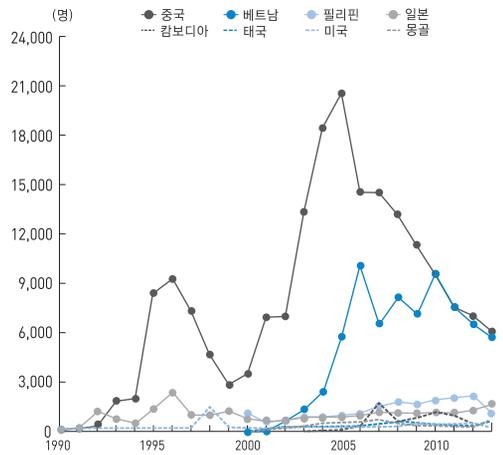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은 1990-2013년의 기간에 약 35만 7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1.3%에 해당된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 추세를 보이며, 국제결혼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혼인이주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혼인 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4만 2,356건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2013년 2만 5,9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비율도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로 높아졌으며, 2013년에는 8.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자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여자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다양해졌다. [그림 I-4]에서 중국인 여자배우자와의 결혼건수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반전된 것은 중국 조선족이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김두섭, 2013).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13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국(6,058명) 다음으로 베트남(5,770명), 필리핀(1,692명), 일본(1,218명), 캄보디아(735명), 미국(637명), 태국(29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4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배우자 수, 1990-2013



출처: 김두섭,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성과 국제결혼의 안정성」, 2013.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14.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과정, 이주 후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결혼 안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구의 규모와 성장

분단 이전의 남북한 인구는 대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선총독부가 1944년 실시하였던 인구조사에 의하면 38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는 각각 1,588만 명과 1,004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광복



직후부터 1949년까지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많았고, 한국전쟁(1950-1953년)과 그 파급효과로 북한의 인구 손실이 심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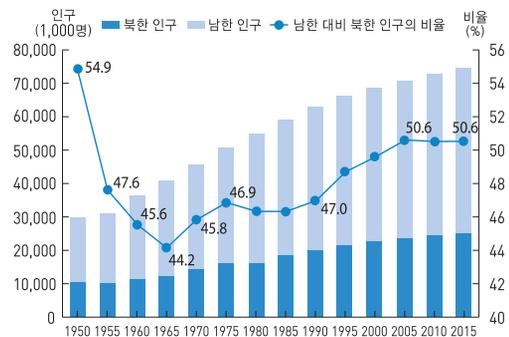
북한에서는 1954년 이후 연평균 3%를 상회하는 인구증가율이 1960년까지 이어졌으며, 1961-1970년의 기간에도 2-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유지하여 1970년 1,628만 명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1982년 이후 1995년까지 2%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대기근의 영향으로 1% 미만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김두섭 외, 2011). UN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규모는 1990년대에 2,020-2,280만 명의 범위에 있으며, 2000년대 초에는 2,300만 명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2008년에 실시된 제2차 인구센서스에서 북한인구는 2,40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북한인구는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2,450만 명과 2,516만 명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1990년대 이후 흉년, 기근, 자연재해, 자원부족, 배급제도의 와해는 인구성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근의 영향이 북한의 인구를 완전한 파국의 상태에 몰아넣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에 제시된 것처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던 1950년에는 남한인구 대비 북한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54.9%였으나, 1953년 전쟁이 끝나고 상대적 규모가 급격히 저하하였으며 1965년에는 44.2%에 이르렀다. 그 후 서서히 회복하여 1975년에는 46.9%로 변곡점을 형성하였다가 1990년부터 다시 약간씩 증가하여 2005년 이후에는 50.6%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5 남한과 북한 인구의 성장추세, 1950-2015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이에 따라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인구는 1955년에 3,126만 명, 1965년에 4,094만 명, 1975년에 5,099만 명을 넘어서고, 1985년에 6,000만 명대에 근접한다. 대체로, 남북한의 인구는 10년을 주기로 약 1,000만 명씩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인구는 2000년 초반에 7,000만 명을 초과하였고, 2010년 중반에 7,500만 명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규모는 2010년 일본의 1억 2,735만 명, 독일의 8,302만 명보다는 작지만, 프랑스의 6,323만 명과 영국의 6,207만 명보다는 크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한반도의 우리 민족도 인구규모 면에서는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유사성이 있지만,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양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인구증가율은 모두 높지만,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쟁기간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피난민 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북한인구의 출산력과 고령화 추세가 일정한 시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남한 인구의 변화와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을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김두섭. 2013.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성과 국제결혼의 안정성」. 집문당.
김두섭 · 최민자 · 전광희 · 이삼식 · 김형석. 2011. 「북한인구와 인구센서스」. 통계청.
Kim, Doo-Sub. 2005.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25.



02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계봉오 (국민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에는 고용률의 변동과 관계없이 하락했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률의 상승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30대의 출산율은 고용률의 상승과 더불어 상승했으나, 20대의 경우 고용률의 상승이 출산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학력 여성의 출산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고학력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나,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차이가 역전되거나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 한국의 출산율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동유럽 및 남유럽에서 관찰되는 모습과 유사하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지난 50여 년 동안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30 이하로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초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불안 등의 경제적 요인이 이러한 초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가가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양육의 경제적 비용이 매우 높은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가는 한국의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최근 10여 년 동안 실업률 상승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남유럽 및 동유럽 지역에서 이와 같은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Goldstein et al., 2013).

이 글에서는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술하고 이를 국제적인 맥락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분석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지난 50여 년 동안 빠르고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1997년과 2008년 전후의 출산율 변화에는 전반적인 출산력 하락 경향과 경제위기의 영향이 동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90년 이후 출산율 변화 경향을 검토하고, 경제위기 전후의 변화가 1990년 이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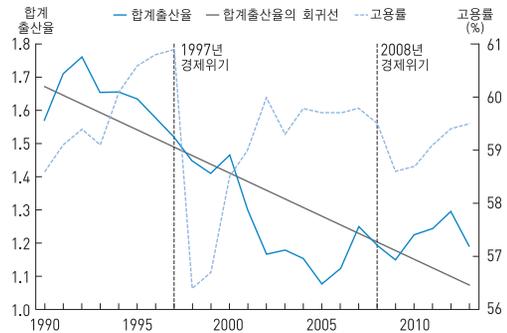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경제위기 전후로 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가 이 집단의 경제적 상황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위기 전후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다.

이 글은 우선 합계출산율과 고용률 추이를 통해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관계를 짚어본 후, 연령별 출산율과 고용률 추이를 분석하여 연령에 따라 고용과 출산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제위기 전후로 교육수준별 차별출산율 패턴의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합계출산율과 고용률 추이

[그림 I-6]은 합계출산율과 고용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직선은 1990-2013년 기간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를 요약해 주는 회귀선이다. 이 회귀선의 기울기는 -0.026 인데, 이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0.026 명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관측된 합계출산율이 회귀선 아래에 위치하면 해당 시점의 출산율이 전반적인 추세보다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회귀선 위에 위치하면 반대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6 합계출산율과 고용률, 1990-2013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두 차례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두 차례 경제위기 직후 합계출산율은 회귀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즉, 1998년과 2009년의 합계출산율 모두 전반적인 추세보다 조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직후 출산율이 단기적으로 더욱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합계출산율 추이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 이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97년 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 1.08까지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200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귀선 밑에 위치했으며, 대체로 1.20보다 작았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초저출산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2008년 위기 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빠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즉, 2010-2013년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이전 수준보다 조금 높으며 회귀선 위에 위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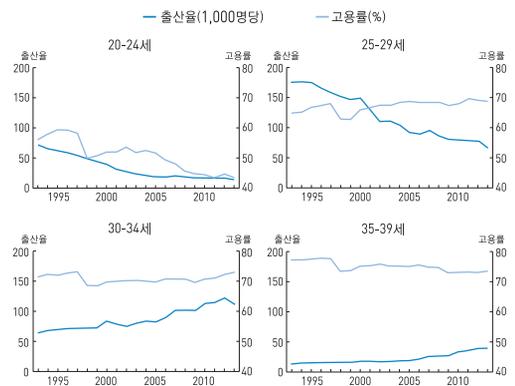
고 있다. 따라서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이후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인 출산율 하락 추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6]은 고용률이 두 차례의 경제위기 직후 급락했다가 회복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고용률은 1997년 경제위기 직후에 2008년 경제위기 직후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추이의 관계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 이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률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2000년 이후에는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반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률의 회복과 합계출산율의 회복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저출산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는 경제상황 변동과 무관하게 고착화되었으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유럽과 유사한 패턴, 즉 출산율과 고용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Goldstein et al., 2013). 이는 1997년 경제위기의 여파가 중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이행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출산율이 경제상황과 정적(+) 관계를 갖는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대 연령별 출산율과 고용률 추이

[그림 I-7]은 1993-2012년 기간의 20-30대의 연령별 출산율과 고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15-19세와 40대의 출산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20대의 출산율은 하락했고, 30대의 출산율은 상승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대 후반의 출산율 하락과 2008년 경제위기 이후 30대 초반의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단, 변화의 양상은 1997년 경제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20대, 특히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 하락 폭이 완만하다. 반면 30대, 특히 30대 초반의 경우, 2008년 이후 출산율 상승이 이전보다 빠르게

그림 I-7 연령별 출산율과 고용률, 1993-2013



주: 1) 연령별 출산율 = (산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 해당 연령의 여자 인구) × 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20대 후반의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6]에 제시된 합계출산율의 변화 양상을 감안하면,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20대의 가파른 출산율 하락이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주도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30대의 상대적으로 빠른 출산율 상승이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혼인의 지연과 이혼의 증가 등 혼인상태 구성 변화에 의해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0년의 24.8세에서 2013년의 29.6세로 23년 동안 4.8년 상승했으며, 이는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초혼의 지연으로 인하여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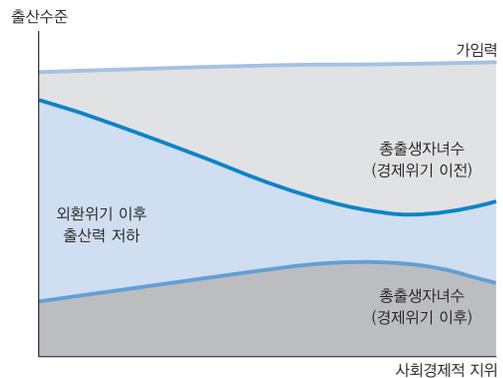
또한 [그림 I-7]은 같은 기간 동안 연령별 출산율과 고용률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고용률은 1997년 경제위기 직후에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급락했으나, 2008년 경제위기 직후에는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 모두, 2-3년 이후에는 고용률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어느 정도 상승했다. 연령별 출산율과 고용률의 관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은 20대 후반의 경우, 고용률의 회복이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출산율과 고용률이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한 다른 연령집단의 패턴과 구별되는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고용률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락했으며, 이것이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하락 및 초저출산 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차별출산력의 변화

경제위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I-8]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율의 관계가 경제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가임력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위기 이전의 출산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다가 다시 약간 상승하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수요 및 출산력 조절과 사회계층

그림 I-8 경제위기 전후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력의 이론적 관계



출처: Kim(2009)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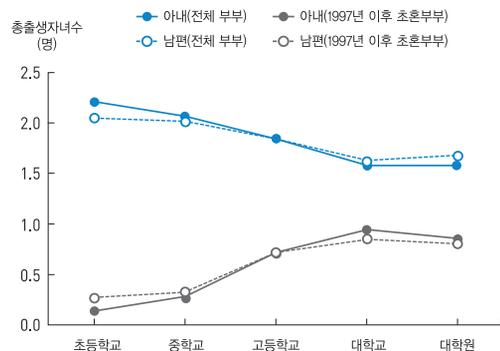
의 관계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 위기 이후에는 출산율이 모든 사회계층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데, 그 하락 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반비례한다(Kim, 2009). 즉, 낮은 사회계층일수록 그 하락 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김두섭, 2007).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 양상은 다양한 출산력조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9]는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총출생자녀수(children ever born)의 차이가 1997년 경제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출생자녀수가 점차 작았으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거나 비슷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출산율은 이러한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즉, 경제위기 이전에 출산율이 높았던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1997년 이후의 출산수준은 부부의 교육수준이 중상층인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직업에 따른 총출생자녀수의 변화 양상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출산행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한 집단은 농어

업과 단순노무직처럼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 그리고 다음으로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과 전문 직종에 중사하는 부부였다(Kim, 2009).

그림 I-9 부부의 교육수준별 경제위기 전후 총출생자녀수 비교



주: 1) 총출생자녀수는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자녀수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006.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고용안정성이 악화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부들에게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부들의 경우에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양육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1997년 이후의 출산수준이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부인의 순서로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런 현상은 직장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두섭, 2007).

경제위기와 출산율 변화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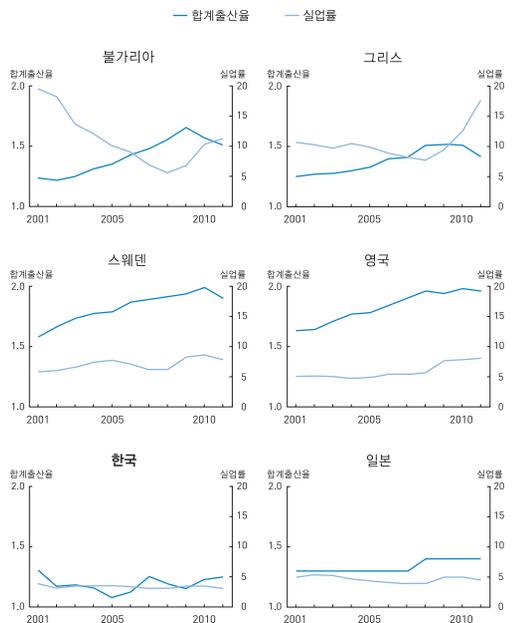
경제위기 이후의 출산율 변화 양상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관찰된다. 최근 10여 년간 유럽에서는 실업률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정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나타났다. 특히 남유럽과 동유럽의 실업률과 출산율간의 관계가 북유럽과 서유럽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관계가 복지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Goldstein et al., 2013).

[그림 I-10]은 2000년 이후 유럽, 한국, 일본에서 합계출산율과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불가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실업률과 합계출산율의 변화가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즉, 실업률의 상승은 출산율의 하락과, 실업률의 하락은 출산율의 상승과 연결되어 있다. 이 그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동유럽과 남유럽의 국가들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웨덴과 영국에서는 실업률의 변화와 상관없

이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다른 서유럽과 북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동유럽 및 남유럽과 대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복지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즉, 복지제도가 발전한 국가들에서는 경제위기 전후의 출산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유럽 및 동유럽의 패턴과 유사하지만, 한국의 실업률과 출산율은 유럽 국가들보다 낮으며 변화의 폭 역시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위기와 출산율

그림 I-10 주요국의 합계출산율과 실업률, 2001-201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Goldstein et al., 2013.
World Bank, 2014.



의 관계가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계출산율과 실업률 간에 특별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림 I-11]은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총출생자녀수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경제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2006년에 조사된 전체 기혼여성의 총출생자녀수는 대체로 교육수준과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초혼시기가 1997년 이후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총출생자녀수가 교육수준에 따라 증가하다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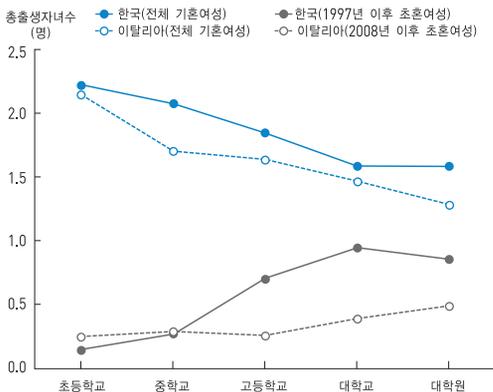
이탈리아에서도 2012년 전체 여성의 경우에

는 교육수준과 출산율 간에 부의 관계가 관찰된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 결혼한 여성들에서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두 국가 모두에서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출산 수준의 변화양상이 [그림 I-8]에 제시한 개념적 모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출산율 변화의 함의

한국의 출산율은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경제 상황과 출산의 긴밀한 관계는 향후 출산율의 변화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경제 상황의 호전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의 완화에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 비용이 매우 높은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여건의 개선 없는 초저출산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출산율이 보다 현저하게 하락했으며, 이것이 초저출산을 지속시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한국 사회의 출산율 상승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11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제위기 전후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총출생자녀수 비교



주: 1) 총출생자녀수는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자녀수임.
 2) 한국 자료는 2006년에 조사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이탈리아 자료는 2012년에 조사된 *The Italian Multi-purpose Survey on Aspects of Everyday Life*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Kim et al., 2014.

참고문헌

-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 Goldstein, Joshua R., Michaela Kreyenfeld, Aiva Jasilioniene, and Deniz Karaman Orsal. 2013. "Fertility Reactions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Recent Evidence from Order-specific Data." *Demographic Research* 29: 85-104.
- Kim, Doo-Sub. 2009.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Pp. 110-131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 Jones, P. T. Straughan and A. Chan. Oxon, U.K.: Routledge.
- Kim, Doo-Sub, Alessandra De Rose, Giuseppe Gabrielli, and Anna Paterno. 2014.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on Fertility: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Italy." Paper presented at the 2014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 World Bank. 2014.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03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이희연 (서울대학교)

- 한국의 지역별 인구 증감의 주된 요인은 사회적 증가(인구이동)이다.
- 인구이동은 상당한 선별성을 띠고 있어서 총 이동자의 약 절반이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며, 특히 1인 이동자가 전체 이동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 인구이동 흐름에는 방향성이 있는데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나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로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전입자가 많은 지역에서 전출자도 많이 배출하여 지역별 전입량과 전출량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으며 따라서 순이동률은 낮은 편이다.
- 인구이동은 전입지와 전출지 패턴 및 순이동률에 따라서 전입형, 전출형, 혼합형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농촌에서 도시를 향한 이촌향도의 흐름은 1990년대 이후 도시 간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구이동에는 직장, 주택, 가족 및 교육, 문화, 자연환경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이동은 주로 젊은 연령층과 1인 이동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선별성과 특정 지역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인구이동 흐름의 특징, 그리고 인구이동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령층별 전출·입 이동자를 기준으로 인구이동의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인구이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는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토대로 매년 집계하는 「인구이동 통계」와 5년 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구이동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연령층별 인구이동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인구이동통계」를 이용하였다.

인구이동의 추이와 선별성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가 이

루어지면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5년 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경계를 벗어난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기에는 약 439만 명이 이동하였는데 이는 5세 이상 인구의 16.2%에 해당한다. 이후 인구이동은 더욱 활발해져서 1970년대 후반기에는 766만 명(이동률 22.9%)이 이동하였고, 1990년대 전반에는 1,018만 명(이동률 25%)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이동 자수는 점차 줄어들어 2005-2010년 사이에는 857만 명이 이동하였고 이동률도 18.9%로 낮아졌다(표 I-5). 주민등록 이전신고로 파악되는 인구이동률은 이보다 더 낮아서 2010년에는 16.5%, 그리고 2013년에는 14.7%로 나타났다.

표 I-5 이동인구와 이동률, 1966-2010

기간	이동인구 (1,000명)	이동률 (%)
1966-1970	4,394	16.2
1971-1975	5,209	17.1
1976-1980	7,658	22.9
1981-1985	8,402	22.8
1986-1990	9,871	22.0
1991-1995	10,183	25.0
1996-2000	9,711	23.1
2001-2005	9,141	20.8
2006-2010	8,572	18.9

주: 1) 이동인구는 5년 전 거주지를 기준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이동한 5세 이상 인구임.

2) 이동률 = 5세 이상 이동인구 ÷ 5세 이상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한국인이 출생 시군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70년에 21.0%였던 타향살이 비율은 1990년에 41.3%, 2000년에 44.4%, 그리고 2010년에는 59.4%로 증가하여 지난 40년 동안 약 2.8배 증가하였다. 2010년 시점에서 전체 인구의 40.6%만이 자신이 태어난 시군구에서 살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출생지 거주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72.9%), 전남(64.3%), 전북(58.6%) 지역이 높은 편이며, 경기(25.1%), 서울(34.9%) 지역은 상당히 낮다(표 I-6).

표 I-6 시도별 출생지 거주비율, 2010

시도	인구 (1,000명)	출생지 거주 인구 (1,000명)	출생지 거주비율 (%)
전국	47,485	19,271	40.6
서울	9,550	3,335	34.9
부산	3,352	1,539	45.9
대구	2,399	1,112	46.3
인천	2,604	958	36.8
광주	1,450	643	44.4
대전	1,472	555	37.7
울산	1,058	466	44.0
경기	11,092	2,782	25.1
강원	1,435	731	51.0
충북	1,480	719	48.6
충남	1,982	977	49.3
전북	1,747	1,023	58.6
전남	1,712	1,100	64.3
경북	2,546	1,422	55.8
경남	3,083	1,527	49.5
제주	523	382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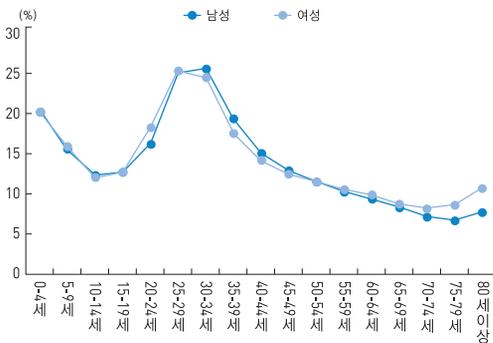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출생지 거주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취업, 학업 등으로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의 결과로 설이나 추석 명절 기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이동과 이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이 나타나게 된다.

인구이동은 일반적으로 선별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성별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연령층별 선별성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 성별 및 연령층별 인구이동률을 나타내는 [그림 I-12]에서 이러한 특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젊은 연령층과 이들과 동반하여 이동하는 유년층의 이동률이 매우 높다. 성별에 따른 인구이동률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여성 노인인구가 많은 75세 이후 여성의 이동률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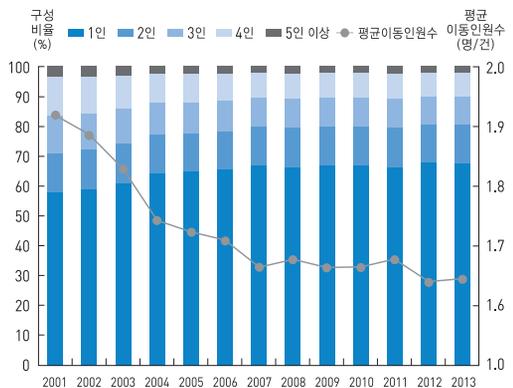
그림 I-12 성 및 연령별 인구이동률, 2013



주: 1) 인구이동률 = 이동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한국의 인구이동 특성 가운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양상은 동반이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입신고건당 평균 이동인원수를 보면 2001년에 1.92명이었던 것이 2005년 1.72명, 그리고 2013년에는 1.65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시군 내 이동에 비해 시군 간 이동의 경우 이동건당 이동규모가 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원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1인 이주 성향이 더 강함을 보여준다. 1인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져서 전체 이동건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I-13).

그림 I-13 이동건수의 이동인원별 구성비율과 평균이동인원수, 2001-2013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5년 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6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동률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동률도 높아서 대학원 이상 인구의 이동률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7).

표 I-7 교육수준별 이동인구와 이동률, 2010

교육수준	이동인구 (1,000명)	이동률 (%)
전체	8,461	18.9
무학	219	11.1
초등학교	936	13.0
중학교	641	11.8
고등학교	2,265	16.1
대학교(4년제 미만)	1,267	23.9
대학교(4년제 이상)	2,621	28.6
대학원 이상	512	31.1

주: 1) 이동인구는 5년 전 거주지를 기준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이동한 6세 이상 인구임.
 2) 이동률 = 6세 이상 이동인구 ÷ 6세 이상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인구이동의 흐름

한국 인구이동의 주류는 수도권을 향한 인구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장 심했던 1970년대에는 매년 약 36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매년 약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수도권 내에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순이동이 지속적으로 (-)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도는 순이동이 계속 (+)로 나타나고 있다(표 I-8). 이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의 인구가 서울 주변의 위성도

시로 지속적으로 전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와 처음으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수도권을 떠나 전출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수도권의 순이동이 (-)를 보였다. 2012년에 다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를 보였으나 2013년에 다시 (-)로 바뀌었다. 이처럼 2011년 이후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비수도권에서 이동할 잠재적 인구 자체가 감소하였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지역균형정책으로 인해 지방도시의 흡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8 수도권 순이동인구, 197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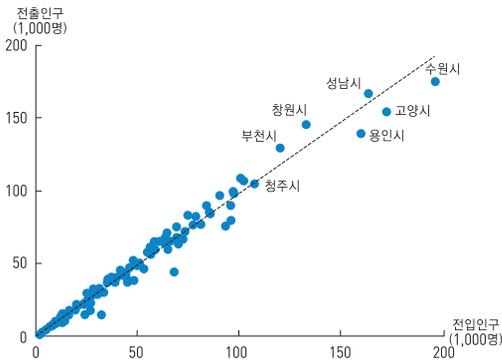
시기	(1,000명)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971-1980	360.9	233.4	0.0	127.5
1981-1990	324.5	87.1	46.8	190.6
1991-2000	110.4	-153.4	31.0	232.8
2001-2010	107.3	-70.2	4.2	173.3
2011	-8.5	-113.1	28.8	75.8
2012	6.9	-103.6	27.8	82.8
2013	-4.4	-100.6	22.0	74.1

주: 1) 순이동인구 = 전입인구 - 전출인구.
 2) 197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는 해당 기간의 연평균 값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지난 10년 동안 시군구의 전출인구와 전입인구의 상관관계를 보면 0.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전출자와 전입자의 수가 거의 동일함을 말해주며, 따라서 특정 연도를 분석하여도 인구이동 흐름을 일반화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2013년 시군구별 전입량과 전출량 간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내 보면 거의 직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입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출인구도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I-14). 이러한 관계를 회귀식을 통해 풀이 하면, 1명의 인구가 전입할 때 0.98명의 인구가 전출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지역들이 전입량과 전출량의 관계가 거의 대각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신규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들에서만 전입인구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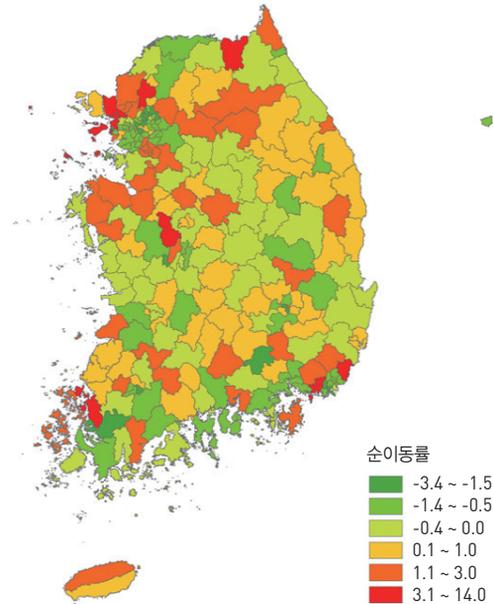
그림 I-14 시군구별 인구 전입량과 전출량의 관계, 2013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시군구별 순이동률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의 순이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 파주시 등은 상당히 높은 순이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산간지역들의 순이동률은 (-)를 보이고 있다(그림 I-15).

그림 I-15 시군구별 인구순이동률, 2013



주: 1) 인구순이동률 =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인구이동의 유형

이 장에서는 85개 도시(특별시, 광역시 포함)의 인구이동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층별 순이동률을 기준으로 각 도시의 인구이동 양상을 유형화해 보았다. 85개 도시의 이동인구에는 전체 이동인구의 90%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도시만으로 한국의 인구이동 유형을 분석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전입률과 전출률 간에 상관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순이동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여기서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더 많아서 순이동률이

1% 이상인 도시를 전입형 도시로, 그 반대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더 많아서 순이동률이 -1% 이하인 도시를 전출형 도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순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에서 1% 사이를 나타내는 도시들은 전입형 또는 전출형 도시로 분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연령층별 이동성향을 토대로 특정 연령대의 전입 및 전출 성향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전입형 도시들의 경우 청년층과 유아연령층이 동반하여 전입하고 있는 유아연령층 동반 전입형, 주로 청년층만이 유입되는 청년층 전입형, 그리고 다른 도시들보다 증장년층의 전입이 두드러지는 증장년층 전입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출형 도시들의 경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출이 이루어지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출형 도시들의 경우도 청년층과 유아연령층이 동반하여 전출하는 유아연령층 동반 전출형, 청년층의 전출이 월등히 많은 청년층 전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이동률이 (+)를 보이는 전입형 도시들 가운데 특정 연령층의 전출이 두드러지거나 순이동률이 (-)를 보이는 전출형 도시들 중 특정 연령층의 전입이 두드러지는 도시들도 있다. 즉, 연령층별로 전입과 전출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도시들도 나타나고 있다.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을 기준으로 한국 도시의 인구이동을 유형화하면 <표 I-9>와 같다.

표 I-9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에 따른 인구이동 유형화

	유형	해당 도시
전입형	유아 동반 청년층 전입형	김포, 남양주, 의왕, 용인, 고양, 세종, 동해, 제주
	청년층 전입형	수원, 오산, 평택, 광주, 아산, 서산, 당진, 김해, 양산, 거제
	증장년층 전입형	파주, 서천
전출형	유아 동반 청년층 전출형	서울, 구리, 광명, 시흥, 부천, 목포, 창원
	청년층 전출형	하남, 양주, 태백
	증장년층 전출형	과천, 안양, 군포, 계룡
혼합형	유아동층 전출 및 청년층 전입형	천안, 광양
	유아동층 전입 및 청년층 전출형	전주, 군산, 광주광역시, 포항
	청년층 전출 및 장년층 전입형	상주, 영천, 남원, 밀양
	기타	부산 외 40개 도시

주: 1) 인구이동 유형은 서울시, 6개 광역시, 세종시와 77개 시 단위의 도시를 대상으로 순이동률이 1% 초과이면 전입형 도시, 순이동률이 -1% 미만이면 전출형 도시, 순이동률이 -1% 미만 이거나 1% 초과이면 혼합형 도시, 순이동률이 -1% 부터 1% 미만 이면 기타 도시로 분류하였음.
2) 유아층의 연령기준은 0-4세이고, 청년층은 25-39세, 증장년층은 45-64세, 장년층은 6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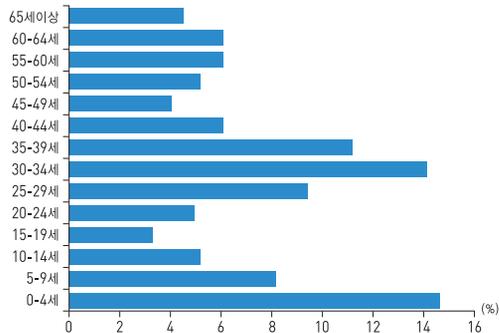
85개 도시의 인구이동을 유형화한 결과, 전입형 도시는 20개, 전출형 도시는 14개, 혼합형 도시는 10개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1개 도시는 순이동률이 -1%에서 1% 사이에 속하는 기타 도시로 분류되었다. 여기서는 인구이동의 각 유형에 속한 대표적인 도시들의 연령층별 인구이동 피라미드를 예시하고자 한다.

전입형 도시로 유아연령층을 동반한 청년층의 전입이 두드러진 유형의 도시들은 주로 수도권 도시들(김포시, 남양주시, 의왕시, 용인시, 고양시)과 세종시, 제주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 사례로 김포시의 연령층별 순이



동률 인구피라미드는 [그림 I-16]과 같다. 청년층의 전입이 두드러진 유형의 도시들은 주로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대도시의 광역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아산시, 당진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등이다. 이들 도시들로 청년층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장년층의 전입이 두드러진 유형의 도시는 파주시와 사천시로 나타나고 있다. 중장년층의 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다소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은퇴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16 김포시의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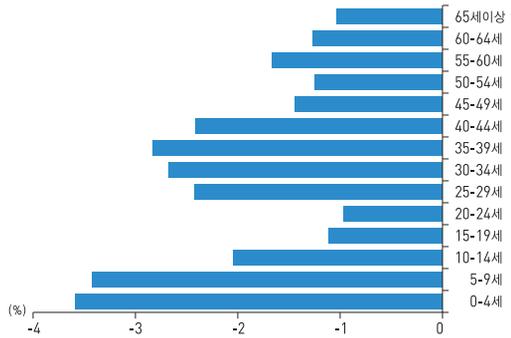


주: 1) 인구순이동률 =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전출형 도시로 유아연령층을 동반하여 청년층의 전출이 두드러진 유형의 도시들은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외의 도시들(구리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그리고 목포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도시들은 주로 주택문제로 인근의 도시들로 이동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구리시를 보면, 인근의 남양주시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남양주시로의 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구리시의 연령층별 순이동률의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그림 I-17]과 같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전출자가 두드러진 유형의 도시들은 주로 일자리를 찾아서 전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17 구리시의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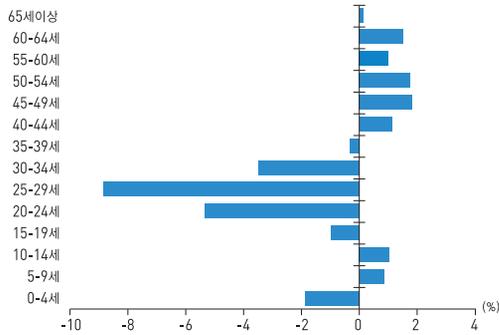
주: 1) 인구순이동률 =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전입형 도시 또는 전출형 도시들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시들의 경우 특정 연령층에서는 전출이 두드러진 반면에 다른 연령층에서는 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혼합형 인구이동 패턴을 보이는 도시들을 보면, 유아동 연령층은 전출하는 데 비해 청년층이 전입하는 유형(천안시, 광양시), 유아동 연령층은 전

입하는 데 비해 청년층이 전출하는 유형(전주시, 군산시, 광주광역시), 청년층은 전출하는 데 비해 장년층은 전입하는 도시(상주시, 영천시, 남원시 등)들이다.

혼합형 인구이동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도시들의 경우 주택, 고용, 교육환경 등과 같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연령층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서도 어떤 연령층은 전출해나가는 반면에 어떤 연령층은 전입해오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상주시의 연령층별 순이동률에 대한 인구피라미드는 [그림 I-18]과 같다.

그림 I-18 상주시의 연령층별 인구순이동률, 2013



주: 1) 인구순이동률 =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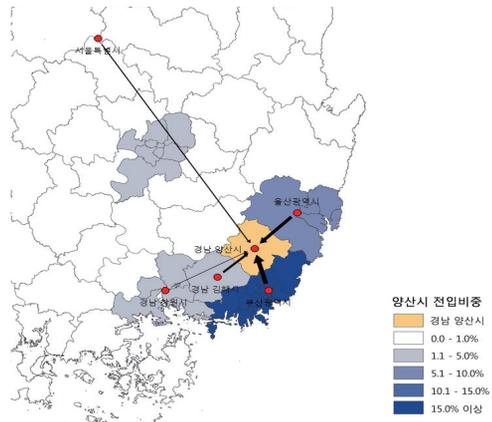
집중형과 분산형 인구이동의 비교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소수의 특정 지역으로 전입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전입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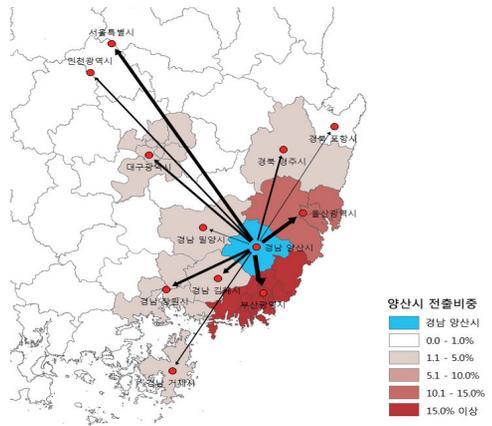
대부분 소수 지역으로 집중된 인구이동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집중화된 인구이동 패턴을 보이는 지역들에서는 주로 광역시 또는 해당 도내의 대도시 및 인근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주군, 고령군, 경산시의 경우 대구광역시로 집중 전입하고 있으며, 양산시는

그림 I-19 양산시 전입 및 전출 인구의 주요 전출지와 전입지, 2013

(1) 전입인구 주요 전출지



(2) 전출인구 주요 전입지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부산광역시, 담양군과 화순군은 광주광역시, 완주군은 전주시로의 전입이 전체 전입량의 50%를 상회하는 집중형 인구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양산시에서 전출하는 사람들의 주요 전입지와 양산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의 주요 전출지를 보면 [그림 I-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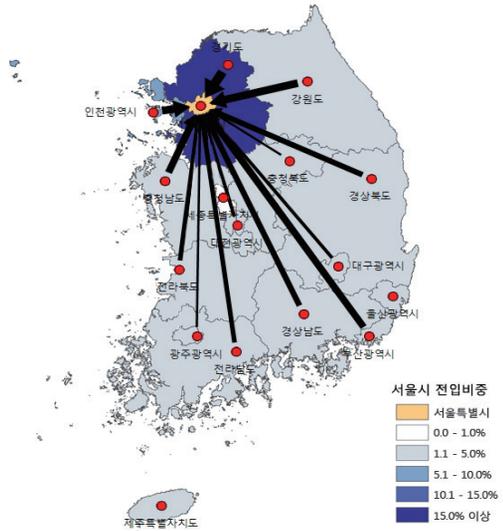
집중형 인구이동 패턴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여 전입하는 특징을 보이는 도시들도 있다. 분산형 인구이동 패턴을 보이는 도시들은 주로 서울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및 충청북과 강원도의 일부 도시들이다. 분산형 인구이동 흐름을 보이는 도시들의 경우 목적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 전출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분산형 인구이동 패턴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특별시에서 전출하는 사람들의 주요 전입지와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의 주요 전출지를 보면 [그림 I-20]과 같다.

인구이동은 선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출·입지역의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수도권으로의 젊은 인력의 선별적 이동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의 지역 간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의료·복지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주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흐름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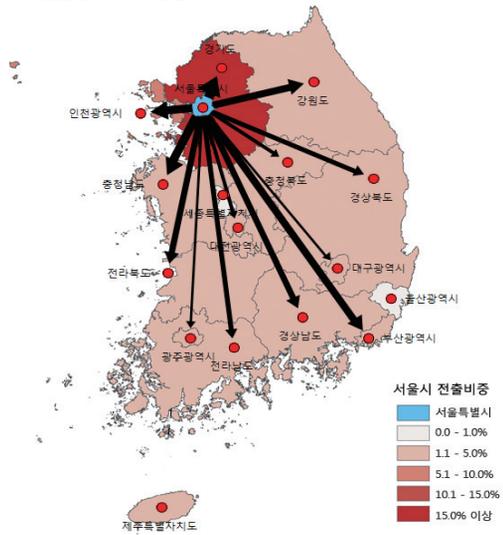
이 모색되지 않는 한 향후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림 I-20 서울시 전입 및 전출 인구의 주요 전출지와 전입지, 2013

(1) 전입인구 주요 전출지



(2) 전출인구 주요 전입지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04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전광희 (충남대학교)

-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정도이지만 상대적 크기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증가해 왔고, 인구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의 차이 때문에 1960년대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았으나 1970년 이후 역전되기 시작했다.
- 남한의 성비는 1950년대부터 100명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북한은 1950년대에는 85 수준이었고 2000년대 이후는 95 수준으로 점점 개선되어 왔다.
-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남한이 북한보다 약간 크지만, 남북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저출산으로 0-14세 인구 구성비의 감소 속도는 남한이 북한보다 빨라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수도 남한이 북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유소년부양비는 작고, 노년부양비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남북한 모두 총부양비가 낮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총부양비는 남한이 북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남한과 북한에 별도의 정치체제가 수립되면서 두 지역의 인구통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어 왔다. 북한은 해방 이후 인구통계는 대부분 행정자료에 의존하고 센서스는 1993년과 2008년에 2번 실시하였을 뿐이며, 인구동태 특히 출생통계와 사망통계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표한 적이 없다. 한편, 남한은 해방 후 5년마다 규칙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인구동태통계」도 신고의 누락이나 지연을 개선해 왔다.

남한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출산율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남한의 노동력 부족 사태를 타개하고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했던 자연재난을 경험했고, 이 재난이 인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홍민, 2013). 이 때문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을 비교하고, 특히 근년의 동향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조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특성을 비교한다. 주요 관심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최근 동향이나 한국전쟁 이후부터 21세기 중반까지의 중장기적 인구추이도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이 글에서 남한과 북한의 비교 검토에 사용되는 자료는 일차적으로 통계청과 UN의 추계인구이며, 이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자료는 남한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통계」이고, 북한의 경우는 1993년과 2008년의 센서스, 곧 「일제 인구조사」와 표본조사에서 추정된 「인구동태 통계」이다.

인구규모와 인구성장의 비교

남북한 총인구를 보면, 2013년 남한은 5,022만 명이고, 북한은 2,454만 명으로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다(표 I-10). 남한인구 대비 북한인구의 비중이 최저점에 이르렀던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구는 남한인구의 55%였다가 점점 감소하여 1960년대에 최저점인 44% 수준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에 점점 상승하여 2010년대에는 50%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표 I-10 남한과 북한의 추계인구, 195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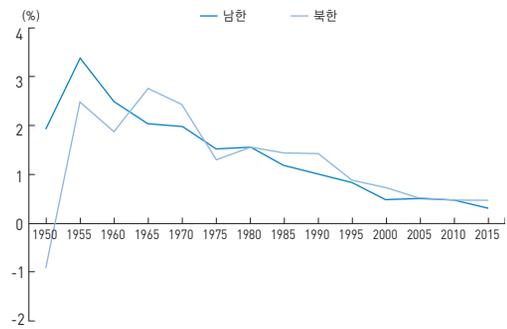
연도	남한인구 (만 명)	북한인구 (만 명)	남한 대비 북한인구 비(%)
1950	1,921	1,055	54.9
1955	2,117	1,009	47.7
1960	2,507	1,142	45.6
1965	2,839	1,255	44.2
1970	3,144	1,441	45.8
1975	3,471	1,628	46.9
1980	3,745	1,737	46.4
1985	4,050	1,878	46.4
1990	4,287	2,022	47.2
1995	4,509	2,172	48.2
2000	4,701	2,270	48.3
2005	4,814	2,356	48.9
2010	4,941	2,419	49.0
2013	5,022	2,454	48.9
2015	5,062	2,478	49.0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확성을 고려하여, 1950-1985년은 유엔 UN 추계인구, 1990년부터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그림 I-21]에서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한국전쟁 이후 20여 년간에는 차이가 컸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모두 1% 미만, 특히 최근에는 0.5% 수준으로 떨어져 남북한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시기별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까지는 남북한 모두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 주민의 월남 등으로 남한의 인구성장률이 북한보다 높다. 남한은 1955년에 정점에 이르고 북한은 남한보다 베이비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면서 2% 근방의 높은 인구성장률이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림 I-21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1950-2015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확성을 고려하여, 1950-1985년은 유엔 추계인구, 1990년 이후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1980년대 이후에는 남북한의 인구성장률이 1.5%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남한에서는 계속 낮아져 1990년대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져 2000년대 이후는 0.5%대 근방에 머무르

고 있다. 북한의 인구성장률은 199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약간 높았지만 1995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지고 2010년대에는 0.5%대에 이르면서 남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인구변동요인의 비교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표 I-11>에 인구변동요인을 출생률, 사망률, 국제인구이동률로 구분하였고,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요인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 [그림 I-22]이다.

출생률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남한보

다 높게 나타난다. 1960년대부터 남한에서는 범정부적 가족계획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북한보다 출생률이 낮아지나 북한도 한국전쟁 후에 생겨난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성장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김두섭 외, 2011; 문호일, 2011; 박경숙, 2013; 이석, 2011).

전체적으로 남한은 1980년대 전반에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20명 수준에 이르고,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 2.1을 밑돌았다. 1990년대 전반에 출생률이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IMF 금융위기로 사회 전반이 위기에 빠지면서 2000년대 전반부터 출생률이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은 1.3명 수준을 넘지 못하면서 동태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남한의 초저출산율 체제는 경제위기와 혼인연령 상승, 양육환경 악화, 청년실업 증대 등으로 생겨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출생률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한보다 높았지만 1990년대 전반부터 천천히 저하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전반 북한의 식량배급체제가 붕괴할 정도의 큰 자연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홍민, 2013). 한국의 통계청과 UN이 2000년대 이후에 추계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당 2.0명 수준인데, 북한의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합계출산율 자체의 감소보다는 15-49

표 I-11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요인, 1950-2010

연도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률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50	35.8	25.3	16.4	23.2	0.0	-11.0
1955	45.4	40.2	15.4	15.3	3.8	0.0
1960	39.9	32.5	13.0	13.8	-2.1	0.0
1965	32.9	38.6	9.9	10.9	-2.6	0.0
1970	30.3	32.6	7.8	8.3	-2.7	0.0
1975	23.1	19.7	7.0	6.6	-0.9	0.0
1980	20.4	21.8	6.4	6.3	1.6	0.0
1985	15.5	20.6	5.7	6.1	2.1	0.0
1990	16.0	20.8	5.5	5.8	-2.9	0.0
1995	13.6	19.1	5.5	9.4	-2.3	0.0
2000	10.2	16.7	5.3	8.4	-0.4	0.0
2005	9.6	14.7	5.1	9.0	1.4	0.0
2010	9.6	14.4	5.6	9.2	1.2	0.0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세 가임여성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망률은 1950년대 전반에 북한이 남한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북한에서 더 컸음을 의미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도 북한과 남한의 사망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사망률이 상승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사망률 차이는 더 커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1990년대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1990년대 전반 70.0세에서 1990년 후반에는 63.5세로 급감하였으나, 2000년대 전반에 68.1세로 약간 반등하여 재난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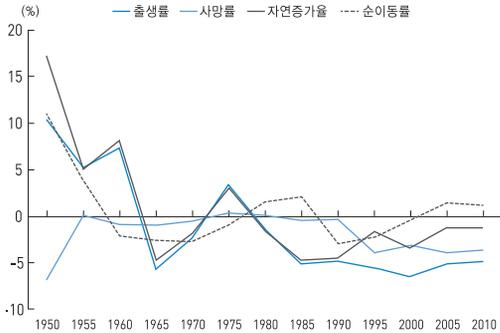
다음은 자연증가율, 곧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를 살펴보자. 1950년대 전반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자연증가율이 크게 낮았지만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1970년대 전반에는 역전되어 북한의 자연증가율이 남한을 능가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다시 남한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남한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북한의 자연증가율이 남한을 크게 앞지르다가 1990년 후반에는 다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남한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수준에 이르면서 일시적이거나 남북한의 자연증가율 차이가 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구이동이 남북한의 인구

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0년 전반을 제외하고는 폐쇄인구, 곧 순이동률이 제로로 가정되고 있다. 탈북자가 적지는 않으나 북한의 인구변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문호일, 2011; 이석, 2011). 반면에 남한은 1960년대 전반부터 1980년 이전까지 인구의 해외유출로 남북한 인구성장률의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는 순유입이 진행되어 남북한 간 차이를 늘리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까지는 다시 해외유출이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순유입이 많아지면서 북한과의 인구성장률 차이를 줄이게 되었다.

최근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률 차이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구변동요인을 보면, 출생률은 북한이 남한보다 높지만 사망률은 남한이 북한보다 낮아서 자연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모두 국가주도의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도 남한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북한의 자연증가가 남한보다 빨라지게 되었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남한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남북한의 인구성장률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림 I-22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요인 차이(남한-북한), 195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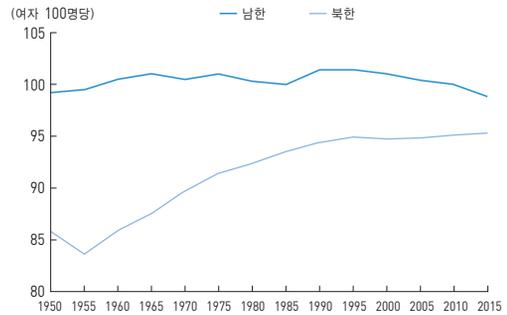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확성을 고려하여, 1950-1980년은 UN 추계인구, 1990년 이후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인구 성비구조의 비교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가 얼마인지를 말해주는 성비를 살펴보면, 북한의 성비는 꾸준히 개선되어 최근에는 9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비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경제발전, 남성 중심적 규범에 따른 남아선호사상, 남녀 간 차별사망력 등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성비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한국전쟁이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민족해방전쟁’에 종군한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의 남성들이 전쟁 중 상당수 사망함으로써 대규모 인력난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성별 인구구조를 심하게 왜곡시켰다. 1950년대에 전체인구의 성비는 정상성비 100보다 낮은 훨씬 낮은 85 수준에 머물렀으나 꾸준히 개선되어 1995년에는 95에 이르러 최근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23).

반면에, 남한인구의 성비는 거의 60년(1960-2010년) 동안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1950년대에 100에 약간 못 미친 것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여성 대비 남성의 초과사망에 기인한다. 2010년대에 성비가 다시 100을 약간 밑돌기 시작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령층에서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I-23 남북한 인구의 성비, 1950-2015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확성을 고려하여, 1950-1980년은 UN 추계인구, 1990년 이후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인구 연령구조의 비교

남북한 인구의 연령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표 I-12>에는 0-14세(유소년인구), 15-64세(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고령자인구)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1950-2015년의 65년간에 북한은 43.4%에서 20.5%로 감소하고 남한은 42.5%에서 13.9%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북한이나 남한 모두 감소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편인데, 1955-1970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1975년 이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범국가적 가족계획사업으로 유소년인구의 구성비가 급감하였다. 그 이후에도 유소년인구의 구성비가 계속 감소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2.0명을 밑돌다가 2000년 중반에는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의 인구체제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연령대(15-64세)의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0-2015년의 65년 동안에 북한은 53.5%에서 70%에 근접하게 되

고, 남한은 54.6%에서 7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남한은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최근 20여 년간 노동력 공급이 사실상 최고에 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고용이 있기는 하지만 기근피해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의 개혁 및 개방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곧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0-2015년의 기간에 북한은 195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9.0%로 고령화사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고령자인구의 비율이 1950년의 2.9%에서 1980년까지는 4%를 밑돌다가 1990년 이후에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북한보다 일찍이 7%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13.1%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사회정책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표 1-12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북한 인구의 구성비, 1950-2015 (%)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50	42.5	43.4	54.6	53.5	2.9	3.1
1955	40.3	38.8	56.3	57.9	3.4	3.3
1960	40.9	37.7	55.4	59.1	3.7	3.2
1965	43.0	36.7	53.6	60.1	3.4	3.2
1970	42.1	41.6	54.6	55.2	3.3	3.2
1975	38.2	39.7	58.4	57.0	3.5	3.2
1980	33.9	36.3	62.2	60.1	3.9	3.6
1985	30.1	31.0	65.6	65.1	4.3	3.9
1990	25.6	26.8	69.4	68.9	5.0	4.4
1995	23.4	27.0	70.7	67.4	5.9	5.7
2000	21.1	26.5	71.7	67.2	7.2	6.3
2005	19.2	24.9	71.7	67.4	9.1	7.7
2010	16.1	22.4	72.8	68.6	11.0	9.0
2015	13.9	20.5	73.0	69.3	13.1	10.2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합성을 고려하여, 1950-1990년은 UN 추계인구, 1990년부터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부양인구의 비교

이제 남북한의 총부양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총부양인구

비의 분모인구는 생산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 연령대의 인구이다. 북한의 경우 의무교육이 끝나고 16세부터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남북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15-64세 인구를 분모인구로 설정하였다. 총부양인구비의 분자인구인 피부양인구는 0-14세의 유소년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합한 인구이다.

남한의 총부양비는 1950년의 83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1965년에 87로 높아졌다가 이후 본격적으로 저하하여 2010년에는 38에 이른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남한의 총부양비 변화는 사실상 합계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북한의 총부양비는 1950년의 87에서 1965년에는 67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여 1970년

에 81에 이른 후 계속 하락하여 1990년에 45로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약간씩 상승한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보았듯이,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유소년인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종합과 전망

2013년 현재 남한의 인구는 5,022만 명이고, 북한의 인구는 2,454만 명으로 북한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이다. 북한인구의 상대적 크기는 해방 이후 감소하다가 1970년대 이후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았으나 1970년 이후 역전되기 시작한다. 남북한 인구성장률 차이에는 출생률이나 사망률과 같은 자연증가율의 차이가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이동은 북한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고 남한의 인구성장률 변화에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

북한인구의 성비는 1950년대에는 100에 훨씬 미달하였지만, 최근에 이르러 100에 근접하게 되었다. 남한은 1950년대부터 성비가 100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최근에 이르러 100 이하로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남한이 북한보다 약간 많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0-14세의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남한이 북한보다 빠르게 감소

표 I-13 남북한 인구의 부양비 구조, 1950-2015

연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50	83	87	78	81	5	6
1955	78	73	72	67	6	6
1960	81	69	74	64	7	5
1965	87	67	80	61	6	5
1970	83	81	77	75	6	6
1975	71	75	65	70	6	6
1980	61	66	55	60	6	6
1985	52	54	46	48	7	6
1990	44	45	37	39	7	6
1995	41	47	32	40	8	8
2000	39	47	29	38	10	9
2005	40	47	27	36	13	11
2010	38	46	22	33	15	13
2015	37	44	20	31	18	14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64세 이상 고령자인구는 남한이 북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남북한 인구의 부양비를 비교해 보면, 2010년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유소년부양비가 작고 노년부양비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남북한 사회

가 모두 총부양비가 낮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은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가 북한보다 빠르기 때문에 남한의 총부양비는 북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두섭 · 최민자 · 전광희 · 이삼식 · 김형석. 2011. 「북한인구와 인구센서스」.
문호일. 201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人口国動—人口変から読み解く朝鮮社会主義」.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이 석. 2011.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홍 민. 2013. “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통일정책연구』 22(1): 297-334.

Korean Social Trends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2014

Family & Household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I 가족과 가구

- 01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62
- 02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한경혜 | 서울대학교 73
- 03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한경혜 | 서울대학교 80
- 04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7

01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서울대학교)

-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2세대 가구와 한부모가구 및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노인의 자녀동거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노인 부부가구와 독거노인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만혼화 현상과 함께 결혼을 선택사안으로 보는 가치관도 증대되고 있다.
- 이혼율의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중장년층의 이혼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맞벌이가족의 증가와 함께 아동보육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가정 내에서 자녀돌봄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한국 가족의 구조, 형성과정 및 가족원 간의 관계에 광범위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족의 주요 변화 추이와 현주소를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 측면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한부모가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한 가구규모의 축소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가족형성 부분에서는 만혼화 및 이혼율 변화 추이와 이와 관련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다.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여성취업의 증가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증가가 부부관계 및 자녀돌봄에 가져온 변화 양상을 짚어본다.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노인부양 의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가족구조의 소규모화

1인가구의 증가

한국 가족은 가구규모의 축소가 장기간 지속되어 평균 가구원수가 1985년 4.1명에서 2010년 2.8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줄고 2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현상과 관련된다. 3세대 이상 가구는 1990년 12.5%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0년에는 6.1%로 감소하였다. 한편, 1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8%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율이 높아지고 노년층에서 노인독거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혼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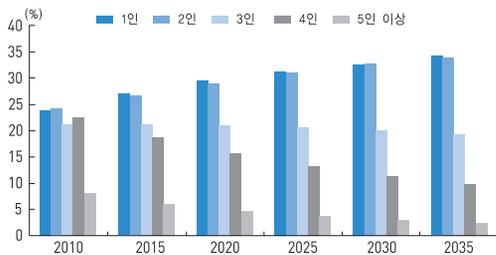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가구원수와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1990	1995	2000	2005	2010
평균가구원수(명)	3,7	3,3	3,1	3,0	2,8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인가구	9,0	12,7	15,5	19,9	23,8
1세대 가구	10,7	12,7	14,2	16,2	17,4
2세대 가구	66,3	63,3	60,8	55,4	51,2
3세대 이상 가구	12,5	10,0	8,4	6,9	6,1
비혈연가구	1,5	1,4	1,1	1,4	1,1

주: 1) 일반가구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 1인가구 등을 포함함.
 2)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3)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 + 자녀 + 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1인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2025년, 2035년에 1인가구는 각각 전체 가구 중 27.1%, 31.3%, 34.3%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2인가구는 각각 26.7%, 31.2%, 3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2인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부터는 1인가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림 II-1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율, 2010-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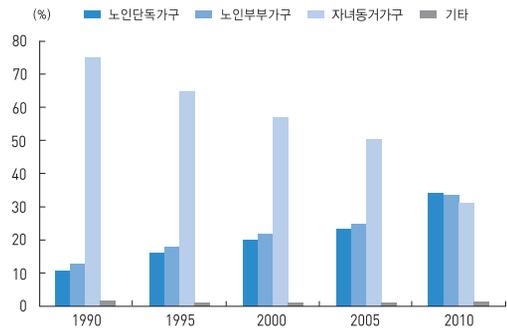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

노인가구의 증가

한국의 가구구성의 변화에는 노인인구의 거주유형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독거가구나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것이 1인가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5.3%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2010년에는 30.8%로 절반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II-2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2) 기타 가구는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세대 가구, 비친족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노인독거가구의 증가는 노인부부가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기보다는 계속 독립주거를 선택하는 노인이 증가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이 노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태도 또한 변화하여 자발적 별거가 증가한 것이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립주거를 하더라도 노부모와 자녀세대 간 접촉 및 다양한 지원 교환을 통하여 가구단위를 뛰어넘는 상호작용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3세대가족의 규범 및 특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독립주거에 필요한 건강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들의 비자발적 별거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자녀세대 또한 노부모를 부양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빈곤계층의 경우에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돌봄의 공백과 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만 65세 이상 노인 독거가구는 총 가구의 6.9%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의 3.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약 20년 후인 2035년에는 15.4%가 노인독거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43.6%)인 것으로 보고되며, 전체 노인인구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4명 중 3명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부모가구의 증가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 간 서서히 증가하였다. <표 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0년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나 2010년에는 9.2%로 증가하였다.

표 II-2 한부모가구 비율과 가구주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1990-2010 (%)

연도	한부모 가구 비율	가구주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1990	7.8	56.0	8.9	9.6	25.5
1995	7.4	54.8	12.9	9.8	22.5
2000	7.9	44.7	21.9	10.9	22.5
2005	8.6	36.6	29.1	10.4	23.9
2010	9.2	29.7	32.8	11.6	25.9

주: 1) 한부모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한부모가구를 혼인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유사한 비율로 유지된다. 배우자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떨어져서 지내는 주말부부와 기러기가족과 같은 가족분거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송유진, 2012). 한부모가구 중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미혼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지난 1990년에는 한부모가구 중 8.9%만이 이혼으로 형성되었으나 2010년에는



이 비율이 32.8%에 달한다. 한편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구와 모자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모자가구가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가족제도의 해체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자 적응으로서 한국 가족이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형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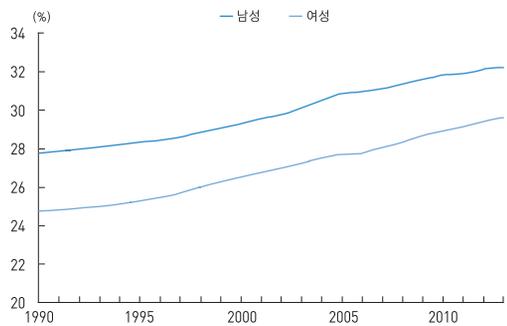
만혼화 경향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가령 남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7.8세였으나 2013년에는 32.2세로 상승하였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13년에는 29.6세로 상승하였다. 약 20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각각 4.4세와 4.8세 상승한 것이다(그림 II-3).

이처럼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현상이지만,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와 취업난으로 결혼의 경제적 여건 확보의 어려움이 최근의 미혼율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감소한 반면, 결혼과 함

께 여성이 짊어지게 될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결혼하지 않는 미혼인구가 늘어나고 결혼시기가 뒤로 늦추어지는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직결되며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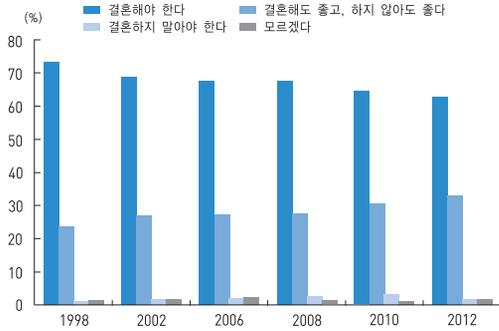
그림 II-3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3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이러한 만혼화 경향은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혼에 대한 선택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2002년 69.1%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10년 후인 2012년에는 그 비율이 63.0%로 줄어들었고, 결혼을 선택사안이라고 보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7.2%에서 33.4%로 증가하였다(그림 II-4).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이 개인의 선택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4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2



주: 1)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문 되었음.
 2) 만 15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부 간 연령차 이별 혼인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의 나이가 아내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갑끼리의 결혼과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혼인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남편이 연상인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동갑끼리의 결혼과 아내가 연상인 결혼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남편이 연상인 혼인형태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아내가 연상인 결혼이 지난 20년 동안 2배 정도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II-3). 이러한 경향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 비하여 결혼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 약해지고 애정과 친밀감을 중시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여성의

나이가 결혼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3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혼인 비율, 1990-2013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1990-2013 변화(%p)
남편 연상	82.2	81.0	76.5	72.8	69.1	67.6	-14.6
동갑	9.0	10.3	12.8	15.1	16.0	16.2	7.2
아내 연상	8.8	8.7	10.7	12.1	14.9	16.2	7.4

주: 1) 혼인비율은 전체 초혼건수 중 해당 유형의 초혼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혼의 추이와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혼 추이를 살펴보면, 이혼건수는 2003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4년의 전년 대비 이혼건수는 이혼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모두 200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표 II-4>에서 보듯이 2013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만 5,300건으로 2009년의 12만 4,000건에 비해 8,700건 감소(-7.0%)하였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도 2013년 2.3건으로 2009년 2.5건보다 0.2건 감소하였고, 15세 이상 남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일반이혼율도 남녀 각각 0.6건과 0.7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혼 감소에는 2008년부터 도입된 이혼숙려기간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 제도가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결혼 상태에 있는 남녀의 숫자와도 관계된다. 우선 만혼과 비혼의 증가로 인해 미혼이 증가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는 무관하며, 이들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이혼발생의 사례를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이미 이혼을 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누적됨으로써 이혼 발생건수가 점차 낮아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건수가 매년 10만여 건을 넘고 있는 것은 이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수용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이혼 당시 남성과 여성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혼 시 평균연령은 2002년과 2013년 사이에 남성이 40.6세에서 46.2세로, 여성이 37.1세에서 42.4세로 높아졌다. 이혼연령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 자체가 상승한 탓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결혼 후 15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5.2%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17.8%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3년에는 전체 이혼 중 28.1%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년세대의 이혼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부부결속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 이후의 이혼 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표 II-4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2002-2013

연도	이혼건수 (1,000건)	조이혼율 (%)	일반이혼율(%)		평균이혼연령(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2	144.9	3.0	7.6	7.5	40.6	37.1
2003	166.6	3.4	8.7	8.5	41.3	37.9
2004	138.9	2.9	7.2	7.1	41.7	38.2
2005	128.0	2.6	6.6	6.5	42.1	38.6
2006	124.5	2.5	6.3	6.2	42.6	39.0
2007	124.1	2.5	6.2	6.1	43.2	39.5
2008	116.5	2.4	5.8	5.7	44.3	40.5
2009	124.0	2.5	6.0	6.0	44.5	40.7
2010	116.9	2.3	5.6	5.6	45.0	41.1
2011	114.3	2.3	5.4	5.4	45.4	41.5
2012	114.3	2.3	5.4	5.3	45.9	42.0
2013	115.3	2.3	5.4	5.3	46.2	42.4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2) 일반이혼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건수,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등이 그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지표들은 주어진 기간의 발생건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혼율에 비해 재혼율이 낮고 매년 10만여 건 이상의 이혼이 유지된다면, 주어진 시점에서 이혼자의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2000년과 2010년 자료에 의하면, 10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에서 이혼자의 수와 비율은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표 II-4>의 이혼건수, 조이혼율, 일반이혼율과는 달리 이혼자들이 꾸준히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현재 남성 이혼자는 모두 72만여 명으로 15세 이상 남성 중 3.6%를, 여성 이혼자는 모두 89만여 명으로 15세 이상 여성 중 4.4%를 차지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 이혼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남성의 재혼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 또한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2년 실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0%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 및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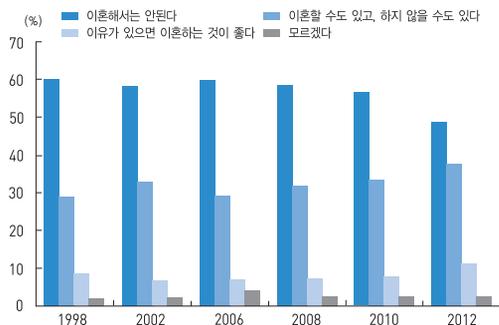
가족관계의 변화

맞벌이가족 증가와 부부관계 변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0%를 넘어 서면서 전체 가구 중 맞벌이가구가 약 1/3을 차지하게 되었고, 맞벌이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남성가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기존의 가족 내 성역할 분업에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에 따른 가족 내 돌봄 노동의 공백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직업역할과 임신, 출산, 양육의 가족책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 내 역할과 책임이 남녀 간에 보다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임신과 출산 시기에 현저히 감소하는 소위 ‘M자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즉 아직도 많은 여성이 가족역할 병행이 어려워 취업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M자의 함몰부분이 점차 덜 도드라지는 방향으로

그림 II-5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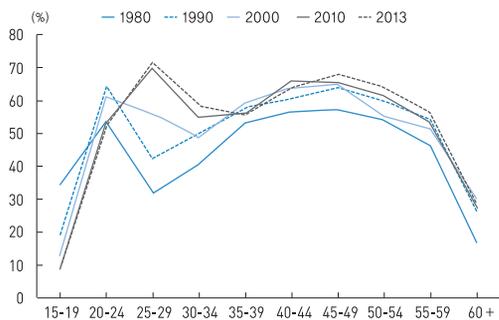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만 15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변화하는 경향도 관찰된다(그림 II-6). 이는 가족역할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현상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간의 평등한 성역할 분담이 이러한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실증자료가 부족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부부 간 성역할 분업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출산자녀수의 감소에 기여하였고, 이는 부부중심성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부부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남성의 가족역할 공유나 부부 간 정서적 유대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부부관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상도 관찰된다.

그림 II-6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980-2013



주: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여성 인구 × 100.
 2) 1980년과 1990년 자료는 구직기간 1주 기준이고, 2000년 이후 자료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맞벌이가족 증가와 아동양육 방식의 변화

가족 내 아동의 주된 양육자가 어머니라는 점에서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족 내 아동양육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시기인 30-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현재 56.9%로 성인 여성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모의 경우 74%가 낮 시간 동안 자녀를 보육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가 아닌 여성의 경우 47.9%가 자녀를 기관에 맡기는 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아동보육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14% 정도이다.

표 II-5 영유아가구의 낮 시간 주된 자녀 보육자, 2012

	부	모	조부모	친인척	육아 전문인력	기관
전체	0.1	37.5	5.4	0.2	0.6	56.0
모취업	0.4	9.7	13.0	0.8	1.9	74.0
모미취업	-	51.4	0.7	-	-	47.9

주: 1) 영유아가구는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임.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

미취학 자녀들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7시간이다. 취업모의 경우 평균 4시간 29분인 데 비해 미취업모는 8시간 22분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약 1/3이 하루 평균 3시간 이하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고, 85.7%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평균치인 7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남짓이며,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자녀돌봄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의 취업이 남성의 적극적 돌봄 참여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I-6 영유아가구 부모의 평일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2012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균 시간 (시간)
	없음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어머니							
전체	1.1	11.6	37.9	26.2	12.5	10.7	7.05
모 취업	3.1	30.2	52.4	11.3	2.1	0.9	4.48
모 미취업	0.0	1.9	31.3	34.9	16.9	14.9	8.36
아버지							
전체	15.3	67.5	12.9	1.0	0.6	2.7	2.03
모 취업	14.6	65.3	14.9	1.4	0.3	3.5	2.12
모 미취업	16.2	68.6	11.7	0.8	0.7	1.9	1.95

주: 1) 영유아가구는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임.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

자녀보육의 사회화는 비단 맞벌이가구에만 국한되는 변화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을 돌보는 기관이나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벌이가구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 경우는 약 3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보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외벌이가구의 자녀들은 반일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2-3시경에 귀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돌봄이 가족돌봄과 기관돌봄의 양립체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사분담 태도 및 양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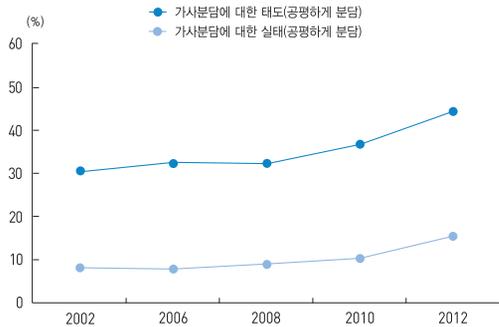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성역할 분업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에 30%를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45%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 II-7). 아직도 아내가 가사를 맡아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지만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태도도 상당히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가사분담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가사를 부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12년 현재 15.5%에 그치고 약 30%의 가정에서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에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커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를 맡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15%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 간 가사의 공평한 분담은 태도 변화만큼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의 가



사 참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7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2-2012



주: 1)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만 15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기혼 여성이 응답한 결과로, 이들 중 평소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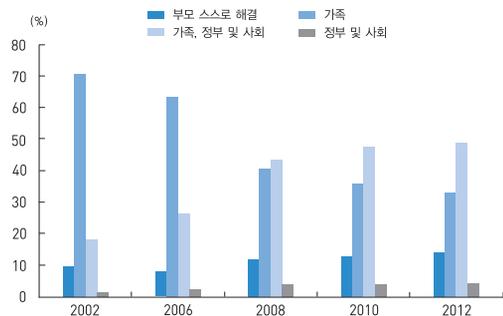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최근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사회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인돌봄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초고령까지 생존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노인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이 된다. 과거에는 자녀, 그 중에서도 장남과 며느리가 주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규범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배우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

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하여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돌보는 전통적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된 때문이다. 이때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 역시 노인이라는 점에서 부양부담이나 건강악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로 나타나는 한국 가족의 구조적 핵가족화와 함께 진행된 정서적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인부양 규범 또한 급격히 약화되었다.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개인적, 사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또한 확대되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나타난 2002년과 2012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노부모 돌봄이 가족 책임이라는 견해는 감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정부·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그림 II-8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2002-2012



주: 1) 설문문항은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되었음(기타는 제외함).
 2) 만 15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3%였지만, 2012년에는 4.2%가 '가족이 아닌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8).

이처럼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이와 많은 차이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전 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복지 부문의 기여가 커지기는 하였으나 그 수준이 여전히 낮다. 가족의 지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사회정책적 지원의 증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노인부양이 부양자인 자녀세대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인 노부모 당사자에게도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자식에게 부담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한국 노인들의 큰 바람이 되고 있다.

노인부양의 주체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를 반영하듯이 노부모 스스로가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부모 세대의 절반이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아들이나 딸 등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이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는 반면,

아들과 딸이 함께 부양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자녀의 부모부양 형태 중 모든 자녀들이 책임지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장남과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을 합한 것보다 더 높다(표 II-7).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아들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II-7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주체, 2002-2012

연도	자녀				부모 스스로	기타
	장남	아들	딸	모든 자녀		
2002	24.4	17.1	2.3	11.5	44.3	0.5
2006	15.3	11.5	2.9	23.9	46.0	0.5
2008	14.5	10.4	2.7	25.9	46.0	0.5
2010	11.6	10.8	2.9	25.9	48.4	0.4
2012	10.6	9.2	3.1	28.3	48.5	0.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2012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노부모 생활비 부담 주체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관찰된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비율이 높아지며, 그 중에서도 장남을 포함한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이 높다. 한편,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공동책임의 비율도 높아진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부모가 고연령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나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송유진. 2012.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12」, 통계개발원.



02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한경혜 (서울대학교)

- 여성의 취업 및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여성이 가정에 전념하기보다 취업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다. 일-가족 우선성에 대한 여성들의 시각 또한 두 역할의 양립을 바람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계속 취업에 대한 동의 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양육 등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취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상당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학 전 자녀돌봄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비율도 29%로 상당 정도를 차지하지만,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약 5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지난 15년 동안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요건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꼽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육아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서고, 전체가 구 중 맞벌이가구가 약 1/3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상에서 일-가족 양립이 요구되는 여성 및 가족의 수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취업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일-가족 양립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원하지만 전업주부로 남아있는 여성들 중 자녀돌봄 등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으로 비자발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살펴보고,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논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종합사회조사」, 그리고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가족모듈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였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

먼저, 직업과 가족 역할 병행에 대한 여성들 스스로의 시각을 살펴보기 위해 일-가족 우선성에 대한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응답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41.7%가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하였고, 41.5%는 두 역할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 64.3%가 일을 우선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을 가정보



다 우선시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낮다. 그러나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여성은 16.8%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83%가 일과 가족 역할에 대해 양립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8).

표 II-8 취업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일-가족 우선성, 2013 (%)

	남성			여성		
	일 우선	비슷함	가정 우선	일 우선	비슷함	가정 우선
전체	64.3	27.7	8.0	41.7	41.5	16.8
연령						
20대	64.8	25.5	9.7	63.3	26.1	10.7
30대	61.4	28.1	10.5	38.6	40.5	20.9
40대	65.6	28.1	6.3	36.2	47.1	16.8
50대	67.9	26.3	5.9	38.6	45.1	16.3
60대 이상	60.0	31.1	8.9	33.6	47.0	19.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5.5	26.4	8.1	34.1	46.7	19.2
고등학교	66.8	26.6	6.6	38.3	44.9	16.8
대학 이상	62.2	28.9	8.9	48.5	36.1	15.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2.1	28.2	9.7	42.3	42.9	14.8
100-199만원	65.0	27.7	7.3	46.5	38.8	14.7
200-299만원	64.8	26.8	8.3	43.2	40.4	16.3
300-399만원	64.3	27.9	7.7	37.5	43.9	18.7
400-499만원	63.4	28.0	8.5	39.5	44.1	16.4
500만원 이상	63.8	28.6	7.6	38.6	41.4	20.1

주: 1)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만 20세 이상 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경우는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남성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일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진다. 결혼 전 혹은 첫 아이를 낳기 전인 20대의 경우 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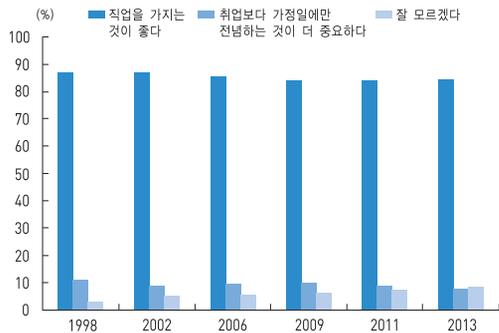
우선시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남성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결혼 후 자녀양육 역할을 실제 수행하게 되면서 두 역할을 비슷한 비중으로 여기게 됨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일 우선적 태도에 있어 교육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체계적 경향성도 관찰되지 않는 반면, 여성은 교육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더 높는데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5% 내외로 가장 높지만, 대학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다.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비율이 줄어들고, 일과 가정을 비슷한 비중으로 보거나 가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위의 결과는 여성들 스스로가 '가정 우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일과 가족 역할에 대해 양립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그림 II-9]는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여성취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80%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의 84% 정도가 여성취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가정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견해는 7.4%에 불과하다. 여성이 가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인식은 1991년 22.5%에서 1998년 10% 내외로 크게 낮아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림 II-9 여성취업에 대한 의견, 199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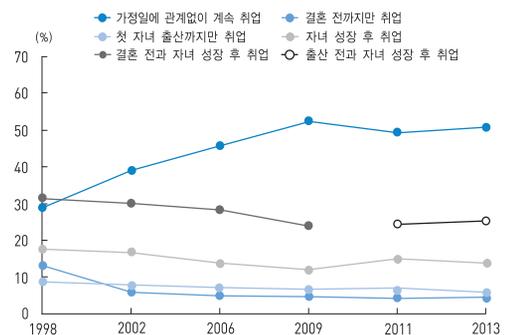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귀하는 여성취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되었음.
 2) 만 20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의 변화 추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취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비율은 큰 등락이 없으나, [그림 II-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성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비율은 변화가 크다는 점이다.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998년 29.0%에서, 2006년 45.8%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52.4%에 달하였다. 반면, 자녀출산 전이나 자녀가 성장한 후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출산이나 자녀연령 등 가족주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9년을 기점으로 둔화 내지는 약간 역전되어 2013년 현재 가족주기에 상관없이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약 절반에 머문다. 나머지 44.9%는 출산 전이나 자녀가 성장한 후에 직업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즉 자녀돌봄이나 양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취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일정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이 자녀유무나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는 가족돌봄, 특히 어린 자녀의 돌봄 및 양육과 직장일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림 II-10 여성의 바람직한 취업시기에 대한 의견, 1998-2013



주: 1) 설문문항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질문되었음.
 2) 만 20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3) 2011년부터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 취업'이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 취업'으로 변경되어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렇다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모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바람직한 분할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과 가정생활의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는 시간제 취업, 아버지는 전일제 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4.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어머니는 집, 아버지는 전일제 취업’이라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40.8%로 나타난다. 즉 응답자들의 85% 정도가 아버지는 전일제 취업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 있거나 혹은 시간제 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어머니가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주로 맡고 이에 따라 취업 상황 역시 조절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표 II-9).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여성취업에 찬성을 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가 여성의 취업 시기를 가정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던 것과 일관된 양상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는 시간제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시간제 취업에 대한 선호는 20대와 고등학교 이상 학력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남성, 60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저학력층에서 전통적 성별분업 방식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는데,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

과 6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전통적 성별분업을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10〉은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가정과 직장 분할방식 태도에 있어서의 국가 간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표 II-9 미취학 자녀 가정의 이상적인 가정-직장생활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 2012

	어머니는 집, 아버지는 전일제 취업	어머니는 시간제 취업, 아버지는 전일제 취업	부모 모두 전일제 취업	부모 모두 시간제 취업	아버지는 시간제 취업, 어머니는 전일제 취업	아버지는 집, 어머니는 전일제 취업
전체	40.8	44.3	9.1	4.9	0.7	0.1
성						
남성	45.1	39.2	10.3	4.4	0.6	0.3
여성	36.7	49.1	8.0	5.4	0.9	0.0
연령						
20대	24.5	53.9	13.7	7.5	0.0	0.4
30대	43.7	42.0	8.7	4.2	1.4	0.0
40대	38.7	47.0	8.7	5.3	0.3	0.0
50대	42.3	46.5	5.8	5.0	0.4	0.0
60대 이상	53.0	33.0	9.3	3.2	1.1	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9.7	38.7	8.0	3.4	0.3	0.0
고등학교	40.6	48.1	6.3	4.1	1.0	0.0
대학 이상	36.1	44.7	11.7	6.3	0.8	0.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6.4	39.3	9.2	4.6	0.5	0.0
100-199만원	47.2	43.3	5.1	3.4	0.6	0.6
200-299만원	39.8	43.1	9.7	6.5	0.5	0.5
300-399만원	37.7	48.1	7.8	5.6	0.9	0.0
400-499만원	39.0	41.9	14.5	4.1	0.6	0.0
500-599만원	31.2	57.8	7.3	3.7	0.0	0.0
600만원 이상	41.7	41.7	9.9	5.0	1.7	0.0

주: 1) 설문문항은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되었음.
 2) 만 20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어머니는 집, 아버지는 취업’ 방식의 전통적 성별분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비율이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만이나 일본,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보다는 이러한 태도가 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등하게 전일제 취업 혹은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

국에서는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직업경력에 상당 기간 단절된 이후에 여성이 재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저임금, 비상용 일자리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직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여성의 취업불연속성과 짧은 취업경력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다시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 내 주변적 위치에 머물게 한다. 즉 여성의 취업단절과 경력불안의 주요 요인이 인적자본보다는 여성의 가족역할에 기인한다고 분석되는 것이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돌봄 제공자는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족과 정부가 각각 55.3%와 29.3%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이 전적으로 사적 영역의 책임이 아니라는 시각이 상당히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주라는 의견은 2.9%에 불과하여 일-가족 양립에 일터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돌봄 주체로 보는 응답은 필리핀, 멕시코, 대만, 일본, 영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한국은 그 뒤를 잇는다. 필리핀의 경우 응답자의 96.9%가 가족이라고 응답했고, 멕시코는 82.6%, 대만은 76.8%, 일본은 76.6%이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돌봄의 주체가 가족이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0% 미만으로 상당히 낮고, 대신 정부기관이 미취학 자녀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60-80% 정도로 상당히 높다. 유럽 국가들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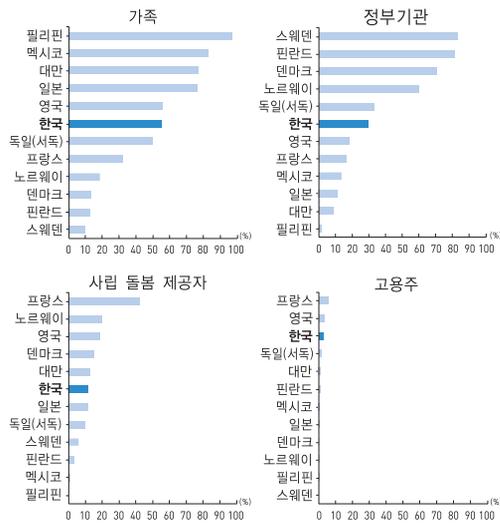
표 II-10 주요 국가의 미취학 자녀 가정의 이상적인 가정-직장생활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 2012 (%)

국가	어머니는 집, 아버지는 전일제 취업	어머니는 시간제 취업, 아버지는 전일제 취업	부모 모두 전일제 취업	부모 모두 시간제 취업	아버지는 시간제 취업, 어머니는 전일제 취업	아버지는 집, 어머니는 전일제 취업
한국	40.8	44.3	9.1	4.9	0.7	0.1
대만	52.1	34.0	11.9	1.5	0.2	0.3
일본	57.8	37.5	3.7	1.0	0.0	0.0
필리핀	60.4	25.4	9.0	2.9	1.2	1.0
덴마크	5.8	47.9	29.8	15.3	0.9	0.3
핀란드	19.7	42.6	24.7	12.4	0.3	0.2
노르웨이	9.7	42.4	25.6	21.4	0.7	0.2
스웨덴	10.7	32.4	16.1	39.1	1.4	0.3
프랑스	21.7	48.4	16.0	13.2	0.5	0.3
독일(서독)	30.0	50.2	2.8	16.2	0.5	0.3
영국	39.5	48.9	5.6	5.8	0.0	0.1

주: 1) 설문문항은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만 20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14.

서도 독일(서독)이나 영국은 미취학 자녀돌봄의 주체가 가족이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0% 내외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II-11).

그림 II-11 주요 국가의 미취학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의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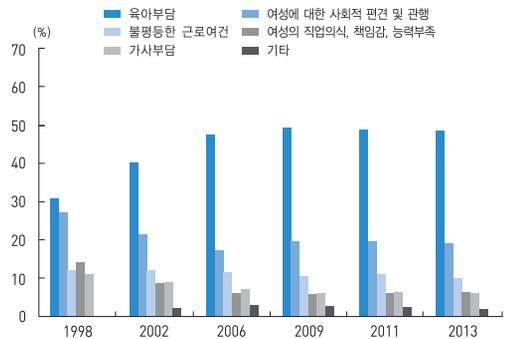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취학전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귀하가 보시기에는 돌봄 제공은 주로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만 20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14.

여성의 일-가족 양립 장애요인

실제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있어 자녀돌봄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라는 점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여성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편견이나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

자신의 직업의식이나 능력 부족 등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육아부담을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꼽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1998년에 30.8%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40.2%, 2006년에는 47.4%, 2013년에는 48.5%로 증가하였다(그림 II-12).

그림 II-12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1998-2013



주: 1) 설문문항은 '여성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만 20세 이상 응답자의 1순위 응답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자녀수는 감소하는데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을 일-가족 양립의 장애요인으로 보는 비율은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고 보육서비스가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일차적 주체는 여전히 가정 내 여성이며,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자녀돌봄 역할이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은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이가 있다. 육아부담을 장애요인



표 II-11 사회경제적 특성별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2013 (%)

	육아 부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의 직업 의식, 책임감 및 능력 부족	가사 부담	기타	잘 모름
전체	48.5	19.2	10.0	6.3	6.2	1.9	7.9
성							
남성	45.3	20.7	9.3	8.5	5.4	1.5	9.3
여성	51.5	17.7	10.7	4.3	6.9	2.5	6.5
연령							
20대	41.3	25.4	13.5	8.2	3.4	2.0	6.3
30대	56.7	17.7	10.3	5.7	4.0	1.7	3.9
40대	47.6	19.5	11.0	7.3	7.0	2.2	5.3
50대	44.4	20.8	10.1	6.9	7.8	2.7	7.3
60대 이상	50.9	14.1	5.8	4.0	8.1	1.3	15.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7.5	14.9	6.9	3.8	8.8	1.9	16.2
고등학교	45.0	20.2	11.3	6.4	7.6	2.2	7.3
대학 이상	51.5	20.7	10.6	7.6	3.8	1.8	3.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5.3	16.6	7.5	4.5	7.6	2.1	16.4
100-199만원	44.6	19.8	10.9	5.3	7.3	2.1	10.0
200-299만원	47.8	20.1	10.3	6.7	5.9	2.3	6.8
300-399만원	49.9	20.4	10.7	7.1	5.2	2.1	4.7
400-499만원	52.4	18.2	10.7	6.6	6.3	1.6	4.2
500만원 이상	54.7	18.8	9.4	8.3	4.4	1.1	3.3

주: 1) 설문문항은 '여성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만 20세 이상 응답자의 1순위 응답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 20대에 비해 30대 이상 연령에서 육아부담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특히 30대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11).

한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아 부담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사부담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가족 내 역할 중에서도 가사에 대한 부분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도우미 등 대체자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육아의 경우는 대체자원을 통해서도 부담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03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한경혜 (서울대학교)

- 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과 가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 두 역할을 양립 시키는 데 더 큰 부정적 영향과 갈등을 겪고 있다.
- 일-가족 두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갈등 경험 정도를 국가 간 비교한 결과, 가족으로부터 일로의 부정적 영향은 비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영향은 멕시코,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사분담이 남녀 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한국은 가사역할 분담의 평등성 정도가 낮은 편이다.
-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고용업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가운데 출산휴가의 도입률이 가장 높고 활용률도 높은 편이다. 그 외의 다른 제도들을 실시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높지 않다. 육아휴직의 도입률은 아직 낮지만 사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취업 증가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일-가족 양립 방식과 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시선 또한 우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일-가족 역할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긴 노동시간, 불충분한 보육서비스, 가족 내 가사분담 불균형 등으로 인한 과도한 역할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종합사회조사」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가족모듈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겪는 부정적 전이 경험과 가족역할 분담 실태를 한국과 주요 국가들 간에 비교한 다음,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가족 양립을 위해 어떤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일-가정생활 양립 관련 경험

가족과 직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두 개의 제도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역할 수행자의 시간과 신체적, 심리정서적 에너지 자원을 경쟁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여성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어머니와 아내로서 가정역할의 주된 책임자라는 점에서 '두 개의 직장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종종 두 영역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압도당하게 되는데, 한 영역에서 역할 수행에 시간을 빼앗기거나 에너지가 소진되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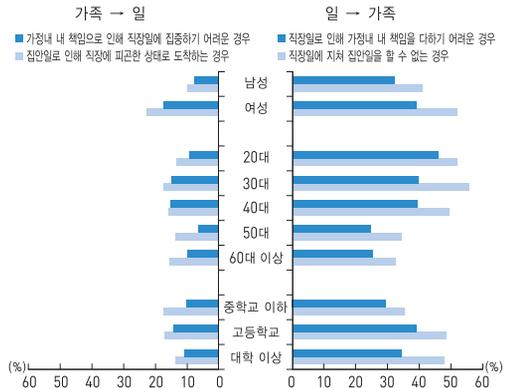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일-가족 영역 간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라고 한다. 그 방향성에 따라 직장으로부터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 즉 직장일 때문에 가족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가족으로부터 직장으로의 부정적 전이, 즉 집안일 수행이나 집안 내 자신의 책임 때문에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II-13]은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20세 이상 취업자 867명의 일-가족 부정적 전이 경험률을 분석한 것이다. 직장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 경험은 '직장 일에 지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해야 할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직장일을 너무 오래 해서 가정내 내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가 지난 3개월간 얼마나 있었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반대 방향의 전이, 즉 가족에서 직장으로의 부정적 전이는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직장에 도착한 경우'와 '가정내 내 책임 때문에 직장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경우'로 측정하였다. 이 그림에서는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를 '한 달에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과 '1주일에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의 왼쪽은 가족역할 때문에 직장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비율을, 오른쪽은 직장역할 수행 때문에 가족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그래프의 왼쪽 막대와 오른쪽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직장역할 수행이 가족역할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 반대 방향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3 취업자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일-가족 영역간 부정적 전이 경험률, 2012



주: 1) 일-가족 영역간 부정적 전이 경험률은 만 20세 이상 취업자 중 지난 3개월동안 해당 일-가족 영역간 부정적 전이 경험을 '한 달에 여러 번'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족 양립에 따른 부정적 전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52.2%가 직장일에 지쳐 집안일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적이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있었는데, 남성의 경험 비율은 그보다 11%p 이상 낮다. 약 40%에 달하는 여성들이 직장일로 가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하기 어려웠던 적이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이러한 경우가 약 32% 정도이다. 가족으로부터 일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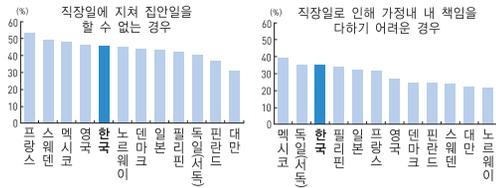
부정적 전이 경험은 그 반대 방향보다 남녀 간 차이가 더 크다. 여성은 집안일로 인해 직장에 피곤한 상태로 도착한 경우가 22.6%이고, 가정 내 내 책임으로 인해 직장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17.2%로 남성보다 각각 12.9%p와 9.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 퇴근 후 가족돌봄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자들에게 일-가족 양립이 특히 힘든 경험임을 보여준다.

연령별 차이도 관찰되는데, 가족으로부터 일로의 부정적 전이를 경험한 비율은 30대와 40대가 타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고, 일로부터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를 경험한 비율은 4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에 비해 10-20%p 정도 더 높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집안일 수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직장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 집단이 일로부터 가족으로 전이되는 부정적 영향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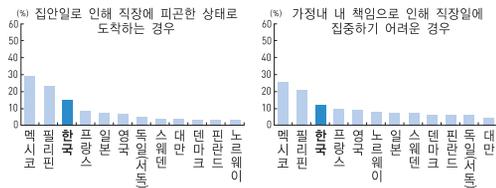
일-가족 영역 간 부정적 전이 정도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14]와 같다. 가족으로부터 일로의 부정적 전이 정도는 한국이 멕시코와 필리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 수준도 비교국들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두 영역 간의 긴장과 갈등을 나타내는 부정적 전이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는 것은 한국인에게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II-14 주요 국가 취업자의 일-가족 영역간 부정적 전이 경험률, 2012

1) 일 → 가족



2) 가족 → 일



주: 1) 일-가족 영역간 부정적 전이 경험률은 만 20세 이상 취업자 중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일-가족 영역간 부정적 전이 경험을 '한 달에 여러 번'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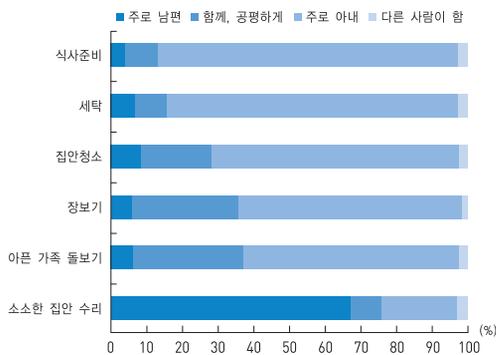
일-가족 양립과 가족 내 역할분담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역할 분담방식에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61.5%,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 남편의 현재 가사분담 정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5.4%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가사분담에서 부부 간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 간 역할분담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림 II-15]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배우자가 있는 만 20세 이상 7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집안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가사는 아내가 주로 맡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난다. 가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식사준비와 세탁은 80% 이상이 여성이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아픈 가족 돌보기와 장보기, 그리고 집안청소는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20~30%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집안수리의 경우 70% 정도가 주로 남편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안수리를 남성의 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수행 비율이 특히 높은 식사준비와 세탁은 다른 가사유형보다 훨씬 더 반복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특히 이들 영역에서의 남성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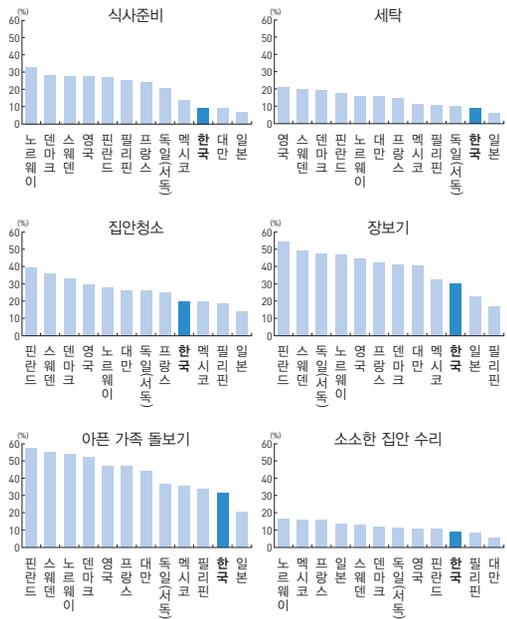
그림 II-15 가사영역별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 2012



주: 1) 만 20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부부가 공평하게 혹은 함께 가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국가 간에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전 영역에서 가사역할 수행의 평등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16). 아픈 가족 돌보기의 경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그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식사준비, 집안청소, 장보기의 경우

그림 II-16 주요 국가의 가사영역별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 2012



주: 1) 통계치는 해당 가사일을 부부가 함께 또는 공평하게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만 20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14.

에도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분담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10%p 이상 더 높게 나타난다.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부모권과 노동권이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존중된다. 사적 영역, 즉 가정에서의 공평한 가사분담이 이들 국가 여성들이 부모권과 노동권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 지원제도

일-가족 양립을 위한 공적 영역, 즉 사회적 여건은 어떠한가?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상 여성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의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2013년 2월부터는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돌봄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도 육아휴직제도를 동일하게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년 2월부터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등 가족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에 연간 최장 90일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출산휴가제와 육아휴직제,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응답자의 70~80% 정도가 알고 있는

표 II-12 임금근로자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일-가족 양립 지원제도 인지도, 2013 (%)

	출산 휴가제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 휴직제	육아 근로 시간 단축제	직장 보육 지원	가족 돌봄 휴직제
전체	79.3	69.0	72.4	36.9	53.2	29.0
성						
남성	78.5	69.8	70.9	34.8	52.1	27.4
여성	80.3	67.8	74.6	40.0	54.7	31.2
연령						
20대	78.3	65.5	70.9	34.0	48.1	26.4
30대	83.8	76.2	77.4	41.6	58.0	29.8
40대	81.3	73.2	76.2	40.2	58.6	33.6
50대	76.9	63.9	68.7	33.9	50.1	27.7
60대 이상	62.1	47.0	52.7	22.3	34.8	17.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9.6	41.7	47.7	15.9	29.9	13.8
고등학교	75.7	64.0	67.2	31.2	50.3	25.1
대학 이상	85.6	77.8	80.8	44.9	59.8	34.5

주: 1) 인지도는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해당 일-가족양립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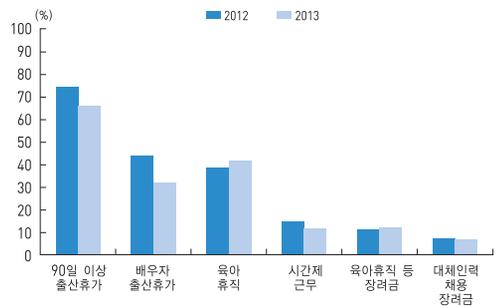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직장보육지원제는 절반 정도가 인지하고 있으나, 육아근로시간단축제와 가족돌봄휴직제는 각각 36.9%와 29.0%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제도들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30대와 40대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인지도가 낮으면 제도의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각종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일터에는 얼마나 도입되고 있는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2013년에 시행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산휴가제의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정 사용일수인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6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다른 제도들을 실시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사업체들 가운데 육아휴직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각각 42.0%와 32.4%이고, 가족돌봄휴직제를 시행하는 사업체는 10.1%에 불과하다. 문제

는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2년(38.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출산휴가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I-17 사업체의 일-가족양립 지원제도별 도입률, 2012, 2013



주: 1) 도입률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해당 일-가족양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3.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대규모 사업장과 정규직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는 비율이 높아서 종업원 100-299인과 300인 이상인 사업체들 가운데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각각 71.0%와 90.2%인 데 비해, 5-9인과 10-2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각각 17.3%와 30.7%에 그쳤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88.2%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1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5.6%에 그쳤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8%

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10인 미만과 10-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규직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각각 91.2%와 82.5%에 달하였다.

가족친화제도의 실제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활용률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63.4%이나 육아휴직 사용률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일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88.2%인 데 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0.5%에 불과하다(표 II-13).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 도입률은 아직 낮지만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3년 현재 6만 9,616명으로 2003년 6,816명에서 10년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05년 1만 700명, 2008년 2만 9,145명, 2011년 5만 8,147명으로 최근에 사용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2%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측에서는 '인력공백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79.9%)와 '대체인력 활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67.4%)를 육아휴직 제공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나아가, 기업체의 41.1%가 육아휴직제도가 가임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배치 기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표 II-13 사업체 규모 및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평균사용일수별 사업체 비율, 2013

	없음	30일 미만	30-60일 미만	60-90일 미만	90일	91일 이상
전체	14.6	1.7	5.3	12.5	56.1	9.8
5-9인	31.9	2.0	4.3	11.3	37.2	13.3
10-29인	17.9	1.6	9.2	13.9	49.8	7.6
30-99인	0.9	1.4	6.0	14.0	66.5	11.2
100-299인	2.3	2.3	3.1	11.5	75.6	5.3
300인 이상	0.0	1.0	0.0	10.8	80.4	7.8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3.

일-가족 양립은 남녀를 불문하고 부모권과 노동권을 포기하지 않고 돌봄노동과 시장노동을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생존과 함께 일정 기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는 것이 노동권과 부모권의 실현이라고 본다면, 여성의 부모 및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가족 내 평등한 성별분업과 함께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등 사회적 지원서비스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4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 사회는 남성 1인 소득자 가족에서 맞벌이가족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족생활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남성의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과 성역할 및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은 양성 평등적 태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실제 행동의 변화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 남성의 가사 및 가족돌봄 참여와 육아휴직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며, 남성의 이러한 가족생활 참여 수준이 높아지려면 장시간 근로관행의 해소, 정시퇴근제 준수, 일 중심적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가족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남성 1인 소득자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표준가족'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인 소득자 가족의 확대와 핵가족화, 한부모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형태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와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가족과 노동시장 속에서 남성들도 자녀양육이나 가족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성의 성역할 태도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남성의 가사 및 가족돌봄 참여 등에 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한국종합사회조사」, OECD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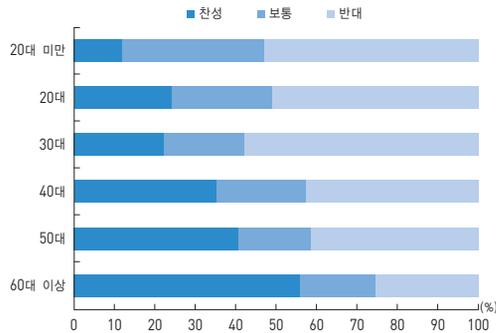
성역할 태도의 변화

최근 남성의 성역할과 가족관계에 대한 태도에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가족 내 성역할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과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묻는 문항에 대한 남성의 동의 응답률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대 이하는 10-20%대에



불과하나 40대는 35.0%, 50대는 40.6%, 60대 이상은 55.7%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동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18).

그림 II-18 남성의 연령별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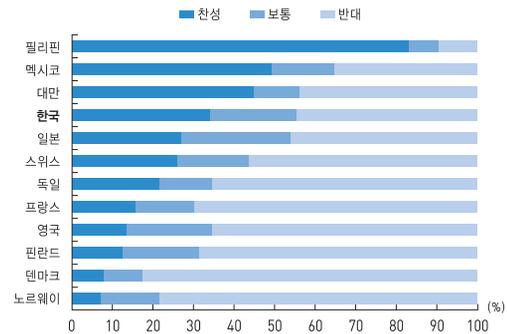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부터 '매우 반대'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이는 거꾸로 말해서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적어서 점차 양성평등적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91.7%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 남성은 아직 전통적인 태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

는 가정과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묻는 문항에 대한 한국과 다른 나라 남성들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82.4%)에 이어 노르웨이(78.2%), 스웨덴(76.4%)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38.7%로 일본의 26.3%보다는 높으나 아직 많은 한국 남성들이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19).

그림 II-19 주요 국가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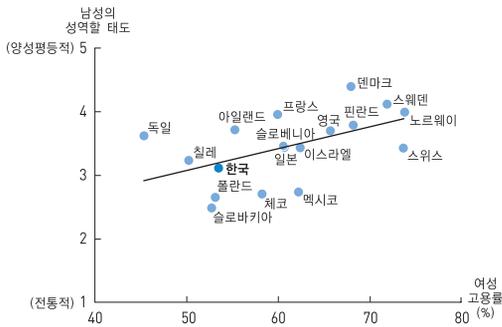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부터 '매우 반대'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14.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성역할 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의 관계이다. 즉,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남성의 성역할 태도도 양성평등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는 여성고용률도 높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은 반면,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등에서는 여성고용률이 낮고 성역할 태도도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I-20).

그림 II-20 주요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2012



주: 1) 남성의 성역할 태도는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찬성'부터 '매우 반대'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2) 여성고용률은 만 15-64세 여성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14.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가족관계의 변화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전국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부부 간 의사결정 유형은 대체로 부부공동 결정방식을 띄고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서는 아내주도형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자녀교육, 주택구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지출, 배우자의 취업 및 직장이동 등 모든 의사결정 영역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내 주도형이 남편주도형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교육 영역과 생활비지출 영역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14).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자녀교육에서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현상은 남성들의 과도한 직장 중심의 생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자녀교육의 문제를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14 주요 가족문제에 대한 부부간 의사결정방식,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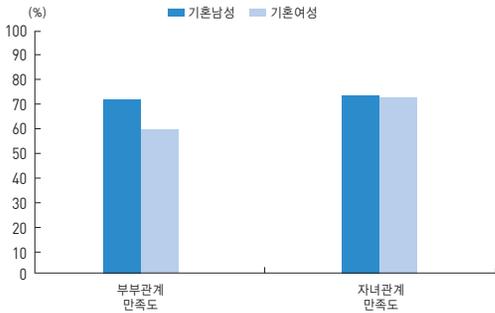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부부 각자
자녀교육	0,6	1,5	56,7	17,6	23,0	0,6
주택구입	2,8	5,6	77,2	9,2	4,8	0,3
투자 및 재산관리	2,7	8,5	70,8	11,6	5,9	0,5
생활비지출	1,3	3,2	43,9	29,9	21,0	0,7
배우자의 취업이나 직장이동문제	4,4	11,4	65,2	12,0	4,5	2,6

출처: 여성가족부, 「전국가족실태조사」, 2010.

부부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편(71.8%)의 만족도가 아내(5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이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평가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나 관계개선의 불만사항이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수준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자녀관계

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가 부부관계 만족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가족관계가 부부 모두 자녀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남편과 아내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편(73.5%)의 만족도가 부인(72.7%)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그림 II-21).

그림 II-21 기혼자의 성별 부부관계 만족도와 자녀관계 만족도, 2012



주: 1)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남성의 가사 및 가족돌봄 참여

여기서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실태를 가사와 가족돌봄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II-15>는 1주일간 집안일과 가족돌봄에 사용한 시간을 남녀 간에 비교한 것이다. 집안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여성이 17시간 28분, 남성이 7시간 25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시간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

봄에 사용하는 시간도 여성이 12시간 47분, 남성이 6시간 30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시간 이상 많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집안일의 경우에는 40대에서 여성과 남성의 시간차이가 12시간 21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가족돌봄 시간에서는 30대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14시간 28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의 경우, 집중적인 육아기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의 여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표 II-15 성인 남녀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 가사노동시간, 2012

	집안일		가족돌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07:25	17:28	06:30	12:47
연령				
20대	04:56	06:49	03:48	05:21
30대	07:14	18:19	10:42	25:10
40대	08:15	20:36	07:00	18:15
50대	07:30	18:46	04:39	07:29
60대 이상	09:06	20:31	05:33	05:5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56	20:00	04:21	07:07
고등학교	07:48	19:53	07:42	14:34
대학 이상	06:38	13:35	06:37	15:33
취업여부				
취업	07:09	15:28	06:03	10:00
미취업	08:07	19:30	07:40	15:37
배우자 취업여부				
취업	09:01	21:37	09:31	19:15
미취업	06:13	19:28	05:21	11:50

주: 1) 가사노동시간은 '집안일(자녀돌봄, 여가활동 제외)'을 하거나 또는 '가족돌봄(자녀, 노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성원 보살피기)'을 하는데 사용한 일주일 평균 시간임.
2) 만 20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있으며, 이 시기 남성의 시간사용은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안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돌봄 시간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집단에 비해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집단에서 더 긴 경향이 있다.

한편 본인 및 배우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집안일과 가족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집안일과 가족돌봄에 각각 한 시간 정도씩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집안일에는 4시간 정도, 가족돌봄에는 5시간 정도를 더 할애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여부보다는 배우자가 취업을 하였는지에 따라 집안일과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차이가 더 커서 배우자가 취업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 집안일에는 9시간, 가족돌봄에는 9시간 30분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데 비해,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에는 각각 6시간 10분과 5시간 20분 정도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가족생활 참여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 남성이 집안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7시간 25분으로 필리핀(15시간 38분), 멕시코(11시간 25분), 영국 (8시간 12분)보다 짧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인 대만과 일본의 경우에는 남성의 집안일 및 가족돌봄 시간이 한국보다 더 짧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집안일 시간이 한국보다 상당히 짧고, 남성의 가족돌봄 시간은 한국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6).

표 II-16 주요 국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2012 (시간:분)

국가	집안일		가족돌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한국	07:25	17:28	06:30	12:47
일본	04:30	19:29	04:12	14:00
대만	04:49	12:22	06:01	10:43
필리핀	15:38	00:58	18:12	05:42
멕시코	11:25	20:57	10:10	12:40
덴마크	07:41	10:52	06:29	11:30
핀란드	07:17	11:10	09:07	17:23
노르웨이	08:11	10:59	08:58	12:45
스웨덴	09:28	13:25	09:20	11:13
프랑스	06:43	10:57	11:03	16:49
독일	08:06	15:11	05:47	12:13
영국	08:12	12:07	09:18	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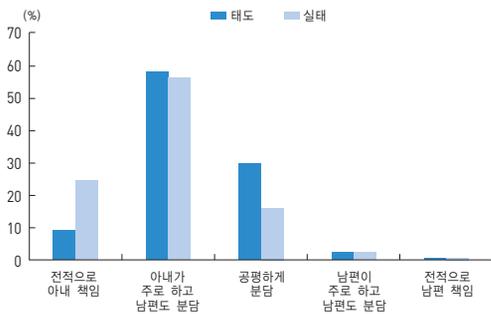
주: 1) 가사노동시간은 '집안일(자녀돌봄, 여가활동 제외)'을 하거나 또는 '가족돌봄(자녀, 노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성원 보살피기)'을 하는데 사용한 일주일 평균 시간임.
 2) 만 20세 이상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14.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가사분담에 대한 남성의 태도와 실재를 비교해 보면,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은 40% 정도이나 실제

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남성의 비율은 16.1%에 불과하다(그림 II-22). 특히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가사분담 방식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7.0%)은 낮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남성들(24.4%)이 이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제 태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림 II-22 기혼 남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12



주: 1)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기혼 남성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남성의 가사분담 실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연령이 낮을수록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공평한 가사분담 형태는 학력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I-17).

표 II-17 기혼 남성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가사분담 실태, 2012 (%)

	전적으로 아내 책임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도 분담	전적으로 남편 책임
전체	24.4	56.1	16.1	2.6	0.8
연령					
19-29세	14.1	56.6	25.5	2.1	1.7
30-39세	20.5	58.7	18.6	2.0	0.3
40-49세	25.7	58.2	13.6	2.1	0.5
50-59세	24.4	57.1	14.3	3.2	0.9
60세 이상	27.4	50.5	17.6	3.3	1.2
교육수준					
초졸 이하	33.0	44.6	17.1	4.0	1.3
중졸	28.0	50.5	17.2	3.5	0.8
고졸	24.4	57.1	15.2	2.4	0.8
대졸 이상	21.2	59.7	16.2	2.2	0.6

주: 1)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기혼 남성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남성의 육아참여 문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남성의 육아참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맞벌이사회의 이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적 변화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면,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남성 사용자수의 증가 추이는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성불균형의 상황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현상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가 여성보다 적기는 하지만 일단 육아휴직을 내면 상당한 기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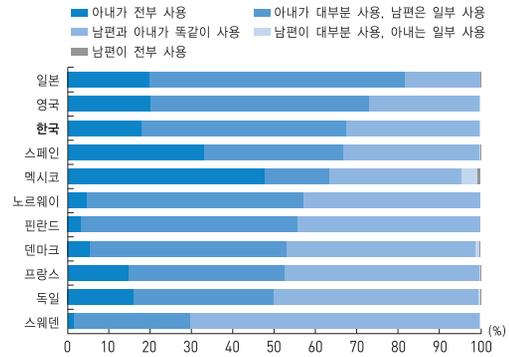
표 II-18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수와 평균사용일수, 2001-2013

연도	이용자수(명)		비율(%)		평균사용일수(일)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1	2	23	8.0	92.0	-	-
2005	208	10,492	1.9	98.1	185	211
2010	819	40,913	2.0	98.0	240	281
2012	1,790	62,279	2.8	97.2	238	289
2013	2,293	67,323	3.3	96.7	244	292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육아휴직 사용방식에 대한 태도를 국가 간에 비교해 보면, '아내가 대부분을 사용하고 남편은 일부를 사용'하는 의견에 대해 한국을 포함하여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영국, 일본 등이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사용'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에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멕시코, 스페인 등에서는 '아내가 전체를 사용'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23).

그림 II-23 주요 국가의 부부간 바람직한 육아유급휴가 사용방식에 대한 의견, 2012



주: 1) 설문문항은 육아유급휴가 제공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부부 둘 다 근무상황이 비슷할 뿐더러 유급휴가 자격 또한 갖추고 있을 경우 유급휴가의 기간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14.

흥미로운 점은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높은 국가일수록 남녀의 동등사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남편이 전체 사용'하는 의견이나 '남편이 대부분을 사용하고 아내는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동의 의견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양육문제를 여성의 역할과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는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육아휴직 이용이 저조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장시간근로 관행으로 인하여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유급노동에 투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조직문화와 사회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한국 남성들의 삶은 달라지기 어렵다. 연평균 근무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국가

들의 평균 1,765시간보다 훨씬 많고, 주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27%로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조사대상 36개국 중 3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시간의 변화가 없이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도 크게 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 및 가족돌봄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시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시간근로 관행의 해소,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4+ Health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Ⅲ 건강

- | | | | |
|----|--------------------|----------------------|-----|
| 01 |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 조병희 서울대학교 | 96 |
| 02 | 흡연율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 조홍준 울산대학교 | 107 |
| 03 | 의약품 사용양상 | 변진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115 |
| 04 | 사회자본과 건강 | 조병희 서울대학교 | 122 |

01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크게 미달한다.
- 고혈압과 당뇨병 및 암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다.
- 의사와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 반면 병원과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높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의료이용 수준이 높고,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가 빠르다.
- 1차 보건의료의 성과가 낮고, 국민의 의료 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상태, 건강행태 및 보건의료체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평균수명, 주관적 건강인식, 주요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둘째,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만성질환이 주요 건강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행태가 위험인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운동실천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셋째, 보건의료체계 영역에서는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다룬다. 의료 인력과 시설, 의료비 지출의 규모와 자원, 의료의 질,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건강과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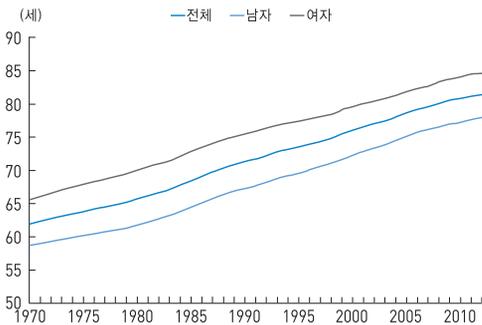
1950년대까지는 전염병 발생이 주요 건강 문제였고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의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건강구조도 복잡해졌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까지 달성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즉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신체와 정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모두 다 '웰빙(well-being) 상태'에 있는 것이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 지표로는 평균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평균수명이 길고 짧음은 인구집단의 사회적 역능성의 기본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0년에 61.9세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8년에 70세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1.4세가 되었다(그림 Ⅲ-1). 이것은 OECD 평균 80.2세보다 1.2년이 더 길다.

그림 Ⅲ-1 평균수명, 197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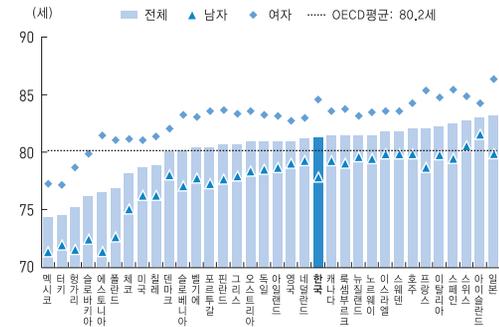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년도.

성별로 보면,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항상 긴 경향이 발견된다. 1970년에 남자 58.7세, 여자 65.6세로 6.9세 차이가 났고, 이후 매년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남자 78.0세, 여자 84.6세로 증가하여 남녀 간 수명격차는 6.6세였다. 여성의 수명이 여전히 길지만 그 격차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독일 4.7세, 스웨덴 3.7세, 아이슬란드 2.7세, 덴마크 4.0세, 영국 3.2세 등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수명차이는 한국보다 적다(그림 Ⅲ-2).

그림 Ⅲ-2 OECD 국가의 평균수명, 2012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은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출산과 관련된 모성사망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산업화 이후 남자들이 위험한 일이나 위험한 장소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수명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명차이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말해 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노령화에 따라 일상적 활동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인구가 많아지거나, 만성질환으로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와병상태에 있는 인구집단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가 건강수명인데, 이는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에 발간한 「World 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2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세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약 8세 차이가 난다. 같은 해에 일본의 건강수명은 75세로 평균수명과 약 9세의 차이가 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건강수명은 70-72세 수준이고, 평균수명과의 차이는 대략 9-10세 정도이다. 평균수명이나 건강수명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경향 때문에 건강지표에서도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3년 42.9%, 2006년 44.6%, 2008년 51.5%, 2010년 46.8%, 2012년 44.3%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0%를 넘지 못한다. 2012년 OECD의 평균 주관적 건강인식률은 69.4%이나 한국은 33.3%로 매우 낮다.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선진국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즉, 한국인이 건강 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병상태의 총괄지표는 유병률인데, 이는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한 조사시점 이전 2주간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되는 2주간 유병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0% 내외이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유병률이 일관되게 높게 나온다(표 Ⅲ-1). 사망률은 남자가 높지만 유병률은 여자가 높은 것이 선진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2012년에 19세 이상 인구 중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인 활동제한율은 7.9%였다.

표 Ⅲ-1 2주간 유병률, 2003-2012

	2003	2006	2008	2010	2012
전체	20.8	19.5	17.5	20.7	24.1
남자	17.1	16.5	14.9	17.1	21.2
여자	24.5	22.4	20.0	24.2	26.9

주: 1) 유병률은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다음으로 주요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 Ⅲ-3).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이거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인데, 2005년 9.1%에서 연도별로 약간씩 상승하여 2012년에는 9.9%에 이르고 있다.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2005년 28.0%에서 2007년 24.6%로 낮아졌다가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12년에는 31.5%가 되었다. 30세 이상 성인의 약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1년 OECD 국가 20-79세 성인 인구의 평균 6.9%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7%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보건학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 즉 평소 개인의 건강증진 노력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질병관리를 통해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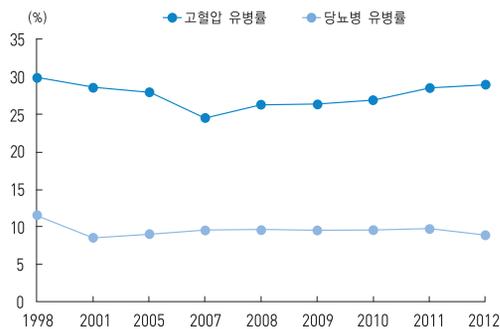
암 발생의 증가도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국

립암센터의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전체 암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환자수로 측정되는 조발생률이 1999년 214.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435.1명이 되었다. 한 시점에서 인구 대비 암 환자수를 의미하는 암 유병률은 2011년 현재 2.2%이다. 2012년 OECD 국가의 피부암 등을 제외한 암 발생 평균 추정치는 인구 10만 명당 271.5명인데 한국은 295.1명으로 더 높다.

정신건강의 지표로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 보면,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8년 36.5%, 2001년 34.6%, 2005년 35.1%로 높은 편이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2년에는 27.7%가 되었다(그림 Ⅲ-4).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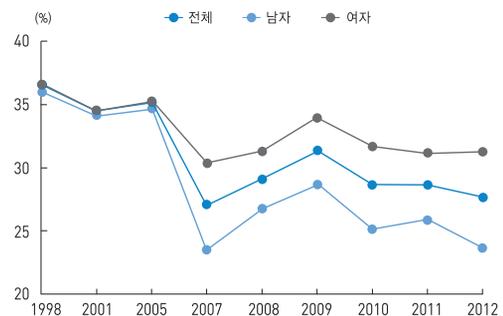
안전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주목

그림 Ⅲ-3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1998-2012



주: 1)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각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2013.

그림 Ⅲ-4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1998-2012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2013.

할 만한 건강 요소가 사고와 중독 등 손상경험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연간 손상경험률은 매년 약 7%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결과적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Ⅲ-2>는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총사망률은 1995년 532.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500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526.6명이 되었다. 주요 사인은 암이 1위이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10.5명에서 2013년 149.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38.9명에서 2009년 109.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 113.1명이 되었다. 순환기계 질환에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 포함되는데 뇌혈관질환 사망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심장질환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995년 39.2명에서 2013년 22.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질병 이외의 사망원인으로 운수사고 사망은 1995년 38.7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살은 1995년 10.8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 28.5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암과 뇌졸중 사망이 OECD 평균치보다 높고, 허혈성심장질환 사망은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통사고, 추락사, 자살 같은 외인에 의한 사망도 OECD 평균치보다 높다.

표 Ⅲ-2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3

	1995	2000	2005	2013
전체	532.1	517.9	501.0	526.6
악성신생물(암)	110.5	121.4	133.8	149.0
내분비질환	18.8	24.8	25.5	23.4
순환기질환	138.9	122.7	115.6	113.1
호흡기질환	24.4	33.8	29.2	44.5
소화기질환	39.2	31.2	23.0	22.1
운수사고	38.7	25.3	16.3	11.9
자살	10.8	13.6	24.7	28.5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건강행태

만성질환은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 간주할 만큼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의 흡연율은 1995년에 38.4%이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 24.0%가 되었다(표 Ⅲ-3). 2012년 OECD의 성인 흡연율은 20.7%였고 한국은 21.6%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성별 흡연율의 차이가 크다. 남성 흡연율은 OECD 평균이 25.4%인데 한국은 37.6%이고, 여성 흡연율은 OECD 평균이 16.5%인데 한국은 5.8%에 불과하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여성 흡연율이 OECD의 평균 여성 흡연율보다 매우 낮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흡연율은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표 Ⅲ-3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12

	1995	1999	2003	2006	2008	2010	2012
(%)							
흡연율							
전체	38.4	35.1	29.2	27.3	26.3	24.7	24.0
남자	73.0	67.8	56.3	52.2	50.8	47.3	44.9
여자	6.0	4.6	3.8	3.9	3.2	3.1	4.0
음주율							
전체	63.1	64.6	64.3	73.2	68.6	68.4	69.3
남자	83.0	82.9	80.7	85.9	82.7	81.8	81.9
여자	44.6	47.6	49.0	61.2	55.3	55.5	57.2

주: 1) 성인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성인 음주율은 만 2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성인 음주율은 큰 변화가 없이 약 60%대를 유지하고 있다(표 Ⅲ-3). 성별로 볼 때, 흡연과는 달리 여성들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2012년에 남성과 여성의 음주율은 각각 81.9%와 57.2%에 달하였다. ‘거의 매일 음주자’의 경우, 1995년 8.4%에서 2012년 5.9%로 약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은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하게 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회 음주

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음주’로 규정하는데, 이 비율은 2012년에 남자 21.8%, 여자 6.0%였다. 국제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량으로 음주율을 측정한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OECD 평균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9.0리터였고 한국은 이와 비슷한 수준인 9.1리터로 나타났다.

비만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의 비만율은 1998년에 26.0%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31.3%가 되었고 이후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32.4%였다(표 Ⅲ-4). 성별로는 남자 36.3%, 여자 28.0%로 남자의 비만율이 더 높다. 국제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2012년 한국의 비만율은 2.2%로 OECD 평균 15.4%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비만 문제는 영양섭취의 과다 또는 불균형과 함께 신체활동의 부족에 기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인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이 2005년에 29.6%였는데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2012년에는 17.3%였다(표 Ⅲ-4). 그런데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규칙적 운동실천율은 2003년 26.9%, 2006년



28.3%, 2008년 32.1%, 2012년 34.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스포츠가 아닌 일상의 걷기도 건강증진에 좋은 실천방법이 된다.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간 1회 3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2005년에 60.7%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39.4%로 낮아졌다(표 Ⅲ-4).

표 Ⅲ-4 비만율과 신체활동 및 걷기 실천율, 2005-2012 (%)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만율	31.3	31.7	30.7	31.3	30.9	31.4	32.4
신체활동실천율	29.6	21.1	25.9	26.3	22.4	19.3	17.3
걷기실천율	60.7	45.7	46.9	46.1	41.1	38.0	39.4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m²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 신체활동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3) 걷기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4) 비만율과 각 실천율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2013.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로 구성된다. 경제성장과 함께 의사와 병상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2년에 214명이 되었다. 같은 기간에 인구 10만 명당 치과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각각 26명에서 54명, 341명에서 591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Ⅲ-5).

의료인력의 증가는 그 자체로 의료복지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OECD에서는 실제 환자진료에 임하는 활동의사(practicing physicians)의 수에 주목하는데, 2012년에 OECD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평균 3.2명인데 한국은 2.1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에서 기본적인 진료 이외에 환자와의 교감이나 상담, 교육 기능이 취약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Ⅲ-5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2

	2000	2005	2010	2012
전체 의료인	578	711	860	917
의사	154	177	205	214
치과 의사	26	32	51	54
간호사	341	444	547	591

주: 1) 의료인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함.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간호사수는 의사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다. 2012년의 OECD의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평균 8.8명인데 한국은 4.8명에 불과하다. 간호서비스가 부족하여 환자간호의 상당 부분을 보호자가 직접 감당하거나 자기비용을 들여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



다. 간병비 부담이 커서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상규모로 구분하는데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 병원으로 구분한다. 199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종합병원은 266개소에서 323개소, 병원은 398개소에서 1,327개소로 각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의원은 1만 4,343개소에서 2만 8,762개소로 증가하였다(표 Ⅲ-6).

병원수의 증가와 함께 병상수도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2003년에 7.1개에서 2012년에 11.5개가 되어 10년 사이에 62%가 증가하였다. 2012년 OECD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평균 4.8개이나 한국은 10.3개였다. 유럽 국가들은 병상수가 7개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병상수 자체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은 병상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면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구에서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병상수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실시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많은 민간병원들이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병상수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병상수의 증가는 고가의 고급 의료장비의 증가와도 관련이 된다. 한국은 OECD 국가들보다 의료장비의 보유율이 더 높다. 2012년에 OECD의 인구 100만 명당 MRI 평균 보유대수는 13.9대인데 한국은 23.5대이고, CT 스캐너의 경우 OECD 평균은 23.7대인데 한국은 37.1대의 분포를 보여 한국은 일본과 함께 고급의료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연평균 1인당 내원일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1990년에 7.9일이던 것이 2000년에 11.6일이 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19.2일이 되었다. 즉 국민 1인당 연 2.3일 입원하고 16.9일 외래진료를 받은 것이다. 2012년 OECD 평균 의사진료(상담)횟수는 6.7회인데 한국은 14.3회로 OECD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의 의료이용이 매우 많은 것은 단순히 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의료공급 시설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어린 시절의 전염병 예방접종에 한정되던 예방사업이 이제는 국민

표 Ⅲ-6 의료기관수, 1995-2012

	1995	2000	2005	2010	2012
종합병원	266	285	290	312	323
병원	398	581	794	1,154	1,327
의원	14,343	19,472	25,412	27,334	28,762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모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성인기 나 노령기에도 각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건강검진은 자비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2년에 54.1%에 그쳤다. 2012년 암검진 수검률은 45.3%, 독감 예방접종률은 31.7%로 나타났다(표 Ⅲ-7).

표 Ⅲ-7 예방서비스 이용률, 2005-2012

	2005 2007 2009 2011 2012 (%)				
건강검진 수진율	47.4	47.9	50.1	51.8	54.1
암검진 수진율	-	35.6	44.7	44.3	45.3
독감 예방접종률	35.0	28.3	26.3	31.0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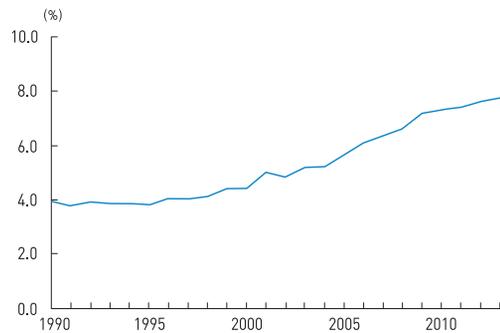
- 주: 1) 건강검진 수진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암검진 수진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암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독감 예방접종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4) 각 수진율과 예방접종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2013.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국민의료비는 1990년에 7조 5,000억 원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 62조 5,000억 원에 달하였다. 5년이 지난 2012년에는 97조 1,000억 원이 되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이 4.7%인데 한국은 9.1%로 매

우 높은 수준이다. 2012년 OECD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평균 9.3%이고 한국은 7.6%였다(그림 Ⅲ-5).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절대적 수준에서는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지만 의료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그림 Ⅲ-5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1990-2013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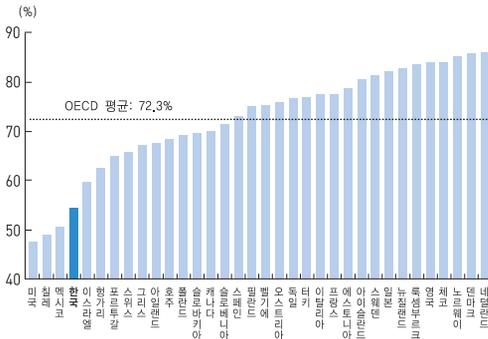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소비의 고급화와 의료이용의 증가 등이 주원인이다. 특히 노령화와 함께 노인의료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현재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11.4%인데, 건강보험의 총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인구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료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재원염출 방식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의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최대화하고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부담 몫이 확대되어 왔다. 전 국민이 건강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에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분의 비율은 36.3%였으나 계속 확대되어 2012년에는 54.5%에 달하였다. OECD의 의료비 공공부분 부담비율이 평균 72.3%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공공부담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그림 Ⅲ-6). 이는 한국 국민이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6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2012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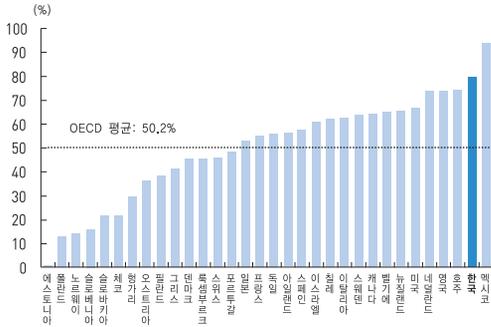
과거에는 의료체계의 성취도를 의사와 병원의 수와 같은 투입(input)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투입지표보다는 성과(outcome)지표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성과지표란 의사와 병원이 얼마나 환자를 잘 치료하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하여 만성적 증상에 대한 장기간의 관리를 제

대로 못함으로써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는 경우를 ‘불필요한 입원율’이라고 한다. 2011년 인구 10만 명당 천식 입원율은 OECD 평균이 45.8명이었는데 한국은 102.8명이었고, 당뇨병 입원율은 OECD 평균이 164.4명이었으나 한국은 350.1명이었다. 즉, 천식이나 당뇨병처럼 1차 의료부문에 관리될 수 있는 증상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병이 위중해져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의료 시설의 적절성은 흔히 퇴원한지 30일 이내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로 측정한다. 2011년 OECD의 정신분열증 재입원율은 12.9%였는데 한국은 19.4%였다. 45세 이상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도 의료의 질 지표가 되는데, 2011년 OECD 평균 7.9명에 비해 한국은 8.9명으로 높은 편이다.

암 환자의 생존율도 의료의 질 지표로 사용된다. 2011년 OECD의 자궁암 환자 5년 생존율은 66.0%였으나 한국은 76.8%로 더 높았다. 유방암 환자 5년 생존율도 OECD 평균은 84.2%인데 한국은 85.2%였다. ‘의료의 질’이 1차 의료부문에서는 취약한 요소들이 있으나 암 환자 치료와 같은 높은 진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통적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도 성과를 크게 내는 부분이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OECD 평균이 50.2%였는데 한국은 79.6%로 나타났다(그림 Ⅲ-7).

그림 Ⅲ-7 OECD 국가의 노인 독감 예방접종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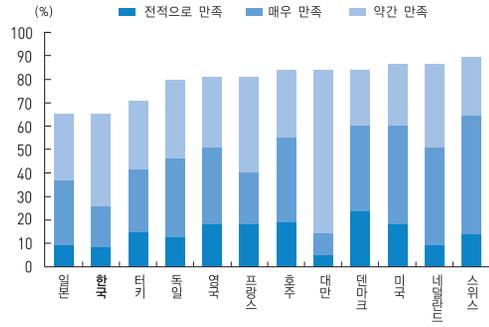
주: 1) 노인 독감 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대상자 중 1년 내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2013.

의료체계의 성과는 이용자의 의료에 대한 평가 또는 만족도로 측정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의료 신뢰도나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체계의 만족도에 대한 국제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림 Ⅲ-8]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 등 서구 국가들은 자국의 병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서구 국가들은 전적으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하고 있으나 한국은 25%에 불과하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병원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9년에는 24.5%에 불과하였으나 그 비율은 2006년 45.2%,

그림 Ⅲ-8 주요 국가의 병원서비스 만족도, 2012



주: 1) 설문문항은 최근에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하가 가장 최근 입원했을 때 받은 치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만족'부터 '전적으로 불만족'까지 7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1: Health, Data Version 2*, 2014.

2008년 54.1%, 2012년 52.9%로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사유를 보면, 1999년에는 비용과다(45.0%)에 이어 장시간 진료대기(39.9%)와 치료미흡(36.4%)이 주된 이유였는데, 2012년에도 이 세 가지가 주요 불만사항이었다.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크고, 의사수가 부족하여 환자의 대기시간도 길며, 의사의 노동강도가 높아 진료와 환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환자에게 불만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공급의 양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의료 접근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의료의 서비스 측면이나 질을 높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면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02

흡연을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조흥준 (울산대학교)

-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5%로 매우 높은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매우 낮다. 성인의 흡연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미혼이나 이혼한 경우에 높다.
- 청소년 흡연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흡연율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높다.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담배규제정책은 OECD 국가들 중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흡연은 건강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준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약 600만 명이, 한국에서는 약 5만 8,000명이 조기에 사망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수명이 10년 정도 더 짧다. 한국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률이 1.75배 높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약 2배 높다. 이 중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4.8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7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2.5배에 달한다(정금지 외, 2013). 한국에서 전체 사망의 21%는 흡연 때문에 생긴다.

사회계층 간 흡연을 격차는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상위 4분위 소득자와 하위 4분위 소득자 간 사망률 차이의 30-40% 정도는 소득수준 간 흡연을 격차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결과(Khang et al., 2008)가 있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는 일과 소득계층 간 흡연을 격차를 줄이는 일 모두가 공중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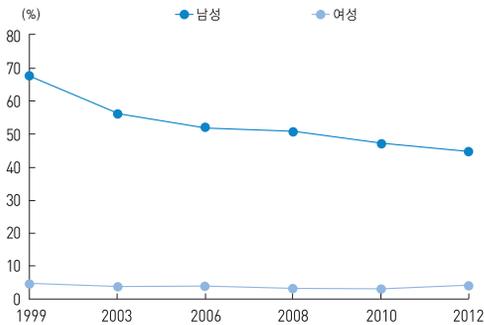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를 이용해서 성인과 청소년 흡연율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개관하고,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흡연율 차이와 흡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조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중심으로 담배규제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성인 흡연율의 변화

통계청 「사회조사」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피운다'고 대답한 사람을 흡연자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른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99년에 67.8%에서 2012년에 44.9%로 크게 낮아졌다(그림 Ⅲ-9).

그림 Ⅲ-9 성인 남녀의 흡연율, 1999-2012



주: 1)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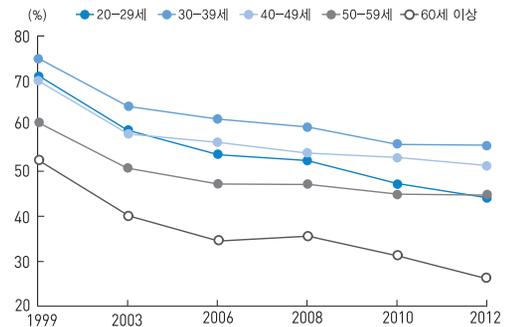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러나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성의 매일 흡연율은 40.8%로 OECD 평균인 25.9%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OECD 34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데, 1999년과 2012년에 각각 4.6%와 4.0%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녀의 흡연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고 30대에서 가장 높다(그림 Ⅲ-10). 이런 경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흡연율은 52.4%에서 26.2%로 절반으로 줄어든 데 비해 30대의 흡연율은 75.1%에서 55.8%로 19.3%p 줄어드는 데 그쳤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흡연율이 낮은 것은 노인에게 질병이 더 많고 이로 인해 금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흡연을 하는 사람의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Ⅲ-10 성인 남성의 연령별 흡연율, 199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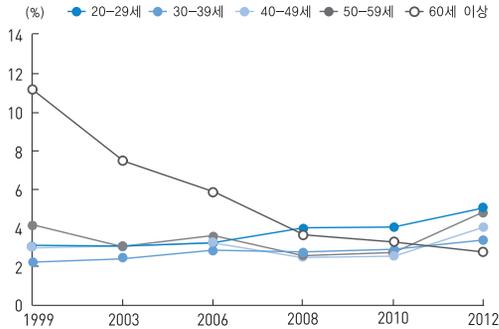
주: 1)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여성의 연령별 흡연율은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1999년에 60세 이상의 흡연율이 11.2%로 다른 연령대의 흡연율보다 크게 높았다(그림 Ⅲ-11). 이런 현상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 여성의 흡연율은 1999년의 11.2%에서 2013년에 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20대의 흡연율은 1999년의 3.1%에서 2012년에 5.1%로 증가하였다. 한국



그림 Ⅲ-11 성인 여성의 연령별 흡연율, 1999-2012



주: 1)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의 흡연율은 북아메리카나 유럽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여성 흡연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상승하는 경향은 향후 여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남성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의 낮은 흡연율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유교적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성 흡연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적 전통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낮은 흡연율은 조사방법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 흡연율 조사 시 흡연 여부에 관한 정보는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얻는다. 여성 흡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 흡연자는 흡연 사실을 숨기고 제대로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흡연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

으로 니코틴의 대사물질인 코티닌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자가보고에 의한 설문조사와 함께 소변 코티닌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성의 흡연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설문으로 측정된 흡연율과 소변 코티닌 검사를 통해 측정된 흡연율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코티닌 검사에 의한 흡연율이 자가보고 흡연율의 1.12배에 불과한데 여성의 경우에는 2.36배에 달한다(표 Ⅲ-8). 이는 여성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여성 흡연자로 하여금 흡연 사실을 숨기게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Jung-Choi et al., 2012).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실제 흡연율은 조사된 흡연율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표 Ⅲ-8 자가보고 흡연율과 코티닌 측정 흡연율, 2008

	자가보고 흡연율(A) (%)	코티닌 측정 흡연율(B) (%)	B-A (%p)	B/A
남성	44.7	50.0	5.3	1.12
여성	5.9	13.9	8.0	2.36

주: 1) 자가보고 흡연율과 코티닌 검사 자료가 동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여러 경로로 흡연과 같은 건강행태에 영향을 준다. 혼인상태도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는데, 대체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바람

직한 건강행태를 보인다. 혼인상태별 흡연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흡연율이 낮고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 높다. 남성의 경우 사별자의 흡연율이 유배우자보다 더 낮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일정하게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2012년에 유배우자 흡연율 대비 이혼자 흡연율의 배율이 남성의 경우에는 1.53배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4.52배로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표 III-9).

표 III-9 성인 남녀의 혼인상태별 흡연율, 1999-2012 (%)

연도	남성				여성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1999	71.1	66.6	57.0	85.1	4.5	2.4	12.6	18.0
2003	59.9	54.7	52.1	74.2	3.9	2.3	9.4	13.2
2006	55.8	50.3	48.6	71.1	4.0	2.4	7.9	13.9
2008	54.7	49.0	45.2	67.1	5.9	1.7	4.0	11.4
2010	50.4	45.6	40.0	63.4	5.2	1.7	4.7	12.3
2012	50.8	42.0	34.0	64.1	6.0	2.7	4.6	12.2

주: 1)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흡연율은 대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고학력자, 고소득자, 도시거주자 등)에서 낮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흡연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고졸 학력 집단에서 가장 높고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 학력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 여성의 흡연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1999년에는 초졸 이하 여성들에서 가장 높았으나 2012년에는 고졸 여성들에서 가장 높다(표 III-10).

표 III-10 성인 남녀의 교육수준별 흡연율, 1999-2012 (%)

연도	남성				여성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999	62.9	69.5	73.6	62.0	9.0	3.2	3.1	1.9
2003	51.0	55.7	63.2	51.5	6.7	3.5	3.7	1.5
2006	45.3	50.8	59.2	48.3	6.0	4.3	4.1	1.9
2008	42.2	49.6	58.5	47.3	4.2	2.6	3.8	2.0
2010	39.8	47.1	51.8	44.5	4.0	4.1	3.3	1.8
2012	38.1	43.4	49.3	42.5	3.8	4.6	5.7	2.0

주: 1)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직업별 흡연율을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1999년에 기능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흡연율이 각각 74.4%와 72.3%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61.8%와 69.6%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2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2012년에 기능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흡연율이 각각 7.6%와 6.8%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2.9%와 2.5%에 비해 높으며, 특히 기능노무직의 흡연율은 1999년과 2012년 사이에 3.0%에서 7.6%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표 III-11).

소득수준별 흡연율은 2010년과 2012년 자료만 이용 가능해서 시계열에 따른 추이를 볼 수



표 Ⅲ-11 성인 남녀의 직업별 흡연율, 1999-2012

(%)

연도	남성					여성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 업직	기능 노무직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 업직	기능 노무직
1999	61.8	69.6	72.3	67.1	74.4	2.9	1.5	6.6	5.0	3.0
2003	51.4	56.2	62.6	51.9	62.8	1.5	1.5	5.1	3.7	3.3
2006	47.2	50.4	57.6	45.9	59.9	1.8	2.8	5.6	3.0	3.5
2008	44.8	51.6	57.1	49.9	59.0	2.0	2.2	6.2	2.9	4.9
2010	41.9	47.2	52.9	46.2	55.9	2.5	2.2	4.7	1.9	3.3
2012	39.9	43.7	53.4	40.3	54.0	2.9	2.5	6.8	1.7	7.6

주: 1)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는 없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월 4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에서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나 남성은 200-399만 원 소득집단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Ⅲ-12).

표 Ⅲ-12 성인 남녀의 소득수준별 흡연율, 2010, 2012

(%)

연도	남성			여성		
	200 만원 미만	200- 399 만원 이상	40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200- 399 만원 이상	400 만원 이상
2010	48.8	49.3	40.6	4.7	2.3	1.4
2012	45.3	47.1	40.5	5.7	3.0	2.1

주: 1)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성인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려면 각 요인의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기법이 사용된다. 가장 최근에 수집된 2012년 「사회조사」 자료를 이 기법으로 분석한 것이 <표 Ⅲ-13>이다. 이 표에 의하면, 남성의 흡연율은 여성의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30대와 40대의 흡연율은 20대보다 각각 1.54배와 1.29배 높고 60대 이상의 흡연율은 20대의 36%에 불과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고졸, 중졸, 초졸 이하 집단의 흡연율이 40-60% 정도 높고,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과 기능노무직의 흡연율이 전문관리직에 비해 50% 이상 높으며, 4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비해 2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흡연율이 30% 정도 높게 나타난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흡연율의 차이가 있었는데, 유배우자에 비해 미혼자와 이혼자의 흡연율이 각각 1.58



배와 2.44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을 통해 남성, 40대 이하의 청장년층, 저학력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미혼과 이혼 집단에서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흡연율이 낮은 것은 흡연의 도입과 확산 시기가 남성보다 늦었고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40대 이하의 흡연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 20대의 흡연율이 30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수준, 직업지위,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담배를 끊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주위에 흡연자가 많고,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흡연 이외에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가족의 해체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흡연 등 불건강한 건강행태를 악화시킨다.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는 이혼이 흡연에 대한 가족 내의 억압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혼 여성의 흡연율이 이혼 남성에 비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남녀 간 흡연율 격차와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남녀의 수명 격차와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흡연율의 전체적인 감소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집단 간 격차 감소가 국가 공중보건정책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 흡연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 여성 흡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 성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흡연율 교차비, 2012

사회경제적 특성	교차비	사회경제적 특성	교차비
성		교육수준	
여성	1.00	대졸 이상	1.00
남성	21.95 ***	고졸	1.48 ***
연령		중졸	1.39 ***
20-29세	1.00	초졸 이하	1.63 ***
30-39세	1.54 ***	직업	
40-49세	1.29 ***	전문관리직	1.00
50-59세	0.92	사무직	1.06
60세 이상	0.36 ***	서비스판매직	1.56 ***
거주지역		농어업직	1.21
도시(동부)	1.00	기능노무직	1.53 ***
농어촌(읍면부)	1.01	혼인상태	
소득수준		유배우	1.00
400만원 이상	1.00	미혼	1.58 ***
200-399만원	1.10	사별	1.26
200만원 미만	1.33 ***	이혼	2.44 ***

주: 1) 교차비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흡연율의 상대적 비임.
 2) ***는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청소년 흡연율의 변화

청소년의 흡연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둘째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질병 발생의 위험이 더 커지며, 셋째 청소년의 흡연은 음주와 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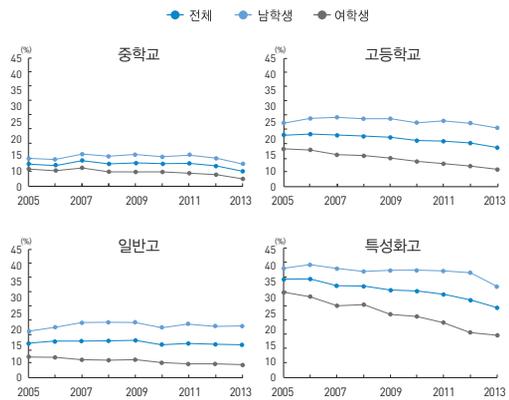


사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 입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응답자를 흡연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5년에 11.8%에서 2007년에 13.3%로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13년에는 9.7%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흡연율은 2005년 8.0%에서 2013년에는 5.5%로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의 흡연율도 같은 기간에 18.3%에서 13.8%로 감소하였다. 남학생의 흡연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여학생의 흡연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남학생의 흡연율은 1.8%p 감소한 데 그쳤으나 여학생은 7.2%p 감소하였다. 고등학생 중에서는 특성화계 학생의 흡연율 감소폭이 일반계 학생에 비해 훨씬 크다. 2005년에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34.1%로 일반계 고등학생 12.2%의 2.8배였다. 2013년에는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24.3%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흡연율 11.7%보다 여전히 높았으나 그 차이는 2005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여학생들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특성화계 여고생의 흡연율은 2005년 29.6%에서

2013년 14.8%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이 기간 동안 일반계 여고생의 흡연율은 7.5%에서 4.7%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그림 Ⅲ-12).

그림 Ⅲ-12 청소년의 학교급별 흡연율, 2005-2013



주: 1) 흡연율은 전체 조사대상 중·고등학생 중 최근 1개월간 1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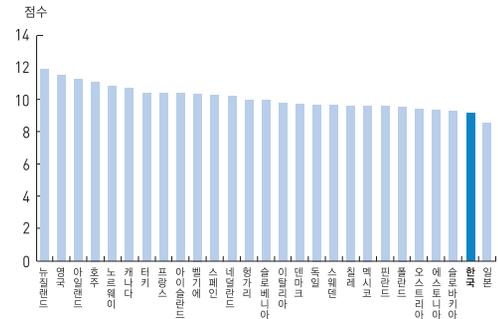
흡연율의 변화와 담배규제정책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05년 2월에 발효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조약이다.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이 조약은 담배규제에 관한 일종의 헌법과 같은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 포함된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크게 담배 공급을 줄이는 조치와 담배 수요를 줄이는 조치로 나누어진다. 담배 공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는 담배제

품의 불법거래 규제,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담배경작자의 대체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세금을 통해 담배값을 올리는 가격 정책과 가격 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비가격 정책으로 크게 구분된다. 비가격 정책에는 공공실내장소에서의 금연,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금연진료에 대한 지원, 담배제품 성분 공개와 이에 대한 규제,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적으로는 공중보건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조약이지만 한국의 담배규제정책과 흡연율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67.8%에서 56.3%로 연평균 2.9%p 감소하였으나, 비준 이후인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52.2%에서 44.9%로 연평균 1.0%p가 감소했을 뿐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담배규제정책은 비교가 가능한 OECD

그림 Ⅲ-13 OECD 국가의 담배규제정책 통합지수, 2010



주: 1) 담배규제정책 통합지수는 각 국가의 담배가격정책, 금연구역 정책, 금연정보정책, 광고 및 후원 규제정책, 건강경고정책, 금연치료정책 등 6가지 세부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이행수준을 종합한 것으로 각 정책에 대한 지표의 표준 점수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정책우선순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임.
2) 자료의 제한으로 체코,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 등 7개국을 제외한 27개국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비교 연구」 2013

27개국 중에서 26위에 머물고 있다(그림 Ⅲ-13). 이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여러 담배규제정책이 충분히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정금지 · 윤영덕 · 백수진 · 지선하 · 김일순. 2013.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정보통계학회지」 38(2): 36-48.

Jung-Choi, Kyung-Hee, Young-Ho Khang, and Hong-Jun Cho. 2012. “Hidden female smokers in Asia: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with cotinine-verified smoking prevalence rates in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from an Asian population.” *Tobacco Control* 21(6): 536-542.

Khang, Young-Ho, J.W. Lynch, Kyung-Hee Jung-Choi, and Hong-Jun Cho. 2008. “Explaining age-specific inequalities in mortality from all causes, cardiovascular disease and ischaemic heart disease among South Korean male public servants: relative and absolute perspectives.” *Heart* 94(1): 75-82.



03

의약품 사용양상

변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에 비해 전문의약품의 생산품목과 생산액 증가가 컸고, 1인당 연간 약품비 지출액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가계와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개입되면서 최근 처방약품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 항생제와 주사제를 처방하는 빈도가 최근 낮아지고 있으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4개 정도이고 대형병원에 비해 의원급에서 더 많은 품목수를 처방하였다.
-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출은 중간소득층 가구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에서 더 높으며, 3개월 이상 자가투약 목적의 장기투약 양상은 남성은 60대, 여성은 70대에서 가장 높다.

한국 사람들은 약을 좋아하고 따라서 의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일까? 의약품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약을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생활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약품 산업이 커지고 의약품 사용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최근에는 의약품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이 큰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은 그 자체로 건강에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의약품 사용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국가 및 개인 수준의 의약품 사용과 약품비 지출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인의 의약품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약품비의 지출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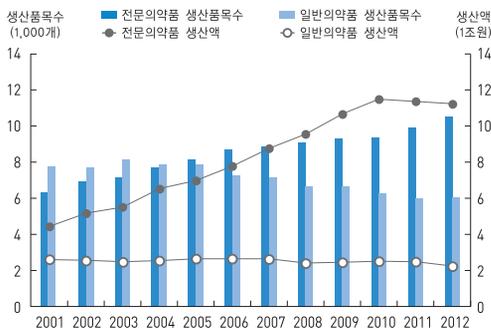
의약품은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 진단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약이며, 일반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을 다루거나 부작용 범위가 좁아서 일반국민이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최근 10여 년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생산품목수와 생산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의약품은 2001년과 2012



년에 각각 6,326개 품목 4조 4,404억 원과 1만 530개 품목 11조 2,461억 원이 생산되었고, 일반의약품은 같은 시기에 각각 7,785개 품목 2조 6,350억 원과 6,081개 품목 2조 2,539억 원이 생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문의약품은 품목수와 생산액 모두 증가한 반면, 일반의약품은 둘 모두 다소 감소하였다(그림 Ⅲ-14).

그림 Ⅲ-14 의약품 생산품목수와 생산액, 2001-201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각 년도.

2000년 의약분업은 병의원의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후 전문의약품의 유통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품목수에 비해 생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사용량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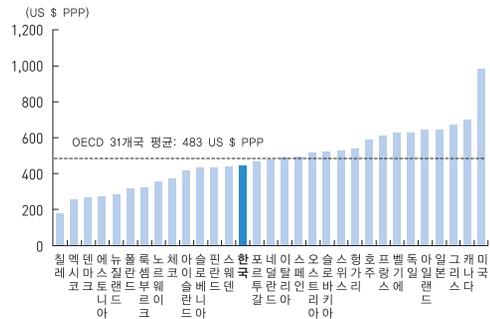
의약품 생산량의 증가는 사용의 증가와 관련되며, 이는 의약품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약품비 지출에 대한 자료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보험부담분과 본인부담액을 더하여 산출하는 건강보험 총약품비이다. 다른 하나는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의약품 등 사용된 모든 의약품에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 비용이다. 건강보험에 청구되지 않는 의약품 비용은 정확하게 조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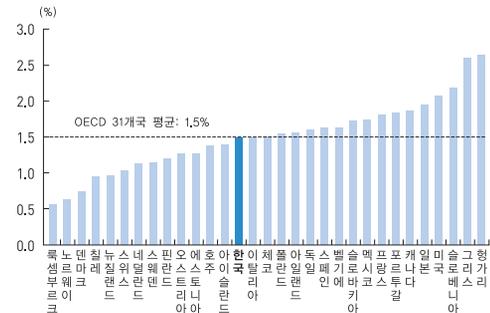
한국 국민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에 지출한 금액은 2012년에 1인당 42만 3,340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1인당 약품비 지출 규모를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GDP 대비 약품비 비중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그림 Ⅲ-15).

그림 Ⅲ-15 OECD 국가의 1인당 약품비 지출과 GDP 대비 비율, 2011

(1) 1인당 약품비 지출



(2) GDP 대비 약품비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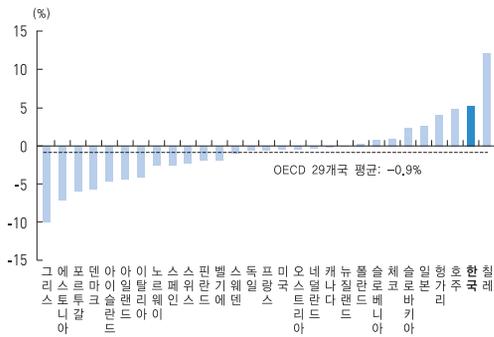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2013.



최근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인구당 약품비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1인당 약품비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Ⅲ-16).

그림 Ⅲ-16 OECD 국가의 1인당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 2009-2011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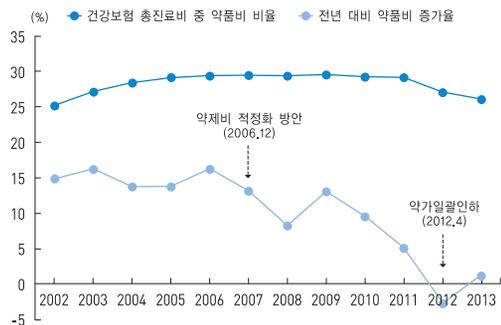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나타나는 의약품 지출의 특징은 [그림 Ⅲ-17]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2013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0조 7,000억 원이고 이 중에서 약품비는 약 13조 2,000억 원으로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이다. 2002년 이후 진료비 중 약품비의 비중은 약 25-30%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15-20%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은 질병치료에 있어 의약품에 대한 의

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의약품 지출의 두 번째 특징은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06년 12월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2012년 4월의 약가 일괄 인하 조치 등 최근 일련의 약품비 절감 정책과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인구고령화나 만성질환으로의 질병양상 변화로 인해 향후 약품비 감소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림 Ⅲ-17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과 약품비 증가율, 200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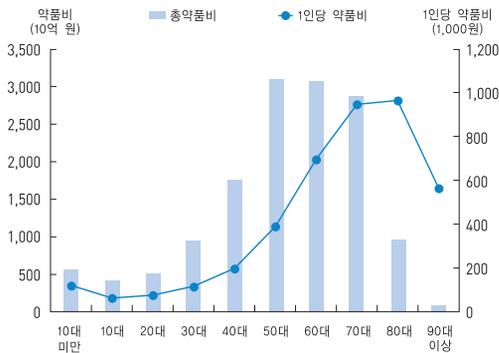


주: 1) 건강보험 총진료비(심사결정기준)는 공단(보험자)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합이며 비급여는 제외됨(연간 심사결정분에 대한 전산매체 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2) 약품비는 의료기관과 약국 약품비의 합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각 년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의약품 사용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약품비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1인당 건강보험 약품비는 80대가 연간 약 97만 원, 70대가 약 95만 원으로 이들의 건강보험 의약품 지출액이 가장 많다(그림 Ⅲ-18).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70대에 도달하게 되는 2025년 이후 건강보험 약품비의 상당한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8 연령별 건강보험 약품비와 1인당 약품비, 2013



출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연령별 의약품 사용현황」, 201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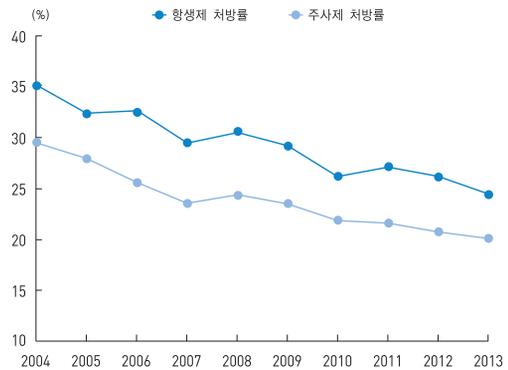
의약품의 처방양상

한국에서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환자보다 의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의사의 의약품 처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로는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과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이 있다.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이란 처방을 발행한 병의원의 전체 진료건수 대비 항생제 혹은 주사제 처방이 있는 진료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현재 24.5%

로 2004년의 35.2%에 비해 10%p 이상 낮아졌고, 주사제 처방률 역시 2004년의 29.5%에서 2013년에는 20.1%로 하락하였다(그림 Ⅲ-19). 이는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고 주사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2001년 이후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정부개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두 지표의 감소율이 모두 완만해지고 있으며,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수준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Ⅲ-19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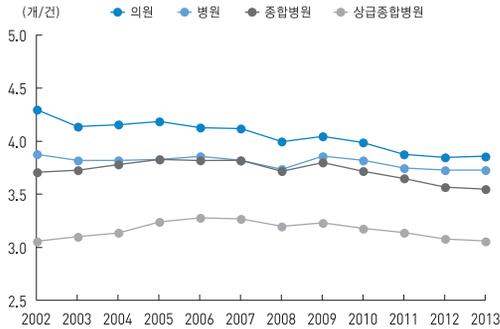
주: 1)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은 의료기관 총 진료건수 중 항생제 또는 주사제 처방이 있는 진료건수의 비율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처방률」, 각 년도 1분기; 「주사제 처방률」, 각 년도 1분기.

의사들이 어느 정도의 의약품을 처방하는지를 나타내는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4분기에 건강보험 기준 3.7개였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의료전달체계의 최하위



기관인 의원급에서 가장 많고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적다(그림 Ⅲ-20).

그림 Ⅲ-20 병원급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2002-201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건당 약품목수」, 각 년도 4분기.

의약품 처방양상을 약효군별 사용금액 순위로 살펴보면, 2013년 현재 혈압강하제와 동맥경화용제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3년 만에 동맥경화용제, 항악성종양제, 당뇨병용제 등의 순위와 비중이 높아졌다(표 Ⅲ-14).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의약품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해 보면 당뇨약을 제외한 고혈압약, 항콜레스테롤약, 항우울약의 사용량은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Ⅲ-21). 질환별 유병률은 국가들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사용량만으로 해당 치료제의 사용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병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우울증 치료제의 최소 사용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의사들은 이들 치료제의 처방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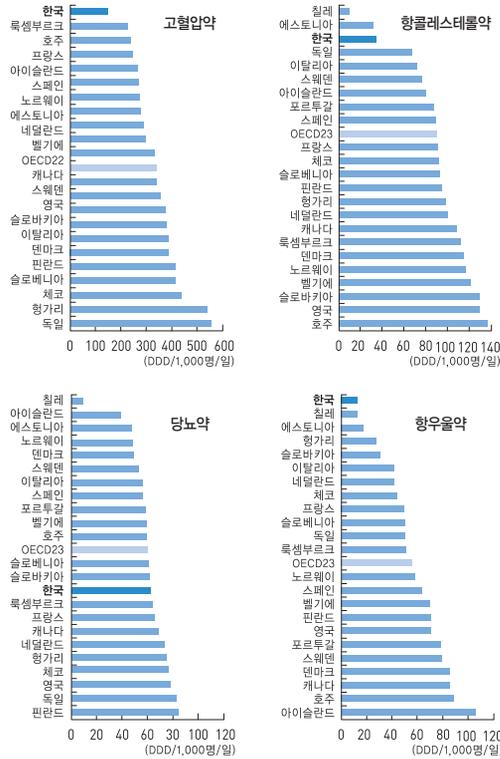
표 Ⅲ-14 효능군별 의약품 사용 금액과 비율(상위 10위), 2010, 2013

순위	2010			2013		
	효능군	금액 (10억 원)	비율 (%)	효능군	금액 (10억 원)	비율 (%)
1	혈압강하제	1,350	17.6	혈압강하제	1,352	17.2
2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1,073	13.9	동맥경화용제	1,104	14.1
3	동맥경화용제	930	12.1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859	11.0
4	소화성궤양용제	795	10.3	항악성종양제	837	10.7
5	항악성종양제	717	9.3	소화성궤양용제	834	10.6
6	해열·진통·소염제	671	8.7	해열·진통·소염제	630	8.0
7	기타의 순환계용약	645	8.4	당뇨병용제	614	7.8
8	기타의 화학요법제	552	7.2	기타의 순환계용약	580	7.4
9	당뇨병용제	538	7.0	기타의 화학요법제	556	7.1
10	진해거담제	424	5.5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479	6.1
계		7,693	100.0	계	7,845	100.0

주: 1) 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진료(처방)일을 기준으로 함.

출처: 의약품종합정보관리센터, 「효능군별 의약품 사용」, 각 년도.

그림 21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1일 주요 만성 질환 의약품 사용량, 2011



주: 1) 인구 1,000명당 1일 의약품 사용량 = ((1년 동안 판매된 의약품의 양) ÷ (DDD × 365 × 성인인구)) × 1,000.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인구 대신 전체 인구를 사용함.
 2)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의 성인 1일 평균 유지용량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통계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re for drug statistics methodology)에서 표준량을 제시하고 있음.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2013.

일반의약품과 생활건강증진제의약품 이용양상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증상의 해소나 감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유지 및 증진 혹은 외모

의 개선과 같이 질병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생활건강증진제의약품(lifestyle-drug)이라고 한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가구의 일반의약품 구매비용은 평균 8만 8,706원이다. 일반의약품 구매비용은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구소득 1-2분위(낮은 소득군)에 비해 3-5분위(높은 소득군)에서 상대적으로 높다(표 3-15).

표 3-15 가구소득수준별 가구당 연간 일반의약품 구매 비용, 2008-2011 (%)

	2008	2009	2011
전체	99,668	81,284	88,706
1분위	71,624	68,378	80,943
2분위	85,649	66,410	82,911
3분위	104,452	88,985	94,341
4분위	127,842	100,129	90,149
5분위	111,521	85,832	95,641

주: 1) 가구소득수준은 연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함.
 2) 2010년에는 일반의약품 구매비용이 조사되지 않았음.
 3) 일반의약품비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0원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1)」, 2013.

「한국의료패널」에서는 비타민과 영양제, 탈모치료제, 비만치료제, 금연치료제와 같은 생활건강증진제의약품을 포함하여 소화제, 변비약, 진통제, 알레르기약, 피부연고(알레르기 치료용 제외) 등 10종의 일반의약품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2011년에 이들 일반의약품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8.1%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사용률은 남녀 모두



표 III-16 사회경제적 특성별 일반의약품 사용률, 2011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8.1	6.4	9.8
연령			
9세 이하	6.1	6.1	6.0
10-19세	2.8	2.2	3.5
20-29세	2.7	2.0	3.5
30-39세	5.8	3.9	7.7
40-49세	9.2	7.6	10.8
50-59세	13.0	9.6	16.4
60-69세	15.7	15.0	16.4
70-79세	15.6	12.5	17.6
80세 이상	9.9	11.7	8.9
가구소득수준			
1분위	10.2	7.4	12.3
2분위	7.7	6.0	9.3
3분위	7.2	5.9	8.6
4분위	8.0	6.0	10.1
5분위	8.4	7.3	9.7
연간외래이용 여부			
예	9.1	7.5	10.4
아니오	4.0	3.4	5.3
연간입원이용 여부			
예	10.9	7.9	13.1
아니오	7.8	6.3	9.4
개인의료비지출수준			
1분위	4.5	3.8	6.0
2분위	6.0	5.2	6.9
3분위	8.9	7.8	9.9
4분위	10.0	9.1	10.7
5분위	12.1	9.2	14.0

주: 1) 일반의약품 사용률은 전체 응답자 중 비타민·영양제, 소화제, 변비약, 진통제, 탈모치료제, 비만치료제, 금연치료제, 알레르기약, 피부연구(알레르기 치료용 제외) 등의 일반의약품을 3개월 이상 복용하였거나 복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가구소득수준은 가구원수를 반영한 연간 가구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함.
 3) 개인 의료비 지출 수준은 연간 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에서의 수납금액(본인부담의료비)과 처방약값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2013.

대체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고, 1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여성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사용률이 16%를 상회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60대가 가장 높은 15%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최저인 1분위 소득계층에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의약품이 의료서비스 접근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외래 및 입원으로 의료이용이 있었던 경우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 일반의약품의 사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6).

경제발전과 국민건강보험의 전국민 확대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향상으로 의약품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고 의약품의 사용도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국제적 권고수준보다 다소 높으나 고혈압약, 항콜레스테롤약, 항우울약 등의 사용량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의약품을 많이 투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건강한 노년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있어 의약품이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에 따라 의약품의 사용양상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04

사회자본과 건강

조병희 (서울대학교)

-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
-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 비활동자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
-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
- 자원봉사 참가자가 비참가자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신뢰와 규범 또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마치 자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평소 인맥을 잘 관리해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생각할 때도 주민들 간에 여러 형태의 모임이나 조직이 잘 만들어진 곳이 생활의 편의성이 높다. 그런 곳에서는 밤길을 걸어도 안심이 될 수 있고, 아이가 밖에서 놀 경우에도 불안하지 않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사람들이 지켜주고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동네에서나 동네 사람들이 잘 결속되어 있지는 않다.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연결되고 결속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trust)이 있어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성이 있어야 하며 행위의 규범을 공유하여야 한다. 신뢰나 호혜성 및 규범이 공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불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이나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사회자본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사회적 연결, 상호 간의 면식, 그리고 사회적 인정에 주목하기도 하고(Bourdieu), 부모와 자식 관계나 의사와 환자 관계처럼 행동양식이 내재된 사회적 구조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으며(Coleman),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신뢰와 규범 및 사회적 연결망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Putnam). 어느 개념 정의를 따르든지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을 호혜적이게 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만든다. 사회자본은 개인이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일 수도 있다. 개인 차원에서 전화번호부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등록된 인물의 수가 많은 사람을 일단 사회자본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각종의 모임이나 조직단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사회자본이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이 많은 사람이나 지역 사회일수록 더 오래 살고, 덜 병에 걸리며, 덜 우울하고, 병에 걸려도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한다. 만일 사회자본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건정책은 개개인을 위생적이게 만드는 전략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협력과 유대에 기초한 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회자본은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사회적 신뢰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비용을 줄여준다. 서로 믿으면 담보를 설정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신뢰의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Rocco and Suhrcke(2012)가 2002년에 유럽지역 21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신뢰수준과 주관적 건강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상관관계가 0.5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연결망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서 우리는 유용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지, 어떤 치료법이 최선의 방식인지, 어디에 가면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건강과 의학 정보는 비교적 전문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건강 정보에 배타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연결망은 그 자체로 건강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금연과 절주를 실천한다면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보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때 사회자본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고등학생의 학교 친구들의 연결망을 조사해보면, 흡연자는 흡연 자끼리 친구로 모이는 경향이 발견된다. 연결망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불건강을 만들기도 하고, 연줄의 폐단을 만들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연결망을 갖추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아기를 돌보아줄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결속과 응집력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의 연결망이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확산



시키는 구심점이 되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도록 지역사회 운동이 전개되었던 사례는 사회자본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높이도록 만드는 기전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사회자본의 건강효과가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발견되는지 자료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자. 이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12년에 남유럽과 한국의 사회발전모델 비교 연구를 위하여 시행한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와 2009년에 시행한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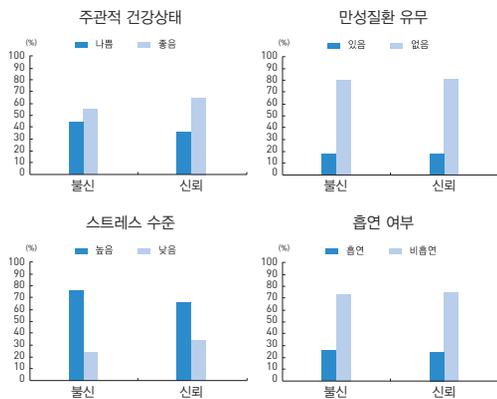
신뢰와 건강

먼저 사회적 신뢰와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자. 사회적 신뢰는 흔히 개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서 측정한다. 개인 간 신뢰는 통상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일반신뢰)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측정된다. 일반신뢰 여부에 따라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Ⅲ-22]이다.

이 그림에서 불신자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55.6%인데 신뢰자 중에서는 64.6%로 나타났다.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적으로 더 건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자와 불신자는 정신건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불신자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가 76.3%였는데 신뢰자는 66.0%였다. 즉 신뢰자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신뢰자와 불신자 간에 만성질환 보유여부와 흡연행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Ⅲ-22 일반신뢰와 건강,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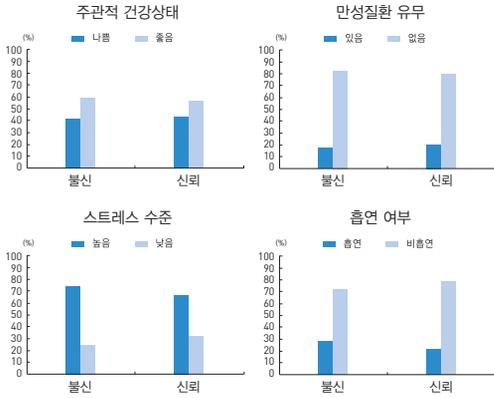
주: 1) 일반신뢰는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믿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의 2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원자료, 2012.

제도신뢰는 정부나 언론, 사법부, 군대 등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여부로 측정된다. 근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과 제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는 그 사회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제도 신뢰 중에서도 정부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정부신뢰와 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Ⅲ-23]이다.



그림 Ⅲ-23 정부신뢰와 건강, 2012



주: 1) 정부신뢰는 '귀하는 중앙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신뢰하지 않음'부터 '매우 신뢰'까지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원자료, 2012.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가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유무, 스트레스 수준 등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흡연 여부에는 일부 영향력을 찾을 수 있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사람 중 흡연자는 21.7%인데 신뢰감이 낮은 사람 중 흡연자는 28.1%였다. 즉 제도신뢰가 높은 사람이 흡연을 더 적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멤버십과 건강

모임 및 단체 참여는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모임은 향우회와 동문회 같은 연줄 기반 모임이다. 이론적으로는 유사한 사회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라고 부를 수 있다. 종교모임도 대체로 거주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속형 사회자본에 가깝다. 반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지연이나 학연을 초월하여 사회적 이념이나 가치를 공유하면서 형성되어 여러 이해집단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모임을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라고 부른다. 스포츠 레저 클럽 등은 유사한 계급 성원들끼리 모일 경우에는 결속형 자본이 될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라면 교량형 자본이 될 것이다. 모임의 멤버십과 건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임 활동여부와 건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표 Ⅲ-17>이다.

향우회의 경우에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고, 만성질환 보유도 적으며, 스트레스도 더 적게 받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향우회 활동자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유의 수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동문회의 경우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문회 활동자는 66.9%가 주관적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반면, 비활동자는 53.9%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흡연에서는 동문회 활동자는 35.2%가 흡연한 반면, 비활동자는 25.3%가 흡연을 하였다.

종교모임에서 활동자일 경우 만성질환을 더



표 III-17 단체/모임 활동과 건강, 2012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스트레스 수준		흡연 여부	
	나쁨	좋음	있음	없음	높음	낮음	흡연	비흡연
동문회								
비활동	46.1	53.9	19.7	80.3	73.0	27.0	25.3	74.7
활동	33.1	66.9	14.6	85.4	76.0	24.0	35.2	64.8
향우회								
비활동	42.8	57.2	18.5	81.5	74.6	25.4	27.5	72.5
활동	36.1	63.9	15.8	84.2	69.9	30.1	35.3	64.7
종교모임								
비활동	43.0	57.0	15.7	84.3	75.6	24.4	33.7	66.3
활동	39.8	60.2	22.7	77.3	70.8	29.2	18.3	81.7
시민단체								
비활동	42.5	57.5	18.3	81.7	74.4	25.6	28.8	71.2
활동	26.5	73.5	11.8	88.2	61.8	38.2	20.6	79.4
정치적 모임/단체								
비활동	41.9	58.1	18.0	82.0	74.1	25.9	28.8	71.2
활동	41.2	58.8	20.6	79.4	70.6	29.4	20.6	79.4
스포츠, 레저모임								
비활동	44.4	55.6	19.4	80.6	73.4	26.6	24.4	75.6
활동	36.1	63.9	15.1	84.9	75.3	24.7	37.8	62.2
전체 모임								
비활동	47.0	53.0	17.3	82.7	74.3	25.7	26.8	73.2
활동	39.1	60.9	18.5	81.5	73.8	26.2	29.4	70.6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원자료, 2012.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모임 활동자는 22.7%가 만성질환이 있는 반면, 비활동자는 15.7%에 불과하였다. 또한 종교모임에서 활동할수록 비흡연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모임 활동자의 경우 흡연자가 18.3%에 불과한 반면, 비활동자는 33.7%에 달하였다. 종교가 만성질환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종교를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의 경우에는 종교적 규범이 어느 정도 금연행위를

이끄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활동자들은 비활동자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도 높고, 만성질환도 적으며, 흡연율이 낮음과 동시에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활동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활동자와 비활동자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스포츠, 레저, 문화 모임에서 활동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등 모임의 활동자는 63.9%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활동자 가운데서는 55.6%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레저, 문화 활동이 일정하게 건강 향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스포츠, 레저, 문화 모임에서 활동할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임의 활동자는 37.8%가 흡연하는 반면, 비활동자는 24.4%만이 흡연을 하였다. 동문회나 스포츠, 레저 모임 참여자들이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원래의 사회자본의 건강 효과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교류 과정에서 음주와 흡연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문회나 스포츠, 레저 모임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종교모임에서는 활동자들이 흡연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생각할 때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금연의 규범이 달리 작동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결속형 자본보다 교량형 자본을 가질수록 더 건강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이 분석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우선 정당이나 시민단체 참여자의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결속형 자본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모임에 많이 참여하면 더 건강할 것인가? <표 III-17>의 하단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어느 한 모임이라도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볼 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았다. 모임 참여자는 60.9%가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참여자는 53.0%만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과 건강

사회적 연결망은 내가 타인과 얼마나 많은 만남이나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사회적 연결망이 크면 사회적으로 더 넓게 결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럴수록 더 건강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은 '최소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친구나 친척의 수' 또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한 사회적 연결망과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락하는 사람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많음'과 '적음'을 나눌 때 연락하는 사람수가 많을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66.7%이고 연락하는 사람수가 적은 경우에 주관적 건강이 좋은 경우가 51.6%였다. 즉 연락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더 좋았다. 같은 방식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많음'과 '적음'을 나눌 경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더 좋았다(표 III-18).

표 III-18 사회적 연결망과 주관적 건강상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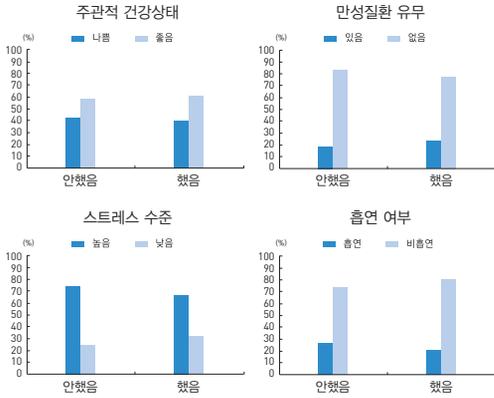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 (%)		
	나쁨	중음	적음
연락하는 사람수			
적음	48.4	51.6	100.0
많음	33.3	66.7	100.0
가깝게 지내는 사람수			
적음	44.5	55.5	100.0
많음	35.5	64.5	100.0

주: 1) 연락하는 사람수는 직장동료 및 가족을 제외하고,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친구 혹은 친척의 수임. 평균값(9.59명)을 고려하여 9명 이하는 '적음', 10명 이상은 '많음'으로 구분하였음.
2) 가깝게 지내는 사람수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친구 혹은 친척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의 수임. 평균값(3.41명)을 고려하여 3명 이하는 '적음', 4명 이상은 '많음'으로 구분하였음.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2009.

사회적 참여(기부, 봉사)와 건강

기부나 봉사는 공동체의 유대증진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기부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이 사회자본 이론의 가설이다. 지난 1년 사이에 기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건강 측면에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III-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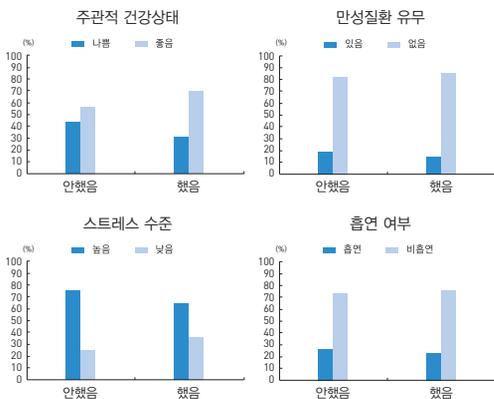
그림 Ⅲ-24 기부참여와 건강, 2012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원자료, 2012.

반면, 지난 1년 사이에 자원봉사 참여자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이 좋은 경우가 69.1%, 비참여자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이 좋은 경우가 56.9%로 자원봉사 경험자의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더 좋았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각각 64.2%와 75.0%로

그림 Ⅲ-25 자원봉사참여와 건강, 2012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원자료, 2012.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5).

사회자본의 건강 영향요인

앞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건강의 일차원적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이 두 변수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더라도 제3의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유의한 관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관 변수들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여 한꺼번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법을 회귀분석이라고 한다. 학력이 높으면 아는 사람도 많고 참여하는 모임도 더 많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더 클 것이다. 사회자본의 건강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표 Ⅲ-19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2012

	회귀계수
성	-0.037
연령	-0.169***
교육수준	0.020
고용상태	0.065
가구소득	0.091**
주거안정성	0.071*
생활사건	-0.041
만성질환	-0.273***
흡연	0.032
스트레스	-0.086**
일반신뢰	0.060*
정부신뢰	0.001
호혜성	0.061*
모임 활동	0.071*
사회적 연결망	0.101**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원자료, 2012.



위해서는 이러한 학력에 따른 차이를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해야 한다. 회귀분석은 유관 변수의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통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학력에 따른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신뢰가 정말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Ⅲ-19>와 같다. 여기서 회귀계수란 각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분석에서는

이 회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여부, 즉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만을 살펴도록 하겠다. 회귀계수에 별표(*)가 붙은 변수들이 유의한 경우이다. 실제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모임활동이 활발하고 사회적 연결망의 수가 클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Rocco, Lorenzo and Marc Suhrcke. 2012. *Is social capital good for health? A European perspective.*

Korean Social Trends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2014 Educ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V 교육

- 01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32
- 0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김경근 | 고려대학교 143
- 03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1

01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유치원 취업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0년대 후반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수준별 참여율 격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 2012년에 시행된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대학 이상 재학생에 비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대학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가시적인 감소세가 나타났다.
- 한국 학생들은 PISA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다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한국에서 교육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은 신분상승을 위한 사다리로 기능하는 한편,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까닭에 한국에서 학력은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교육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분상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무지와 문맹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교육은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민통합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의 양성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의 삶과 사회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영역에서 목도된 주요 변화를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기회 영역에서는 학교급별 취학률과 진학률의 추이를 살펴보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실태와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방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는 학교급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와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수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논의하였다.



교육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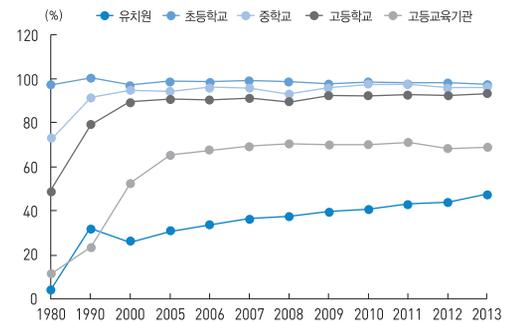
국민의 교육수준은 몇 개의 지표로 잘 파악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취학률, 진학률, 학력별 인구분포를 교육기회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번창하고 가정배경에 따라 사교육 참여 기회에서 격차가 발생하면서 사교육 참여율도 교육기회 영역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면밀하게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교육기회에 미칠 영향을 유추해 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누리는 교육기회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취학률은 각 학교급별로 취학 적령 인구 중 실제로 해당 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이 지표는 교육기회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이고 유용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IV-1]에는 198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학교급별 취학률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이미 1980년에 97.7%로 실질적으로 완전취학 수준에 도달한 후에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의 초등학교 취학률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0%를 초과하는 취학률이 보고되는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1980년대에

비약적으로 상승했는데, 그 상승세가 1990년대 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학교는 90%대 중반, 고등학교는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편교육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OECD가 자체 기준으로 산출한 15-19세 취학률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은 86.5%로 핀란드(86.7%)보다는 낮지만 영국(78.3%), 미국(80.3%), 캐나다(80.5%), 프랑스(84.4%)보다는 높다(OECD, 2013).

그림 IV-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3



- 주: 1) 취학률 = (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 ÷ 취학 적령 인구) × 100.
 2) 유치원의 경우 1992년부터 취원 적령이 4-5세에서 3-5세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이전 자료는 4-5세를 취원 적령으로 하여 산출되었음. 유치원 재적 원아수에는 6세 이상 아동이 포함됨.
 3) 199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 또는 이후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임.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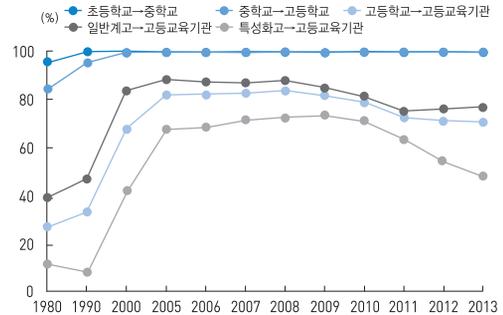
한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급속히 상승하였는데, 1995년에 정부가 대학설립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다시 한 번 상승세가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현재 유치원 취원율은 47.4%로 다른 학교급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취원율이 낮다고 해서 많은 아동들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3년 현재 유치원 원아수는 65만 8,188명인데, 만 3-5세 아동들 가운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60만 2,17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따라서 만 3-5세 아동들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현재 OECD 25개국 만 3-5세 아동의 평균 교육(보육)기관 이용률이 76%임을 감안하면(OECD, 2011), 국내 미취학 아동의 조기교육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학률도 취학률과 함께 교육기회의 향유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진학률은 각 학교급별로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로 측정된다. 이 때문에 진학률은 상급학교 진학에 요구되는 입시제도나 가정형편 등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림 IV-2]는 각 학교급의 진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3



주: 1) 진학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 연도 졸업자) ×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초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최근 10년 이상 99.9%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99.6-9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08년에 83.8%로 정점에 도달한 후에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 현재 70.7%로 떨어져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특히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하락 폭이 큰 편인데, 이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이전에는 2월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진학률을 산출했었다. 참고로 OECD가 자체 기준으로 산출한 대학(석사과정 포함) 입학률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69%이다. 이는 OECD 평균(60%)을 크게 상회하지만 미국(72%), 스웨덴(72%), 노르웨이(7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OEC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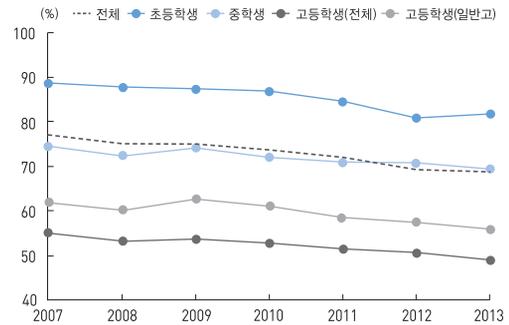
한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변화 양상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에 비해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더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실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에 75.2%까지 낮아졌다가 이후에는 조금씩 상승하여 2013년에는 76.8%를 보이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에 73.5%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커지면서 2013년 현재 48.0%로 떨어져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2년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이는 대졸자의 실업률 상승과 고졸자 취업 확대 정책의 효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교육성고가 사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활용 양상에 따라 결정되는 정도가 점차 커지면서 사교육 참여율이 개별 학생이 누리는 교육기회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부의 대물림의 핵심 기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학교급별 및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3]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사교육 참여율은

통계청이 「사교육비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7년에 77.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3년 현재 68.8%까지 낮아져 있다.

그림 IV-3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7-2013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해당 학교급별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대로 가장 높았지만,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은 다른 학교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2013년에는 81.8%로 2012년의 80.9%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약간 높아졌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초등학생 다음으로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 줄곧 70%대에 머물다가 2013년에는 69.5%까지 낮아졌다. 흥미롭게도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사교육 참여율과 매우 흡사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 전체의 사교육 참여율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조금씩 하락하는 가운데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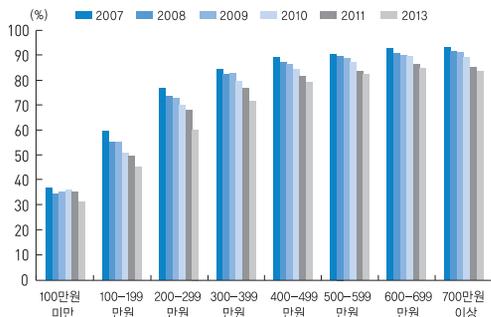
대를 유지했었지만, 2013년에는 49.2%로 떨어져 처음으로 50%를 하회하게 되었다. 일반고 학생들은 고등학생 전체 평균보다는 약 7%p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큰데, [그림 IV-4]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이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속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 출신 학생은 2000년대 중후반에는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고 현재도 80%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참여율 격차가 크다.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면서 소득집단 간 차이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 격차

는 현격한 편이다.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집단은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지출액 자체도 클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부의 대물림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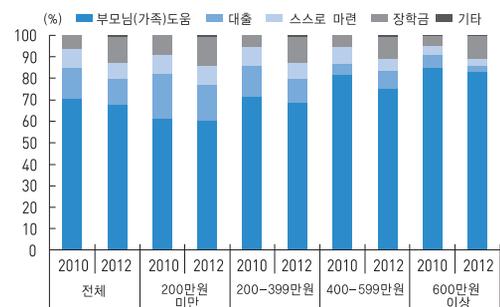
한편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고등교육의 경우 등록금이 교육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비싼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에 가시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기회 변화 추이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IV-5]에는 이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7-2013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그림 IV-5 소득수준별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2010, 2012



주: 1) 통계치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생 포함)이 최근 납부한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방법으로 마련한 금액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전체적으로 2010년에는 총 등록금의 70.5%를 부모(가족)의 도움에 의존했고, 14.3%는 대출을 받았으며, 8.6%를 스스로 마련한 반면, 나머지 6.5%는 장학금을 받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2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데 부모(가족) 도움(67.8%), 대출(12.0%), 스스로 조달(7.3%) 등이 기여한 비율은 줄고 장학금(12.0%)이 도움을 준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2년에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작한 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학알리미에 제시되어 있는 연도별 장학금 통계에 따르면, 대학들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2010년에 약 140만 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약 209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참고로 2012년에 국가장학금 사업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수혜자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소득 8분위 이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소득수준별 등록금 마련 방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사업의 수혜가 특정 소득분위에 국한되기보다는 거의 모든 집단에게 두루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600만 원 이상 집단의 경우에 2010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데 장학금이 기여한 비율이 5.1%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그 비율이 10.7%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2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납부한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차

지하는 비율이 2010년에 8.9%에서 2012년에 13.8%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국가장학금 사업이 실시되면서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가정형편이 아니라 성격으로 수혜자 선정 기준이 꽤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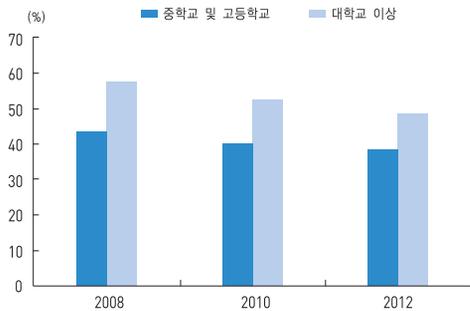
교육의 조건과 과정 관련 지표들은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 수준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학습시간, 학교만족도 등을 들 수 있고, 학교 수준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만족도와 학급당 학생수를 중심으로 교육의 조건 및 과정의 변화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교육내용 만족도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요구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정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학습내용이 적절히 제공된다면 교육내용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6]에 제시된 것처럼, 교육내용 만족도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 이상 재학생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전체적으로 대학 이상 재학생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크게 낮다. 대학과 달리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이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를 낮추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그림 IV-6 학교급별 학교 교육내용 만족도, 2008-2012



주: 1) 학교 교육내용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5세 이상) 중 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한편, 교육내용 만족도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시계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교육내용 만족도는 2008년 43.6%에서 2010년 40.1%, 2012년 38.7%로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대학 이상 재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도 2008년 57.8%, 2010년 52.7%, 2012년 48.6%로 좀 더 가시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교육내용 만족도 하락의 배경은 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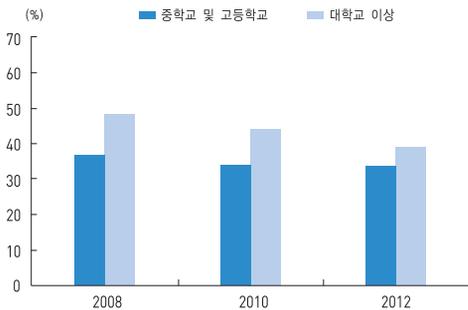
의 요구나 의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획일적 교육과정이 교육내용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는 반면, 대학 이상 재학생은 취업과 관련된 고민이나 요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교육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학교교육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림 IV-7]에는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교육방법 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사나 교수의 수업 및 평가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해 제약 받는 교육내용 만족도보다는 교사나 교수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방법 만족도도 교육내용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대학 이상 재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훨씬 낮았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전체의 1/3만이 교사의 교육방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가 어디에 있건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공교육이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나마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 하락세가 멈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는 2008년 36.6%에서 2010년 33.7%로 떨어졌지만 2012년에는 33.9%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 이상 재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는 2008년 48.4%, 2010년 43.8%, 2012년 39.1%로 매 2년마다 4%p 이상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매년 강의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교육방법 만족도의 추세적 하락은 다소 의외의 현상으로 여겨진다. 비관적인 취업 전망이 대학 이상 재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는 물론 교육방법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IV-7 학교급별 학교 교육방법 만족도,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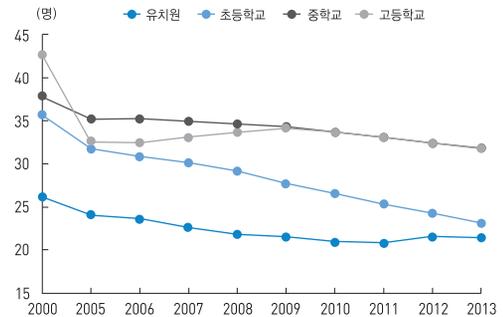
주: 1) 학교 교육방법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5세 이상) 중 학교의 교육방법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지금까지는 학생 수준에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교육조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학교 수준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환경의 쾌적함,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 그리고 수업지도

의 질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지표의 통계는 한국이 그간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교육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8]에는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계열적 감소세의 정도는 학교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격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림 IV-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00-2013



주: 1) 학급당 학생수 = 재적학생수 ÷ 학급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초등학교에 비하면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상당히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가 조금씩 증가했다가 2010년 이후로는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

교와 고등학교는 현재도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상회하고 있다. 유치원도 지속적으로 학급당 원아수가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일시적으로 약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효과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다양하다.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있는가 하면,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보상을 반영하는 지표가 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국가나 사회가 갖게 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수준을 보여주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성적,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PISA는 OECD가 회원국들의 교육성과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만 15세(고 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을 실생활의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00년에 시작된 PISA는 읽기, 수학, 과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1>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학생들이 PISA에서 거둔 성적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1 OECD 학업성취도(PISA) 점수와 순위, 2003-2012

연도	읽기		수학		과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03	534	2	552	3	538	4
2006	556	1	557	1	522	7
2009	539	2	546	3	538	4
2012	536	3	554	3	538	5

주: 1) PISA의 국가순위는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저 등수를 추정함. 위 통계표 상의 수치는 총 참여국 순위이며, 수치입력 상의 한계로 최고 등수만을 기재함.
출처: OECD, PISA.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는 무척 높은 편이다. 읽기의 경우 2003년 2위, 2006년 1위, 2009년 2위, 2012년 3위로 최상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조금 낮은 과학의 경우에도 4-7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만 13세(중 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취수준이 과연 공교육의 수월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IV-2>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



된 학생들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학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고 교육격차도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높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조하는 정도가 정권 간에 다르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육현장에 많은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정도 이상으로 좋은 평가결과가 도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유발하는 교육적 폐해를 일정 부분 인정하여 초등학생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생의 평가과목도 축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인위적으로라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덜 받게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표 IV-2>에 따르면, 도농 간 학력격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의 차이가 2010년 0.7%p, 2011년 0.5%p, 2012년 0.4%p, 2013년 0.3%p로 미세하나마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률 차이의 감소가 좀 더 두드러져 2010년 1.4%p, 2011년 1.0%p, 2012년, 0.2%p, 2013년 0.2%p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적어도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에는 일정 정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 지역규모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0-2013 (%)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010	4.4	4.2	4.5	4.9	4.0	3.9	3.8	5.3
2011	2.2	2.1	2.3	2.6	3.3	3.1	3.3	4.1
2012	2.2	2.0	2.4	2.4	3.0	2.8	3.2	3.0
2013	3.3	3.0	3.5	3.3	3.4	3.2	3.4	3.4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출처: 교육부, 「201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2013.

마지막으로 <표 IV-3>에는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2012년 이후에는 다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남녀 졸업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약 6%p 정도 꾸준히 높다.

표Ⅳ-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0-2013 (%)

	전체	전문대학	4년제대학	일반대학원
전체				
2010	55.0	55.6	51.9	70.7
2011	58.6	60.7	54.5	72.1
2012	59.5	60.8	56.2	69.7
2013	59.3	61.2	55.6	68.9
남성				
2010	58.3	56.0	55.7	78.9
2011	62.2	61.0	58.7	80.6
2012	62.8	61.5	60.1	77.0
2013	62.7	61.5	59.7	76.8
여성				
2010	51.9	55.2	47.9	58.3
2011	55.1	60.4	50.0	59.4
2012	56.2	60.3	52.1	59.2
2013	56.1	61.0	51.3	58.5

주: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년도.

고등교육기관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2011년 이후에는 취업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다면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일반대 졸업자보다는 줄곧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률만 놓고 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가운데 4년제 일반대 졸업자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2012년보다는 2013년에 취업률이 더 낮아 암울한 전망을 걷어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단순 취업률만 놓고 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가운데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률도 2011년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전문대학 졸업자나 4년제 일반대 졸업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현격한 남녀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0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김경근 (고려대학교)

- 다문화가정 학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 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취학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봉착하는 가장 큰 고충은 공부를 도와줄 사람의 부재이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차별을 덜 느끼지만,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슬픔이나 절망감은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최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급증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4년 75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10년도 경과하지 않아 2013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58만 명이 되었다. 2013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국내 인구 100명 중 3명이나 될 만큼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령기 자녀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 전체 학생은 매년 20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6,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도 다문화적 공간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취학률이 낮고 언어문제나 편견 등으로 인해 학교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평한 삶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편, 그들의 심리적 및 정서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학교적응 양상과 심리정서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수와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을 개관하고, 다문화가정 유형 및 부모 출신국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취학률과 학교적응 문제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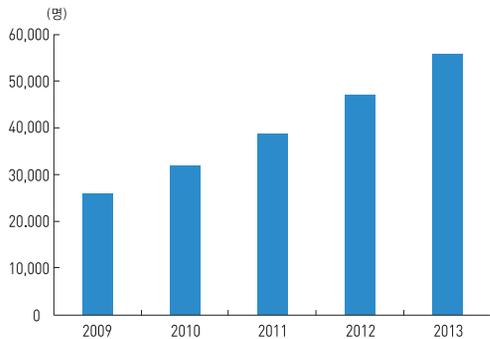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몇 가지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 논의 하도록 하겠다.

다문화가정 학생 실태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중도입국 학생 포함)과 외국인가정 학생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림 IV-9]에 나타나 있듯이,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9년에만 해도 전체 학생의 0.35%인 2만 6,01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은 5만 5,78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0.86%에 해당한다.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전체 학생 대비 비율로는 146%가 증가한 것이다. 전체 학생 대비 점유율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일반가정 출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 IV-9 다문화가정 학생수, 2009-201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표 IV-4>에는 2013년 현재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에는 총 3만 9,430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3만 2,831명이고 외국에서 태어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는 3,065명이며 외국인 자녀가 3,534명이다. 2013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의 비율은 70.7%인데, 이는 전년 대비 1.3%p 감소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총 1만 1,294명인데 이들 중 국내 출생

표 IV-4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2013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명)	비율 (%)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45,814	82.1	32,831	83.3	9,174	81.2	3,809	75.3
중도입국	4,922	8.8	3,065	7.8	1,144	10.1	713	14.1
외국인가정	5,044	9.0	3,534	9.0	976	8.6	534	10.6
계	55,780	100.0	39,430	100.0	11,294	100.0	5,056	100.0

주: 1) 다문화가정 학생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출생 자녀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경우는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함.
 3)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임.
 출처: 교육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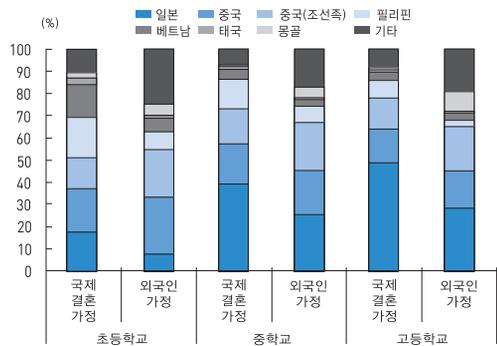
자녀가 9,174명, 중도입국 자녀는 1,144명, 외국인 자녀가 976명이다. 이들은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중 20.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전년 대비 0.2%p가 감소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총 5,056명이고, 이 가운데 국내 출생 자녀가 3,809명, 중도입국 자녀는 713명, 외국인 자녀가 534명이다. 이들이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9.1%인데, 이는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국내 출생 자녀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중도입국 자녀의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이 목도되고 있다. 즉 학교급이 높을수록 중도입국 자녀의 절대수는 감소하지만 이들이 점유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입국 자녀는 외모가 일반가정 아동들과 확연히 구분되고 언어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도입국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학교가 이들의 적응을 돕는 일은 그만큼 어려워질 개연성이 크다.

다음으로 [그림 IV-10]에는 다문화가정 유형별로 부모 출신국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국제결혼가정 출신 초등학생의 부모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19.4%), 필리핀(18.0%), 일본(17.5%), 베트남(15.1%), 한국계 중국(조선족)(14.2%)의 순인데 특정 국가에 쏠려 있지 않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가정

출신 초등학생 부모의 국적은 중국(25.8%), 한국계 중국(조선족)(21.8%), 필리핀(7.7%), 일본(7.2%), 베트남(6.4%) 순으로 나타나 중국에서 건너온 한족 및 조선족이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림 IV-10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출신국적별 구성 비율, 2013



주: 1) 외국인가정의 경우 부모의 출신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3.

한편 국제결혼가정 출신 중학생 부모의 출신국은 일본(39.0%), 중국(18.2%), 한국계 중국(조선족)(15.7%), 필리핀(13.8%), 베트남(4.3%) 순으로 많다. 초등학생의 경우와 비교하면 일본 출신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은 반면, 베트남 출신의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가정 중학생의 부모 국적은 일본(25.0%), 한국계 중국(조선족)(21.6%), 중국(20.2%), 필리핀(7.5%), 몽골(4.8%) 순으로 대체로 일본 및 중국 출신의 비중이 전체의 2/3를 상회할 정도로 높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 출신 고등학생 부모의 경우 일본(48.8%) 출신

이 절반에 가까웠고, 중국(15.2%), 한국계 중국(조선족)(14.0%), 필리핀(8.1%), 베트남(3.9%) 출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 가정 출신 고등학생 부모의 국적은 일본(28.0%), 한국계 중국(조선족)(20.1%), 중국(17.1%), 몽골(8.9%), 베트남(3.2%)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교급과 비교할 때 고등학교에서는 몽골 출신 부모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이채로운데, 이는 몽골 출신 부모 가운데 자녀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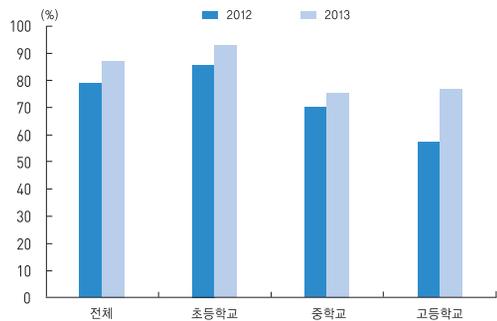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언어문제, 빈곤, 차별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취학률이 낮은 것은 물론 학업성취 수준도 뒤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취학률은 취학 적령 인구 대비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수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도 취학률은 교육기회의 향유 정도와 학교적응 여부를 유추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 밖에 남아 있는 비율이 높으면 이들이 교육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학교적응에도 실패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그림 IV-11]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이 학교급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2013년 현재 초등학교 93.0%, 중학교 75.6%, 고등학교 76.7%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 현재 전체 학생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7.2%, 중학교 96.2%, 고등학교 93.6%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취학률이 상당히 낮다. 그럼에도 2012년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취학률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취학률은 1년 사이에 19.3%p가 상승했다. 학교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좀 더 충분한 교육 지원이 제공된다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12]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점이 무엇인지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

그림 IV-11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 2012, 2013



주: 1) 취학률 =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 ÷ 취학 적령 인구) × 100.
 2)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는 교육부의 「다문화학생현황」 기준임.
 3) 취학 적령 인구는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기준임.
 출처: 교육부, 「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2014.



에 제시된 통계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국제결혼가정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외국인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부 통계 자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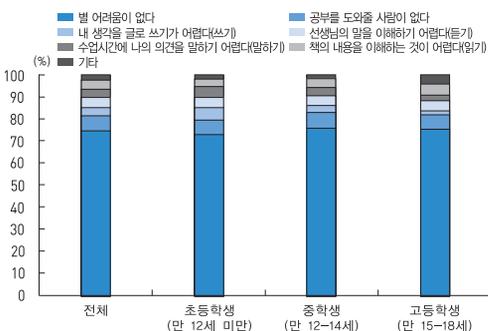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어떤 연령대에서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3/4 정도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공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은 학교급에 따라 다소 달랐다. 즉 초등학교 연령대인 12세 미만 아동은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6.5%), ‘내 생각을 글로 쓰기가 어렵다’(5.6%),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4.9%),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4.7%)의 순으로 고충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만 12-14세 학생들은 ‘공부를 도

와줄 사람이 없다’(7.2%),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4.5%),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4.2%),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3.6%)의 순으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만 15-18세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6.7%),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5.0%),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4.6%)는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입장에서 가장 큰 고충은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부재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학교수업을 따라가는 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방법을 통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림 IV-13]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에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학교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교사관계는 4학년 때에 비해 6학년이 되면서 오히려 미미하나마 더 악화된 측면이 엿보인다. 6학

그림 IV-1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학교공부에서 가장 큰 어려움, 2012



주: 1)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9-18세 자녀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원자료, 2013.

년이 되면서 학습활동이 좀 더 용이해진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그 정도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학습활동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역인데 학년이 올라가도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내용을 이해하는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교우관계는 미미하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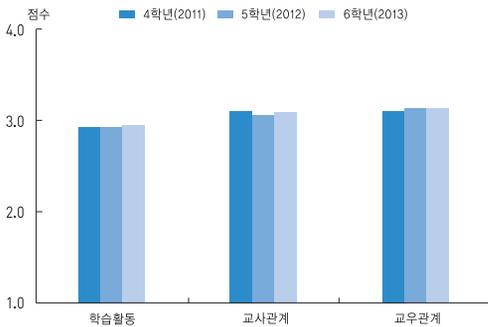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교육 부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자녀의 학습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교사들의 다문화 친화적 학생 지도 노력이 결여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전교육 단계부터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위한 소양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부정적 자아개념, 편견이나 차별, 언어습득의 어려움 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상당 부분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일정 정도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관

그림 IV-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2011-2013



주: 1) 이 자료는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것임.
 2)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적응 수준은 각각 4점 척도로 측정된 5개 관련 문항들의 평균 점수이며, 값이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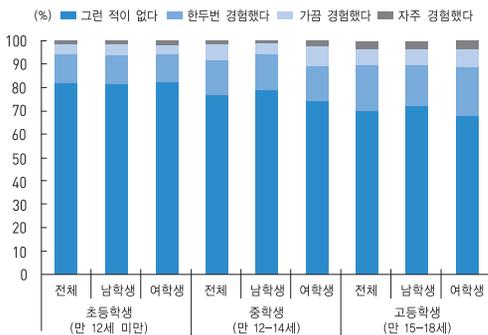
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림 IV-14]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과거 1년간 슬픔이나 절망감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없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하는 만 12세 미만 집단에서는 미미하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슬픔이나 절망감에 빠진 경험이 많았다. 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연령대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슬픔이나 절망감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어떤 집단에서건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경우에 그 빈도는 1년에 한두 번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나 절망감

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IV-5>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토로한 고민거리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공부이다. 공부로 인한 고민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좀 더 심각했다. 중학생 연령대인 만 12-14세 집단은 공부 다음으로 친구, 외모 순으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학생에게서 두드러졌다. 반면, 고등학교 연령대인 만 15-18세 집단의 경우 공부 다음으로 남학생은 진로, 경제적 어려움, 외모 순으로 고민이 많았고, 여학생은 경제적 어려움, 진로, 외모 순으로 고민이 컸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외모보다는 진로나

그림 IV-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슬픔 또는 절망감 경험 빈도, 2012



주: 1) 설문문항은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9-18세 자녀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원자료, 2013.

표 IV-5 다문화가정 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고민거리, 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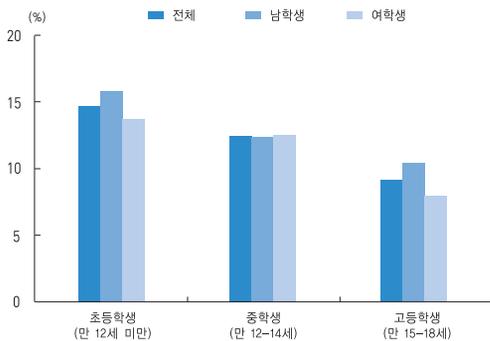
	전체			중학생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8세)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고민 없음	22,8	26,9	18,5	27,4	31,6	22,7	19,0	22,9	15,3
공부	45,7	44,4	47,1	42,4	40,8	44,3	48,5	48,1	48,8
경제적 어려움	6,4	5,7	7,1	5,3	6,1	4,3	7,5	5,5	9,3
친구문제	6,0	5,0	7,1	8,6	6,8	10,7	3,4	2,3	4,4
외모문제	5,7	4,7	6,8	6,3	4,6	8,1	5,4	4,9	5,9
진로문제	5,6	5,2	6,0	2,7	2,3	3,1	8,1	7,9	8,3
건강문제	3,3	2,7	3,9	1,9	1,7	2,1	4,5	3,7	5,3
기타	4,5	5,3	3,6	5,4	6,1	4,7	3,5	4,6	2,5

주: 1)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18세 자녀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원자료, 2013.

경제적 궁핍과 같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주된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5]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가 제시되어 있다. 차별을 인식했던 비율이 가장 높은 만 12세 미만 남학생 집단의 경우 15.8%였고, 만 15-18세 여학생 집단은 7.9%만이 차별 경험을 보고했다. 만 12-14세 집단을 제외하고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차별에 대해 좀 더 민감하며, 나이가 들수록 차별을 덜 느끼고 있었다.

그림 IV-15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적 차별 경험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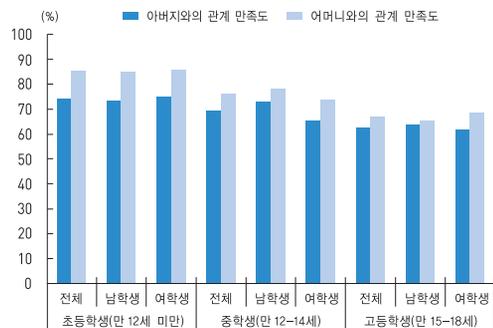


주: 1) 사회적 차별경험률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만 9-18세) 중 다문화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원자료, 2013.

마지막으로 [그림 IV-16]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초·중·고 학령기 연령대별로 제시되어 있다. 어떤 연령대에서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대체로 동일 연령대

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모와 더 원만한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만 12-14세 집단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IV-16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2012



주: 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만 9-18세)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원자료, 2013.

앞서 밝혔듯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가족의 지지, 특히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는 부정적인 자아개념, 정체감의 혼란, 폐쇄적 대인관계 등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을 원활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03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과거보다 최근에 더 높으며,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높다.
- 학습동기는 외재적 학습동기보다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이 더 높다. 내재적 동기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학습동기도 높다.
- 부모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내재적 학습동기 격차는 한국이 OECD의 주요국들에 비해 더 큰 편이다.

OECD가 2012년에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수학에서 1위, 읽기에서 1-2위, 과학에서 2-4위를 차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냈다. 그에 비해 학업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은 조사대상 65개국 가운데 58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쳐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비교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과 중국은 각각 89.1%와 87.7%로 나타난 데 비해 한국은 75.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비율은 한국이 24.7%로 9.6%와 12.0%에 그친 미국과 중국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은 인지적 성취 수준은 대단히 높지만 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에 대한 흥미, 학습동기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교육이 그간 학업성취 향상에만 역점을 둔 채 입시 위주로 전개되었던 까닭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자아존중감은 학문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과 부적응 행동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학업에 대한 흥미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의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학습동기는 이처럼 개인의 삶의 질에 결



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에 대한 흥미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 가정의 자녀가 무척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3-2011년에 걸쳐 수집한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에 따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 발달이 청소년기에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할 주된 과업이라는 점에서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발달수준의 차이가 이후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동기 발달 격차의 상대적 수준도 확인해 볼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의 변화 추이

개괄적인 수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추이를 살펴본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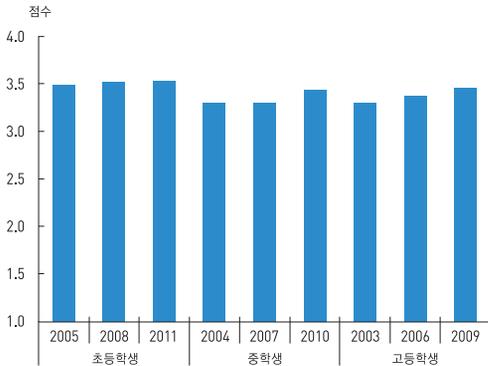
[그림 IV-17]에 제시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자아존중감 수준이 5점 척도 평균으로 3점대 초중반을 나타내 한국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30-3.43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30-3.45점 사이에 분포하는 데 비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48-3.53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그러한 경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과업의 양과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대와 성취 간의 간극을 경험할 소지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자존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2005년에 3.48점이었으나 2008년 3.51점, 2011년 3.53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학생은 2004년 3.31점, 2007년 3.30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0년에 3.43점으로 높아졌다. 고등학생은 2003년 3.30점, 2006년 3.37점, 2009년 3.45점으로 자아존중감이 꾸



그림 IV-17 학교급별 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 2003-2011



주: 1) 자아존중감 수준은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남보다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나를 무시하고 알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 등의 자아 관련 진술에 대한 동의도를 1-5점으로 측정된 5개 문항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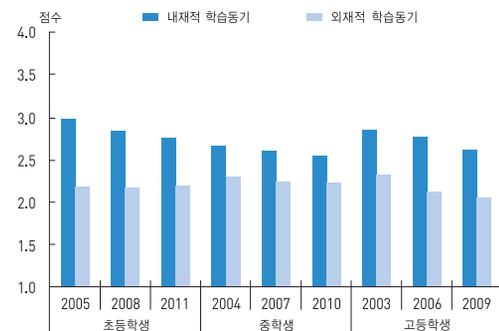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원자료, 각 년도.

준히 향상되고 있다. 자녀수 감소로 인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변화나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요즘 청소년들이 자아가 강한 경향이 있는데, 여기 제시된 결과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18]에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학습동기는 내재적 학습동기와 외재적 학습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재적 동기는 공부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동기이며, 외재적 동기는 칭찬이나 벌, 사회적 압력과 같은 외적 내지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동기를 의미한다. 한국 학생들의 내재적 학습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2.54-2.98점으로 2점대 중후반에 분포해 보통 수준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거나 앞의 즐거움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외재적 학습동기는 2.05-2.34점으로 2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내재적 학습동기보다 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18 학교급별 학생의 학습동기 수준, 2003-2011



주: 1)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등의 공부 이유에 대한 동의도를 1-5점으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외재적 학습동기 수준은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화를 내셔서', '공부를 하면 부모님께서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셔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께서 상을 주시거나 칭찬을 하셔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벌(야단, 체벌)을 주셔서',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시키셔서', '선생님께서 공부하라고 시키셔서' 등의 공부 이유에 대한 동의도를 1-5점으로 측정된 6개 문항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재적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원자료, 각 년도.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내재적 학습동기가 조금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경쟁이 약하고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

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조차 내재적 학습동기가 보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의 교육이 아직 본격적으로 입시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학습의 즐거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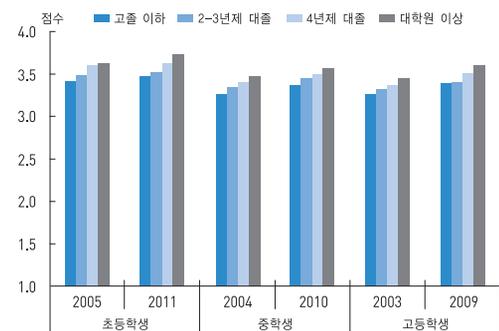
한편,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내재적 학습동기가 저하되고 있는 경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05년에 2.98점이었으나 2008년 2.84점, 2011년 2.76점으로 낮아졌고, 중학생은 2004년 2.67점에서 2007년 2.61점, 2010년 2.54점으로 하락하였다. 고등학생도 2003년 2.85점, 2006년 2.77점, 2009년 2.63점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즐기고 지식을 쌓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됨을 의미한다. 학업성취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아울러 공부를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적 성취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내재적 학습동기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과 인지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IV-19]는 이러한 자아존중감 발달

과 가정배경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해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부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 3.47점이 고, 2-3년제 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인 경우 각각 3.53점과 3.63점이며, 대학원(석·박사) 이상인 경우에는 3.73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를 존중하는 양육방식을 구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밀착되며 자녀가 학교생활에도 보다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이들 가정의 자녀가 보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V-19 부모 교육수준별 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 2003-2011



주: 1) 자아존중감 수준은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남보다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나를 무시하고 알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 등의 자아 관련 진술에 대한 동의도를 1-5점으로 측정된 5개 문항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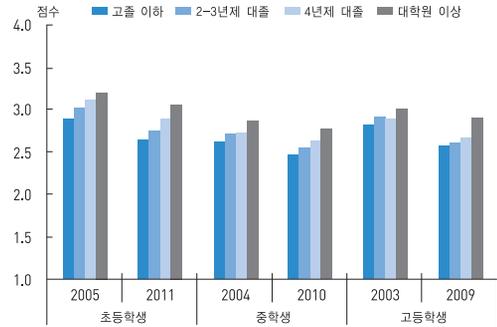


부모의 소득수준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소득 1분위 가정인 경우 3.33점이고, 2분위와 3분위 가정인 경우 각각 3.41점과 3.45점이며, 4분위와 5분위 가정인 경우에는 각각 3.51점과 3.54점으로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학교급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가정배경과 내재적 학습동기

[그림 IV-20]에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 자녀의 내재적 학습동기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도 높아진다. 특히 부모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이들 청소년의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이 눈에 띄게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고등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는 부모가 대학원 이상인 경우 2.91점으로 4년제 대졸자인 경우 2.67점, 2-3년제 대졸자인 경우 2.61점, 고졸 이하인 경우 2.57점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과 2010년 중학생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그림 IV-20 부모 교육수준별 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 2003-2011



주: 1)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등의 공부 이유에 대한 동의를 1-5점으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원자료, 각 년도.

청소년의 내재적 학습동기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고소득 가정의 자녀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초등학생의 경우, 소득 1분위 가정 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는 2.87점으로 보통에 미달하는 수준을 나타내는데 비해 소득 3분위, 4분위 및 5분위 가정 학생은 각각 3.04점, 3.11점, 3.12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다. 2011년에서도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 학생은 2.66점에 그쳤으나 소득 4분위와 5분위의 고소득층 가정 학생은 각각 2.88점과 2.90점을 나타내 부모의 소득수준과 비례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정배경과 외재적 학습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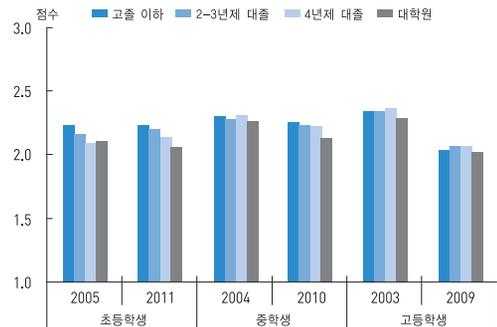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는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로부터 부여되는 성취압력이 무척 큰 편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처럼 부모나 교사의 요구 때문에 공부를 하는 외재적 학습동기 수준이 가정배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그림 IV-2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외재적 학습동기는 초·중학생들에서는 반비례 관계를, 고등학생들에서는 역U자형 관계를 나타낸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는 교사나 부모의 요구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양상이 완화된다. 2011년 초등학생의 외재적 학습동기는 부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 2.23점으로 가장 높고, 2-3년제 대졸자인 경우 2.20점, 4년제 대졸자인 경우 2.14점, 대학원 이상인 경우 2.06점으로 낮아져 부모 학력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3년에 부모가 2-3년제 대졸 이하인 경우보다 4년제 대졸자인 경우 부모나 교사 때문에 공부를 하는 외재적 학습동기 수준이 더 높다. 2009년에도 부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2-3년제 대졸자나 4년제 대졸자인 경우 외재적 학습동기 수준이 더 높아 2003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학업 부담이 가장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4년제 대졸자 부모를 둔 청소년 집단에서 외재적 동기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이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성취에 대한 요구를 더 강하게 표출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저학력 부모들에 비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을 지닌 고학력 부모들에 비해 교육을 통한 상승욕구가 더 강할 개연성이 있다.

그림 IV-21 부모 교육수준별 학생의 외재적 학습동기 수준, 2003-2011



주: 1) 외재적 학습동기 수준은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화를 내셔서', '공부를 하면 부모님께서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셔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께서 상을 주시거나 칭찬을 하셔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벌(야단, 체벌)을 주셔서',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시키셔서', '선생님께서 공부하라고 시키셔서' 등의 공부이유에 대한 동의도를 1-5점으로 측정된 6개 문항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재적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원자료, 각 년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외재적 학습동기 양상도 학교급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외재적 동기는 높다. 이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일수록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상벌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역U자형 관계를 나타내거나 오히려 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학생의 경우, 2004년에는 소득 1분위 가정의 외재적 학습동기가 2.30점인 데 비해 소득 3분위는 2.31점으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2010년에도 소득 3분위 가정의 자녀에 비해 소득 5분위 고소득 가정 자녀의 외재적 학습동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재적 학습동기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2003년에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 자녀의 외재적 동기가 2.28점으로 나타난 반면, 2분위와 3분위 가정 자녀는 각각 2.36점과 2.38점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1분위 2.01점, 3분위 2.05점, 5분위 2.06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외재적 학습동기는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중간층 또는 고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에 비해 중간층이나 고소득층 부모들이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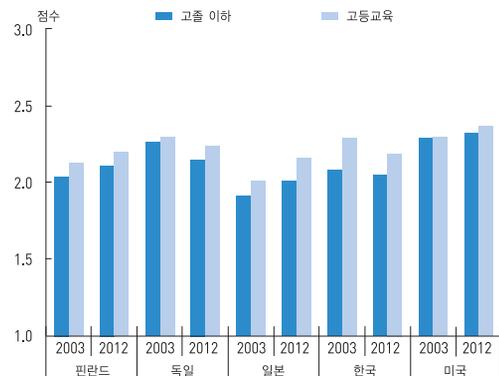
가정배경과 학습동기 관계의 국제비교

한국에서 관찰되는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학습동기 차이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OECD의 PISA 2003년 및

2012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IV-22]에는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를 4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주요 국가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대상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흥미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국가별로 다른데 핀란드, 독일,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 비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격차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핀란드에서는 부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와 고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의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2003년에 각각 2.04점과 2.13점이고 2012년에 각각 2.11점과 2.20점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난 미국의 경우,

그림 IV-22 OECD 주요국 학생의 부모 교육수준별 수학교과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 2003, 2012



주: 1) 수학교과 내재적 학습동기 수준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1-4점으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OECD, PISA 2003; PISA 2012 Dataset.

고졸 이하와 고등교육을 이수한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가 뚜렷한 편이다. 특히 2003년에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크다. 부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 자녀의 수학흥미도는 2.08점인 데 비해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29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편이다. 2012년에는 그 차이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부모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에서 2003년보다 수학흥미도가 크게 감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인 격차 감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한국의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이나 학습동기가 그다지 높지 못하며, 가정환경에 따라 발달수준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다. 반면 외재적 학습동기는 대체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관찰된다. 자아존중감은 비행, 우울, 자살 등 심리 사회적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학습동기는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나 학습동기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나 학습동기와 같은 심리적 발달수준에서 열위에 처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4 Labor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 노동

- | | | | |
|----|--------------------|-----------------|-----|
| 01 |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160 |
| 02 |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69 |
| 03 |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 176 |

01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고용률은 2013년 현재 64.4%로 2011년 대비 0.5%p 증가를 기록하였다. 5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 고용률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30세 미만의 청년층 고용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32.6%로 2004년 이래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감소는 주로 한시적 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는 10.3%이다.
- 저임금 일자리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법정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현재 11.5%를 기록하고 있다.
- 노동조합 조직률은 12.4%로 작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노동시장 현황은 고용률 관련 지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의 특성 순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인구집단별 고용현황에 주목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65세 이상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던 기존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을 때 그 기준은 전자의 방식이다.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추세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노동 영역의 동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고용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온 가운데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고,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생산하는 통계와 OECD 국가비교 통계를 활용하였다.

고용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의 비율로 산출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데 비해 고용률은 취업자만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이점이 있다. 실업



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추세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보다 고용률이 갖는 의미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고용률은 2013년 현재 64.4%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표 V-1). 이는 1990년에 비해서 3.2%p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정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직 5.6%p의 순증가가 필요하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2%p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

표 V-1 성 및 연령별 고용률, 1990-2013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전체	61.2	63.5	61.5	63.7	63.3	63.9	64.2	64.4
성								
남자	73.9	76.8	73.1	75.0	73.9	74.5	74.9	74.9
여자	49.0	50.5	50.1	52.5	52.6	53.1	53.5	53.9
연령								
15-29세	43.6	46.4	43.4	44.9	40.3	40.4	40.4	39.7
30-49세	75.8	76.4	74.3	74.7	75.0	75.4	75.6	75.9
50-64세	67.3	67.6	62.5	64.2	66.7	67.6	68.3	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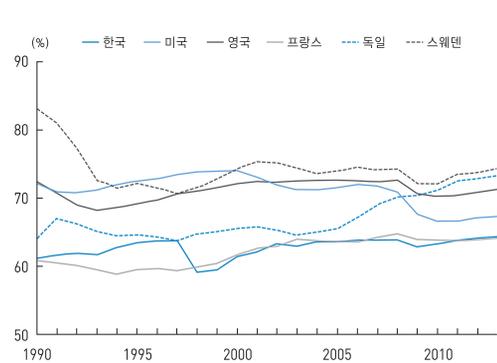
주: 1) 만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고용률을 인구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4.9%로 전년 대비 변화가 없고 여성은 53.9%로 0.4%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2013년 현재 39.7%로 40%선 아래로 내려가 전년도에 비해서 0.7%p 감소하였다. 30-49세의 고용률은 75.9%로 소폭 상승하였고, 50-64세의 고용률도 69.3%로 전년 대

비 1.0%p 증가하였다(표 V-1). 청년층의 고용률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률이 증가한 이유는 장년층의 고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분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낮다(그림 V-1). 이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V-1 OECD 주요국의 고용률, 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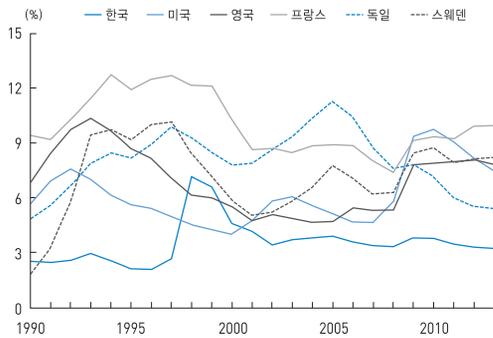
주: 1) 만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한국의 실업률은 OECD의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독일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밖에 다른 나라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였다가 이후 커다란 상승이나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V-2). 한국은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노동시장 상황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실업'에 대한 정의에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일할 의지가 있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면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V-2 OECD 주요국의 실업률, 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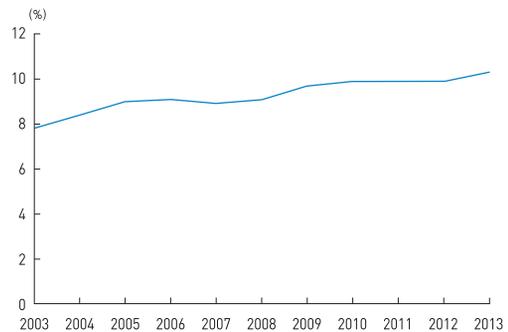


주: 1) 만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 이른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층을 우리는 '유휴청년층'이라고 한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인구 중에서 이들의 비율이 2013년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NEET 비율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지난 1주간 활동을 근거로 산출한다.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에 다니지 않았고, 취업하고 있지 않으며, 가

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배우자가 없는 15-34세의 인구를 유휴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조사된 유휴청년층의 비율은 2003년 7.8%에서 2013년에는 10.3%까지 높아졌다(그림 V-3).

그림 V-3 유휴청년층(NEET) 비율, 2003-2013



주: 1) 유휴청년층(NEET) 비율은 15-35세 미만 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 미취업상태이면서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취업준비학원에 다니지 않았고,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취업자의 구성

취업자는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와 자기 사업을 하는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는데, 자영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근로자는 흔히 정규직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에 27.4%를 기록하고 있다(표 V-2). 취업자의 72.6%는 임금근로자이다.

표 V-2 성별 비임금근로자 비율, 1990-2013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전체	39.5	36.8	36.8	33.6	28.8	28.2	28.2	27.4
남자	36.9	34.3	35.7	34.0	30.0	29.6	29.8	29.0
여자	43.2	40.4	38.5	32.9	27.1	26.4	26.0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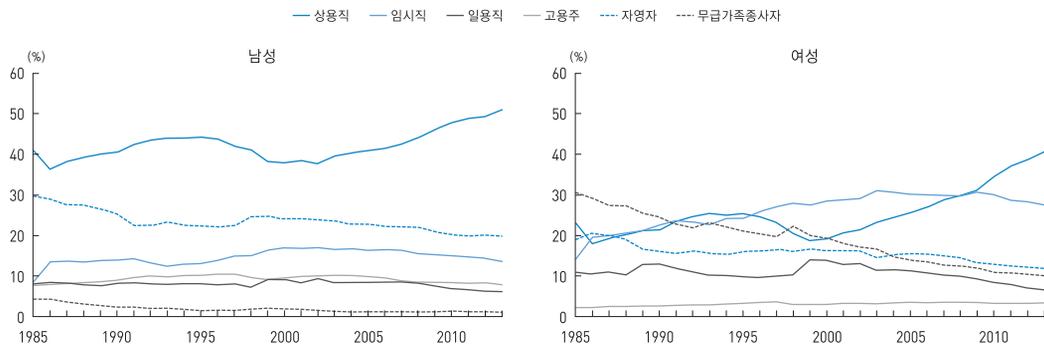
주: 1)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감소는 노동시장구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여성의 경우에 한정해서 보자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임금근로자는 늘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V-4). 여성 고용률의 증

가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된다.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표 V-3>과 같다.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그 외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16.8%이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69.6%이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과 농업직이 줄어들고 있으며, 사무직과 전문직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문·관리직은 2005년 18.4%에서 2013년에는 21.4%까지 증가하였으며, 사무직은 같은 기간에 14.8%에서 16.8%로 증가하였다. 생산직은 소폭이지만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13년에는 33.7%를 기록하였다.

그림 V-4 취업자의 성별 종사상지위 구성, 1985-201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V-3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구성, 2005-2013 (%)

	2005	2010	2011	2012	2013
산업					
농림어업	7.9	6.6	6.4	6.2	6.1
제조업	18.1	17.0	16.9	16.7	16.8
건설·전기·수도	8.5	8.0	7.8	7.8	7.6
도소매·음식숙박업	25.4	23.0	22.7	22.7	22.5
기타 서비스업	40.0	45.5	46.2	46.7	47.1
직업					
전문·관리직	18.4	21.5	21.5	21.3	21.4
사무직	14.8	15.7	16.5	16.6	16.8
서비스·판매직	25.2	22.5	22.1	22.5	22.4
농업직	7.5	6.0	5.9	5.8	5.7
생산직	34.2	34.2	34.1	33.8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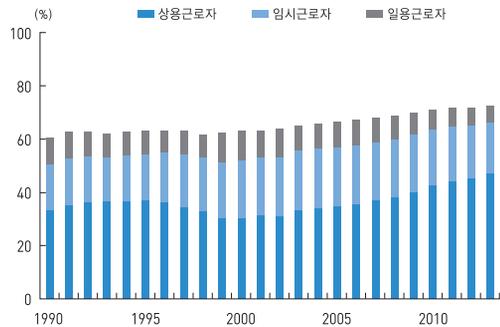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근속기간 및 근로조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60.5%에서 2013년에는 72.6%로 증가하였다. 취업자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산업화를 먼저 겪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한국에서도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임금근로자 분류방식인 상용·임시·일용의 구분으로 살펴볼 때, 상용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V-5). 2000년을 전후하여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1년 이상을 고용계약 기간으로 정한 모든 고용이 상용직 일자리로 구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 V-5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비율, 1990-2013



주: 1)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종사상 지위의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편,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보강되었다. 한시적 근로이거나 시간제 근로, 혹은 비전형 근로이면 비정규직으로 보는 정의를 사용할 때,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3년 현재 67.4%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표 V-4).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에 37.0%로 최고점에 다다른 이후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기간제 근로와 일시적 고용을 합친 개념인 한시적 근로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8%를 차지하고 있는



표 V-4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별 구성비율, 2003-2013 (%)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2003	67.4	32.6	21.3	6.6	11.9
2004	63.0	37.0	24.7	7.4	13.4
2005	63.4	36.6	24.2	7.0	12.7
2006	64.5	35.5	23.6	7.4	12.6
2007	64.1	35.9	22.3	7.6	13.9
2008	66.2	33.8	20.4	7.6	13.3
2009	65.1	34.9	21.3	8.7	13.9
2010	66.6	33.3	19.2	9.5	13.4
2011	65.8	34.2	19.7	9.7	13.9
2012	66.7	33.3	19.2	10.3	12.9
2013	67.4	32.6	18.8	10.3	12.1

주: 1)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비정규직 비율을 초과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데, 전체 비정규직 비율의 감소는 주로 한시적 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에 24.7%였으므로 지금까지 5.9%p 감소하였다. 한편, 시간제 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 불과하였던 시간제 근로자는 2013년에 와서는 10.3%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고용과 재택근로, 특수고용 등을 포괄하는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은 2013년 현재 12.1%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구성도 고령화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41.7세로 10년 전에 비하여 약 4세 증가하였다(표 V-5). 임금근로자들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근속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3년에 66.8개월로 산출되었다(표 V-5).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보면 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근속기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80개월이고, 여성 임금근로자는 51개월이다. 중위수로 보면 남성은 39개월, 여성은 22개월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표 V-5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평균연령, 2003-2013

연도	근속기간(개월)		평균연령(세)
	평균	중위수	
2003	52.7	18	37.6
2004	52.9	19	38.0
2005	54.3	20	38.4
2006	54.1	19	38.9
2007	55.1	20	39.5
2008	57.1	22	39.7
2009	58.6	22	40.4
2010	59.4	23	40.7
2011	61.2	24	41.0
2012	64.0	27	41.3
2013	66.8	29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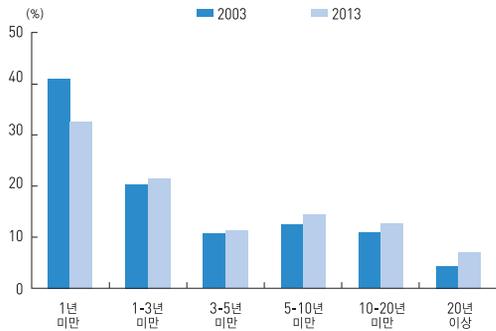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년 8월.

임금근로자 중에서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의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V-6]과 같다. 근속기간의 분포는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산업화의 성숙 정도 또는 노동인력의 고연령화를 반영하



는 것이다. 2003년에 비하여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은 3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는 약 21%이다. 근속기간이 20년이 넘는 근로자의 비율은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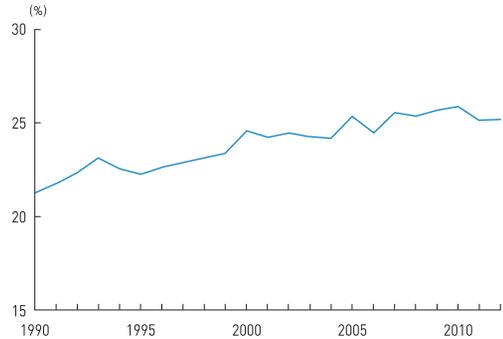
그림 V-6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별 구성비율, 2003, 201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년 8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중위임금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저임금’이라고 정의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V-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에는 22%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0년에는 26%에 달하는 임금근로자가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2012년 통계는 조금 감소한 25.2%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것을 근거로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V-7 저임금 근로자 비율, 1990-2012



주: 1)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금수준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과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860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는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제도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표 V-6>과 같이 변화해 왔는데, 2013년 기준으로는 11.5%에 달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7.3%, 여성 임금근로자의 16.9%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의 9.7%,



35-54세 장년층 근로자의 7.2%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인 데 비하여 55세 이상 고령층 임금 근로자는 28.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고 있다.

표 V-6 최저임금과 임금근로자의 성 및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 200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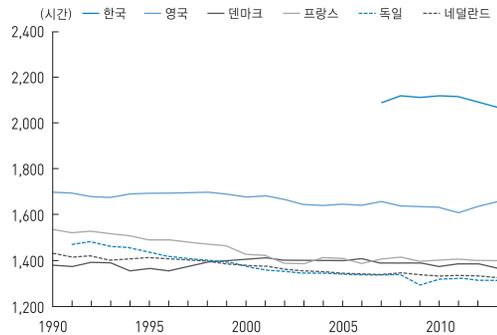
연도	최저 임금 (원/시간)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성		연령		
			남성	여성	15-34세	35-54세	55세 이상
2003	2,275	4.9	2.9	7.6	3.7	3.3	18.0
2004	2,510	5.8	3.5	9.0	4.6	4.1	19.2
2005	2,840	8.1	5.2	12.2	6.6	5.7	25.4
2006	3,100	9.4	6.2	13.8	7.2	7.0	28.7
2007	3,480	11.9	7.3	18.3	9.1	9.2	32.8
2008	3,770	10.9	6.8	16.5	8.3	8.0	31.3
2009	4,000	12.8	8.3	18.9	10.5	9.2	33.1
2010	4,110	11.6	7.8	16.9	8.7	8.3	31.9
2011	4,320	10.9	7.3	15.6	8.3	7.2	29.9
2012	4,580	9.6	6.4	13.9	7.2	5.9	26.9
2013	4,860	11.5	7.3	16.9	9.7	7.2	28.1

주: 1)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년 8월.

한국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있다. [그림 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00시간 내외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길다. 선진국들은 이미 1,400시간에서 1,600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연간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덴마크를 제외

한 국가들은 최근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 초반부터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은 지금도 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V-8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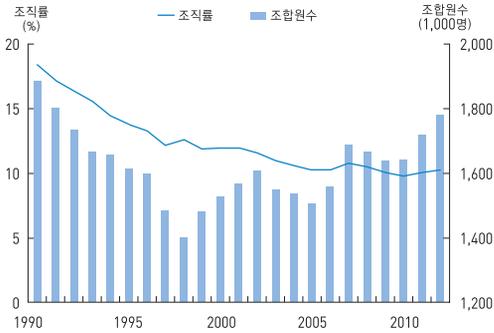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노사관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2년 기준 10.3%로 1990년 18.4%에 비해 8.1%p 감소하였고, 조합원수는 178만 명이다(그림 V-9).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의 조직률은 그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노동조합 조직률은 사업체 규모나 고용 형태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경제활동

그림 V-9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수, 1990-2012



주: 1) 노동조합조직률 = (조합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년도.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7.0%이나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3.0%에 불과하다(표 V-7). 2005년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조직률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V-7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 2005-2013 (%)

연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005	11.8	15.9	4.6
2010	11.4	15.7	2.8
2011	10.9	15.2	2.6
2012	11.5	15.8	2.9
2013	12.4	17.0	3.0

주: 1) 노동조합가입률 = (노동조합가입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파업과 근로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 노동쟁의 발생은 72건, 근로손실은 638일로 2012년보다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2011년보다는 증가한 상황이다(표 V-8).

그러나 통계로 명확히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중요한 지표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노동쟁의 발생건수의 감소를 노사관계의 안정화로 곧바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V-8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2000-2013

연도	파업건수	근로손실일수
2000	250	1,894
2005	287	848
2010	86	511
2011	65	429
2012	105	933
2013	72	638

주: 1) 파업건수는 2006년부터 산별노조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할 경우 1건으로 파악함.
2) 근로손실일수 =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백서」, 각 년도.



02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989년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 등에 힘입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국가군에 속한다.
- 2013년 현재 주당 53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총 취업자의 22.5%이다.
-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3년 현재 평균 66.4%로 임금근로자의 33.6%가 주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장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가족관계의 악화 등 가족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 한국은 멕시코, 칠레, 그리스 등과 함께 근로시간은 길고 생산성은 낮은 국가 범주에 속한다.

장시간 노동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업무집중도 저하를 초래하여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비용부담을 야기한다.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에 2,090시간으로 1990년의 2,677시간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은 한국을 장시간 근로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2004년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된 주40시간 근무제도 등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를 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매우 긴 편이지만, 시간당 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초과노동에 대한 의존과 장시간 근로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정시간 근무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창조와 혁신이 필요하며, 그 징후가 근로시간의 감소를 통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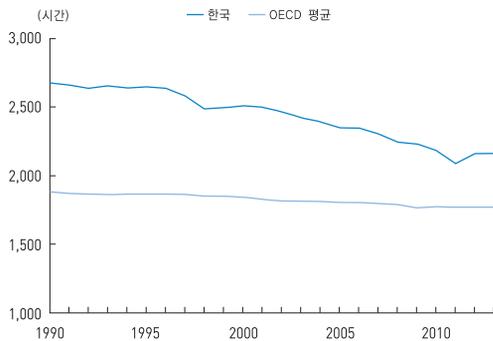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30여 년 동안의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고, 장시간 근로체제에 변화를 가져온 제도적 요인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주당 53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업종과 사업체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노동이 개인과 기업 및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국내 장시간 노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OECD 통계 DB에 수록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근로시간의 변화와 국제비교

한국은 장시간 노동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근로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1990년 연간 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 이상이 감소되었다(그림 V-10). 그러나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1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고,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인 1,770시간보다 393시간이 길다.

그림 V-10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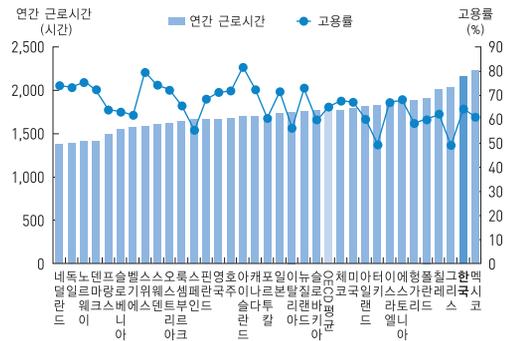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최근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면서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림 V-11]은 OECD 국가들의 연간 실근로시간과 고용률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근로시간이 길수록 고용률이 낮은 것이 확인된다. 가령 근로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의 고용률은 61.0%인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4.3%이다. 이처럼 고용률 증가는 근로시간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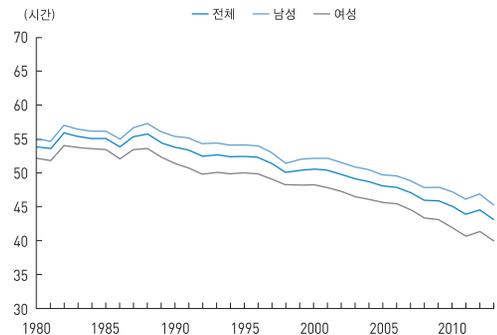
그림 V-11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과 고용률, 2013



주: 1)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2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파악되는 총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를 보면, 1980년대 중반의 근로시간 감소가 두드러진다(그림 V-12). 이는 1989년 주44시간제의 단계적 도입

그림 V-12 취업자의 성별 주당 근로시간, 198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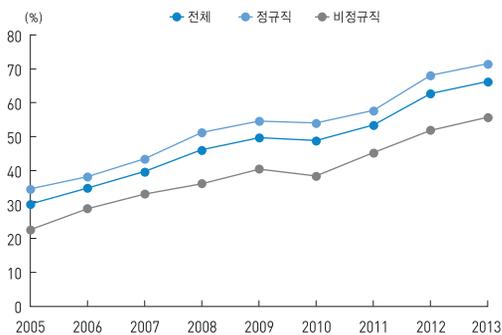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등 노동법 개정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나 곧 법 개정의 효과가 소진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된다. 근로시간은 2000년대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인데,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13년 현재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3.1시간이다.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에는 주40시간제의 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림 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도를 도입한 비율이 2005년에 임금근로자의 30.2%였으나 2013년 8월 현재는 66.4%로 높아졌다. 향후 근로시간의 감소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40시간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한편, 주40시간제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3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률, 2005-2013



주: 1) 주40시간제 도입률은 해당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그림 V-12]에서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살펴 보면, 대체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의 근

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이 유지되며, 최근에 이를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근로시간 감소 추이가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 및 시간제 근로의 확산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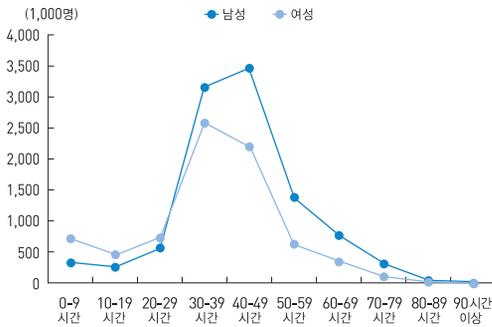
장시간 노동의 실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3년 8월 현재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9.9시간이다. 남성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0시간에서 126시간까지 분포하며 평균 42.3시간이고, 여성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0시간에서 112시간까지 분포하며 평균 36.6시간이다. 주당 29시간까지는 여성 취업자수가 남성을 능가하는데, 그 이상에서는 남성취업자수가 여성보다 더 많다(그림 V-14). 장시간 근로자가 남성취업자 집단에서 더 많이 발견되지만, 여성취업자 집단에서도 장시간 근로자가 적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종사상 지위별로 비교하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특히 고용주)의 근로시간이 길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8.2시간인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44.2시간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의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47.8시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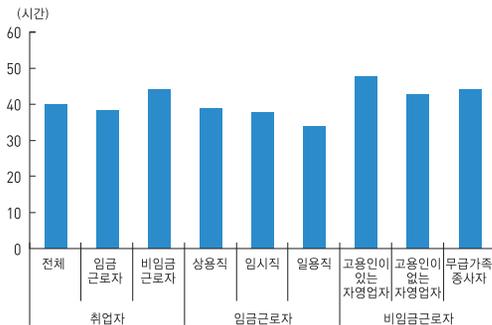


그림 V-14 취업자의 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1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그림 V-15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주당 근로시간, 201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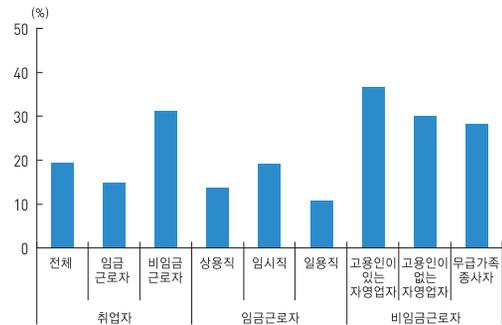
가장 길며, 여성이 대부분인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평균 44.3시간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순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길다(그림 V-15).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까지 포함하면 1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

며, 근로시간특례업종의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몇 시간 이상의 근로를 장시간 근로로 볼 것인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주당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장시간 근로로 보고자 한다.

2013년 8월 현재 주당 5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총 취업자의 19.4%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임금근로자에서는 14.8%이나 비임금근로자에서 31.3%로 나타나, 비임금근로자 집단의 장시간 근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주당 53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이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그림 V-16). 앞에서 임시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상용근로자보다 짧

그림 V-16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장시간근로자 비율, 2013



주: 1) 장시간근로자 비율은 해당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중 주53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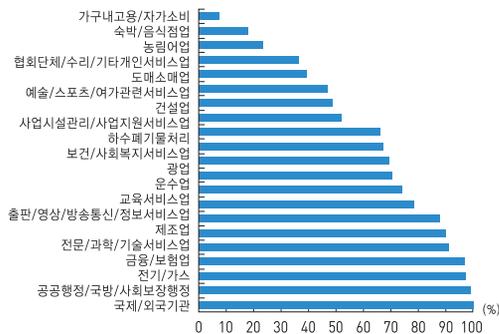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임시근로자 집단 내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주40시간제 도입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동 제도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3년 8월 현재 66.4%로 임금근로자의 33.6%가 주40시간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이 제도가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40시간제 실시율은 업종별로 편차가 크다. [그림 V-17]에서 보듯이 전기·가스업, 행정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에서는 실시율이 90%를 넘는다. 그러나 가구내서비

그림 V-17 업종별 임금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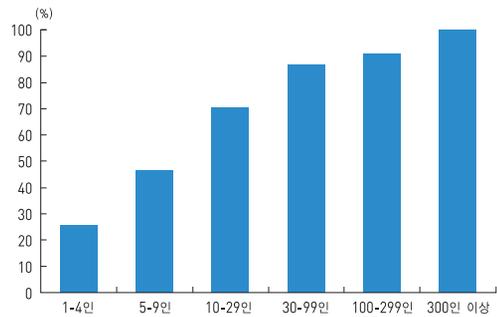


주: 1) 주40시간제 도입률은 해당 업종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산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는 실시율이 4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사업체 규모별 주40시간제 실시율을 보여주는 [그림 V-18]을 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실시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인 미만 초영세사업체의 경우 25.7%만이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100% 실시하고 있다.

그림 V-18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률, 2013



주: 1) 주40시간제 도입률은 해당 사업체 규모에 속한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989년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과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 등에 힘입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국가군에 속한다. 장시간 근로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는 남성 외별이를 전제로 전일제 근로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규범에서부터 근로시간특례제도, 교대제, 낮은 연차휴가 소진율, 저임금 구조, 느슨한 노동시간 규제 등의 제도와 관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장시간 근로체제의 요인을 밝히는 작업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한 마땅한 자료도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예컨대 근로시간특례제도의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되면 초과근로시간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실증분석 결과는 특례업종과 장시간 노동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배규식, 2012). 이것은 아마도 근로시간특례업종은 ‘특례업종’이 아니라 이미 전체 고용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일반업종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교대제가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키는 데 반해,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동일한 제도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표준노동시간에 가깝게 만든다(배규식 외, 2013).

장시간 노동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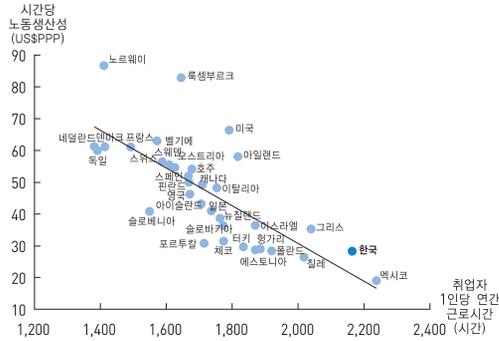
최근 근로시간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그 배경을 이룬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장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아울러 가사와 자녀양육의 소홀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 부족과 마찰 증가,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그로 인한 불화 등 가족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은 자녀양육과 가사의 부담을 불균형적으로 짊어지는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재취업의 어려움이라는 비용을 초래한다. 나아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들의 집중력 감소, 능력개발 기회의 축소, 산업재해로 이어질 경우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이제 부가가치가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이 아닌 혁신과 창의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생산성 이슈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기업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다(OECD, 1998). OECD 통계를 이용하여 2013년 연간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을 [그림 V-19]와 같이 산점도로 그려보면, 뚜렷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에서 생산성이 높다. 한국은 멕시코, 칠레, 그리스 등과 함께 근로시간은 길고 생산성은 낮은 국가 범주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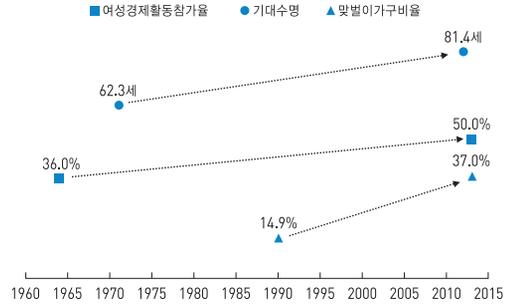
그림 V-19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과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관계, 2013



주: 1)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적용한 명목 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장시간 노동체제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므로 이것이 유지되려면 ‘가구 내 전업주부’라는 부부 간 역할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은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을 것임을 전망케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964년 36.0%에서 2013년 50.0%)이 증가하고, 맞벌이가구비의 비중(1990년 14.9%에서 2013년 37.0%)도 높아졌다. 한편, 평균수명(1971년 62.3세에서 2012년 81.4세)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노인돌봄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그림 V-20).

그림 V-20 한국 사회 일-생활 양립의 도전 지표들



주: 1) 경제활동참가율은 구직기간 1주 기준임.
2) 맞벌이가구비율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생명표」, 각 년도;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이러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 인구구성, 사회적 요구 등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장시간 근로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장시간 근로체제는 많은 문제를 초래하므로 이제까지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를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물량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창조와 혁신을 통한 고생산성 성장전략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수 근로자가 적정시간을 근무하는 시스템으로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배규식, 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경제와 사회」 95: 128-162.
- 배규식 · 박태주 · 이문호 · 이영호 · 김종진 · 정승국 · 김인아, 2013. 「교대제와 노동시간」, 한국노동연구원.
- OECD, 1998. *Employment Outlook*.

03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 최근의 고용률 회복은 청년층의 고용 악화를 중·고령층 고용증가로 상쇄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수는 공식적 청년 실업자의 수를 능가한다.
- 청년층의 취업시험 준비는 취업준비생만이 아니라, 실업자와 기타 비경제활동인구에게도 일반화되었으며, 공공부문 취업시험 준비자가 많다.
- 청년층의 장기간 취업준비는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취업경쟁의 산물이지만 그 노동시장 성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 청년층의 취업 지연은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학교졸업 이후에도 구직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통계상으로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당장에 구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취업상태가 아니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나, 유휴청년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취업준비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지연은 개인이나 가계, 노동시장에 모두 손실이다.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적지 않은 수가 취업준비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특성과 취업준비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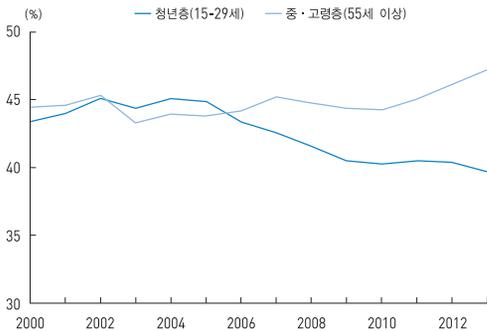
청년층 고용률의 추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02년 60.0%를 정점으로 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8.6%까지 떨어졌으나, 2013년에는 59.5%로 다소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성을 보인다(그림 V-21).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에 45.1%를 기록한 이후 2013년 39.7%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2003년



43.3%를 최저점으로 하여 2013년 47.2%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므로 최근 고용률의 회복은 청년층 고용감소를 중·고령층의 고용 증가로 상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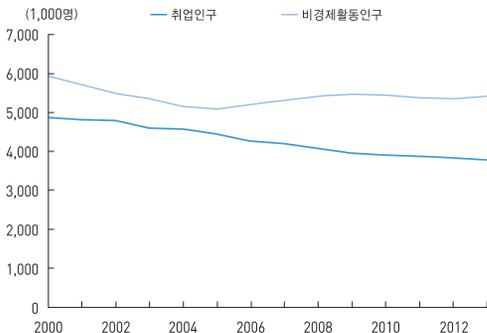
그림 V-21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률, 2000-201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청년층 비경제 활동인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효과로 청년인구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청년층 비경제 활동인구는 고용률의 하락세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그림 V-22). 청년층

그림 V-22 청년층 취업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2000-201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학생들이 휴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당장에 구직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의 증가추세도 무시할 수 없다.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규모

청년층 취업준비생을 파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다. 첫째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을 포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인구와 그 외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인구 모두가 포함된다. 두 번째 방법은 취업시험준비생을 파악하는 것인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2006년부터 15-34세 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1주간 취업 관련 시험준비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전자를 통해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후자를 통해서 는 경제활동상태와 무관하게 실제로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15-29세 청년층의 취업준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본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수는 2012년 5월 기준 38만 9천 명으



로 공식적 청년 실업자의 수 34만 2천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표 V-9). 이들 중에서 학원 및 기관 통학을 통한 취업준비생은 약 12만 8천 명이고, 그 외 취업준비생은 26만 1천 명에 달한다. 청년층 취업준비생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들을 사실상의 실업자로 간주하여 당장에 구직을 하고 있는 공식적 실업자와 합계할 경우에는 청년층 실업자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표 V-9 청년층의 연령별 실업자수와 취업준비생수, 2012 (1,000명)

	실업자	취업준비생		
		전체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그 외 취업준비
전체	342	389	128	261
15-19세	15	15	8	7
20-24세	140	163	60	103
25-29세	187	211	60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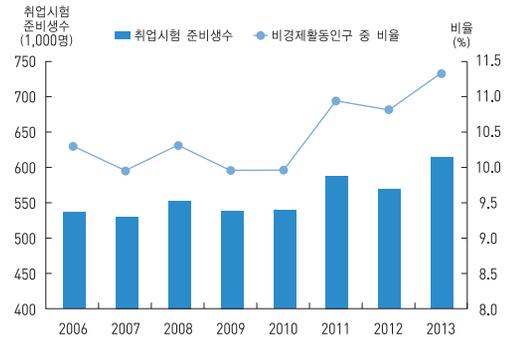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2. 5.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취업시험 준비생의 규모를 살펴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시험 준비생의 수는 2013년 5월 현재 61만 4천 명이며, 이는 2006년 53만 7천 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다(그림 V-23).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10.3%에서 11.3%로 증가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두 번째 방법에 의한 취업시험 준비생의 규모는 56만 9천 명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산출한 취업준비생 38만 9천 명에 비해 18만 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정규 통학이나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도 취업 관련 시험준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V-23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생의 수와 비율, 2006-201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년 5월.

〈표 V-10〉은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취업시험 준비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취업시험 준비생의 비율은 취업자의 6.4%, 실업자의 36.3%, 비경제활동인구의 10.8%에 달한다. 이미 취업한 청년층도 이직을 위해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실업자도 당장에 구직을 하면서 동시에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의 6.8%도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취업준비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유희인력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 가운데는 공공부문 취업을 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시험 준비생 가운데 공공부문 시험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취업



자의 경우에 25.5%이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우에는 각각 26.6%와 41.8%에 달한다. 청년층의 적지 않은 수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 당장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표 V-10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별 취업시험 준비생 비율과 공공부문 시험준비자 비율, 2012 (%)

	취업시험 준비생 비율	공공부문 시험준비자 비율
취업자	6.4	25.5
상용직	4.4	29.8
임시직	9.1	28.4
일용직	8.5	8.3
고용주	4.0	-
자영업자	8.3	9.1
무급가족종사자	8.0	14.3
실업자	36.3	26.6
비경제활동인구	10.8	41.8
그중 쉬었음	6.8	30.0

주: 1) 취업시험 준비생 비율은 경제활동 상태별로 지난 1주간 취업 관련 시험준비를 한 사람의 비율임.
 2) 공공부문 시험준비자 비율은 취업시험 준비자 중 국공영기업체 입사시험, 교원임용고시, 외무, 사법 및 행정 고시, 일반직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2. 5.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경제활동상태 이행

청년층 취업준비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취업준비생이 일정기간 이후에 어떤 경제활동상태로 이행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졸업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취업준비생이 2012년에 어떤 경제활동상태로 이동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표 V-11〉에 의하면, 2009년에 취업준비생이었던 청년층은 3년 뒤에 51.7%가 취업자로 이동하였고, 6.3%는 실업자로, 14.2%는 취업준비생으로, 27.9%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였다. 취업준비생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비율(51.7%)은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행(56.9%)보다는 낮지만, 기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51.5%)과는 차이가 거의 없다.

표 V-11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이행비율, 2009, 2012 (%)

	2012				
	취업자	실업자	취업 준비생	기타 비경제 활동자	계
2009					
취업자	74.1	2.5	1.3	22.1	100.0
실업자	56.9	7.0	4.9	31.2	100.0
취업준비생	51.7	6.3	14.2	27.9	100.0
기타비경제활동자	51.5	4.6	3.0	40.9	100.0
전체	68.9	3.3	2.4	25.4	100.0

주: 1)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 대학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및 그 외 취업준비자를 포함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취업준비의 노동시장 성과가 미미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취업준비를 선택한다

고 보면, 취업자로 이행하는 비율은 낮아도 고용안정성이나 임금수준 등 취업의 질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자에 한정하여 3년 후의 취업 이행을 살펴보았다(표 V-12). 2009년 취업준비생이 2012년에 상용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80.5%로 실업자(82.6%)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기타 비경제활동인구(74.7%)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간에 걸쳐 취업을 준비한 청년층이 당장에 구직을 했던 청년층에 비해서 고용안정성이 높은 취업상태로 이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표 V-12 대졸 취업 이행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율, 2009, 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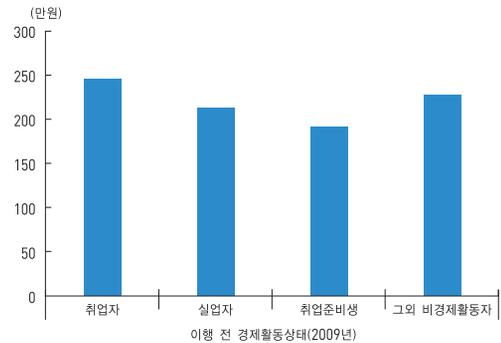
	2012			계
	상용직	임시 일용직	비임금 근로	
2009				
취업자	86.4	6.9	6.7	100.0
실업자	82.6	12.3	5.2	100.0
취업준비생	80.5	14.9	4.7	100.0
기타 비경제활동자	74.7	17.7	7.7	100.0
전체	84.9	8.5	6.6	100.0

주: 1)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 대학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및 그 외 취업준비자를 포함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음으로 취업준비생이 상용직으로 취업했을 때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았다(그림 V-24). 취업준비생이 상용직으로 취업하여 받은 월 평균임금은 약 192만 원인데, 이들의 임금수준은

실업자는 물론 기타 비경제활동인구였다가 상용직으로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취업의 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졸업 이후 취업준비 기간이 대다수에게 성공적인 취업이행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V-24 대졸 상용직 취업 이행자의 월평균임금, 2009, 2012



주: 1)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 대학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및 그 외 취업준비자를 포함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년도.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취업준비가 양질의 취업 성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취업준비생의 취업 성과는 당장에 구직을 한 실업자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으며, 취업 이후의 임금수준도 실업자는 물론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다가 취업한 사람에 비해서도 낮았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특성

그렇다면 왜 상당수의 청년층이 취업 여부나



질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취업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취업자, 실업자, 기타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해 보았다.

각 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취업자와 실업자 및 취업준비생 집단 모두 50% 미만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부모와 동거하거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표 V-13).

또한 졸업한 대학의 특성과 전공계열에도 차이가 있다. 취업준비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국공

립 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고, 지방대 출신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높아서 이들의 취업준비가 공무원, 교원 또는 공공부문 시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가족배경이 나쁘지 않은 4년제, 지방대 출신, 사회교육계열 전공자들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준비때문에 경제활동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층 취업준비생은 당장에 구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지방대 및 4년제 대학 출신의 비율이 높고, 사회 및 교육 계열 전공자가 많다. 이들이 일정 기간 이상 취업준비를 하는 이유는 주로 공공부문 시험준비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준비생을 사실상의 실업자로 간주하여 실업률에 포함시킬 경우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다른 경로로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고용안정성이나 임금수준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았다. 취업준비 기간을 통해서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취업시험에 성공한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

표 V-13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성, 대학 및 전공계열, 가족배경적 특성, 2009 (%)

	취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생	기타 비경제활동자
여성 비율	45.1	48.7	47.4	53.1
대학 특성				
국립대학 졸업자 비율	17.7	15.4	28.2	19.6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	61.2	65.5	71.4	71.3
서울권 소재 대학 졸업자 비율	20.9	21.3	18.3	27.5
어학연수 경험자 비율	15.3	14.8	10.3	15.3
전공계열 특성				
인문계열 전공자 비율	9.3	13.1	10.0	13.3
사회계열 전공자 비율	26.0	25.2	30.8	18.8
교육계열 전공자 비율	7.8	5.5	19.6	4.9
가족배경적 특성				
부모와 동거자 비율	60.4	78.5	86.1	73.0
가족의 경제적 지원 경험자 비율	4.8	38.1	63.7	56.7

주: 1) 2009년도 대학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및 그 외 취업준비자를 포함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2009.

시험에 실패한 다수는 장기간의 취업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서 노동시장에서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졸업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에 몰입하고 있는 청년층의 존재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산물이다. 공공부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가 커질수록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취업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당분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 지연은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층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중·고령자의 고용증가에 의한 고용률 회복에 대해서 반가워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기를 바쳐 입시와 취업경쟁에 매진해 온 고학력 청년들에게 무조건 눈높이 낮추기를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청년 노동력의 고용안정 없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2014

Income & Consumption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 소득과 소비

- | | | | |
|----|-------------------|---------------|-----|
| 01 |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 박정수 서강대학교 | 184 |
| 02 |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 195 |
| 03 |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 홍석철 서강대학교 | 202 |

01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금융위기 이후 경기악화 시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 보다 낮았으며, 경기가 호전되었을 때는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였다.
-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직종 간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 1인가구 중 상당수가 빈곤층에 속하며 장년 및 고령층에 해당되고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근로소득의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다.
- 여성배우자의 가구소득기여도는 모든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진출은 전문직 및 관리직 등 고소득 직종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 소비지출 구성항목 중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낮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은 편이다.
- 금융위기 이후 상위 소득계층의 순자산은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 간 순자산 점유율 격차는 더 커졌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구들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최근 한국경제 변화의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계층이나 집단 간에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6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2013년 최근까지 각 소득계층별, 연령집단별, 기타 가구특성별 소득과 소비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집단별 분석은 향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생계의 기본 단위인 가구를 분석의 단위로 하였고, 분석을 위한 미시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2006년 이전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1인가구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 글은 1인가구가 포함된 2006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인가구의 경제적 특징이 2인 이상 가구들에 비해 상당히 달라 전체적인 분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요 분석에서는 1인가구를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적은 분석에는 1인 가구를 포함시켰다. 소득 및 소비를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이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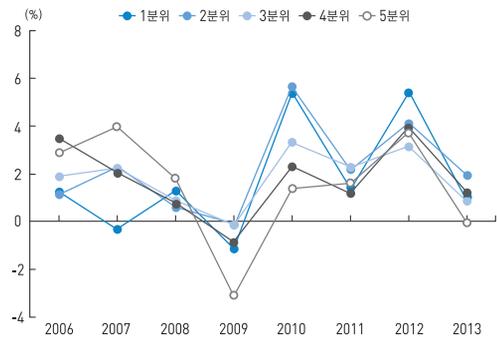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개별 가구의 경제생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각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가구소득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가구의 소득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고 가구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전체 가구를 소득규모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각 소득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을 구한 후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 보았다. 이 분석에서 이용되는 자료가 동일한 가구의 연도별 실질소득 변화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각 소득집단의 평균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집단 간 소득 변화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I-1]을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그 다음해인 2009년 실질소득증가율은 대부분의 소득집단에 있어서 급격히 하락했으며 2010년에 다소 회복한 후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2.1%의 평균 소득증가율을 보인 반면, 2008년에는 1.1%, 2009

년에는 -1.0%의 소득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 이후 2009-2013년 기간 동안의 실질소득증가율은 2.6%에 머물러 금융위기 직전 기간의 소득증가율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I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2006-2013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난 8년 동안 시기에 따라서 소득집단별 소득 변화의 추이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09년이나 2011년 그리고 2013년에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평균 소득증가율보다 낮았으며, 반대로 경기가 좋았던 2010년과 2012년의 경우 저소득집단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집단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소득층일수록 수입에 안정적인 기반이 확보되어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나 소득기반이 불안하여 경기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기간의 회복 국면에서 1분위와 2분위 소득집단의 소득 증가율이 3.4%였던 반면, 4분위와 5분위 소득 집단의 소득증가율은 1.9%에 그쳐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소득분위별 집단의 소득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분위의 평균소득은 전체 평균소득 대비 32.5%이며 5분위의 평균소득은 약 191.9%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2013년 기간에서는 1분위와 2분위의 소득비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4분위와 5분위의 소득비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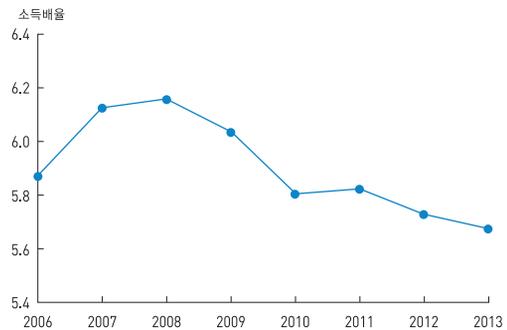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32.8	63.9	89.6	121.1	192.4
2007	31.8	63.7	89.3	120.2	194.9
2008	31.9	63.3	89.0	119.8	196.0
2009	32.0	64.3	90.2	120.5	192.9
2010	32.8	66.1	90.7	120.0	190.4
2011	32.7	66.4	91.2	119.5	190.1
2012	33.2	66.6	90.7	119.5	190.0
2013	33.2	67.4	90.8	120.0	188.5
2006-2013 평균	32.5	65.2	90.2	120.1	191.9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지난 8년 간 소득집단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VI-2]에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을 제시하였다. 이 배율은 2006년에 5.87이었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6.16으로 상승하였다가 그 다음 해인 2009년에는 6.03, 그리고 2013년에는 5.68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경기침체에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고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의 완화는 경기회복 기간에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I-2 소득 5분위 배율, 2006-2013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최근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가구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VI-3]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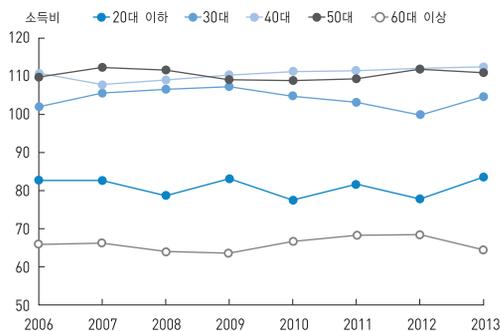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각 집단의 소득비가 지난 8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와 50대는 소득비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60대가 평균 이하의 소득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60대의 경우 은퇴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가장 낮은 소득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시기에 20대와 60대의 소득비는 각각 2006년 82.9, 66.1에서 2008년 78.8, 64.3으로 낮아진 반면, 나머지 연령집단의 소득비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금융위기는 일자리가 취약한 청·노령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 반면, 안정적인 직장기반을 가진 30대와 40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의 소득비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소득비의 상대적 격차는 유지되고 있어 청·노령층과 중·장년층 간 소득비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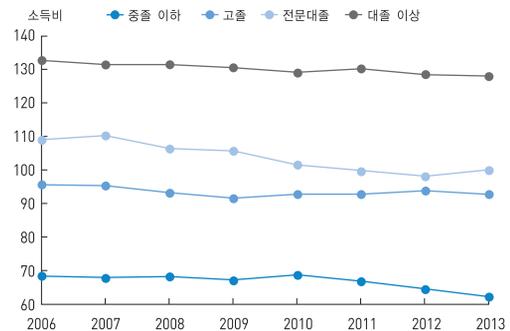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비례관계를 보이므로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교육에 따른 소득 격차가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기 위해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체 평균소득 대비 각 학력집단의 소득비를 [그림 VI-4]에 제시하였다. 대졸 집단과 고졸 집단의 소득비는 각각 2006년 132.9와 95.8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128.1과 92.9로 하락하였다. 한편, 전문대졸 집단과

그림 VI-3 가구주 연령별 소득비, 2006-2013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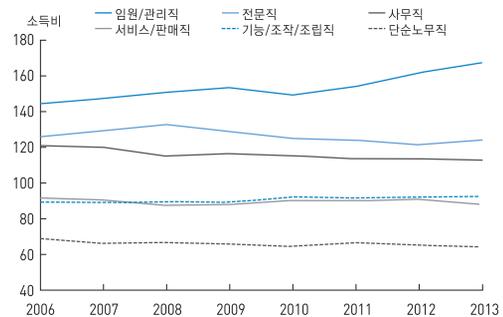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학력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중졸 이하 집단의 소득비는 각각 2006년 109.2와 68.5에서 2013년 100.2와 62.3으로 급격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모든 집단의 소득비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대졸 집단의 비중이 2006년 26.2%에서 2013년 32.8%로 늘어난 반면 중졸 이하 및 고졸 집단의 비중은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전문대졸 집단의 소득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사실은 기술혁신의 진행으로 중간 수준의 기술자들에게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졸 이하 집단의 소득비는 2010년 이후 하락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최근 대내외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특성에 따라 그리고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직업별 임금이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원·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직업군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직, 기능·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 등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VII-5]에서 보면 지난 8년 동안 전체 평균소득 대비 임원·관리직의 소득비는 상승한 반면, 전문직 및 사무직의 소득비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능·조작·조립직과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상대적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소득비가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직종 간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림 VII-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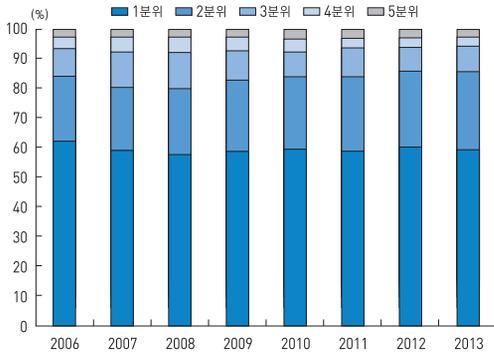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1인가구의 후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 평균소득 대비 1인가구의 소득비는 2007년 46.1에서 2013년 42.3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1인가구 집단과 2인 이상 가구 집단의 소득은 각각 -5.4%와 -1.5% 감소를 기록했는데, 2009-2013년 동안 1인가구의 소득증가율 1.1%에 머무른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은 연평균 2.35%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 이후 2인 이상 가구는 소득증가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데 반해 1인가구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VII-6]에서는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 추이를 보면, 1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1인가구가 2007년 80.2%에서 2013년 85.7%로 높아져 상당수의 1인가구가 빈곤층에 속하며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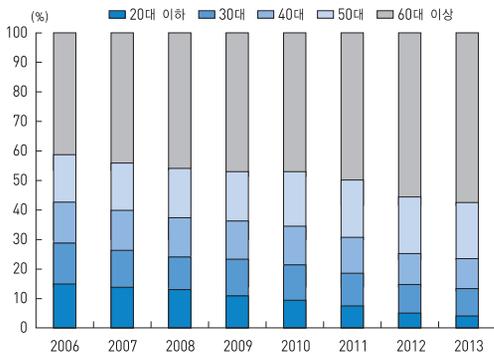
그림 VI-6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 2006-2013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VI-7]에서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추이를 보면, 60대의 비중이 2006년 42.7%에서 2013년 56.0%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60대 이상의 가구 중 1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81.4%와 14.3%여서 1인가구의 빈곤은 곧 장년층 및 고령층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7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율,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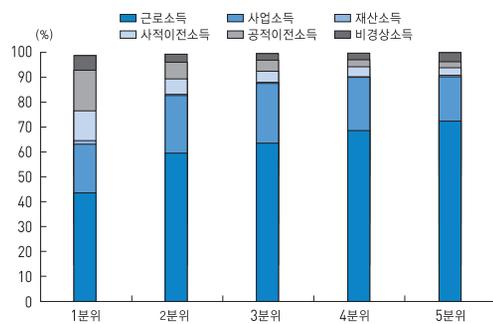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은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이 다양하고 그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원천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6.4%와 20.6%로 두 소득 비중의 합이 87.0%에 이른다. [그림 VI-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3년 소득원천의 구성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1분위에서는 43.7%인 반면 5분위에서는 72.5%에 이르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사업소득의 비중은 소득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1분위의 경우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8.3%로 매우 높으며 비경상소득도 5.9%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의 기반이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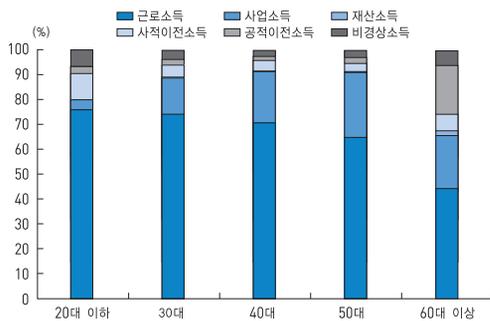
그림 VI-8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3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3.

[그림 Ⅶ-9]의 2013년도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의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20대의 76.1%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서 60대의 경우 44.1%에 이른다. 사업소득은 40대, 50대,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 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20대와 60대에서 각각 총소득의 19.8%, 32.1%의 비중을 차지해 청년층과 노령층에서 이차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Ⅶ-9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구성,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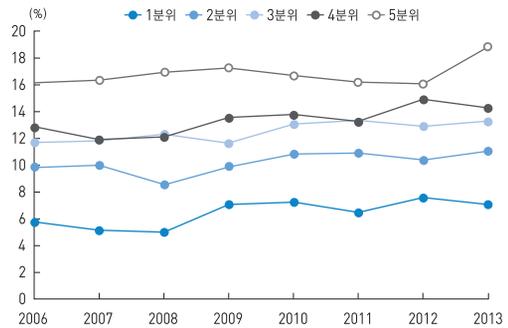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3.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에서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기여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성배우자 소득 비중은 2006년 13.4%에서 2013년 15.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그 기여도가 확대되었고 고소득층일수록 여성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 이러한 경향

은 지난 8년간 꾸준히 나타나는데, 동 기간에 1분위의 배우자 소득기여도는 5.8%에서 7.1%로 증가하였고, 5분위의 배우자 소득기여도는 16.2%에서 18.9%로 증가하였다(그림 Ⅶ-10).

그림 Ⅶ-10 가구 소득분위별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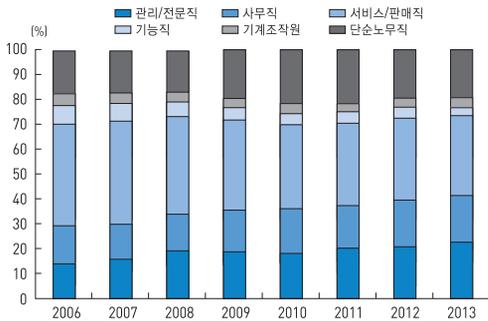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기여도는 가구소득 중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취업하고 있는 여성배우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20대 및 30대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40대 이상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이가 뚜렷하다. 2006년에는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8.3%였으나 2013년에는 40대 이상의 비중이 68.6%로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는 30대 이하에서 미혼 여성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그만큼 여성배우자의 수가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Ⅶ-11]에서 취업 여성배우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2006년 40.6%에서 2013년 32.0%로 떨어졌다. 반면 전문직 및 관리직의 비중은 2006년 14.1%



에서 2013년에는 22.9%로 눈에 띄게 높아졌고, 사무직도 동 기간에 15.4%에서 18.6%로 그 비중이 높아져 여성근로자의 직종이 보다 고소득 직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Ⅶ-11 여성배우자의 직업별 구성비율,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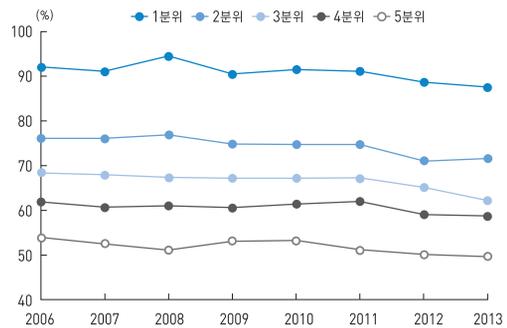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가구지출 및 가계수지의 변화

가구소득은 가구지출의 재원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지출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Ⅶ-12]는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에서 전체 기간에 걸쳐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비지출 비중이 70.2%에서 65.7%로 하락하며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

지출 비중이 낮아졌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모든 계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하락하다가 2011년까지는 정체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다시 2013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변동이 적은 편이어서 금융위기 직후 실질소득 증가가 후퇴하면서 소비지출의 비중이 다소 커진 것이고 2009년 이후 실질소득이 개선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소비지출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Ⅶ-12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3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1분위 가구 중 소비지출 비중이 200%가 넘는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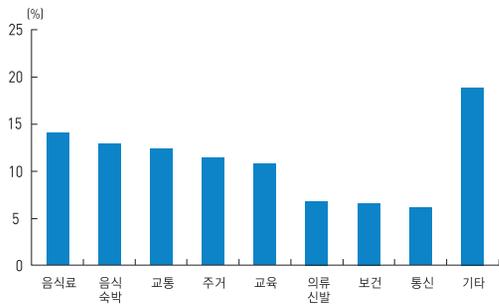
전체 평균 소비지출 대비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를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에 2분위, 3분위, 4분위의 소비지출비는 점차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분위의 소비지출비는 정체, 그리고 5분위의 소비지출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5분위와 4분위 이하 소득계층 간 소비지출의 불평등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평균 소비지출



대비 가구형태별 소비지출비를 살펴보면, 2013년에 1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전체 평균의 44.4%에 불과하며 1인가구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1인가구의 소비지출비가 낮은 것은 우선 적은 가구원수에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가구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그림 VI-13]에 제시된 소비지출 항목들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음식료, 음식 및 숙박, 교통, 주거, 교육에 대한 지출이 각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항목들의 가격 변화가 한국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VI-13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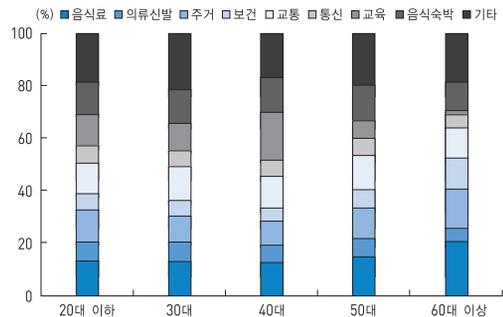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3.

[그림 VI-14]에는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지출 구성항목 중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대가 28.3%로 가장 낮고 20대와 50대가 각각 32.6%와 33.4%로 높은 편이며 60대 이상은 40.7%로

매우 높다. 보건의료지출의 경우 60대는 11.9%의 지출을 하고 있어 나머지 연령집단 평균인 6.1%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교육에 지출하는 비중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주로 학령기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가 18.2%로 매우 높은 편이고 20대가 11.8%, 그리고 30대가 10.5% 순으로 높다. 40대의 경우 의식주, 보건 등의 비중이 타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교육비지출 부담으로 다른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VI-14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성,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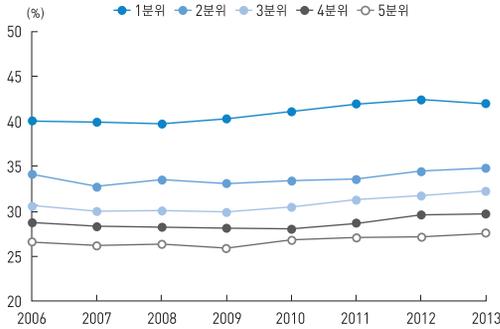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3.

[그림 VI-15]에 제시된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의 비중을 보면, 2006년에서 2009년 기간 동안 모든 소득계층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상층의 폭이 소득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 금융위기 이후 특히 저소득층에게 의식주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15 가구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비율,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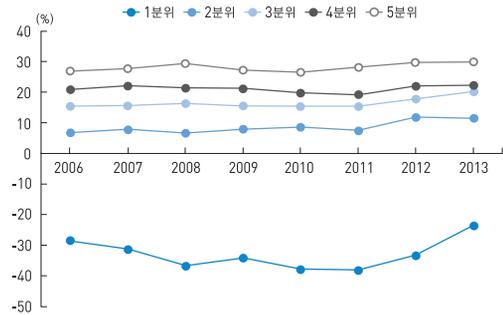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의식주 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등의 지출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가구소득 중 일부분은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하게 된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16.9%에서 2013년 18.1%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동 기간에 비소비지출 중에서 경상 및 비경상 조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5%에서 2.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2분위는 1.7%인 반면 5분위는 4.7%로서 조세의 누진체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금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중은 동 기간에 각각 1.9%와 2.1%에서 3.0%와 2.8%로 증가했다.

가구 입장에서는 소득이 지출보다 더 크면 흑자를 볼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적자를 볼 것이다. 소득과 지출 간의 차이를 다시 소득으로 나눈 것을 가계흑자비율이라고 할 때, 가계흑자비율이 각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6]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

후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흑자비율은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1분위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적자를 기록한 가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금융위기의 여파가 유독 저소득층의 재정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회복 국면인 2011년 이후 시기에는 1분위 계층도 흑자비율이 다시 상승하여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16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2006-2013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가계흑자비율은 가구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1분위의 경우 월소득 10만 원 이하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자산과 부채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013년 현재 전체 가구 중 66.9%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1분위는 34.9%, 5분위는 81.9%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0년 1.22에서 2013년 1.30으로 높아졌는데,

1분위는 하락하고 5분위는 유지된 반면 2-4분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동 기간 동안 2분위, 3분위, 4분위의 부채증가율이 각각 49.9%, 26.8%, 36.5%로 상당히 높았던 사실에 기인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동 기간에 평균 15.9% 증가했는데 1분위와 2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11.1%, 12.5%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순자산은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3분위, 4분위, 5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20.4%, 18.5%, 19.3% 증가하여 상위 소득계층은 부채 증가와 함께 높은 순자산 증가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순자산에서 각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점

유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8.6%를 점유하고 있고 5분위는 44.8%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집단 간에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과 2013년 순자산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2-4분위의 점유율은 대체로 유지된 반면 1분위의 점유율은 2%p 감소하고 5분위의 점유율은 1.3%p 증가하여 소득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 간 순자산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순자산의 계층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소득계층 간 소득증가율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점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는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혜택이 계층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2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약 1.61,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비율은 약 1.35에 달하고 있다.
- 2010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적인 부채 규모가 더 커졌다기보다는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부채보유 가구의 증가는 고소득층보다는 소득 2-4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40-59세의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로 임대보증금, 주택 구입 및 사업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근 수년 동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특별히 더 커지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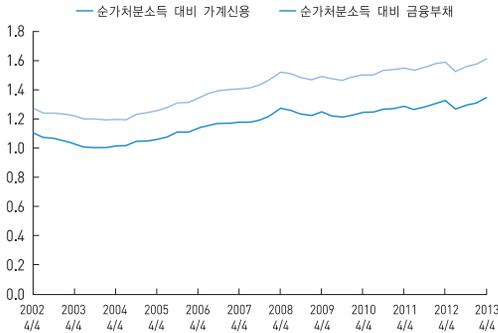
최근 한국경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이슈 중의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를 들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부채감축 현상 즉 디레버리지(deleveraging)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아직도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주로 어떤 가계들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수준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과 심각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최근 수년 동안 가계부채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과 이들 가구의 평균부채 규모를 살펴보고, 그 다음 소득분위별, 연령별, 부채발생 목적별로 부채의 분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부채 규모가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위험을 개략적으로 가늠해보기로 한다.

가계부채의 추이와 국제비교

미시자료 분석에 앞서 한국 가계부문 전체의 순가처분 소득(NDI)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VI-17]과 같다.



그림 VI-17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0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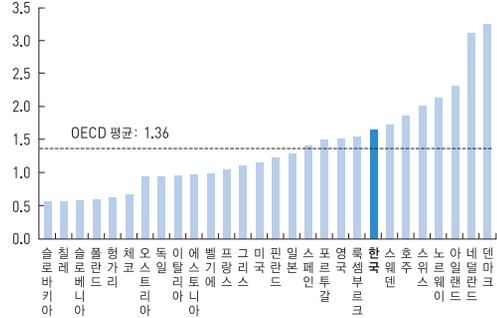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임. 가계대출은 금융기관이 가계에 공여한 대출을 말하며, 판매신용은 재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포함함.
 2) 금융부채는 자금순환표(1993 SNA 기준)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총액임.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국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최근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3년 현재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약 1.61,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비율은 약 1.35에 달하고 있다.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VI-18]에서 보듯이 201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64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36보다 더 높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가계부문 전체로 볼 때 한 가구의 부채는 다른 가구의 자산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총 가계부채의 증가는 총 가계자산의 증가를 수반한다. 그러나 개별 가구의 경우

그림 VI-18 OECD 국가의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3



주: 1) 스위스는 2012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2014.

에는 부채의 증가가 반드시 그 가구의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계부문 전체에 대한 총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도 가계부채의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즉 가계부채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분포와 관련된 것이므로 가계부문 전체의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외에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떤 집단의 가구들이 얼마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하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과 평균부채 규모

먼저, 총부채/총소득 비율과 부채보유 가구 비율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총부채/총소득 비



율의 증가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간단한 항등식에 의하면, 총부채/총소득 비율은 부채보유 가구들의 평균부채/평균소득 비율과 총소득에서 부채보유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곱으로 주어진다. 또한 총소득에서 부채보유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에서 부채보유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부채보유 가구의 상대소득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그림 VI-17]에서처럼 총부채/총소득 비율의 상승은 부채보유 가구들의 평균부채/평균소득 비율, 부채보유 가구 비율, 부채보유 가구의 상대소득 등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적용한 결과가 <표 VI-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가구의 총부채/총소득 비율은 2010년 1.52에서 2013년 1.6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VI-17]의 거시자료 결과와 유사한 부분이다. 반면, 전체 가구와 달리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에는 총부채/총소득 비율이 2010-2013년 기간 동안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두 집단의 평균소득을 비교해 보더라도 부채보유 가구의 평균소득이 2010년에는 전체 가구의 1.14배, 2013년에는 1.13배로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그림 VI-17]에서와 같이 가계부채/순가처분소득 비율이 증가한 것은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적인 부채 규모가 더 커졌기보다는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표 VI-2>의 마지막 행을 보면,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이 2010년 약 60%에서 2013년 약 67%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2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분해, 2010-2013

	2010	2011	2012	2013
전체 가구				
부채(만 원)	4,618.3	5,204.8	5,449.6	5,818.4
처분가능소득(만 원)	3,047.2	3,282.9	3,476.0	3,645.1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1.52	1.59	1.57	1.60
부채보유가구				
부채(만 원)	7,722.2	8,289.2	8,364.6	8,695.7
처분가능소득(만 원)	3,464.3	3,758.1	3,980.4	4,124.8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2.23	2.21	2.10	2.11
부채보유가구 비율(%)	59.8	62.8	65.2	66.9

주: 1) 부채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의 합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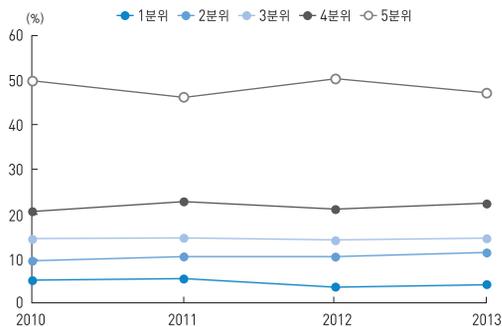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동시에 부채보유 가구의 상대소득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2010-2013년 기간 동안 부채의 확대가 소득계층별로 서로 상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별 부채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소득분위별 부채의 분포

소득분위별 분석을 통하여 가계부채가 어떤 소득집단에서 확대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VI-19]를 보면 총부채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소득 5분위의 비중은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약 2.7%p 감소하고 소득 1분위의 비중 역시 소폭 감소한 반면, 소득 2, 3, 4분위의 비중은 각각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I-19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 201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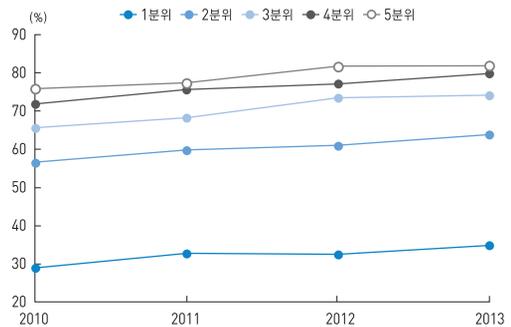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이러한 변화는 각 소득분위별로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이 변화하거나 부채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가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림 VI-20]에 의하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그 상승 폭은 2, 3, 4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그림으로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소득분위별 부채보유 가구의 평균부채 증가율은 소득 2분위와 4분위에서 각각 33%와 23%로 다른 소득분위보다 더 높다. 따라서 총부채/총소득 비율의 상승 및 부채보유 가구 비율의 상승은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보다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의 부채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던 2008년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그림 VI-20 소득분위별 부채보유가구 비율, 2010-2013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연령집단별 부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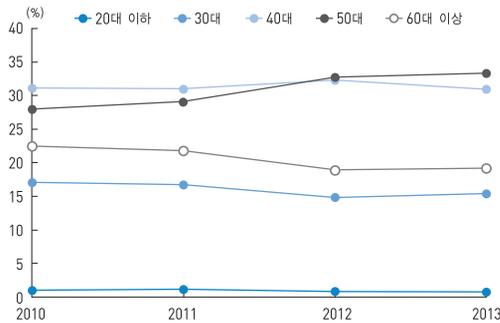
[그림 VI-21]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각 연령 집단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그림 VI-22]는 각 연령집단별로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먼저 [그림 VI-21]에 의하면 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가계는 40대와 50대 집단이며, 2010-2013년 기간 동안 이 집단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었다. 고령층의 부채보유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면 경제 전체의 부채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본 소득분위의 경우에는 각 집단에 속한 가구의 비중이 항상 20%로서 일정하지만,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각 집단의 크기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연령집단별 부채 분포



의 분석에서는 각 집단의 크기 변화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전체 표본 가구에서 40대와 50대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기간 동안 상승한 반면, 여타 연령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상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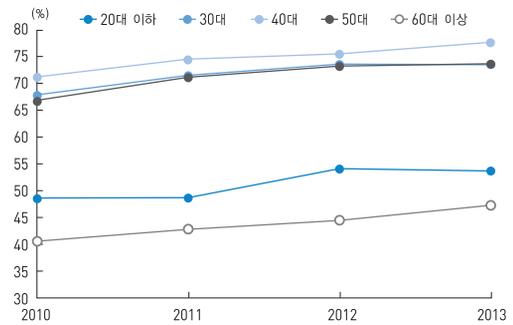
그림 Ⅶ-21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율, 2010-2013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Ⅶ-22]에 의하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 또한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고령 집단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단 연령집단별로 부채보유 가구의 평균부채 규모를 보면, 20대 이하 집단에서의 증가율이 약 35%로 40대와 50대 집단에서의 증가율 14%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총부채/총소득 비율의 상승은 부채를 많이 보유한 40대와 50대 집단의 크기가 확대된 동시에 이들 연령집단 내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Ⅶ-22 가구주 연령별 부채보유가구 비율, 2010-2013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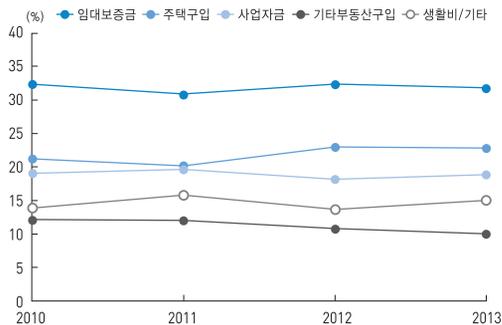
부채의 발생목적별 분포

그렇다면 40대와 50대 연령집단이 부채를 많이 보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부채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구입이나 사업자금 등에 대한 수요가 생애주기상 40대와 50대에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증가는 자산의 구입이나 소비의 보전이라는 용도로 발생하게 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부채의 용도를 12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비중이 크지 않은 여러 항목들을 '생활비 마련' 항목과 함께 묶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Ⅶ-23]에 제시된 부채의 5가지 용도별 분포를 보면, 총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임대보증금이란 임대인이 보유한 전월세보증금을 의미하는데, 전세제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매우 높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택구입을 위한 부채인데, 특히 이 항목의 비중은 2010-2011년에 비해 2012-2013년에 다소 상승하였다. 한국에서는 가계의 자산이 주로 자가 및 기타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23]에 의하면 생활비 마련 즉 소비보전을 위한 부채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림 VI-23 가계부채의 용도별 구성비율, 201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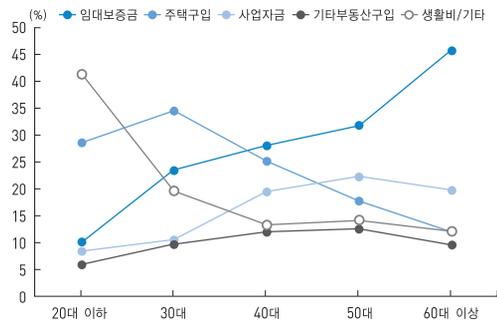


주: 1) 외상할부,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을 포함하는 기타 부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한편, [그림 VI-24]는 연령집단들 간에 부채의 용도별 분포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의하면 40대와 50대 집단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제일 높은 반면, 20대 이하와 30대 집단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생활비 마련(전월세보증금 마련 포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VI-24]를 [그림 VI-21] 및 [그림 VI-22]와 결합해서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임대보증금, 주택구입 및 사업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40대와 50대 집단에 의하여 보유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24 가구주 연령별 부채용도, 2010-2013년 평균



주: 1) 외상할부,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을 포함하는 기타 부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채무불이행 위험

개별 가계 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집계자료와 달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한계가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그에 해당하는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파악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2년과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 원리금 연체가 있었던 가구의 비율을 구해보면, 2012년 18.2%에서 2013년 20.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항목은 2010년과 2011년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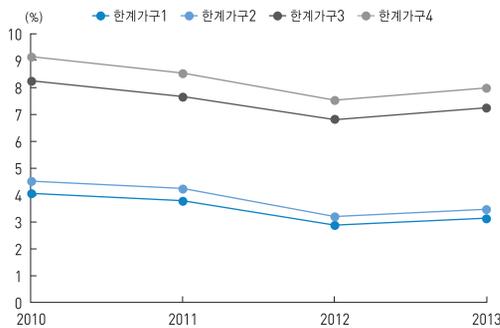
통하여 2010-2013년 동안의 채무불이행 위험의 추이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에서는 2010-2013년 기간 동안의 채무불이행 위험의 추이를 가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부채 규모가 특정 수준 이상인 한계가구들의 비중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 부채 규모의 임계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한계가구의 정의를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I-25]에는 서로 다른 4가지 정의에 따라 한계가구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어떤 정의의 방식으로 기준을 삼더라도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1년보다 2012-2013년에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계가구의 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2013년 기간 동안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 VI-2>에 의하면 부채보유 가구들의 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2010-2011년 기간보다 2012-2013년 기간에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림 VII-25]의 패턴은 이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부채보유 가구의 부채와 소득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직접 살펴보면, 전체 (금융)부채보유 가구의 (금융)부채의 로그값의 평균은 2010-2011년에서 2012-2013년 사이에 약 11-12% 감소한 반면, 가처분소득의 로그값의 평균은 약 1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적어도 최근 수년 동안은 가계부채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특별히 더 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II-25 한계가구 비율, 2010-2013



- 주: 1) 한계가구1의 비율은 전체 부채보유가구 중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이상인 가구의 비율임.
- 2) 한계가구2의 비율은 전체 금융부채보유가구 중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이상인 가구의 비율임.
- 3) 한계가구3의 비율은 전체 부채보유가구 중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0이상인 동시에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큰 가구의 비율임.
- 4) 한계가구4의 비율은 전체 금융부채보유가구 중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0이상인 동시에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은 가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맺음말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적인 부채 규모가 더 커졌기보다는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보유 가구의 증가는 주로 고소득층보다는 여타 계층(소득 2, 3, 4분위)을 중심으로 그리고 40-59세의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근 수년 동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특별히 더 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03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홍석철 (서강대학교)

-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국가일수록 국민의료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7.4%이며, 지난 20년 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 한국은 1990-2010년에 실질 의료비 지출이 4.3배 증가하였고, 이 중 33%는 인구고령화로 설명된다.
- 2010년의 연령별 인구분포가 1990년과 동일하다면, 2010년의 평균 진료비는 실제보다 24% 낮았을 것이다.
- 가구의 소비지출 중 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후에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다.
- 인구고령화로 2040년까지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율은 1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의료서비스 소비를 통해 건강 수준이 개선될 때 획득하는 만족감 또는 효용의 증가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비 지출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국민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고령층에서 더 빈번히 발병하는 만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의 비중을 증가시켜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최근 들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의 출발점은 향후 국민의료비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측하는 작업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경험한 인구고령화의 정도가 국민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논의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글은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연관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들의 인구고령화 속도와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를 비교한다. 둘째,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의료비 지출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추정해 본다. 셋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미시적 관점에서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연관성을 논의한다. 끝으로 향후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한다.

OECD 국가 간 비교

우선 OECD 회원국의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알아보자. 이때 ‘국민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 의료 및 건강을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표 VI-3>은 OECD 회원국

의 2011년 기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1인당 실질 국민의료비, 그리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의 비율을 보여준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약 7.4%이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균 국민의료비는 2,198 달러로 OECD 평균의 66% 수준이며, 공공지출의 비율은 OECD 평균의 77%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한국의 국민의료비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보다 낮으며, 앞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공공지출의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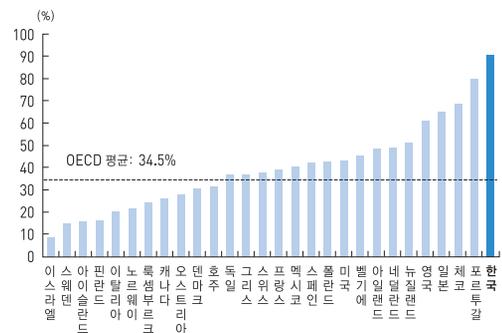
하지만 한국의 국민의료비 규모는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VI-26]은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의 1990-2011년 증가율을 보여준다. 지난 20년 간 OECD 평균 증가율은 34.5%이지만, 한국의 증가율은 9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00-2011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의 증가율을 계산하여도

표 VI-3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2011

국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1인당 국민의료비 (\$PPP)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
한국	7.4	2,198	55.3
OECD 평균	9.3	3,322	72.2
에스토니아	5.9	1,303	79.3
멕시코	6.2	977	47.3
칠레	7.5	1,568	46.9
헝가리	7.9	1,689	65.0
아일랜드	8.9	3,700	67.0
호주	8.9	3,800	67.8
핀란드	9.0	3,374	75.4
그리스	9.1	2,361	65.1
이탈리아	9.2	3,012	77.8
스페인	9.3	3,072	73.0
영국	9.4	3,405	82.8
스웨덴	9.5	3,925	81.6
일본	9.6	3,213	82.1
벨기에	10.5	4,061	75.9
덴마크	10.9	4,448	85.3
캐나다	11.2	4,522	70.4
독일	11.3	4,495	76.5
프랑스	11.6	4,118	76.8
네덜란드	11.9	5,099	85.6
미국	17.7	8,508	47.8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그림 VI-26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증가율, 1990-2011



주: 1) 증가율 = (2011년 비율 - 1990년 비율) ÷ 1990년 비율 × 100.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한국의 증가율은 7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비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

각국의 국민의료비 증가속도가 인구고령화와 관련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VI-27]에서는 [그림 VI-26]에서 구한 1990-2011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증가율과 동일 기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증가율의 산포도를 그려보았다. 그림 안의 직선은 두 변수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물론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며, 인구고령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랐던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국민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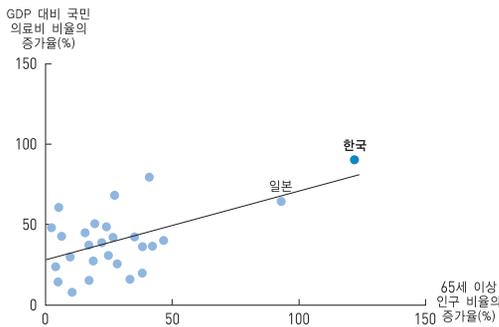
지출의 빠른 증가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그림은 한국과 일본이 이 같은 경험을 하였던 대표적인 국가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고령화와 국민의료비 증가추이를 비교하여도 유사하게 관측되며 동일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실질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

이제 국내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자. <표 VI-4>는 가계의 목적별 최종 소비지출 중 의료비 지출의 1985-2012년 추이를 몇 가지 모형으로 보여준다. 의료비 지출은 앞 절에서 논의한 국민의료비와 동일한 개념이다. 모형(1)의 값은 명목지출로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경상수치이며, 1985년 3조 1,000억 원에서 2012년 43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 비교 시점은 1990년과 2010년으로 이 기간 동안 명목 의료비 지출은 약 8.6배 상승하였다.

명목지출은 의료소비량에 의료의 단위당 가격을 곱한 값으로 소비량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반해 실질지출((명목지출÷물가지수)×100)은 의료가격을 고정했을 때, 다시 말해 물가상승을 통제했을 때 의료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측정한다.

그림 VI-27 인구고령화와 국민의료비 증가의 관계, 1990-2011



주: 1) 증가율 = (2011년 비율 - 1990년 비율) ÷ 1990년 비율 × 100.
 2) 그림에서 각 점은 OECD 개별 국가를 나타내며, 직선은 선형 회귀선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증가율(X)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증가율(Y)은 $Y = 0.4296X + 28.0861$ 의 선형 관계를 가지며, R^2 는 0.3335임. 기울기와 Y절편의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실질지출의 추이를 추정하기 위해 <표 VI-4>의 모형(2)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물가수준을 통제하였다. 이때 물가지수로는 보건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1990-2010년에 실질 의료비 지출은 4.3배 증가하였다. 모형(2)는 가격을 통제한 결과이므로 의료소비량이 4.3배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VI-4 실질 의료비 지출 추계, 1985-2012

(1조 원)

연도	모형(1) 명목 지출	모형(2) 물가 조정	모형(3) 인구 조정	모형(4) 연령분포 조정
1985	3.1	7.7	9.4	12.8
1990	4.5	9.0	10.4	13.7
1995	9.9	16.0	17.5	21.9
2000	12.7	16.4	17.2	20.1
2005	23.6	25.9	26.6	29.0
2010	39.0	39.0	39.0	39.0
2012	43.1	42.0	41.5	40.0
1990년 대비 2010년 증가(배)	8.6	4.3	3.8	2.9

주: 1) 모형(1)은 의료비 명목지출의 추이를 보여주며, 모형(2)-(4)는 2010년 가격수준으로 산출한 실질 의료비 지출임. 모형(2)-(4)의 추정치는 본문을 참조바람.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2011.

실질지출이 4.3배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인구고령화로 설명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추정하기에 앞서, 단순한 인구수의 증가가 실질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간략히 추정해 보자. <표 VI-4>의 모형(3)에서는 만약 각 연도의 총인구수가

20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실질 의료비 지출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모형(2)에서 계산한 1990년 실질지출을 같은 연도의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실질의료비 지출은 21만 363원으로 계산된다. 1인당 실질 의료비 지출의 추정치는 유지하되, 1990년의 인구를 2010년 인구나 같다고 가정하면 총실질 의료비 지출은 10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¹⁾. 다시 말해 모형(3)은 1인당 의료지출은 연도별로 다르지만, 각 연도의 인구수가 2010년과 동일하다면 총 의료비 지출은 어떠했을지를 추정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1990-2010년 기간에 3.8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년 간 인구증가는 실질 의료지출 증가의 12%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4)에서는 위 논의를 확대하여 연령에 따른 인구분포를 통제할 때 각 연도의 실질 의료비 지출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며,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지출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 평균의료비를 가중치로 하여, 각 연도의 총인구수를 50-54세 인구수로 표준화하였다. 예를 들어, 60-64세 인구의 평균 의료비는 50-54세의 평균보다 1.7배 높다²⁾. 이 값을 가중치로 하여 60-64세 인구에 1.7을 곱하여 50-54세 인구나 바꾸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 1990년과 2010년의 총인구는 각각 4,286만 9,283명과 4,941만 366명이다.

2) 연령대별 평균 의료비 차이는 <표 VI-5>의 2010년 값을 사용하였다.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표준 인구는 증가하며, 젊은 인구가 많으면 실제보다 표준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모형(4)에서는 실제 인구수가 아니라 표준인구로 계산된 인구수를 사용한다. 이후의 방법은 모형(3)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우선 표준총인구를 사용하여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을 계산한다. 그리고 각 연도의 표준총인구가 2010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총실질 의료비 지출을 계산한다. 각 연도의 표준인구를 정의할 때 연령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였으므로 이 분석방법은 인구고령화를 통제하였을 때 실질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모형(4)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1990년 13조 7,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는 1990-2010년 실질 의료지출 증가의 약 33%를 설명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³⁾

의료이용과 진료비 분석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 의료이용 및 진료비 상세내역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아래 분석은 의료이용의 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진료

비는 국민의료비의 일부라는 사실에 유의하자.

〈표 VI-5〉는 건강보험의 급여실적 통계와 건강보험 적용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의 1인당 외래 및 입원의 평균내원일수와 평균진료비를 추정한 결과이다. 연령에 따라 의료이용과 평균 진료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특히 50대에 들어서면서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표 VI-5 연령별 의료이용 및 진료비, 2010

연령	평균내원일수(일)		평균진료비 (1,000원)
	외래	입원	
0-4세	27.7	2.4	898
10-14세	10.1	0.3	321
20-24세	7.0	0.6	309
30-34세	10.2	1.1	486
40-44세	11.3	1.1	568
50-54세	18.0	2.1	1,041
60-64세	26.8	3.4	1,777
70-74세	42.3	6.8	2,824
80세 이상	34.6	21.3	3,530

주: 1) 평균내원일수와 평균진료비는 급여실적자료의 총량을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나눈 값임. 5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지면 제약으로 일부 연령대의 결과만을 보고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10.

한편, 〈표 VI-6〉은 1990년과 2010년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로부터 우리는 4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인구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4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70세 이상의 인구는 2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 33% = (4.3 - 2.9) ÷ 4.3 × 100.



표 VI-6 연령별 인구 비율, 1990, 2010

연도	연령대 (%)									
	0-4세	10-14세	20-24세	30-34세	40-44세	50-54세	60-64세	70-74세	80세 이상	
1990	7.5	9.2	10.1	9.6	5.8	4.7	2.7	1.4	0.7	
2010	4.5	6.5	6.4	7.8	8.6	8.0	4.5	3.1	1.9	

주: 1) 5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지면제약으로 일부 연령대의 결과만을 보고함.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표 VI-7〉의 모형(1)과 (2)는 〈표 VI-5〉를 활용하여 유형별 의료서비스의 내원일수와 평균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1)의 경우, 〈표 VI-5〉에서 2010년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연령대별 의료이용 및 진료비 평균값에 곱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다. 그 결과 국민들의 연간 평균 외래방문일수는 16.6일, 입원일수는 2.2일, 그리고 평균 진료비는 91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들은 2010년 의료이용 및 진료비 자료와 2010년 인구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0년도 관측값이다.

표 VI-7 의료이용 및 진료비 중 인구고령화 기여도 추정, 2010

	평균 내원일수(일)		평균 진료비 (1,000원)
	외래	입원	
모형(1) 2010년 인구 연령구조 기준	16.6	2.2	911.3
모형(2) 1990년 인구 연령구조 기준	14.5	1.5	692.4
인구고령화 기여도(%)	12.4	31.9	24.0

주: 1) 모형(1)과 모형(2)는 연령집단별(5세 간격) 평균내원일수와 평균진료비 자료에 2010년과 1990년의 인구 연령구조(5세 간격)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평균값임.
2) 인구고령화 기여도 = {모형(1) - 모형(2)} ÷ 모형(1) × 1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반면, 〈표 VI-7〉의 모형(2)에서는 가중평균을 구할 때 2010년의 연령대별 평균 의료이용과 진료비를 사용하지만 1990년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사용한다. 만약 지난 20년 간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또는 인구분포가 199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현재의 의료이용과 진료비는 얼마나 낮았을지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설을 가정하는 분석이다. 그 결과 평균 외래방문일수는 14.5일, 입원일수는 1.5일, 그리고 평균 진료비는 6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모형(2)는 지난 20년 간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했으므로 〈표 VI-7〉의 모형(1)과 (2)의 결과는 실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초래된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진료비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인구고령화가 없었다면 2010년 평균 진료비는 69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진료비는 91만 원으로 관측된다. 2010년 평균 진료비의 24%는 인구고령화로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같은 방법으로 외래 및 입원의 2010년 평균 내원일수 중 인구고령화 기여도는 각각 12.4%와 31.9%로 추정된다.

한편, 위 결과에서 진료비 중 인구고령화 기여도 24%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도 있다.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7.3%이다. 위 결과를 적용해 보면, GDP의 1.8% 규모가 인구고령화로 초래된 국민의료비라는 의미이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의 의료지출

지금까지는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지출과 인구고령화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두 변수의 관련성이 미시자료에서도 관측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그림 VI-28]은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10세 단위로 나누어서 각 가구 집단의 평균 의료지출과 소비지출 중 의료지출의 비율을 추정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의료지출의 장기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연도를 1990-1997년, 1998-2005년, 2006-2013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류된 의료지출은 국민의료비와 동일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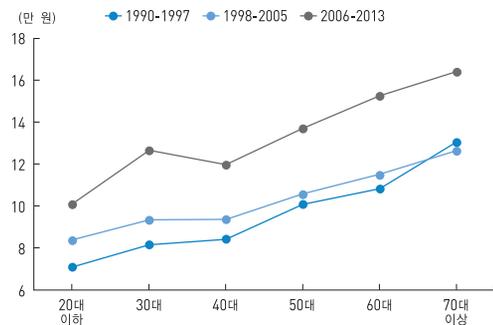
[그림 VI-28]은 세 가지 주요 사실을 보여 준다. 첫째, [그림 VI-28]의 (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의 의료지출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06-2013년에 의료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은 고령층에서 좀 더 크게 관측되지만, 젊은 층의 의료지출도 증가하였다. 그림에서 의료지출은 실질지출로 변환한 값이므로, 이는 전반적으로 건강 관련 소비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둘째, 분석 기간에 상관없이 가구의 의료지출은 가구주의 연령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의료지출이 많다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셋째, [그림 VI-28]의 (2)는 가구소비지출에서 의료지출이 차

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며, 가구주가 50대일 때까지는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이 관측된다. 이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수준이 낮아지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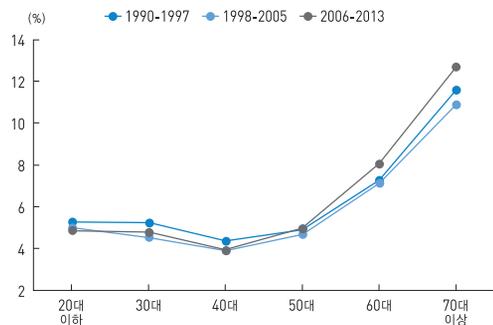
특히 그림(2)에서 표본연도와 무관하게 각 연령대의 의료지출의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전반적으로 총소비지출에서 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28 가구주 연령별 의료비 지출, 1990-2013

(1) 월평균 의료지출



(2) 월평균 소비지출 중 의료지출 비율



주: 1) 전국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국민의료비 증가 예측

마지막으로 <표 VI-8>에서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심화될 때 의료지출과 의료이용은 얼마나 증가할 지를 예측해보았다. 추정방법은 <표 VI-7>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즉, 연령대별 평균 의료이용과 평균 진료비는 2010년 수준으로 고정하고,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예상되는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적용하여 가중 평균을 구하였다. 연령대별 추계인구 자료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VI-8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예측, 2020-2040

	2020	2030	2040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7	24.3	32.3
평균 내원일수(일)			
외래	18.7(12.5)	21.2(27.4)	23.0(38.4)
입원	2.9(30.2)	3.6(63.7)	4.7(114.0)
평균 진료비 (1,000원)	1,097(20.4)	1,305(43.2)	1,507(65.4)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8.8	10.5	12.1

주: 1) 추정방법은 본문 참조바람.
 2) 괄호안의 값은 2010년 대비 증가율(%)임.
 3) 평균 진료비는 2010년 가격 기준임.
 4)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10년 수준인 7.3%에 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2010년 65세 인구 비중은 약 11%이며,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 그리고 2040년에는 32.3%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가까운 미래인 2020년까지 평균 외래방문 일수는 18.7일로 2010년 대비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원의 평균 내원일수도 2010년 대비 3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균 진료비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20.4%, 2030년까지는 43.2%, 그리고 2040년까지는 6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현재 7% 남짓이지만, 2040년까지는 1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맺음말

<표 VI-8>은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의료이용과 평균 의료지출의 예를 보여준다.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지출은 인구고령화 외에도 소득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이용 및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표 VI-8>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료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흔히 고려하지 못하는 점은 의료지출의 증가로 국민건강 수준이 더 개선되고 효용이 증대된다면 사회적 편익 또한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건강증진과 효용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계층과 집단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Korean Social Trends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2014

Culture & Leisure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I 문화와 여가

- 01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12
- 02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이훈 | 한양대학교, 박정숙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2
- 03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심미선 | 순천향대학교 229

01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문화여가 기반이 개선되었으나, 여가시간은 감소하거나 이전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중에서 TV시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여행과 문화예술 관람의 비율이 높았다.
- 문화예술 관람률과 국내외 여행 비율이 증가한 반면, 스포츠 관람률은 감소하였다.
- 여가만족도는 2011년에 비해 높아졌으며, 경제적 부담을 여가 불만의 이유로 지적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최근 한국의 문화와 여가 동향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한국영화 관객객이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 명을 돌파하였고 전체 극장 관객객이 2013년에 사상 최초로 2억 명을 넘었다. 공연계에서는 흥행에 성공하는 블록버스터 뮤지컬 작품들이 있는 반면, 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전하는 작품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캠핑 열기와 지자체의 관광자원 개발에 힘입어 국내여행 참여는 증가 추세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자체 중 문화도시와 관광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법' 등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입법안들을 마침내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였다. 특히 문화복지정책을 여가활동에까지 확대하면서 스포츠 관람과 여행을 포함하는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화와 여가 부문 항목들을 중심으로 시계열 비교를 하였고, 정부기관들이 생산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파악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문화여가의 기반을 검토한 후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의 동향을 분석하고 여가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여가활동은 공공과 시장 투자에 의해서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상품이 공급될 때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여가활동의 기반은 문화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VII-1>을 보면, 19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본격화되었던 문화인프라 구축이 최근까지도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358개였던 박물관이 2012년에는 740개로, 미술관도 같은 기간 80개에서 171개로 증가하여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공공도서관, 등록공연장, 문예회관 등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모두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표 VII-1).

표 VII-1 문화예술시설수, 2005-2012

연도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록공연장	문예회관
2005	358	80	514	503	150
2006	399	92	564	558	155
2007	511	115	600	589	160
2008	579	128	644	619	167
2009	630	131	703	639	182
2010	655	141	759	637	193
2011	694	146	786	751	209
2012	740	171	828	826	2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운영실태조사」, 각 년도; 「미술관운영실태조사」, 각 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산업 역시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기본 재화를 상품의 형태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문화여가활동의 주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의 규모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산업 매출액을 보면, 2012년 82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1년 82조 9,700억 원에 비해 4조 3,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09-2012

	2009	2010	2011	2012
총 매출액	67,08	73,32	82,97	87,27
출판	20,61	21,24	21,24	21,10
만화	0,74	0,74	0,75	0,76
음악	2,74	2,96	3,82	3,99
게임	6,58	7,43	8,80	9,75
영화	3,31	3,43	3,77	4,40
애니메이션	0,42	0,51	0,53	0,52
방송(영상)	9,88	11,18	12,75	14,18
광고	9,19	10,32	12,17	12,48
캐릭터	5,36	5,90	7,21	7,52
지식정보	6,07	7,24	9,05	9,53
콘텐츠솔루션	2,18	2,36	2,87	3,03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통계」, 각 년도.

문화여가활동은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평일의 평균 여가시간은 3시간 18분, 휴일에는 5시간 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여가시간은 평일에는 실제 여가시간보다 1시간 6분이 많은 4시간 24분, 휴일에는 1시간 12분이 더 많은 6시간 18분이다. 여가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평일 3시간 6분, 휴일 5시간 30분이었던 것이 2010년 평일 4시간, 휴일 7시간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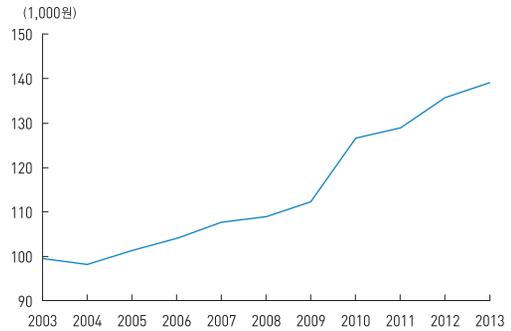
하였다가 2012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 모두 2010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휴가 경험 비율에서도 증가세 이후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2007년 66.4%에서 2009년 69.9%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 62.5%로 감소하였고 이후 2012년에도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여가시간이나 휴가 경험률이 감소하였거나 정체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비용의 변화는 여가시간의 변화와 대체로 공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양상도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국민여가활동조사」의 2012년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 모두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여가비용은 2006년 14만 2천 원에서 2007년 12만 2천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에 16만 8천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다시 12만 5천 원으로 감소하였다. 희망 여가비용 역시 2006년 24만 3천 원에서 2007년 19만 8천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에 26만 6천 원까지 증가했는데 2012년에는 19만 8천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악화된 경제적 상황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를 보면, 오락문화비는 2003년 10만 원 미만에서 2012년 현재 13만 9천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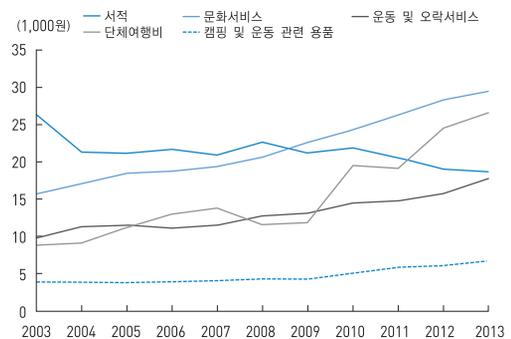
그림 VII-1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액, 2003-2013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오락문화비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서적 지출비용이었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공연 및 극장, 공원 및 관람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방송 수신료 등을 포함하는 문화서비스와 단체여행비, 캠핑운동용품 및 운동오락서비스를 위한 지출비용이었다(그림 VII-2).

그림 VII-2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03-2012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여가활동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34.5%로 가장 많았고, 가사(13.3%), 휴식(11.5%), 종교활동(8.8%), 사고 관련 활동(7.4%), 여행(5.8%), 스포츠활동(5.1%),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4.8%), 문화예술 관람(3.4%), 자기개발(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을 기준으로 보아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TV시청이 59.7%로 가장 많았다. 1순위 기준 결과와 비교하여 다중응답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는 휴식(37.9%)이 가사(29.0%)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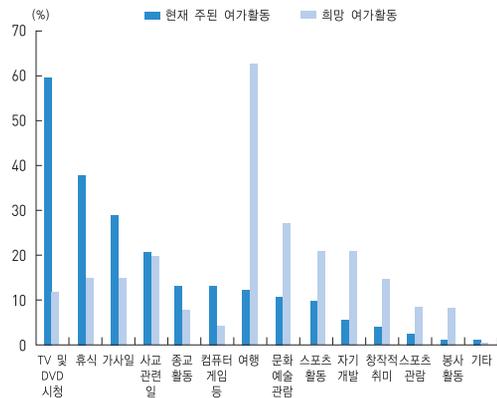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관람(8.8%), 스포츠활동(8.3%), 자기개발(6.3%), 사고 관련 활동(5.0%), 창작적 취미(4.3%) 등의 순으로 많았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기준에서도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을 비교해 볼 때, 국민이 현재보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여가활동은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활동, 자기개발, 창작적 취미, 스포츠 관람 등이었으며, 현재보다 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TV시청, 휴식, 가사, 종교활동 등이었다(그림 Ⅶ-3).

여가활동 1순위로 TV 및 비디오 시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2004년 26.1%, 2007년

27.7%, 2009년 30.1%, 2011년 3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1순위 기준으로 1.6%p 감소하였고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기준으로는 3.3%p 감소하였다. 2013년 희망 여가활동을 다중응답을 기준으로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여행의 비율이 3.5%p 증가하였다.

그림 Ⅶ-3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3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말과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와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무엇인지를 질문함.
2) 다중응답(1-3순위)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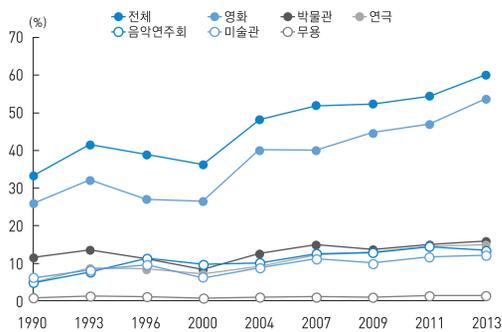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3.

여가활동 동반자는 2013년에 '가족과 함께'라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와 '혼자서'라는 응답이 19.7%로 같았으며 '동호회'라는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와 비교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이 2.5%p 감소한 반면 '혼자서'라는 비율은 2.8%p 증가하였다.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활동은 경제 불황의 영향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파악된 2013년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률을 살펴보면, 영화가 5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박물관(16.0%), 연극(15.1%), 음악 연주회(13.5%) 미술관(12.2%)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무용은 1.5%로 가장 낮았다(그림 Ⅷ-4). 2011년 조사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장르에서 관람률이 증가한 반면 음악의 관람률은 1.0%p 감소했고 무용의 관람률은 차이가 없었다. 관람률의 증가는 특히 영화에서 두드러졌다. 2011년의 47.1%에 비해 6.7%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를 최소한 한 번이라도 관람한 인구의 비율은 2011년 54.5%에서 2013년 60.1%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2000년대 들어서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그림 Ⅷ-4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0~2013



주: 1) 문화예술 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양 음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2010년보다 관람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던 것은 대중음악 관람률이었는데, 2010년 7.6%에서 2012년 13.5%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관람률의 증가 폭이 컸던 분야는 영화와 문학행사로 각각 60.3%에서 64.4%, 3.8%에서 6.1%로 증가하였다.

박물관과 영화관의 증가 및 확장과 더불어 관람객수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영화와 같은 대중적 장르 외에 연극 관람 비율도 증가한 것은 문화예술활동의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문화 복지정책 확대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의향이 78.1%로 조사되어 이 조사에서 파악된 실제 관람률과 약 9%p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 경험이 있는 관람자에서는 관람의향이 93.3%로 조사된 것에 비해 비관람자의 관람의향은 43.3%에 불과하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으로는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고, 시간부족(21.6%)과 경제적 부담(1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은 2010년의 8.4%에 비해서 20%p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여가 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공급되는 콘텐츠가 다양한 문화적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창작 및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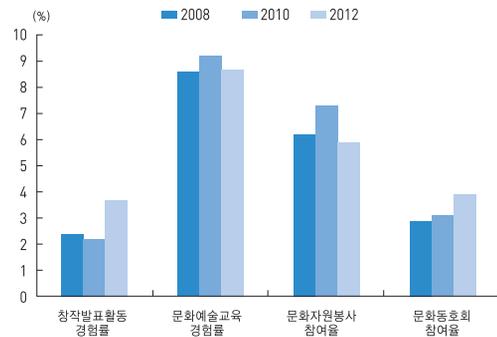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창작발표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 창작발표활동의 경험 비율은 3.7%로 나타났다고, 앞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참여 경험 비율은 2008년의 2.4%와 2010년의 2.2%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고(그림 VII-5), 참여 의향 비율은 2008년의 6.5%에 비해서는 낮지만 2010년의 3.7%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연극 참여율이 1.7%로 가장 높았다. 참여 경험과 의향 비율 사이에 2%p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면 여건이 갖추어지면 창작발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도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경험률은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의향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2012년 조사에서 8.7%로 나타나 2010년의 9.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그림 VII-5), 문화예술교육 의향률은 2010년의 16.6%에서 25.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경험률과 의향률 사이의 차이가 2010년에는 의향률이 경험률의 두 배를 넘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의향률이 경험률의 세 배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다. 잠재적 문화예술교육 수요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야별로는 미술(2.2%)과 영화(2.1%)의 교육 경험률이 비교적 높았다.

문화예술교육 참여 장애요인으로는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25.8%로 많았으며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은 11.4%였다. '시간부족' 비율은 2010년 44.6%에서 크게 줄었고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은 2010년 26.6%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감소하고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다소 증가하였다(그림 VII-5).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5.9%로 조사되어 2010년 7.3%에 비해 감소하였다.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3.9%로 조사되어 2008년 2.9%, 2010년 3.1%

그림 VII-5 창작발표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률과 문화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율, 2008-2012



- 주: 1) 창작발표활동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창작, 발표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2)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3)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4)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문학동호회가 0.9%로 가장 높았고 영화(0.7%), 미술(0.7%), 대중음악(0.6%) 동호회 등의 순서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행과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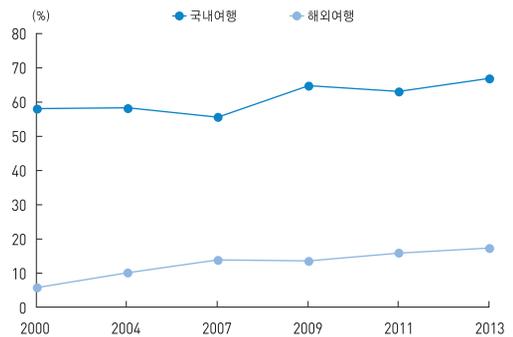
관광활동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수가 지난 2003년 이래 급증하였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218만 명으로 나타나 2012년 1,114만 명에 비해 10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03년 475만 명이었던 외래관광객수가 200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여 정부가 세운 1,000만 명 목표를 2012년 달성한 후 그 증가세가 지속됨을 보여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67.0%로 나타나서 2011년 63.0%에 비해 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 비율도 17.4%로 2011년 16.0%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6).

통계청 「사회조사」로 산출되는 국내여행자 비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와 차이가 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0년 72.8%, 2011년 81.6%, 2012년 85.2%에 이어 2013년

86.5%까지 증가하였다. 관광여행의 비율 역시 2010년 59.7%, 2011년 64.8%, 2012년 69.0%에 이어 2013년 71.8%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행지출비용은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내여행비가 2013년에 53만 1,576원으로 집계되어서 2012년 55만 1,457원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 39만 6,741원부터 2012년까지 이어졌던 여행 지출비용의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II-6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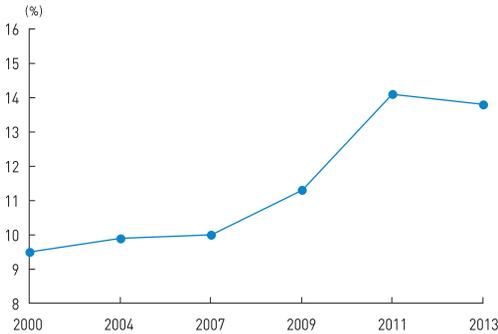
주: 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은 각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생활체육과 스포츠 관람

다음으로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2000년 9.5%에서 2011년 14.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스포츠 관람 비율이 2013년에는 13.8%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7). 2013년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생활체육 참여율을 보면,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비율은 31.4%이다.

그림 Ⅶ-7 스포츠 관람률, 2000-2013



주: 1) 스포츠 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관람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미디어 이용

여가활동에서 TV 및 비디오 시청이 가장 많았던 것처럼, 미디어 활용은 일상의 여가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2013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일상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매체는 TV(46.3%), 스마트폰(37.3%), PC·노트북(12.9%)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TV와 PC·노트북의 중요도가 각각 7.1%p와 5.7%p 낮아진 반면, 스마트폰의 중요도는 12.3%p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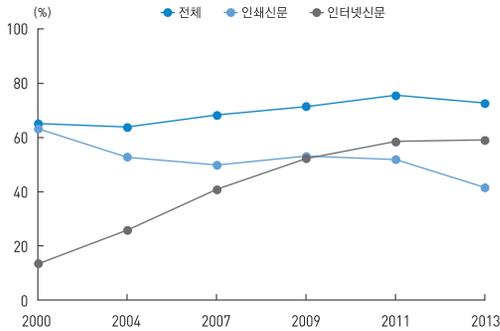
주목할 만한 것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TV를 필수 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93.2%

나 되는 반면, 20대에서는 13.9%에 불과했다. 20대에서는 대신 스마트폰(67.3%)을 필수 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매체 이용에서 세대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매체를 자주(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TV(79.4%), 스마트폰(65.8%), PC·노트북(33.0%), 라디오(11.8%), 신문(10.0%)의 순서였다.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은 TV가 가장 길었다.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평일 2시간 55분, 주말 3시간 57분으로 하루 평균 3시간 14분이다. 이는 2011년의 3시간 7분과 2012년의 3시간 9분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그 외 스마트폰은 1시간 44분을 사용하고, 라디오는 1시간 5분을 청취하며 신문은 30분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을 읽는 방법 또한 크게 달라졌다.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던 반면,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난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이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을 넘어섰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그림 Ⅶ-8).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59.0%로 200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반면,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은 41.6%로 2011년에 비해 10.3%p나 감소하였다.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모두 고려한 신문 읽는 전체 인구의 비율은 72.7%로 2011년에 비해 2.8%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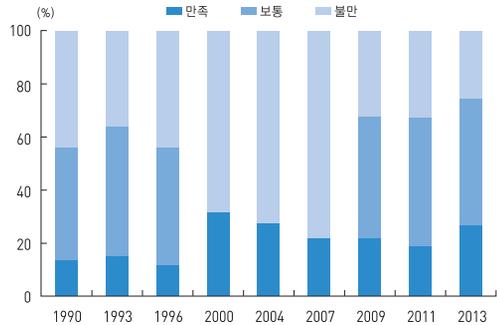
그림 Ⅶ-8 신문 읽는 비율, 2000-2013



주: 1) 2007년 이전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고, 2007년부터는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Ⅶ-9 여가만족도, 1990-2013



주: 1)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이며, 불만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2)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여가만족

여가만족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지난 1990년부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다가 2000년부터 '보통'이라는 응답범주가 없어진 4점 척도로 조사되었고, 2009년부터는 다시 5점 척도로 변경되었다.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은 가운데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26.5%와 25.5%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그림 Ⅶ-9). 국민 중 여가생활 만족이 중간 수준인 인구가 절반, 만족하는 인구와 만족하지 못하는 인구가 각각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여가만족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2.5%에서 7%p 감소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18.6%에서 7.9%p 증가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여가만족도가 감소해 왔던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21.0%였다. 그 외 체력이나 건강 문제(9.4%), 적당한 취미 결핍(4.5%), 여가동반자 부재(2.3%), 여가시설 부족(1.7%), 교통혼잡(1.6%),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여가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비율은 2011년에 비해 3.3%p 감소하였고, 시간부족이라는 비율도 2011년에 비해 1.8%p 감소하였다. 반면 체력이나 건강 문제라는 응답이 2.6%p 증가하였고, 적당한 취미 결핍이라는



응답도 1.2%p 증가하였다. 이전에 대표적 여가 제약요인이었던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의

비중이 줄고, 다른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02

여행과 삶의 질: 소득
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이훈 (한양대학교)

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만 15세 이상 한국인 중 국내여행자와 해외여행 출국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모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에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 소득수준이 높은 여행자일수록 여가생활과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관광은 행복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관광은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며, 사람들은 관광의 여유로움을 통해 성찰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따라서 관광의 보편화는 사회적 과제이며 추구해야 할 정책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경험을 소득집단별로 비교해 보는 것은 관광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 분석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관광활동과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는 국내여행을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구분한다. 관광여행은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여행을 말하며, 기타여행은 비관광여행으로서 가족·친지·친구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업무 목적의 여행으로 구분한다. 반면 해외여행은 국내여행처럼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 국내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경우를 의미하며, 해외여행은 이들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친지·친구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업무 등 모든 목적의 여행을 포함한다.

관광경험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만 15세 이상의 한국인(약 4,370만 8천 명) 중 71.8%인



3,136만 4천 여 명이 연간 1회 이상 국내여행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0년의 59.7%보다 약 12.1%p 증가한 것이다. 또한 만 15세 이상 국민 중 해외여행 경험률은 2010년 10.8%에서 2013년 12.9%로 약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3).

표 VII-3 국내여행 총량 및 해외여행 출국자수, 2010, 2013

연도	국내여행				해외여행 출국자수 (100만 명)
	참가자수 (100만 명)	참가횟수 (100만 회)	총비용 (1조 원)	이동총량 (100만 일)	
2010	25.4	68.0	8.8	129.6	12.5
2013	31.4	110.9	14.3	185.3	14.8

- 주: 1) 국내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함.
 2) 국내여행 참가자수는 조사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숙박 및 당일여행을 한번 이상 다녀온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인구임.
 3) 국내여행 참가횟수는 조사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5세 이상 인구의 국내 숙박 및 당일여행 횟수의 총합임.
 4) 국내여행 총비용은 조사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5세 이상 인구가 국내 숙박 및 당일여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총합임.
 5) 국내여행 이동총량은 조사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5세 이상 인구의 국내 숙박 및 당일여행 일수의 총합임.
 6) 해외여행 출국자수는 전체 출국자 기준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각 년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출입국 관광통계」, 각 년도.

만 15세 이상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다녀온 국내 숙박 및 당일 여행 횟수의 총합계인 국내여행 참가횟수는 2013년 약 1억 1,000만 회로 2010년 6,800만 회 대비 63.1% 증가했으며, 국내 여행 총비용 또한 2013년 약 14조 2,883억 원으로 2010년 약 8조 7,613억 원 대비 63.1% 증가하였다. 한 해 동안 다녀온 국내 숙박 및 당일 여행 일수의 총합계인 국내여행 이동총량

은 2013년 1억 8,533만여 일로 2010년의 1억 2,961만여 일과 비교하여 4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에서 집계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출입국 관광통계를 보면, 조사 기간 동안 한국인의 실제 해외여행 총출국자수는 2010년 1,248만여 명에서 2013년 1,484만여 명으로 2010년 대비 1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VII-3).

〈표 VII-4〉는 만 15세 이상 국민의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횟수 및 일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2010년 1.60회에서 2013년 2.54회로 0.94회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 횟수는 2010년 0.14회에서 2013년 0.16회로 큰 변화가 없다.

국내여행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횟수가 더 많다. 반면에 해외여행의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횟수가 더 많다. 연령집단별로는 국내여행의 경우 2010년에는 40대가 1.94회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에는 30대가 3.12회로 가장 많이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여행 횟수는 2010년 대비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여행의 경우 2010년과 2013년 모두 50대에서 참여 횟수가 높고,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2010년 대비 2013년에 높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학력집단에서,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에서 2010년과 2013년 모두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참여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국내여행 일수는 2010년 3.05일에서

2013년 4.24일로 1.19일 증가하였으며, 해외 여행 일수는 2010년 1.11일에서 2013년 1.28일로 0.1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국민 1인당 여행횟수 및 여행일수, 2010, 2013

	국민 1인당 연간 여행횟수(회)				국민 1인당 연간 여행일수(일)			
	국내여행		해외여행		국내여행		해외여행	
	2010	2013	2010	2013	2010	2013	2010	2013
전체	1.60	2.54	0.14	0.16	3.05	4.24	1.11	1.28
성								
남성	1.53	2.37	0.15	0.16	2.97	4.00	1.23	1.11
여성	1.67	2.70	0.12	0.17	3.13	4.48	0.98	1.44
연령								
15-19세	1.16	1.78	0.06	0.08	2.60	3.57	0.28	0.67
20대	1.01	1.64	0.11	0.18	2.13	3.08	2.24	2.41
30대	1.89	3.12	0.13	0.15	3.84	5.24	1.18	1.09
40대	1.94	2.97	0.15	0.18	3.56	5.00	1.13	1.06
50대	1.53	2.67	0.19	0.20	2.80	4.13	1.24	1.41
60대 이상	1.62	2.45	0.16	0.15	2.72	3.82	1.13	1.16
교육수준								
초졸 이하	1.30	1.76	0.07	0.05	1.98	2.46	0.48	0.38
중학교	1.60	2.54	0.09	0.07	2.89	3.94	0.55	0.42
고등학교	1.40	2.56	0.09	0.13	2.71	4.19	0.55	1.04
전문대	1.78	2.62	0.11	0.15	3.56	4.56	0.70	1.19
대학교	1.87	2.64	0.22	0.23	3.70	4.62	2.27	1.80
대학원	2.27	3.24	0.40	0.39	4.42	5.52	3.10	3.26
직업								
전문관리직	2.31	3.33	0.45	0.24	4.06	5.74	2.72	1.99
사무직	1.81	2.91	0.20	0.19	3.69	4.84	1.69	1.30
서비스판매직	1.59	2.59	0.15	0.17	2.97	4.14	0.87	1.03
농어업	1.85	2.27	0.13	0.08	2.63	3.09	0.69	0.62
기능노무직	1.38	2.55	0.06	0.10	2.44	3.96	0.63	0.85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국내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여성의 국내여행 일수가 남성보다 더 길게 나타났는데 2010년에 남성이 2.97일, 여성이 3.13일로 남녀 간에 0.16일의 차이가 났다. 이

후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에 남성 4.40일, 여성 4.48일로 여전히 여성의 국내여행 일수가 길지만 그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의 경우는 2010년과 2013년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남성이 1.23일로 여성 0.98일보다 길었으나, 2013년에는 여성(1.44일)이 남성보다(1.11일) 연평균 여행일수가 많았다. 특이한 점은 2010년 대비 2013년에 남성의 해외여행 일수는 0.12일 감소한 반면에 여성의 해외여행 일수는 0.46일 증가한 것이다. 연령집단별로는 국내여행의 경우 30대의 여행일수가 가장 많은 반면,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많다. 여행 참여횟수와 마찬가지로, 고학력자이면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모두에서 여행하는 일수가 많다.

〈표 VII-5〉는 만 15세 이상 국민의 연평균 여행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연평균 여행지출액은 2010년 국내여행 20만 6,170원, 해외여행 19만 5,655원에서 2013년 국내여행 32만 6,902원, 해외여행 32만 7,173원으로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각각 12만 732원과 13만 1,518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0년의 경우 국내여행에서는 여성이 20만 7,192원으로 남성의 20만 5,138원보다 많았고, 해외여행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그러나 2013년에는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모두 여성의 지출비용이 더 많았다. 연령집단별로는 국내여행의 경우 30대의 지출비



용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았다. 해외여행 지출 비용은 2010년에는 50대가 30만 1,105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에는 20대가 46만 3,761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2010년 대비 약 58%p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학력집단, 직업별로는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에서 모두 높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여행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국내여행의 경우 2010년 대비 2013년에 모든 계층에서 지출비용이 증가하였고,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초졸 이하, 전문·관리직, 농어업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2010년과 비교해 2013년에 지출비용이 증가하였다.

표 VII-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국민 1인당 연간 여행지출액, 2010, 2013

	국내여행		해외여행	
	2010	2013	2010	2013
전체	206	327	196	327
성				
남성	205	311	198	306
여성	207	342	194	348
연령				
15-19세	137	229	62	166
20대	126	196	180	464
30대	294	466	211	353
40대	281	425	187	304
50대	192	317	301	402
60대 이상	141	257	219	264
교육수준				
초졸 이하	97	137	84	75
중학교	158	260	131	148
고등학교	169	321	122	254
전문대	257	370	171	284
대학교	286	365	341	460
대학원	359	556	515	958
직업				
전문관리직	349	480	575	552
사무직	290	424	259	420
서비스판매직	236	327	205	255
농어업	129	192	157	147
기능노무직	179	286	94	211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국내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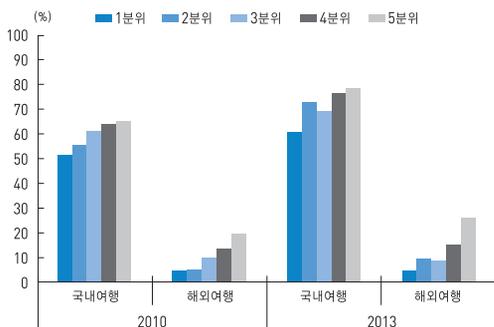
여행은 소비성 사치재라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담은 필수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과 여가는 상징성이 강하여 사회적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소외계층의 경우 여행에 대한 욕구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경제적 제약이나 시간적 제약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여행 참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행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수준별 여행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조정한 균등화 소득(가구소득 ÷ √가구원수)을 활용하였다. 균등화 소득을 소득규모에 따라 5개의 집단, 즉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구분하여 소득집단별 여행 경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VII-10]은 소득분위별 여행 경험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과 2013년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 여행 경험률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5분위가 78.7%로 가장 높고, 이어서 4분위(76.6%), 2분위(73.1%), 3분위(69.8%), 1분위(60.9%)의 순이다. 해외여행 경험률도 국내여행과 마찬가지로 5분위(26.2%), 4분위(15.2%), 2분위(9.8%), 3분위(8.8%), 1분위(4.8%) 순으로 높다.

통계청의 2013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2년 대비 오락문화비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2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분위 -6.0%, 2분위 7.6%, 3분위 3.1%, 4분위 3.9%, 5분위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가치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2분위 증가세의 두각은 소득중위계층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그림 Ⅶ-10 소득분위별 여행 경험률, 2010,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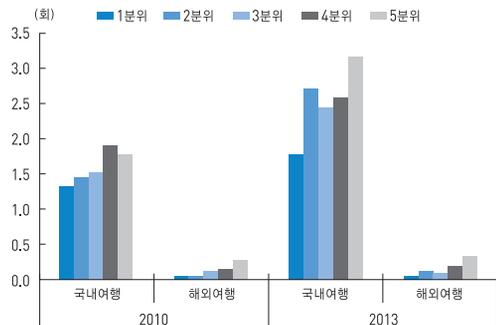


주: 1) 여행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숙박 및 당일여행 또는 해외여행을 1회 이상 다녀온 사람의 비율임.
 2) 국내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림 Ⅶ-11]과 [그림 Ⅶ-12]는 각각 소득분위별 연평균 여행 횟수와 일수를 보여준다. 2013년 소득분위별 국내여행 횟수는 5분위(3.17회)가 가장 많고, 이어서 2분위(2.72회), 4분위(2.59회), 3분위(2.45회), 1분위(1.78회)의 순이다. 해외여행 횟수는 5분위(0.34회), 4분위(0.20회), 2분위(0.12회), 3분위(0.10회), 1분위(0.06회)의 순으로 많다. 여행횟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3년에 소득 5분위는 국내여행 1.38회, 해외여행 0.06회 증가하였고, 소득 2분위는 국내여행 1.27회, 해외여행 0.06회 증가하였다. 하지만 소득3분위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횟수가 0.03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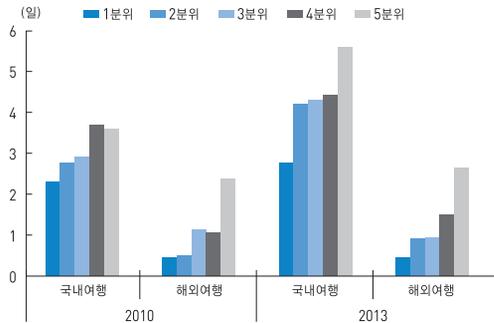
그림 Ⅶ-11 소득분위별 국민 1인당 연간 여행횟수, 2010, 2013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국내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2013년 소득분위별 연평균 여행일수를 살펴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일수가 많아지고 있다. 2010년과 2013년

그림 VII-12 소득분위별 국민 1인당 연간 여행일수, 2010, 2013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국내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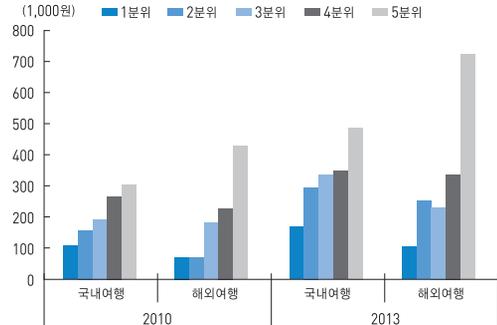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국내여행의 경우 소득 5분위(1.98일)와 2분위(1.45일)에서 여행일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의 경우 소득 3분위만이 0.18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13]은 소득분위별 연평균 여행지출액을 보여준다. 2010년과 2013년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내여행 지출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시기 모두 소득 5분위의 국내여행 지출액은 소득 1분위보다 약 2.8배 정도 많다.

해외여행의 경우 2010년에는 소득 2분위의 지출액이 7만 237원으로 1분위의 7만 2,848원보다 약간 적으며, 소득 3분위부터 지출액이 커진다. 2013년에는 소득 5분위가 72만 3,959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4분위, 2분위, 3분위, 1분위의 순으로 높다. 특히 소득 5분위의 해외여행 지출액은 소득 1분위의 약 6.8배 정도이다.

종합하면, 2010년의 경우 소득 5분위가 1분

그림 VII-13 소득분위별 국민 1인당 연간 여행지출액, 2010, 2013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국내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위보다 국내여행 경험률에서 1.3배, 횡수에서 1.4배, 일수에서 1.6배, 지출액에서 2.7배 높았고, 해외여행 경험률에서 3.9배, 횡수에서 5.6배, 일수에서 5.2배, 지출액에서 5.9배 높았다. 2013년의 경우에도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1.3배, 횡수는 1.8배, 일수는 2.0배, 지출액은 2.9배이고, 해외여행 경험률은 5.5배, 횡수 및 일수는 5.7배, 지출액은 6.8배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소득분위별 여행 참여행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는, 국내여행보다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소득분위별 여가 및 삶의 만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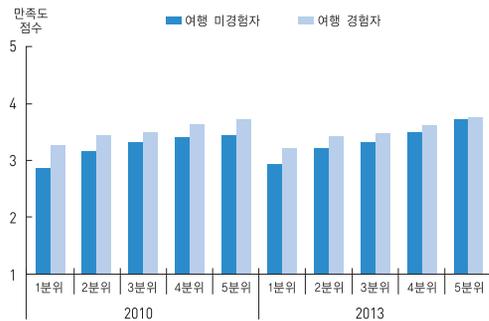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여행 참여와 여가생활 및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VII-14]는 소득분위별 여행 경험여부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여가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행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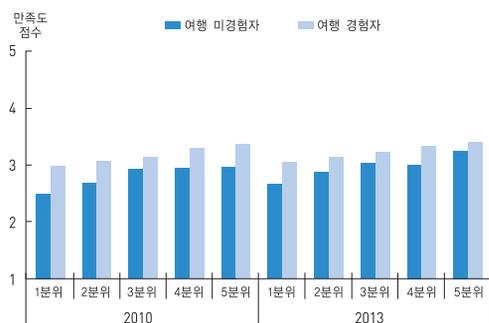
펴보면, 2013년 여행 미참여 집단의 경우 소득 5분위의 만족도가 3.26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3분위(3.03점), 4분위(3.01점), 2분위(2.88점), 1분위(2.67점)의 순이다. 여행 참여집단의 여가생활 만족도 역시 소득 5분위가 3.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4분위(3.34점), 3분위(3.23점), 2분위(3.14점), 1분위(3.06점) 순이다.

그림 VII-14 소득분위별 여행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여가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2013

(1) 여가생활 만족도



(2) 삶에 대한 만족도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여행경험 여부는 국내관광여행 경험을 기준으로 구분함.
 3)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심층조사」, 원자료, 각년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집단 간 비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여행 참여집단이 여행 미참여 집단보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여행 미참여 집단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 5분위가 3.72점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4분위(3.49점), 3분위(3.32점), 2분위(3.22점), 1분위(2.9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참여집단 역시 소득 5분위의 만족도가 3.77점으로 가장 높고, 4분위(3.62점), 3분위(3.48점), 2분위(3.43점), 1분위(3.21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광은 국민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행복권의 차원에서 관광 소외계층에 대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상황이 관광활동 참여와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무직, 일용직 및 비정규직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복지 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03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 2013년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은 69%인데,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10명 중 7명이 된다는 것이며,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1시간 44분이다. 20대와 3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를 넘어섰고, 40대는 82%, 50대는 51%, 60대 이상은 11%이다.
-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은 텔레비전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선호한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고, 40대 이상부터는 텔레비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30대 미만에서는 게임 앱을, 30대 이상에서는 뉴스 앱을 많이 사용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엔터테인먼트 앱을 많이 이용하고, 40대 이상에서는 건강관리 등의 생활정보 앱 이용자가 많다.
- 스마트미디어 이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방송미디어가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상의 삶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대표되는 스마트미디어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10년이다. 당시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3.8%에 불과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3년에는 69%로 급증하였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 기존 휴대폰의 전화와 문자 기능 이외에 인터넷 기능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영역으로 그 활용도가 확장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기존의 미디어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통화 외에 이동 중에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이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텔레비전의 기능과 PC의 기능, 여기에 휴대폰의 기능이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단말기에서 이용 가능해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은 그 어떤 미디어보다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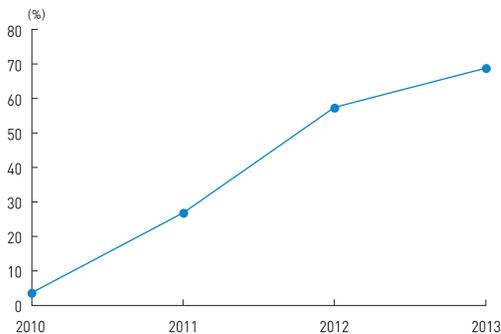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스마트미디어의 이용현황과 이를 이용한 여가활동의 실태를 살펴본 후 스마트미디어 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스마트미디어로 분류되는 것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그리고 스마트TV가 있는데, 태블릿PC와 스마트TV의 보급률은 5% 미만으로 아직은 저조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스마트폰에 초점을 두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스마트미디어 이용현황

2010년부터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의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3.8%에 불과했던 이용률이 2011년 27.0%, 2012년 57.5%로 급격하게 높아졌고 이후 더 높아져 2013년 현재 68.8%에 이르고 있다(그림 VII-15).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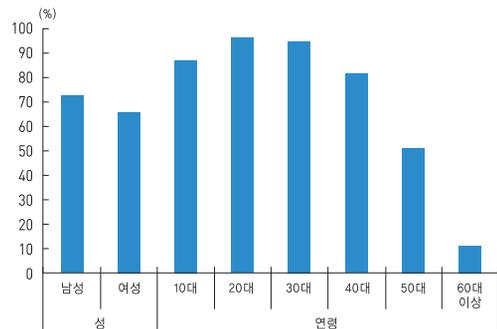
그림 VII-15 스마트폰 이용률, 2010-2013



주: 1) 이용률은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지난 3개월 간 1일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VII-16]은 성별 및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을 보여준다. 여성(66.0%)보다는 남성(72.8%)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다. 20대와 3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5% 내외로 100%에 근접한 데 반해, 50대로 넘어오면 스마트폰 보급률은 51.2%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60대 이상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11.1%에 불과하다.

그림 VII-16 성 및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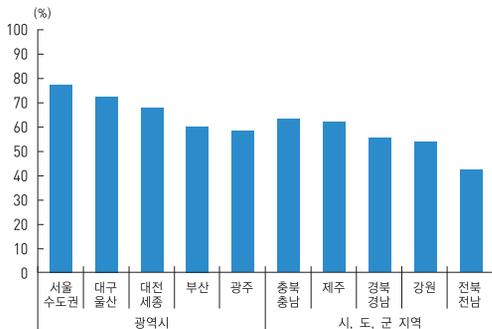


주: 1) 이용률은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지난 3개월 간 1일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원자료, 2013.

거주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다. 우선 수도권과 광역시의 스마트폰 이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이용률이 77.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대구·울산(72.5%), 대전·세종(67.7%), 부산(60.4%), 광주(58.4%)의 순이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별 스마트폰 이용률에서는 충청북이

6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제주(62.0%), 경남북(55.6%), 강원(53.8%), 전남북(42.3%)의 순이다(그림 VII-17). 종합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그 외 지역보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으며,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지역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가장 낮다.

그림 VII-17 지역별 스마트폰 이용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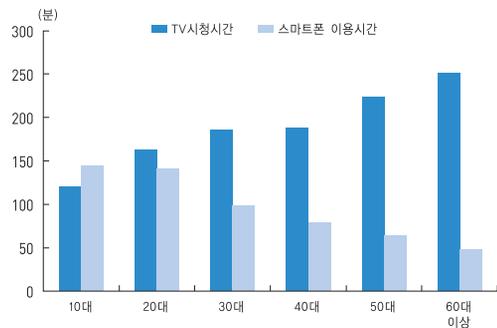
주: 1) 이용률은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지난 3개월 간 1일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수도권은 경기와 인천을 포함함.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원자료, 2013.

그렇다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어디에 얼마나 이용하는가? 스마트폰은 그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사람에 따라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화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통화라는 기본적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사용시간은 평균 1시간 44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텔레비전의 평균 시청시간인 3시간 14분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사용시간으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차이를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간에는 스마트폰 이용시간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10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2시간 24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대(2시간 21분), 30대(1시간 39분)의 순이다. 50대는 스마트폰 이용률도 50% 수준으로 절반 정도이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시간도 48분으로 1시간 미만이다. 스마트폰과는 달리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났다. 특히 50대부터 시청시간이 급격히 늘어나 60대 이상의 시청시간은 평균 4시간 11분으로 10대(2시간)보다 두 배 이상 많다(그림 VII-18).

그림 VII-18 연령별 TV 및 스마트폰 이용시간, 2013



주: 1) 이용시간은 1일 평균 이용시간임.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원자료, 2013.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평균 3시간 30분으로 남성의 평균 시청시간(2시간 57분)보다 30분 이상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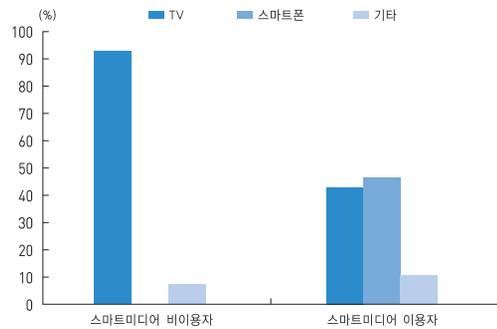
미디어 이용의 변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약 3시간 10분,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약 1시간 40분으로 이 두 매체의 이용시간만 합해도 5시간 정도가 된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8시간)과 일하는 시간(8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 남는데, 이 8시간 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5시간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미디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최근 한 보도(세계일보, 2014년 6월 24일)에 의하면, 한국인은 옥외에서 하는 활동적인 여가보다는 집에서 하는 비활동적인 여가를 많이 하는데 집에서 하는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으로는 텔레비전 시청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텔레비전 시청은 여가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현재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텔레비전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부터 여가활동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

리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은 텔레비전(42.9%)보다는 스마트폰(46.4%)을 약간 더 선호한다. 반면, 스마트미디어 비이용자들은 텔레비전 선호도가 92.9%로 스마트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그림 VII-19).

그림 VII-19 스마트미디어 이용여부별 매체선호도, 2013



주: 1) 매체선호도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일상적으로 접하는 전자 매체 중 해당 매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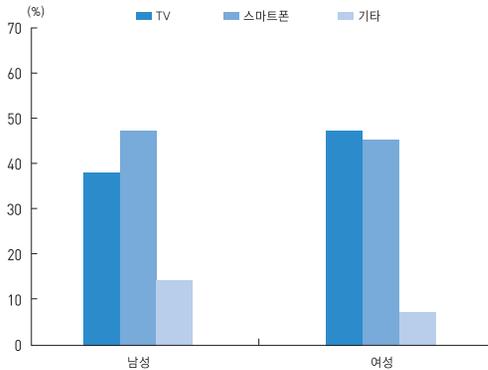
2) '기타'는 PC,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게임기, 그 외 기타 매체 등을 포함함.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선호도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텔레비전(38.2%)보다는 스마트폰(47.5%)을 더 선호하고, 여성은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텔레비전(47.3%)을 스마트폰(45.3%)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그림 VII-20). 미디어이용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선호의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

그림 VII-20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성별 매체선호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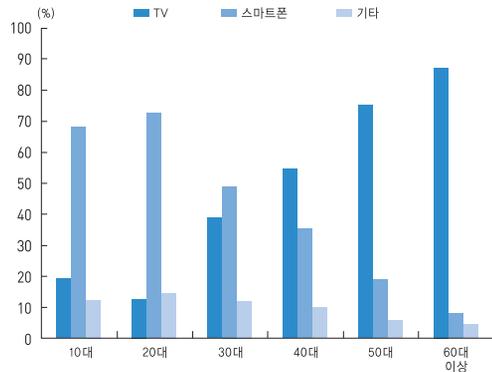


주: 1) 매체선호도는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만 13세 이상) 중 일상적으로 접하는 전자 매체 중 해당 매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기타'는 PC,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게임기, 그 외 기타 매체 등을 포함함.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그림 VII-21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연령별 매체선호도, 2013



주: 1) 매체선호도는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만 13세 이상) 중 일상적으로 접하는 전자 매체 중 해당 매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기타'는 PC,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게임기, 그 외 기타 매체 등을 포함함.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40대 이상부터는 텔레비전에 대한 선호도가 스마트폰보다 더 높다. 특히 20대는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7%로 가장 높다. 텔레비전에 대한 선호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50대의 75.2%, 60대 이상의 87.3%가 스마트폰보다 텔레비전을 더 선호한다(그림 VII-21). 스마트폰은 불과 4년 만에 지난 50여년간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텔레비전을 제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제까지 미디어를 통한 여가활동의 중심에는 텔레비전 시청이 있었지만 젊은 층에서 스마트폰 중심의 여가활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여가활동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가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정보 검색을 포함하여 음악 감상, 전자책 이용, 방송 프로그램 시청 등 다양한 콘텐츠의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2014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47.5%로 상당히 높다. 2명 중 1명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도 동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과거 단순히 텔레비전만을 시청하던 여가활동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이용하는 활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다른 매체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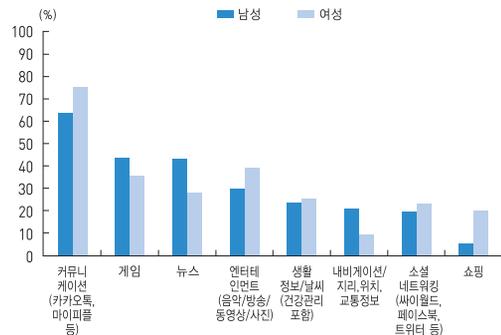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습관적으로’가 48.7%로 가장 많고, ‘채팅과 메신저 이용’(42.0%)과 ‘다양한 정보 검색’(27.2%)과 같은 능동적 이용 행태도 함께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텔레비전 시청방식을 ‘수동적 시청’에서 검색을 활용한 ‘능동적 시청’으로, 가족이나 거실에 한정된 ‘폐쇄형 시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연계된 ‘네트워크형 시청’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프라임타임대 텔레비전 시청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의 절반 정도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nancial Times, April, 27, 2014).

이렇게 스마트미디어가 여가활동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미디어 여가활동의 내용도 단순한 프로그램 시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의 앱 이용은 여가활동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앱은 카카오톡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앱이다.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카카오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앱을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은 오락적인 목적을 위해 음악을 듣거나 방송동영상을 보기 위한 앱(39.1%) 이용이 많고, 이 외에 게임 앱(31.1%), 뉴스 앱(30.6%)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자주 이용하는 앱은 카카오톡을 제외하고는 성별로 차이가 있다. 남성은

카카오톡(63.7%) 다음으로 게임 앱(43.5%), 뉴스 앱(42.9%), 음악이나 방송 관련 엔터테인먼트 앱(29.9%), 날씨나 건강 관련 생활정보 앱(23.4%),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정보 앱(20.6%),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앱(19.2%)을 많이 이용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카카오톡(75.2%), 엔터테인먼트 앱(39.1%), 게임 앱(35.6%), 뉴스 앱(27.9%), 생활정보 앱(25.4%), SNS 앱(23.2%), 쇼핑 앱(19.9%), 교통정보 앱(9.4%)의 순으로 많이 이용한다(그림 VII-22).

그림 VII-22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성별 자주 이용하는 앱, 2013



주: 1) 다중응답 결과임.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스마트미디어 앱 이용의 성별 차이에서 특징적인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및 커뮤니케이션 앱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앱 이용률도 남성은 29.9%인 데 반해 여성은 39.1%로 여성이 오락적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쇼핑 앱도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앱 중의 하나이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앱은 게임, 뉴스, 교통정보 앱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미디어 앱 이용은 연령별로도 흥미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10대가 주로 이용하는 앱은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카카오톡(76.7%)과 게임 앱(66.3%), 음악이나 방송 관련 엔터테인먼트 앱(47.7%),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앱(31.1%)으로 나타난다. 20대는 카카오톡(78.2%)에 이어 게임 앱(43.2%)과 SNS 앱(42.8%), 엔터테인먼트 앱(42.1%)을 주로 이용하며, 30대는 카카오톡(74.2%), 뉴스 앱(38.3%), 게임 앱(38.1%), 엔터테인먼트 앱(32.9%)의 이용률이 높다. 40대에 들어서는 카카오톡(65.8%)과 게임 앱(30.2%)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대신, 뉴스 앱(48.0%)과 생활정보 앱

(32.2%)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50대도 40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게임 앱(25.8%)보다는 뉴스 앱(52.9%)이나 날씨, 건강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 앱(36.9%) 이용률이 높다. 60대 이상은 뉴스 앱(50.0%)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카카오톡(42.9%)과 생활정보 앱(38.6%)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표 VII-6).

음악 감상이나 동영상 시청 그리고 게임이나 뉴스 이용은 기존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가능했던 여가활동 영역이다. 스마트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여가활동이 확장된 것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방식이 확장된 것이다. 여기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활동도 여가 영역에서 손쉽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마트미

표 VII-6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연령별 자주 이용하는 앱 순위, 2013

	1위	2위	3위	4위	5위
10대	커뮤니케이션 76.7%	게임 66.3%	엔터테인먼트 47.7%	소셜네트워킹 31.1%	책/만화 17.7%
20대	커뮤니케이션 78.2%	게임 43.2%	소셜네트워킹 42.8%	엔터테인먼트 42.1%	뉴스 20.0%
30대	커뮤니케이션 74.2%	뉴스 38.2%	게임 38.1%	엔터테인먼트 32.9%	생활정보/날씨 24.8%
40대	커뮤니케이션 65.8%	뉴스 48.0%	생활정보/날씨 32.2%	게임 30.2%	엔터테인먼트 28.4%
50대	커뮤니케이션 58.8%	뉴스 52.9%	생활정보/날씨 36.9%	엔터테인먼트 26.3%	게임 25.8%
60대 이상	뉴스 50.0%	커뮤니케이션 42.9%	생활정보/날씨 38.6%	엔터테인먼트 25.6%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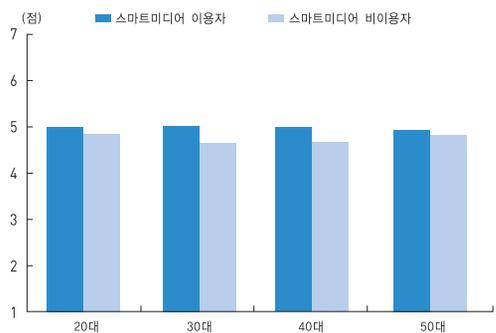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디어의 등장은 여가활동의 범위를 미디어와 개인이라는 일방향적 관계에서 미디어를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고 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게 해주는 상호작용적 여가활동 양식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스마트미디어 이용은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만족도와 관계적 측면에서의 만족도,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미디어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그림 Ⅷ-23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연령별 삶의 만족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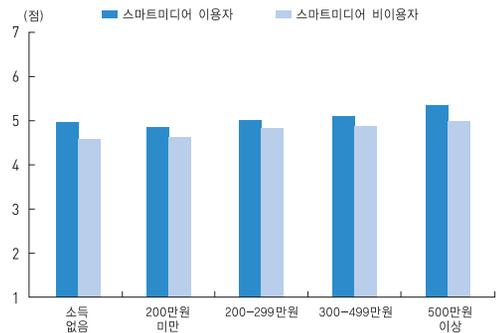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등 각각에 대한 만족 정도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도록 1-7점('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세 측면의 만족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Ⅷ-2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동일한 소득집단 내에서는 스마트미디어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Ⅷ-24).

그림 Ⅷ-24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 2013



주: 1) 삶의 만족도는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등 각각에 대한 만족 정도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도록 1-7점('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세 측면의 만족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함.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은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이용방법이 다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미디어



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이용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앱을 이용하여 사람들과 수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용부담 없이 주변 사람들과 일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음악이나 방송을 손쉽게 즐기게 됨으로써 여가활동의 폭이 넓어졌으며,

뉴스나 생활정보 등의 이용도 한결 수월해졌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와 함께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은 삶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삶에 대한 만족이 일상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종합적인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미디어가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orean Social Trends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2014

Housing & Transport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II

주거와 교통

- | | | | |
|----|----------------------|-------------|-----|
| 01 |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 손경환 안양대학교 | 240 |
| 02 | 전월세시장의 변화 | 정의철 건국대학교 | 250 |
| 03 |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 박천규 국토연구원 | 258 |
| 04 |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 김회경 동아대학교 | 267 |

01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손경환 (안양대학교)

- 2012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71호이고, 신주택보급률은 103.0%가 되어 주택부족 현상이 거의 해결되었다. 신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지역 간에 주택수급 편차가 있고, 주거이동에 따른 일시적 수급 지체 현상이 생기는데다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지난 10년 동안 주택공급 실적은 연평균 48만 호에 달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은 급등한 다음 침체상태에 빠져들었으나, 전세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양자 간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거유형에서는 보증부월세를 비롯한 월세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자가га구의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고, 임차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월세나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현재 1,940만 대로 1990년의 340만 대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 도로연장은 2012년 현재 10만 6,414km로 198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980년 33.2%에 그쳤던 도로포장률은 2013년 82.5%로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거와 교통 영역의 변화를 다루었다. 주거 영역에서는 주택수급, 주택가격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거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택수급 측면에서는 주택보급률과 함께 인구 1,000명당 주택수의 변화,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등을 검토하고,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변화 추세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편익시설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교통 영역에서는 자동차의 보급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구의 교통 이용수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주택건설과 주택보급률의 상승

주택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고가성, 비이동성, 영구성 및 장기간의 건설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많은 세분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표 VIII-1〉은 지난 30여 년간의 신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여준다. 신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주택사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신주택보급률이 작성되기 이전의 주택보급률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1인가구를 가구수에



표 VIII-1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980~2013

연도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주택 보급률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호)
1980	7,470	5,319	71.2	142.2
1985	8,751	6,104	69.8	151.0
1990	10,167	7,357	72.4	165.0
1995	11,133	9,570	86.0	214.5
2000	11,928	11,472	96.2	248.7
2005	15,887	15,623	98.3	330.4
2010	17,339	17,672	101.9	363.8
2011	17,719	18,131	102.3	364.2
2012	18,057	18,551	102.7	371.0
2013	18,408	18,969	103.0	377.7

주: 1) 2005년 이전 자료는 신주택보급률 산정 이전의 자료로 가구수는 보통가구(월연가구) 기준이고, 주택수는 다가구주택을 통수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임.
 2) 2005년 자료부터는 신주택보급률 산정 기준에 따라 가구수는 보통가구, 1인가구, 5인 이하 비월연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 기준이고, 주택수는 다가구주택을 호수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임.
 3) 주택보급률 = (주택수 ÷ 가구수) × 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주거와 가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주택들과 1인가구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가구로 주택과 가구의 기준을 확대하여 산출하는 신주택보급률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신주택보급률에서는 이전까지 한 채로 계산하였던 다가구주택에서 각각의 거처를 개별주택으로 판단하여 주택호수를 산정한다. 주택보급률의 보조지표로 발표하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주택수를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되며, 많은 국가들에서 주택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어 국제비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빠른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가구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주택사정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신주택보급률은 2008년 처음으로 100%를 상회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현재는 103.0%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2002년에 100%를 넘어선 이후 2005년에 105.9%, 2008년에 109.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신주택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거처기준으로 계산한 주택수의 증가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의 산출에서는 제외되었던 1인가구 등을 포함한 가구의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신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택수급은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는 데다 주거이동에 따른 일시적 수급마찰 등으로 주택재고는 수요보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다. 신주택보급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7.5%, 인천 102.0%, 경기도 98.7%로 수도권의 평균 신주택보급률은 98.6%에 그쳐 여전히 100%를 밑돌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신주택보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북과 경북, 충남 등의 신주택보급률은 110%를 상회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 200호

를 밀돌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00년 248.7호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77.7호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신주택보급률에 비하여 빠르게 향상된 것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가구증가율은 가구규모의 감소, 1인가구의 증가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미국 410호(2010년), 영국 434호(2011년), 호주 424호(2011년), 일본 451호(2008년) 등으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신주택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수의 증가가 보여주듯이 지난 30여 년간 주택수급 사정은 크게 개선되어 왔다. 이는 <표 VIII-2>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주택이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힘입어 수도권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주택이 단기간에 공급되었다.

표 VIII-2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 주택수, 1980-2013 (1,000호)

연도	전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1980	212	106	105
1985	227	132	95
1990	750	269	481
1995	619	228	391
2000	433	140	293
2005	464	141	323
2010	386	138	248
2011	549	115	434
2012	587	110	477
2013	440	80	360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주택건설 실적은 1980년대까지 연간 25만 호 내외에 머물렀으나, 1988년에 41만 호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75만 호를 기록하였다. 한국에서 주택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전반기로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에 총 326만 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65만 호에 해당한다. 1990년대 전반기에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만성적인 주택부족과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공급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전반기의 활발한 주택건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여 지난 10년 동안 주택건설 실적은 연평균 48만 호에 달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50만 호를 훨씬 상회하는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 기간 동안 주택건설 호수가 증가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의 소형화는 공급되는 주택규모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택규모의 불일치를 불러 왔으며, 특히 늘어나는 도심지역의 주거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6만 호를 상회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되었고, 이는 주택공급의 증가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는 부족한 주택재고를 조기에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



하였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해서부터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활기를 보인 것은 분양가 자율화, 저렴한 택지의 대규모 개발, 미분양 아파트 지원대책을 비롯하여 민간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투자의 수익성이 좋아지자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에 적극 뛰어들어 준 결과로 여겨진다.

주택공급 증가에 힘입어 주택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현재 주택재고는 1,536만 호로 지난 10년 사이에 264만 호가 증가하였다. 주택공급에 비하여 주택재고의 증가가 낮은 것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많은 주택들이 멸실되었기 때문이다. 주택의 멸실은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많이 나타났으며, 2000년대 초반의 경우 매년 10만 호 이상의 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되었다. 주택재고에서 아파트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아파트가 총 주택건설 가운데 80%에 이를 정도로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3년 사이에 아파트의 공급비중은 66.3%로 줄고, 단독주택의 공급비중이 13.6%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택공급의 증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 주택재고의 증가로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주택정책의 관심은 양적인 공급확대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주거문제로 옮겨갔으며, 1990

표 VIII-3 주택유형별 건설 주택수, 1995-2013

(1,000호)

연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1995	570	56	497	17
2000	377	35	332	10
2010	328	45	277	6
2011	420	50	357	13
2012	447	51	376	20
2013	342	52	279	11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년대 초반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에도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2005년 총 주택수의 2.3%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10년에 5.5%로 증가하였다. 2013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2만 5천 호로 총 주택수의 6%에 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국가별로 편차가 심하여 영국 17.5%(2010년), 프랑스 17.0%(2005년), 일본 6.1%(2008년), 미국 1.0%(2009년) 등이며, OECD 평균은 11.5%(2007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거사정의 개선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힘입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0년 거의 30%에 달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0년에 10.6%로 감소하고 2012년에는 7.2%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과 비슷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일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4.3%(2008년)에 불과하다. 일본과 비교

할 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지난 10여 년간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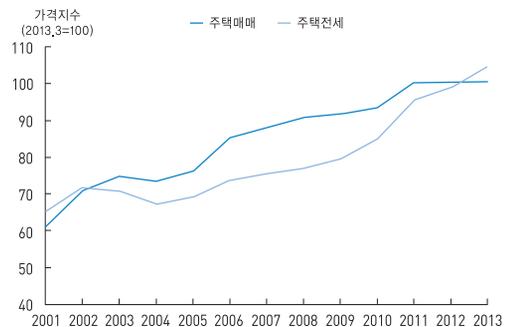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디커플링

주거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변동이다. [그림 VIII-1]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의 주택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의 추세를 보여준다. 주택가격은 2000년대에 들어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화로 자리 잡은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금리는 5%대로 떨어졌고, 낮은 이자수익에 만족하지 못한 자금이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와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려들어 주택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의 리스크를 경험한 금융기관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주택시장에는 풍부한 자금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의 주택가격 상승은 사람들의 주거선호가 집중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가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거수요가 몰리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추세를 비교하여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2.0%에 그쳤지만 전세가격 상승률은 6.6%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가격의 안정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라는 디커플링 현상은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일시적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나,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동행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소유보다는 임차를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했고, 이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디커플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은 사람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높은 구입비용과 세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세를 들어 사는 편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임차수요의 증가와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림 VIII-1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2001-2013



주: 1) 해당연도 12월 기준임.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각 년도 12월.



200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은 사람들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높아졌고,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수준을 나타내는 RIR(Rent to Income Ratio) 역시 2006년 18.7%에서 2012년 19.8%로 높아졌다. PIR과 RIR의 상승은 사람들의 주택구입 능력을 떨어뜨리고, 세를 들어 사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PIR은 미국 4.8배(2012년), 영국 5.7배(2012년), 일본 5.5배(2012년) 등이다.

주거유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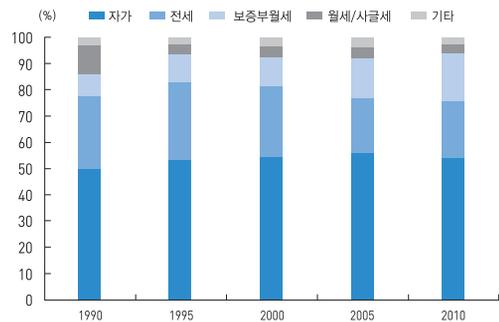
주택의 임차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임차형태가 전세 중심에서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까지는 임차가구의 절반 이상이 전세로 거주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는 보증부월세나 사글세를 포함한 월세의 비중이 21.4%로 전세 비중인 21.7%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다.

월세 비중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집주인들이 전세로 받은 자금의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 전세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세의 월세전

환이율은 연 7% 내외로 예금금리나 회사채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기대가 낮아지면서 장래의 불확실한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주택소유자들의 판단도 월세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비해 세입자는 높은 수준의 월세를 매달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를 원하는 성향이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임차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보증부월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2010년 보증부월세의 비중은 18.1%에 달하여 1990년의 8.2%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다. 이는 임차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Ⅷ-2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구성비율, 1990-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 10% 표본자료, 각 년도.

한편, 자가거주의 비중은 1995년 53.3%까지 높아졌으나 이후로는 55% 내외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의 주

택가격 급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워진 데다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주요 국가의 자가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 66.2%(2011년), 영국 65.1%(2012년), 일본 61.1%(2008년) 등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자가점유율은 54.2%이지만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1.3%로 훨씬 높아 약 7% 정도의 가구가 자기집이 있으면서 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녀교육, 출퇴근 등의 생활여건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환경의 향상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관심은 재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보다 주거의 물리적 조건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변화를 주관적인 만족도 측면과 객관적인 시설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거만족도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주거상황을 보여준다. 먼저 주거만족도를 주택의 점유 형태별로 비교하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택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월세나 사글세 거주자의 주택만족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목돈이 없고 적정한 주거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 매달 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거상태가 열악한 주택에서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2008년과 2012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주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2008년에 24.5%였으나 2012년에는 12.6%로 낮아졌다. 특히, 자가가구의 불만족 비율은 21.3%에서 7.8%로 크게 낮아졌으며, 전세나 보증부월세 거주가구의 불만족 비율도 낮아졌다. 그러나 월세와 사글세 거주가구의 불만족 비율은 2012년에 각각 45.1%와 63.1%로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매우 높고 2008년과 비교해서 더 높아졌다.

주거환경의 경우, 2008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2008년에는 불만족 비율이 25.5%였으나 2012년에는 12.7%로 절반으로 낮아졌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족 비율은 다른 유형의 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주거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주거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주택 내부시설 구비율과 노후주택 비중을 살펴보자 한다. 주거의 편리성을 보여주는 내부시설의 경우, 입식부엌은 2000년 93.9%에서 2010년 96.4%로 향상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수세식



화장실은 87.0%에서 97.0%, 온수목욕시설은 87.4%에서 97.6%, 그리고 상수도는 87.5%에서 93.7%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노후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분류한다. 노후주택의 비중은 2005년 12.7%에서 2010년에는 9.7%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역시 노후주택 비중이 11.0%에서 8.4%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후주택은 아니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과연수 15년에서 30년 사이의 주택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비중은 2005년 245만 호(19.6%)에서 2010년에는 496만 호(35.8%)로 크게 늘어났으며, 아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전반 주택 대량공급의 영향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동차의 보급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활동은 다양해지고 활동에 따른 이동도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망의 확충과 자동차의 보급은 출퇴근, 통학, 여행과 같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동차의 보급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빠

르게 진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로 증가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보급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함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표 VIII-4>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에는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약 340만 대에 그쳤으나, 2000년에 1,000만 대를 돌파한 후 2013년 현재는 1,940만 대에 달하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1990년대 전반기에 빠르게 늘어났고 2010년에 1대를 넘어 서면서 본격적인 1가구 1자동차 시대가 개막되었다. 2013년 현재 가구당 자동차수는 1.07대에 이르러 1990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졌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1990년 78대에서 2013년 386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VIII-4 자동차 등록대수, 1990-2013

연도	자동차 등록대수 (1,000대)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1990	3,395	0.30	78.2
1995	8,469	0.65	190.1
2000	12,059	0.84	262.2
2005	15,397	0.97	327.3
2010	17,941	1.03	373.9
2011	18,437	1.04	370.4
2012	18,871	1.05	377.4
2013	19,401	1.07	386.3

주: 1) 1990-2010년 가구당 및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는 각각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와 내국인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2011-2013년 자료는 추계가구 및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장래가구추계」, 2012; 「장래인구추계」, 2011.

자동차 보급의 증가는 가구의 교통비 지출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미미하였던 1985년의 경우 가구당 교통비 지출은 가구소득 대비 3.5%에 불과하였다. 교통비 지출의 대부분은 요금이 저렴한 공공대중교통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가용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교통비 지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후 자가용을 비롯한 자동차의 이용빈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대비 교통비지출의 비중은 2000년에 8.0%까지 높아졌고 이후에도 7.3%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는 국민들의 통근과 통학 그리고 쇼핑 등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12세 이상 인구 4,165만 명 중에서 매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통근이나 통학하고 있는 인구는 2,85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통근자는 2,157만 명이고 통학학생은 693만 명이다. 이는 12세 이상 인구의 68.4%에 해당한다. 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1990년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 교통수단 이용비율이 53.3%였고 승용차 이용비율은 8.3%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승용차 이용비율이 34.0%로 크게 높아지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비율은 28.9%로 감소하였다.

교통수단의 발전을 뒷받침한 배경에는 도로망의 확충이 자리 잡고 있다. <표 V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 4만 6,951km에 불과

했던 도로연장이 2013년에는 10만 6,414km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 함께 원활하고 빠른 교통이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도로포장률은 1980년의 33.2%에서 2011년 이후에는 80%를 상회하여 대부분의 도로가 빠른 이동이 가능한 쾌적한 상태로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의 시도나 군도의 경우 아직 미포장된 상태로 남아 있는 도로가 상당한 비중을 이룬다.

표 VIII-5 도로연장과 도로포장률, 1980-2013

연도	도로연장(km)	도로포장률(%)
1980	46,951	33.2
1985	52,264	49.9
1990	56,715	71.5
1995	74,237	76.0
2000	88,775	76.0
2005	102,293	76.8
2010	105,565	79.8
2011	105,931	80.4
2012	105,703	83.4
2013	106,414	82.5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각 년도.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측면도 있지만, 반면 도로교통의 혼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 혼잡비용이란 도시내부와 지역간 도로에서 도로교통의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2010년 현재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28조 원을 상회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한다. 이는 2001년과 비교할 때 약 35%가 증



가한 수치다. 교통 혼잡비용을 요소별로 살펴 보면, 2010년의 경우 시간비용이 78.6%로 대부분이고 고정비용과 유류비용이 각각 16.9%와 4.5%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 혼잡비용에서 시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는데, 이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에 따른 도로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중교통의 다양화 및 교통복지의 실현

자가용 승용차의 확산과 함께 대중교통수단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과다사용, 도로체중 증가, 환경 악화와 같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정책당국은 대중교통수단의 육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을 살펴보면, 2012년

의 경우 버스와 택시,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88.2%에 이르며, 철도와 지하철은 각각 3.9%와 8.1%를 차지한다. 한편 녹색교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각종 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자전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을 15% 정도로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도로망 확충과 같은 시설투자에 주로 치중하여 왔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편의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수단의 확보와 함께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자전거 도로의 확대, 고령자나 장애인의 교통접근성 강화,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이용 제고와 같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02

전월세시장의 변화

정의철 (건국대학교)

-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전세가구의 비중은 점차 낮아진 반면, 보증부월세 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 보증부월세가구 비중은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임차 가구에서 보증부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초과하였다.
-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감소와 전월세시장과 금융시장의 수익률 차이로 인해 전세수요는 증가하나 전세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 임차인은 보증부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나 임대인은 전세보다 보증부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 전세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빨라 전국적으로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에서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주택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고, 주택임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높아진 전세가격과 저금리로 인해 전세에 대한 대체재로서 보증부월세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월세시장의 변화는 주택의 위치적 고정성과 이질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유형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임차형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살펴본다. 또한 여러 가지 전월세시장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여 최근의 전월세시장 변화의 원인과 특징을 탐색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가구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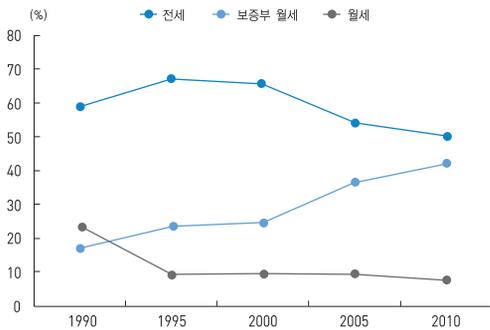
임차가구의 임차형태 변화 추이

지난 20년간 일반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가구는 1990년 49.9%에서 2005년 55.6%까지 증가하다 2010년 54.2%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전세가구는 1990년 27.8%에서 1995년 29.7%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보증부월세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8.2%에서



2010년 18.2%로 10%p나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전세가구와 보증부월세가구 간의 비중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 [그림 VIII-3]은 임차가구를 100%로 하여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가구의 비중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1995년 67.2%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50.3%로 낮아졌다. 반면, 보증부월세가구의 비중은 1990년 임차형태 중 가장 낮은 17.4%였으나 2010년에는 42.1%에 달하고 있다.

그림 VIII-3 임차가구의 임차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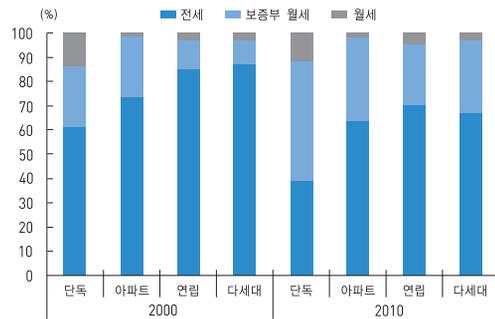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한편, 임차가구의 임차형태별 비중은 거주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VIII-4]는 2000년과 2010년 임차가구의 주택유형에 따른 임차형태별 비중을 보여준다. 2000년에는 모든 주택유형에서 전세가 지배적인 임차형태였는데, 전세가구의 비중은 단독주택에서 61.0%로 가장 낮았고 다세대주택에서 86.8%로 가장 높았다. 보증부월세가구의 비중은 아파트

에서, 월세가구의 비중은 단독주택에서 각각 25.4%와 14.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200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세가구 비중이 모든 주택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증부월세가구 비중은 2000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특히 단독주택에서는 보증부월세가구 비중(49.1%)이 전세가구 비중(39.0%)보다 높아졌다.

그림 VIII-4 임차가구의 주택유형 및 임차형태별 구성비율, 200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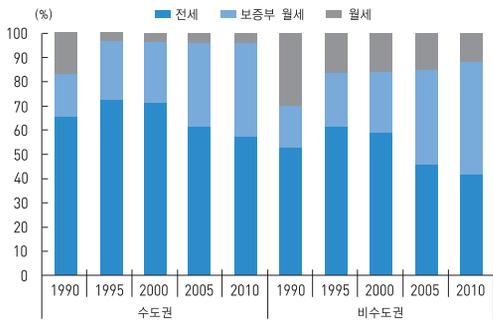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임차가구의 임차형태별 비중은 지역별로도 다르다. [그림 VIII-5]는 임차가구의 임차형태별 비중의 추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모든 연도에서 전세가구 비중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높다. 전세가구는 수도권에서는 그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95년 대비 2010년에 약 15.5%p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에 19.9%p 감소하였다. 보증부월세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14.6%p 높아졌고, 비수도권에서는 무려 24.0%p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0년 비수도권에서는 전 세가구 비중(41.3%)보다 보증부월세가구 비중 (46.5%)이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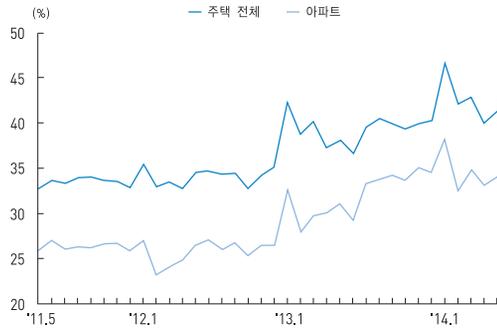
그림 VIII-5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차가구의 임차형태별 구성 비율, 1990-2010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VIII-6]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1년 5월 이후의 전 월세 거래량 중 보증부월세 계약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 5월 32.8%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보증부월세 계약 비중은 2012년 12월 35%를 넘어섰으며 2013년 11월부터는 4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의 보증부월세 계약 비중은 전체 주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보증부월세 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VIII-6 보증부월세 계약 비율, 2011. 5-2014. 5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원인과 특징

전세시장의 쇠퇴와 보증부월세시장의 확대로 대변되는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생각해 보자. 먼저 임대인의 입장을 살펴보자. 임대인은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때와 보증부월세로 주택을 임대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임대형태로 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의 장점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매매가격이 더 올랐을 때 매각함으로써 높은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임대인은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전세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보증부월세는 모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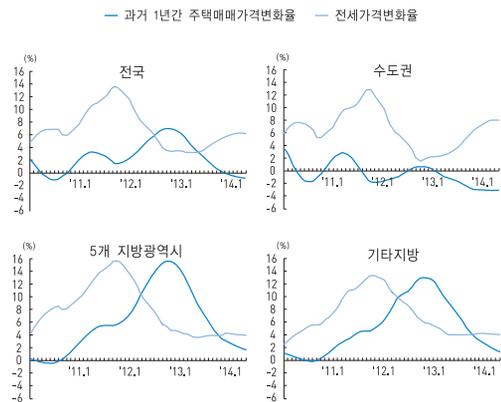
익이 매매차익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임대료의 형태로 발생한다. 보증부월세에서의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차액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월세이율 또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월세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을수록 전세보다 보증부월세로의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보증부월세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때와 보증부월세로 임차할 때의 주거비용을 고려하여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차유형을 선택할 것이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주거비용의 일부이지만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전액 돌려받으므로 보증금 자체가 주거비용이 아니라 그 보증금의 기회비용이 주거비용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기 위해 1,000만 원을 대출 받는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1,000만 원에 월세이율을 곱한 만큼 월세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가 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물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전제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전월세시장에서 전

세와 보증부월세의 배분은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 그리고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II-7]은 전국과 지역별 전세가격 상승률과 주택매매가격 상승 예상률의 대리변수로 과거 1년 동안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과 수도권에서는 주택매매가격 상승 예상률과 전세가격 상승률은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택매매가격 상승 예상률이 높을수록 높은 매매차익이 예상되므로 전세로 임대하는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세로 임대하는 것을 선호하여 전세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은 둔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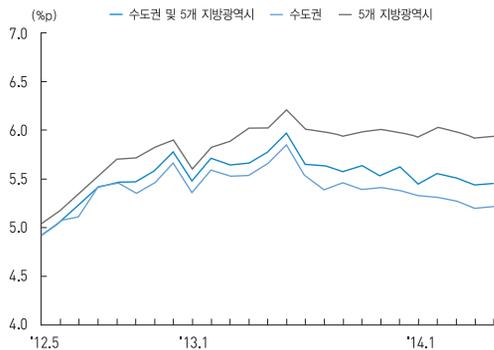
그림 VIII-7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화율, 2010. 1-2014. 5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2) 5개 지방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을 포함함.
 3) 기타 지방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를 포함함.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각 년도 매월.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5개 지방광역시와 기타 지방에서는 주택매매가격 상승 예상률과 전세가격 상승률 사이의 음(-)의 관계가 전국 및 수도권 지역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두 변수가 양(+)의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택매매가격 상승 예상률만이 전세가격 변화를 견인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림 VIII-8]은 연 단위로 환산한 월세이율과 금리의 대리변수로 가계대출금리의 차이를 지역별로 계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는 대략 5%p 이상이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5개 광역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VIII-8 지역별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 2012. 5-201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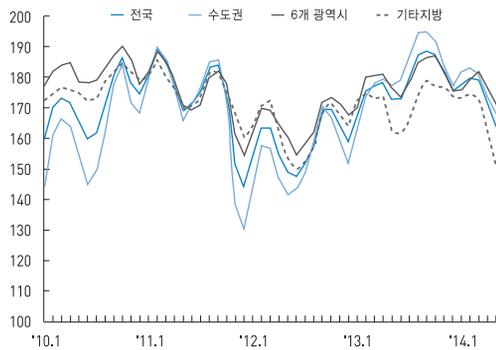


주: 1) 월세이율=(월세×12)÷(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보증금)×100.
 2) 시장금리로 가계대출금리를 이용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4) 5개 지방광역시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을 포함함.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http://www.r-one.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가 클수록 임대인은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로의 임대를 선호하여 전세공급이 감소하고, 임차인은 보증부월세보다는 전세로의 임차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VIII-7]에서와 같이 지방에서 주택매매가격 상승 예상률과 전세가격 상승률 사이의 역(-)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상승하게 된다.

임대인은 전세보다 보증부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보증부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시장구조에 따라 최근의 전세시장은 공급자시장으로 전환되어 움직이고 있다. 공급자시장이란 전세 공급물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하여

그림 VIII-9 지역별 전세수급지수, 2010. 1-2014. 5



주: 1) 전세수급지수는 전세수요에 비해 전세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100이면 '공급부족' 비중과 '공급충분' 비중이 같고,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함.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3) 기타 지방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를 포함함.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각 년도 매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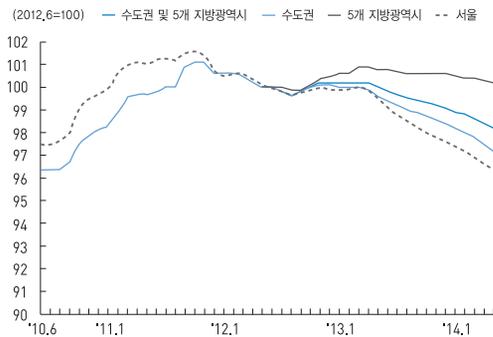
임대인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림 VIII-9]는 KB국민은행에서 계산한 전세수급지수를 보여준다. 전세수급지수는 '100 + (공급부족 비중 - 공급충분 비중)'으로 계산되는데, 이 값이 100을 초과하면 공급부족의 비중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VIII-9]를 보면, 전세수급지수는 지역별, 시점별로 등락을 있으나 100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2010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공급부족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VIII-10]은 지역별 월세가격지수를 보여준다. 201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주택구입의 매력이 감소하여 임차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와 보증부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가격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이후 주택매매가

격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저금리로 인해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임대인의 보증부월세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월세가격지수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VIII-6>은 2010년 이후의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배율과 소득 대비 주거비용 추이를 지역별로 보여준다. 2010년 이후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전세가격으로 인해 전국과 수도권 모두에서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배율이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전체 주택의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배율은 2010년 2.92에서 2013년 3.22로

그림 VIII-10 지역별 월세가격지수, 2010. 6-2014. 5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2) 5개 지방광역시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을 포함함.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http://www.r-one.co.kr>).

표 VIII-6 지역별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배율 및 전세 주거비 비율, 2010-2013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배율(배)		소득 대비 전세 주거비 비율(%)	
	주택 전체	아파트	주택 전체	아파트
전국				
2010	2.92	3.07	15.7	16.5
2011	3.09	3.33	16.9	18.2
2012	3.10	3.41	16.2	17.8
2013	3.22	3.58	14.0	15.6
수도권				
2010	3.41	3.73	18.3	20.1
2011	3.56	3.97	19.5	21.7
2012	3.55	3.84	18.5	20.1
2013	3.67	4.01	16.0	17.4

주: 1) 전세보증금은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조사」의 2013년 평균전세가격과 연도별 평균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2) 소득은 연간소득으로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전세가구 평균 경상소득을 이용하였음.
 3) 주거비용은 전세보증금에 가계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각 년도 매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증가하였으며, 아파트는 같은 기간 동안 3.07에서 3.58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격으로 인해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주택에서는 2010년 3.41에서 2013년 3.67로 증가하였으며, 아파트는 같은 기간 동안 3.73에서 4.01로 높아졌다.

한편,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거비용은 일종의 기회비용 개념으로서 전세보증금에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2011년까지 높아지다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계대출금리가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주택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4.0%이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 15.6%로 계산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 주택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6.0%, 아파트의 경우 17.4%로 계산된다.

그러나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내야하는 보증부월세로 주택을 임차한다면, 전세보증금과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차액에 월세이율을 곱한 금액을 월세로 내야하고 월세이율이 가계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전세보증금과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차액이 클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표 VIII-7>은 2013년을 기준으로 보증부월세 보증금이 전세보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표 VIII-6>에서 2013년 전국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4.0%이고, 수도권에서는 16.0%였다. 그런데 만일 전세보증금의 85%만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 1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월세로 내게 되면 전국 기준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16.8%로 높아지고, 전세보증금의 70%만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월세로 내게 되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9.5%로 높아진다. 동일한 가정 하에 수도권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각각 19.0%와 22.0%로 높아진다. 즉, 월세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상황 하에서 동일한 주택을 전세 대신 보증부월세로 임차하게 되면 전세보증금과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차이가 클수록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표 VIII-7 보증부월세 보증금 비율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13 (%)

	전국	수도권
전세보증금 100%	14.0	16.0
전세보증금 85% + 나머지 월세	16.8	19.0
전세보증금 70% + 나머지 월세	19.5	22.0

주: 1) <표 VIII-6>의 자료에 추가하여 보증부월세의 월세부분은 전국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정보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3년 수도권 및 5개 지방광역시(8개시도)의 연평균 월세이율을 적용하였으며,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의 연평균 월세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각 년도 매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http://www.r-one.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 전월세시장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그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세시장의 쇠퇴와 보증부월세시장의 확대로 대변되는 전월세시장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주택매매시장의 침체와 전월세시장에 적용되는 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전세가격의 빠른 증가는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고 월세이율과 시장금리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전월세시장에

서 전세 비중이 감소하고 보증부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라 소득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전세라는 한국의 독특한 임차유형은 주택매매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앞으로 주택매매가격이 과거와 같은 추세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전세는 점차적으로 보증부월세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임차가구는 과거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부월세시장의 확대가 장기적 추세라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03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박천규 (국토연구원)

- 청년층의 주택문제는 만혼 또는 비혼과 이에 따른 저출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 청년층 가구는 다른 연령층 가구보다 주택 시장 여건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주거의 질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청년층 가구의 주택구매력은 다른 연령층 가구의 구매력보다 상당히 낮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청년층 가구는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데 부모세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상대적으로 주택보유 의식이 낮고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취업난,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20-30대 청년층의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초혼연령이 크게 높아졌다. 1990년에 남성의 결혼연령은 평균 27.8세, 여성은 평균 24.8세였는데 2013년에는 남성 32.2세, 여성 29.6세로 각각 높아졌다. 이러한 청년층의 비혼 및 만혼은 저출산 문제로 이어졌으며, 출산을 저하는 다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마련 등 경제적 이유가 비혼 및 만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87.0%, 미혼여성의 86.3%가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을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들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미혼남성의 40.4%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이유 중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7%로 소득이 적어서라는 응답(11.2%)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년층의 비혼 및 만혼, 저출산 문제에 있어 주택문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젊은 남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혼인과 출산을 경험하는 연령대는 20-34세이다. 2010년 현재 20-34세의 청년층 인구는 1,029만 명으로 총인구의 21.4%



를 차지하고, 독립하여 가구를 형성한 청년층 가구는 274만 5천 가구로 총가구의 15.8%를 차지한다. 현재의 청년층은 학창시절인 1997년 IMF 금융위기와 세계화를 겪었고, 2000년대 초반 주택가격 급등 시기를 지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 주택시장 침체 시기를 겪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청년층은 주거문제에서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코호트(cohort)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층 가구의 주거특성과 주택문제를 짚어보고 청년층의 비혼과 만혼 및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청년층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순이다. 다른 연령층 가구와 비교해 볼 때, 청년층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48.3%로 50-64세의 44.2%와 65세 이상의 32.2%보다는 높았으나 35-49세의 61.9%에 비해서는 낮았다. 청년층 가구의

연립·다세대주택 거주 비중은 16.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다(표 VIII-8).

청년층 가구를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사회진입기에 속한 청년층 가구, 특히 미혼가구가 비교적 저렴한 도심의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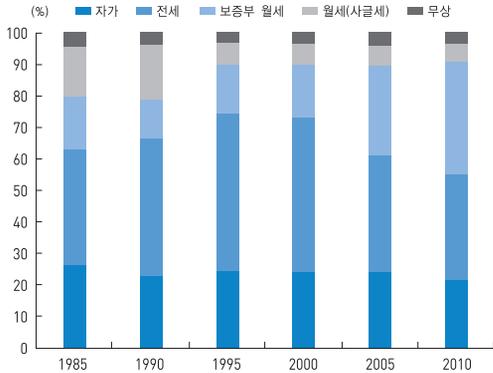
표 VIII-8 가구주 연령별 거주 주택유형, 2012

	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	기타	계
20-34세	23.9	16.4	48.3	11.4	100.0
배우자 있음	12.8	14.0	69.7	3.4	100.0
배우자 없음	38.2	19.5	20.6	21.7	100.0
35-49세	24.4	10.6	61.9	3.1	100.0
50-64세	41.6	11.0	44.2	3.2	100.0
65세 이상	59.6	6.6	32.2	1.6	100.0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2.

청년층 가구의 점유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와 전세의 비중은 줄고 보증부월세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1985년 청년층 가구 중 자가는 26.0%, 전세는 37.0%에 달했으나, 2010년 현재 자가는 21.2%, 전세는 33.4%로 감소하였다. 반면,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는 1985년 16.7%에서 2010년 현재 36.0%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VIII-11).

그림 VIII-11 청년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구성비율, 1985-2010



주: 1) 청년층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일반적으로 주거안정성은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높고 전세가 자가를 마련하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년층 가구에서 자가와 전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증부월세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저축 여력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향후 자산 축적을 통한 주거상향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청년층 가구 중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자가 가구와 전세가구는 각각 78.2%와 77.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증부월세가구는 63.8%, 월세 가구는 43.9%로 낮았다. 보증부월세가구와 월세가구는 평균 저축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의 주된 이유가 주택마련이라는 가구의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표 VIII-9).

표 VIII-9 청년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저축가구 비율과 월평균 저축액, 2010

	저축가구 비율 (%)	주택마련 목적 저축가구 비율 (%)	월평균 저축액 (만 원)
자가	78.2	11.8	101.5
전세	77.8	38.7	96.6
보증부월세	63.8	21.9	67.4
월세(사글세)	43.9	14.2	46.5
무상	79.7	30.8	86.7

주: 1) 청년층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가구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0.

2012년 현재 청년층 가구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56.8㎡로 35-49세의 76.3㎡, 50-64세의 84.1㎡, 65세 이상의 80.0㎡에 비해 작다. 이는 청년층 가구의 가구규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층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2.3명으로 35-49세의 3.6명과 50-64세의 3.1명에 비해 적으며, 이 때문에 1인당 주거면적은 청년층 가구가 오히려 넓다. 이들의 1인당 주거면적은 29.1㎡로 가구원수가 크게 늘어나는 35-49세

표 VIII-10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과 평균가구원수, 2006, 2012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평균 가구원수(명)	
	2006	2012	2006	2012	2006	2012
20-34세	51.4	56.8	23.2	29.1	2.6	2.3
배우자 있음	61.1	68.5	19.9	24.4	3.3	3.1
배우자 없음	37.8	41.5	27.7	35.1	1.5	1.3
35-49세	69.3	76.3	20.3	23.3	3.7	3.6
50-64세	73.8	84.1	27.7	30.4	3.1	3.1
65세 이상	68.5	80.0	36.3	43.6	2.3	2.2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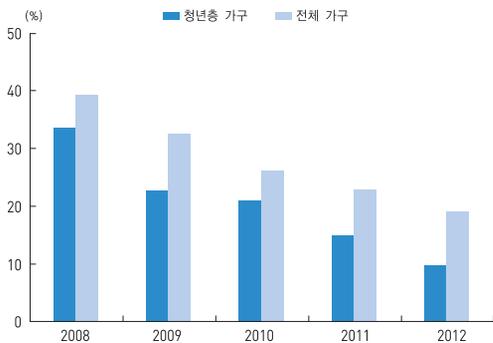
의 23.3㎡보다 더 넓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층 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에 비해 가구당 주거 면적은 넓지만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서 1인당 주거면적은 더 작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청년층 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가구당 주거면적 차이는 2006년 23.3㎡에서 2012년 27.0㎡로 늘어났다(표 VIII-10).

2012년 「주거실태조사」로 파악된 과거와 현재의 가구점유형태를 거주시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의 점유형태는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청년층 가구 중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한 가구의 비율은 2008년 33.5%에서 2012년 9.7%로 크게 감소하였다. 청년층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도 임차에서 자가 전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청년층 가구에서 이 비율이 더 크게 감소하여 전체 가구 대비 청년층 가구의 비율 차이

는 2008년 6.0%p에서 2012년 9.4%p로 확대되었다(그림 VIII-12). 이는 청년층 가구일수록 주택보유 의식이 약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으나 취업난, 고용불안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층 가구의 주택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향후 2년 내 이주계획을 살펴봐도 청년층 가구의 자가 이주희망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2년 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청년층 가구가 높은 편이지만, 희망 점유형태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35-49세의 경우 자가와 전세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43.2%와 45.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자가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청년층 가구는 자가보다 전세로 이주하려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으며, 보증부월세나 월세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표 VIII-11).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대 간 주택보유 의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측면도

그림 VIII-12 임차에서 자가 전환 가구 비율, 2008-2012



주: 1) 청년층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가구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VIII-11 가구주 연령별 2년내 이주 희망 가구 비율과 이주 희망 주택점유형태, 2012

이주 희망 가구비율	이주 희망 주택점유형태별 구성비율 (%)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20-34세	30.3	24.4	45.2	17.9	8.5	4.1
35-49세	18.0	43.2	45.3	8.6	1.1	1.8
50-64세	7.9	61.0	27.1	9.2	1.7	1.0
65세 이상	4.1	59.8	23.4	10.8	5.2	0.7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2.

있으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으로 표현되는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청년층 가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월세나 월세로의 이주는 청년층 가구의 자산형성 여력을 줄이고, 이는 주거상향이동 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먼저 전반적 주거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은 청년층 가구가 65세 이상의 고령층보다는 낮지만 35-64세의 중·장년층보다는 높은 편이다. 청년층 가구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7.2%로 35-49세의 6.4%, 50-64세의 5.3%에 비해 높다. 불만족 비율이 높은 주거환경 영역은 소음 23.3%, 주차여건 20.0%, 육아환경 16.0%, 의료이용 15.2% 등의 순이다(표 VIII-12).

표 VIII-12 가구주 연령별 주거환경 불만족 가구 비율, 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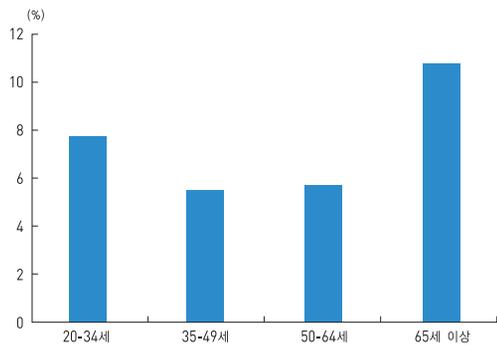
	전반적인 주거환경	주거환경 영역별				
		소음	주차 여건	육아 환경	의료시설 이용	방범 상태
20-34세	7.2	23.3	20.0	16.0	15.2	13.6
35-49세	6.4	20.0	18.3	11.8	13.0	9.4
50-64세	5.3	16.8	18.6	13.0	13.1	9.1
65세 이상	7.7	16.0	18.8	18.0	21.7	10.2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2.

주택시설, 주거면적, 사용방수를 대상으로 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65세 이

상을 제외하면 청년층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청년층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7%이며, 이는 35-49세의 5.5%와 50-64세의 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그림 VIII-13) 청년층 가구에서 주거환경 불만족도와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이들 가구의 주거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함을 의미한다.

그림 VIII-13 가구주 연령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2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2.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자금마련

주택과 같이 고가의 재화를 구매하는 데는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택가격과 소득, 보유한 자산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주택구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위순자산 대비 중위주택가격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3.62배, 비수도권의 경우 1.52배로 다른 연



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청년층 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중위주택 가격 비율은 수도권인 경우 7.88배, 비수도권의 경우 3.62배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서는 낮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VIII-13). 청년층 가구는 생애주기 특성상 점진적으로 소득이 늘고 자산형성이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인 경우 그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고 현재 청년층 가구의 다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이 비율이 크게 낮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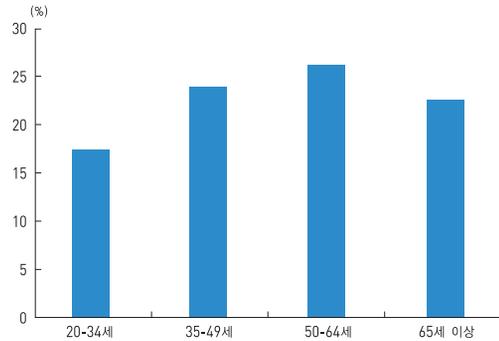
표 VIII-13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구매력, 2013

	중위 가구순자산 대비 중위 주택가격 비율		중위 연가구소득 대비 중위 주택가격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20-34세	3.62	1.52	7.88	3.62
35-49세	1.82	0.95	5.93	2.74
50-64세	1.33	0.87	5.53	2.96
65세 이상	1.74	1.65	13.96	8.69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3.

구매 가능한 주택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 중 '내 경제 형편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17.5%로 35-49세의 24.0%, 50-64세의 26.3%, 65세 이상의 22.7%에 비해 낮다(그림 VIII-14). 이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청년층 가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택마련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II-14 가구주 연령별 구매 가능 주택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2012



주: 1) 통계치는 해당 연령 가구주 중 '내 경제형편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가구주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2.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는 주택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모나 친지 등의 지원을 받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가구 중 부모, 친지, 자녀 등 친인척의 지원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29.0%에 달하여 35-49세의 15.9%, 50-64세의 13.7%, 65세 이상의 22.8%에 비해 크게 높다. 전세자금의 경우도 청년층 가구의 32.2%가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35-49세의 11.3%, 50-64세의 6.3%, 65세 이상의 9.0%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높다(표 VIII-1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택구입자금 출처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청년층 가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지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비율이 높다. 전세자금은 배우자 유무에 관계

없이 친인척의 지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에 의존하는 비율은 더 높다.

표 VIII-14 가구주 연령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출처, 2012 (%)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친인척	금융기관	친인척	금융기관
20-34세	29.0	50.1	32.2	21.5
배우자 있음	26.9	54.9	29.8	25.0
배우자 없음	39.8	25.6	40.0	10.1
35-49세	15.9	51.6	11.3	16.5
50-64세	13.7	40.0	6.3	7.7
65세 이상	22.8	19.7	9.0	5.2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2.

총 주택자금 중 친인척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청년층 가구의 친인척 지원금은 주택가격의 70.5%를 차지한다. 이는 35-49세의 54.0%, 50-64세의 64.8%보다는 높으며, 65세 이상의 85.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친인척의 지원을 받아 조달한 금액은 청년층 가구가 평균 1억 1,500만 원으로 35-49세의 1억 2,500만 원, 50-64세의 1억 2,200만 원보다 적으며, 65세 이상의 7,500만 원보다는 많다. 전세자금의 경우, 청년층 가구는 전세금의 63.9%를 친인척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35-49세의 39.0%, 50-64세의 45.3%보다 높은 편이며, 65세 이상의 79.3%보다는 낮은 편이다.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조달한 금액은 청년층 가구가 평균 7,800만 원으로 다른 연령층

보다 많다(표 VIII-15).

청년층 가구의 친인척을 통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조달 비중을 배우자 유무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의 지원금은 주택구입자금의 77.5%, 전세자금의 77.4%를 차지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보다 그 비중이 높다. 다만 주택구입 시 지원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더 많다.

표 VIII-15 가구주 연령별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의 친인척 이전금액과 비율, 2012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이전금액 (100만 원)	주택가격 대비 비율(%)	이전금액 (100만 원)	전세자금 대비 비율(%)
20-34세	115.2	70.5	78.0	63.9
배우자 있음	117.0	68.4	77.9	58.3
배우자 없음	108.0	77.5	78.3	77.4
35-49세	125.1	54.0	68.2	39.0
50-64세	121.8	64.8	52.6	45.3
65세 이상	75.2	85.0	34.7	79.3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2.

이상의 결과는 청년층 가구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모세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 전세 가구의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보다 부모세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부모세대의 자산이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이러한 세대 간 전이현상은 부모세대의 지원을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주거 및 자산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주택



자금 지원으로 인한 부모세대의 노후소득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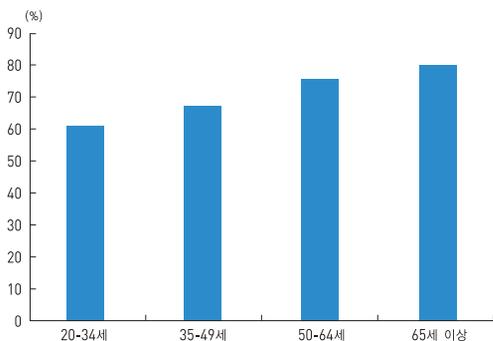
청년층의 주택보유와 주거지원에 대한 인식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주택보유 의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34세의 청년층 가구는 '자기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61.1%로 35-49세의 67.0%, 50-64세의 75.6%, 65세 이상의 79.9%에 비해 낮은 편이다(그림 VIII-15). 이는 현재의 청년층 가구가 사회 진입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의 구조 및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주택보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유 의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년층 가구의 주거이동이나 점유형태 선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 가구의 만혼 및 비혼 문제에 있어 주택문제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도 주거마련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미혼남성의 61.7%가 주택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45.2% 대비 16.5%p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20-24세 48.4%, 25-29세 67.4%, 30세-34세 73.6%, 35-44세 55.3%로 초혼연령에 근접할수록 이 비율이 높아진다. 미혼여성의 경우 주택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은 2012년에 58.2%로 2009년의 41.0% 대비 17.2%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24세 51.4%, 25-29세 64.1%, 30세-34세 59.8%, 35-44세 60.2%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인 25-29세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VIII-16). 따라서 청년층 가구의 만

그림 VIII-15 가구주 연령별 주택보유의식, 2012



주: 1) 주택보유의식은 해당 연령 가구주 중 '자기 집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가구주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2.

표 VIII-16 미혼남녀의 연령별 결혼지원 중 주택지원에 대한 선호 비율, 2012

	선호 비율 (%)	
	남성	여성
전체	61.7	58.2
20-24세	48.4	51.4
25-29세	67.4	64.1
30-34세	73.6	59.8
35-44세	55.3	60.2

주: 1) 20-44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12.

혼과 비혼 문제 해결에 있어 주거지원은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층 가구의 주거지원 필요여부 및 필요한 주거지원을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 중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은 66.6%로 35-49세의 59.9%, 50-64세의 41.8%, 65세 이상의 27.8%에 비해 높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 중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는 28.8%,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는 39.6%이다. 주택구입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65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으며, 전세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한편, 청년층 가구의 경우 전세자금 지원에 대

한 요구가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보다 높지만 다른 연령층의 경우 대체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표 VIII-17).

맺음말

청년층 가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성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며, 향후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의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주택자금 마련에 있어서 부모세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택보유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상의 분석결과만으로 청년층 가구의 주택 문제가 다른 세대에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청년층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표 VIII-17 가구주 연령별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필요한 주거지원정책, 2010 (%)

주거지원 정책의 필요성	필요한 주거지원정책						
	월세 보조	전세 자금 지원	구입 자금 지원	주택 개량 지원	장기 공공임대 공급	기타	
20-34세	66.6	8.4	39.6	28.8	1.3	12.4	9.4
35-49세	56.9	6.3	28.4	38.4	3.4	11.7	11.8
50-64세	41.8	9.2	23.3	32.5	7.6	16.7	10.7
65세 이상	27.8	16.4	18.4	19.0	17.4	19.6	9.2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0.



04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김희경 (동아대학교)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2년 약 1,400만대에서 2013년 약 1,940만 대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1,6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는 전체 등록차량의 약 70%에서 78%로 증가하였고, 승용차 중에서 중·대형차의 비중은 약 51%에서 80%로 높아졌다.
- 승용차의 대형화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정부의 교통 부문 SOC 지출은 40~60%가 도로에 투자되고 녹색교통 수단인 도시철도와 철도에는 20~25% 정도만 투자되고 있다.
- 정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버스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현대와 기아라는 두 글로벌 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입차의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수입차 소비는 차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차량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등록차량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등록차량대수는 약 1,940만 대로 머지않아 2,0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최근 들어 1,600cc 이상의 중·대형차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도로의 폭, 노후화된 건축물의 진출입구, 주차면의 크기 등 사회기반시설이 차량의 대형화에 맞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 이어서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설계기준 정비와 정책적 및 기술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배기가스는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는데, 최근 이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녹색도시운동이 시도되고 있다. 자동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 중의 하나로서 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 수요의 증가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어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녹색대체에너지의 개발,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승용차 대형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교통시설에 대한 SOC 투자와 대중교통수단별 재정보조 현황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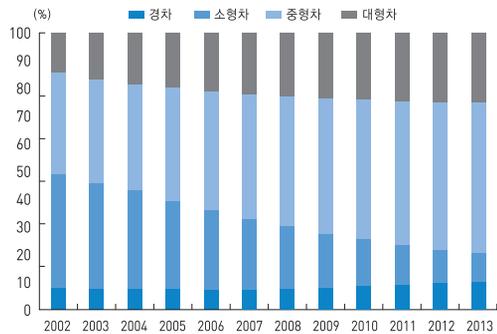
승용차의 증가와 대형화

[그림 VIII-16]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그 증감률을 보여준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2년 약 1,400만 대에서 2013년 약 1,940만 대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약 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인구로 보면 2.64명당 한 대인 셈이고, 세대수로 보면 1.07세대당 한 대에 해당한다. 등록차량의 차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차량의 증가는 승용차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에 승용차가 전체 차량의 약 70%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이보다 높아져 78%에 이르고 있다. 승용차의 증가율 또한 과거 10년 동안 전체 차량의 증가율보다 높은 연평균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승용차의 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엔진의 용량인데, 엔진 용량이 1,000cc 미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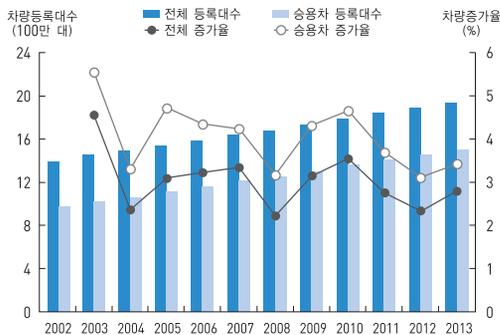
경차, 1,000-1,600cc 미만은 소형차, 1,600-2,000cc 미만은 중형차, 2,000cc 이상은 대형차로 분류된다. [그림 VIII-17]은 최근 10년 동안 승용차의 크기별 구성비율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형차의 비율이 높아지고 소형차의 비율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그림 VIII-17 승용차 배기량별 구성비율, 2002-2013



주: 1)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 소형차는 1,000-1,600cc 미만, 중형차는 1,600-2,000cc 미만, 대형차는 2,000cc 이상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년도.

그림 VIII-16 자동차 등록대수와 증가율, 2002-2013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년도.

중형차와 대형차가 전체 승용차의 약 51%(37%와 14%)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이 비중이 약 80%(54%와 26%)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소형차의 비중은 2002년 41%였던 것이 2013년에는 11%로 하락하였다. 도로에서 급격히 사라진 소형차의 자리를 중형차와 대형차가 차지한 것이다. 요약하면, 지난 10여 년간 전체 등록차량의 증가는 대부분 승용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증가한 승용차의 대부분은 중·대형차이다.



[그림 VIII-18]은 2014년 6월 현재 국내 생산차량 403종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량 770종을 대상으로 분석해 얻은 차량의 배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국산차량이나 수입차량에 관계없이 차량의 배기량이 커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최근 중·대형차 소비의 급속한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정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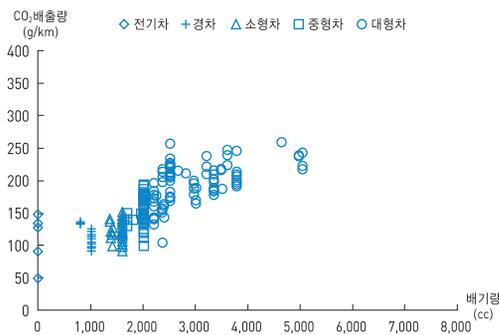
한국 정부는 2008년에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가비전의 하나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고 2009년 12월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여 녹색교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3~37% 감축할 것을 목표로 SOC 투자에서 도로 부문을 줄이고 철도 부문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대중교통 중심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KTX 중심 고밀복합 역세권 개발,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도입, Eco-Drive 활성화, 복합환승센터 설치, 자동차통행 제한지역 지정,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철도역 자전거 시설 확충, 자전거 도로망 설치 등과 같은 녹색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집행된 교통시설별 SOC 자본지출 현황과 대중교통수단별 재정보조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집행 노력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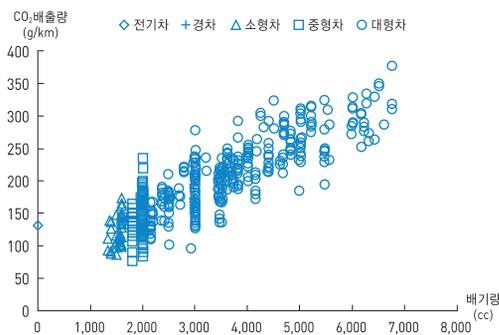
[그림 VIII-19]는 한국 정부의 수송 및 교통 부문 지출을 교통수단별로 보여준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 SOC 자본투자가 전 교통수단에 골고루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II-18 자동차 배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 2014

(1) 국내 생산차량



(2) 국내 판매 수입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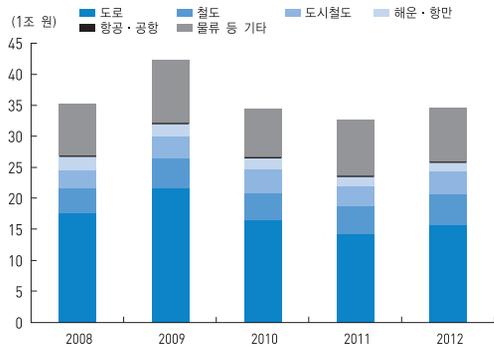


주: 1) 2014년 6월 기준 국내 생산차량 403종과 국내 판매 수입차량 770종을 대상으로 함.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http://bpms.kemco.or.kr/transport_2012/main/main.aspx).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약 42조 원이 지출되어 SOC 지출규모로는 가장 컸지만, 도로시설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다른 해에는 SOC 지출의 약 40~50%가 도로시설에 투입되었지만, 2009년에는 도로시설에만 약 61%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녹색교통 수단인 도시철도와 철도에 투입된 자본은 전체 SOC 지출의 20~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2008년 이래로 도시철도나 철도와 같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교통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그림 VIII-19 수송 및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지출,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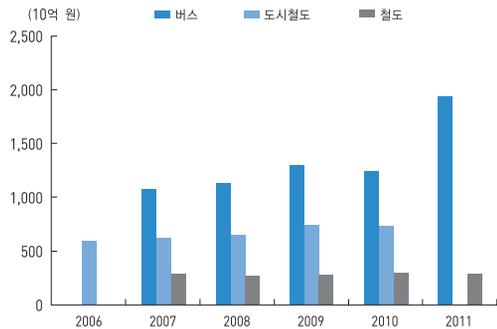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통계」, 각 년도.

한국 정부는 대중교통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정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VIII-20]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대중교통에 재정지원 방식으로 투

자한 금액을 버스, 도시철도, 철도의 세 가지 교통수단별로 보여준다.

그림 VIII-20 대중교통수단별 재정보조금, 2006-2011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재정보조의 복지효과 평가 및 혁신 방안」, 2013.

버스는 세 가지 대중교통수단 중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07년 1조 원을 넘어선 후 2011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조 원 수준에 근접해 있다.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버스회사 재정보조, 벽지노선 지원, 유가보조금 그리고 자동차취득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운임감면금액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지원금액은 2006년 약 6,000억 원에 그쳤으나 2010년에 약 7,300억 원 수준으로까지 증가하였다. 철도를 위한 재정지원에는 운임감면금액 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이 있는데, 세 가지 대중교통수단 중 가장 적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2014 Environment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X 환경

- | | | | |
|----|--------------|--------------------|-----|
| 01 |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72 |
| 02 | 미세먼지와 건강 | 권호장 단국대학교 | 281 |
| 03 |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88 |

01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중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은 1990-2011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2011년 현재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다.
- 한국은 2011년 현재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오존이나 소음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은 조금씩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국토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 전국 수준에서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은 이미 몇 년 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농어촌 지역의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9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이 사회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는 통념이 확산되면서 환경 문제는 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간사회는 광물, 에너지, 수자원 등 여러 가지 자연자원을 채굴·이용하고 또한 온실가스, 폐수, 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자연으로 배출함으로써 환경에 압력을 가한다(환경압력). 이 과정에서 대기나 하천이 오염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한다(환경상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염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진다(환경관리).

여기에서는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과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압력(오염물질 배출과 자연자원 이용으로 세분), 환경상태(생활환경과 생태환경으로 세분), 환경관리로 구분된 각 영역별 주요 지표를 이용하여 해당 영역의 변화 양상과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오염물질 배출

전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온실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하며, 현재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6개 기체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규정되어 있다. 6개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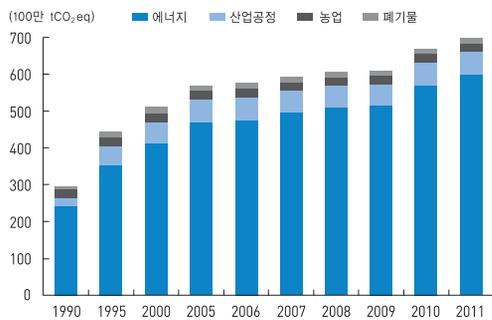


배출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온실효과의 80%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1990-2011년 동안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0년 약 3억 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에 6억 톤을 넘겼으며 2011년에는 약 6억 9,000만 톤까지 늘어났다. 2011년 현재 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인데,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다. 1990-2011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4.4%로(1990년 대비 135.9% 증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1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며, 동 기간 동안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8.1% 증가하였다(그림 IX-1).

그림 IX-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1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2014.

온실가스에 의해 야기되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것과는 달리 대기질은 특정 지역의 문제이며, 대기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산성비를 야기하는 황산화물은 정부의 저항 유 정책에 힘입어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산성화 물질이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증가 추세가 꺾이게 된다. 반면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IX-1).

표 IX-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0-2011

연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2000	490,761	1,122,844	61,719	706,915
2001	487,734	1,219,020	67,368	734,814
2002	474,084	1,242,265	65,100	741,647
2003	469,145	1,362,141	66,357	758,455
2004	446,804	1,377,526	62,491	797,240
2005	408,462	1,306,724	67,343	756,421
2006	446,488	1,274,969	64,795	794,158
2007	402,525	1,187,923	98,143	874,699
2008	417,980	1,045,104	110,797	857,856
2009	387,727	1,014,318	103,735	851,162
2010	401,741	1,062,210	116,808	866,358
2011	433,959	1,040,214	131,176	873,108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년도.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축산분뇨는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후에는 일정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생활하수의 1인당 1일 발생량은 1990년 287ℓ에서 2005년 350ℓ로 증가하였으며, 그 후 340-370ℓ 수준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폐수와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IX-2).

표 IX-2 하수,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1990-2011

연도	하수 발생량 (1,000m ³ /일)	1인당 하수발생량 (ℓ/일)	산업폐수 발생량 (1,000m ³ /일)	가축분뇨 발생량 (1,000m ³ /일)
1990	12,323	287	4,106	128
1995	14,976	332	8,741	168
2000	15,441	328	7,097	125
2005	16,833	350	7,991	138
2006	16,920	350	8,682	137
2007	16,745	345	9,181	154
2008	17,113	350	6,215	128
2009	16,681	339	5,352	136
2010	16,111	326	4,557	136
2011	18,661	375	4,622	129

주: 1) 2000년 산업폐수발생량은 2001년 자료임(2000년 자료 없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년도: 「하수도통계」, 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IX-3).

표 IX-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1995-2012

(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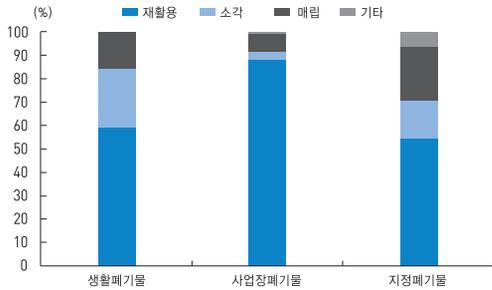
연도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생활	사업장	
1995	47,774	95,823	4,445
2000	46,438	180,230	7,615
2005	48,398	247,325	8,634
2006	48,844	270,084	10,026
2007	50,346	286,812	9,511
2008	52,072	307,224	9,594
2009	50,906	306,955	9,060
2010	49,159	315,995	9,488
2011	48,934	324,378	10,021
2012	48,990	333,019	12,501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2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59.1%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5.0%) 또는 매립(15.9%)된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활용(88.1%)되며, 소각(3.2%)되거나 매립(7.8%)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54.3%)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해 소각(16.4%) 또는 매립(23.0%)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림 IX-2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2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2년도)」, 2013;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2년도)」, 2013.

사업장에서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중에는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많이 있으며, 이 물질들은 대부분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대상 업종 및 화학물질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연간 약 5만 1,000톤의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은 꾸준히 낮아져서 2012년 현재 0.0323% 수준이다(표 IX-4).

표 IX-4 화학물질 배출량, 1999-2012

연도	화학물질 배출량 (1,000톤)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
1999	16	0.0480
2000	30	0.0520
2005	47	0.0420
2006	48	0.0405
2007	48	0.0373
2008	48	0.0368
2009	47	0.0348
2010	50	0.0350
2011	52	0.0347
2012	51	0.0323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각년도.

자연자원 이용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다.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1톤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 단위인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를 기준으로 1990년 약 9,319만 toe에서 2012년 약 2억 7,870만 toe로 199% 증가하였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동 기간 동안 157% 증가하였다. 전력 소비량은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990년 9만 4,383GWh에서 2012년 46만 6,593GWh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인당 전력 소비량 역시 동 기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IX-5). 2012년 현재 한국은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역시 OECD 평균인 4.28toe(2011년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IX-5 1차 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 1990-2012

연도	1차 에너지 소비량 (1,000toe)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	전력 소비량 (GWh)	1인당 전력 소비량 (KWh)
1990	93,192	2.17	94,383	2,202
1995	150,437	3.34	163,270	3,640
2000	192,887	4.10	239,535	5,067
2005	228,622	4.75	332,413	6,883
2006	233,372	4.82	348,719	7,191
2007	236,454	4.87	368,605	7,607
2008	240,752	4.92	385,070	7,922
2009	243,311	4.95	394,475	8,092
2010	263,805	5.34	434,160	8,883
2011	276,636	5.56	455,070	9,142
2012	278,698	5.57	466,593	9,33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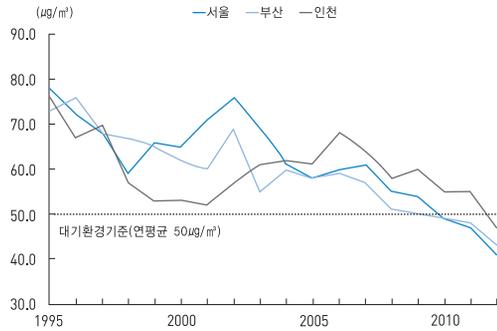


물은 에너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다. 에너지와 달리 물은 국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자원이다. 수자원 이용량은 1990-2007년 동안 34% 증가하였다.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에서 농업용수가 절반(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와 유지용수(하천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가 각각 23%, 공업용수가 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상수도를 통한 급수량은 1990년 1일 1,242만 m³에서 2012년 1,636만 m³로 약 32% 증가하였으며, 1인당 급수량은 1990년 1일 369ℓ에서 2012년 332ℓ로 10% 감소하였다.

생활환경

생활환경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다.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연료에 함유된 황성분에 의해 발생하는데, 1990년 이후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아황산가스 오염이 급속히 개선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02ppm 이하)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여러 도시들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그림 IX-3).

그림 IX-3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1995-2012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대표적인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평균 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기상여건에 따라 많이 좌우되어 해마다 변동 폭이 크다(표 IX-6).

표 IX-6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1995-2012

연도	시행지역 (곳)	발령일수 (일)	발령횟수 (회)	시간최고농도 (ppm)
1995	1	1	2	0.167
2000	21	17	52	0.177
2005	57	19	84	0.199
2006	58	22	52	0.192
2007	62	30	82	0.217
2008	63	32	101	0.203
2009	65	20	60	0.169
2010	63	25	83	0.181
2011	64	19	55	0.174
2012	65	29	66	0.163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1991년과 1994년에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등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와 환경오염사고 대응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이고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지정, 토지매수와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조성,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추진되었다.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BOD 환경정책은 화학적 오염물질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 건강과 생태적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 물'(BOD 3mg/l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고 훼손된 모든 하천의 25%를 생태(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수질조사가 이루어진 전국 114개 중권역 중 97개 중권역이 '좋은 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 '좋은 물' 목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X-7).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시간대(낮, 밤)에 따라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 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지난 20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도 않았다(그림 IX-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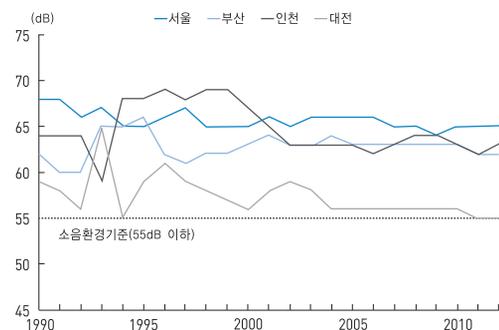
표 IX-7 하천 좋은물 달성률, 2013

대권역	중권역 하천수	좋은물 중권역 하천수	좋은물 달성률 (%)	2015년 달성률 목표기준(%)
전체	114	97	85.1	85.1
한강	28	23	82.1	82.1
낙동강	33	31	93.9	87.9
금강	22	15	68.2	72.7
영산강	31	28	90.3	93.5

주: 1) 좋은물 달성률은 전체 중권역 하천 중 BOD 3mg/L 이하인 '좋은물'에 해당하는 하천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14.

그림 IX-4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1990-2012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인 체감도 역시 객관적인 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은 반면,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다. 하지만 2010년과 2012년 동안 대기, 수질, 소음 문제에 대해서 모두 ‘좋음’의 비율은 높아지고 ‘나쁨’의 비율은 낮아짐으로써 전반적인 만족도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IX-8).

표 IX-8 거주지역 환경오염 상태에 대한 체감, 2010, 2012 (%)

연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2010	36.0	43.2	20.8	33.9	51.3	14.8	27.3	39.5	33.2
2012	40.1	43.1	16.8	36.9	51.3	11.8	29.1	39.3	31.7

주: 1) 설문문항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생태환경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임야나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도시용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그만큼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왔다. 정부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등으로 지정

하여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을 제한함으로써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36개소(354.5km²), 습지보호지역 32개소(336.6km²), 자연공원 78개소(7,858km²), 특정도서 183개소(10.8km²) 등 전 국토의 10% 정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표 IX-9). 또한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대암산 용늪, 우포늪, 순천만 갯벌, 한강밤섬 등 총 18개 지역이 람사르협약(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설악산, 백두산, 한라산 등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IX-9 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2

구분	지정현황
생태·경관보전지역	· 총 36개소, 354.5km ² · 환경부(9개소), 국토해양부(4개소), 시도 지정(23개소)
습지보호지역	· 총 32개소, 336.6km ² · 환경부(18개소), 국토해양부(11개소), 시도 지정(3개소)
특정도서	· 독도 등 183개소, 약 10.8km ²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 총 1개소, 진양호 수달서식지 약 26.1km ²
자연공원	· 총 78개소(면적 7,858km ²): 국립 20, 도립 31, 군립 27
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 1,626km ² (2009년 기준)
보전임지(산림보전지역)	· 49,414km ² (총 산림면적의 77%)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 379개소, 898.76km ²
백두대간 보호지역	· 6개도 32개 시군 2,634km ² (2005년 9월 고시) · 범위: 백두산-지리산(1,400km, 남한 684km) · 핵심구역(1,699km ²), 완충구역(935km ²)
개발제한구역	· 3,874km ²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3.



한편 「환경백서」에 따르면, 한국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수는 약 10만 종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문헌조사에 의해 밝혀진 생물종수는 동물 2만 1,785종, 식물 9,893종, 균류·지의류 4,103종, 원생생물 1,374종, 원핵생물 856종 등 총 3만 8,011종이다. 이는 비슷한 생물지리학적 조건을 가진 인접국가나 선진외국의 생물종수와 비교할 때 적은 편이지만, 자생생물종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관리

정부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직후인 1995년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전체 정부예산 대비 0.9%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환경부 예산의 3배 가까운 수준이었다(표 IX-10).

정부예산 대비 환경부 예산의 비율은 조금씩 이나마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2005년에 행정자치부의 수질보전지방양여금이 환경부 예산으로 편입되면서 외형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011년에는 처음으로 정부예산 대비 2% 수준을 넘었다. 하지만 환경분야 예산의 비중

은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예산과 환경분야 예산의 차이가 현재에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표 IX-10 환경예산, 1995-2012

연도	환경분야 예산		환경부 예산	
	금액 (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	금액 (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
1995	17,801	2.39	6,729	0.90
2000	30,581	2.44	13,023	1.04
2005	35,578	2.12	28,557	1.70
2006	33,978	1.94	29,992	1.71
2007	32,837	1.86	32,203	1.82
2008	36,568	1.87	35,514	1.82
2009	42,101	1.94	40,282	1.85
2010	46,740	2.07	44,832	1.98
2011	49,741	2.11	47,778	2.03
2012	51,496	2.07	49,897	2.01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환경예산의 증가와 관련해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상·하수도 보급률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1990년 78.4%에서 2010년에 95%를 넘어섰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1990년 32.9%에서 2010년에 90%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2012년 현재 특·광역시외의 보급률이 98.8%인 데에 비해 면지역의 보급률은 41.9%에 그치고 있다.



표 IX-11 지역별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2012

	상수도보급률 (%)	하수도보급률 (%)
전국	98.1	91.6
특·광역시	99.9	98.8
면지역	87.8	41.9

주: 1) 상수도 보급률 = 급수인구 ÷ 총인구 × 100. 급수인구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를 포함함.

2) 하수도 보급률 = 종하수처리수혜인구 ÷ 총인구 × 100.

출처: 환경부, 「2012 상수도통계」, 2013; 「2012 하수도통계」, 2013.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보여주는 것이 환경보호지출이다. 환경보호지출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비율은 대체로 2%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개로 구분되는 환경보호지출 영역 중에서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체 환경보호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IX-12). 폐수 영역은 공공부문이

표 IX-12 환경보호지출, 2001-2011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1	12,395	1.90	16.2	38.8	28.1	16.8
2002	13,579	1.88	17.0	39.3	27.2	16.5
2003	14,741	1.92	16.2	37.6	27.7	18.5
2004	16,087	1.95	16.5	36.4	27.8	19.2
2005	17,631	2.04	17.1	36.4	26.8	19.6
2006	19,479	2.14	18.9	36.3	25.6	19.2
2007	21,010	2.15	21.4	35.3	24.3	19.0
2008	22,033	2.15	21.5	35.2	24.6	18.7
2009	23,861	2.24	19.0	36.3	24.5	20.2
2010	23,983	2.04	19.8	34.1	26.1	20.1
2011	24,586	1.99	20.3	34.8	24.9	20.0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대부분의 지출을 담당하며, 대기 영역은 기업 부문이 상당 부분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다.



02

미세먼지와 건강

권호장 (단국대학교)

- 미세먼지는 직경이 1mm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0 μ m(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먼지를 말하며, 미세먼지 중에서 2.5 μ m보다 작은 크기의 먼지를 초미세 먼지라고 한다.
- 비산먼지를 제외할 때 미세먼지의 발생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는 13%이지만 수도권에서는 48%이다.
-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에 가장 낮아졌다가 2013년에 다시 높아졌다.
- 2000년 이후 황사 발생일수는 연간 최소 3일에서 최대 27일로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70만 명에 이르고, 가장 중요한 사인은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이다.

2014년은 미세먼지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했다. 중국 발 미세먼지 스모그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 특별한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세먼지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왔던 공기오염 물질이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설명한 뒤에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수준과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해마다 관측되는 황사 발생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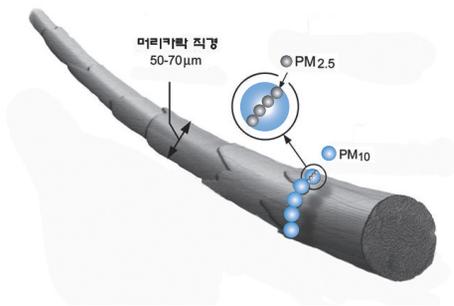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중에 가스가 아니고 고체나 액체와 같이 입자 형태인 것을 총칭해서 분진 또는 먼지라고 한다. 먼지 중 직경이 1mm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0 μ m(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을 미세먼지라고 한다. 영어로는 10 μ m보다 작은 먼지입자(particulate matter)라는 말을 줄여서 PM₁₀(피엠텐)이라고 한다. 미세먼지, 즉 PM₁₀ 중에서 크기가 2.5 μ m에서 10 μ m 사이로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은 주로 도로나 흙에서 날아온 먼지이고, 2.5 μ m보다 작은 입자(초미세먼지 또는 PM_{2.5}라고 함)들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의 굴뚝 연기와 같이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가스 형태의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



을 거쳐 이차적으로 생성된 먼지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크기를 머리카락 직경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작은 입자인지를 알 수 있다(그림 IX-5).

그림 IX-5 미세먼지(PM₁₀)와 초미세먼지(PM_{2.5})의 크기 비교



먼지의 독성은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100 μ m 가 넘는 먼지들은 대개 코 또는 인후부에서 걸러지고 20 μ m 정도의 먼지는 기관지에서 걸러진다. 이런 먼지들은 눈이나 코에 자극 증상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10 μ m 이하의 먼지부터 기도를 통해 폐 속까지 들어오고 2.5 μ m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폐 속에서 공기와 혈액이 만나는 허파꽂리까지 도달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성이 더욱 크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그 특성에 따라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고정오염원과 자동차나 이륜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한다.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방식에 따라 도로나 흙에서 비산되는

먼지와 연소에 의해 생기는 먼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에는 공장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나오는 먼지 외에 고기를 굽거나 노천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한 것도 있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별로 다르다. 전국적으로는 비산먼지를 제외한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3% 가량이 이동오염원에 의해 생기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이동오염원에 의한 발생량이 48%에 이르고 서울로 한정했을 때는 그 비중이 62%까지 높아진다. 즉 대도시일수록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표 IX-13 지역별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PM₁₀) 배출량, 2010

지역	배출량(톤/년)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율 (%)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	
전국	116,808	15,255	13.1
수도권	10,625	5,113	48.1
서울	1,938	1,191	61.5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함.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2013.

미세먼지 오염수준

최근 1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PM₁₀)와 초미세먼지(PM_{2.5}) 오염수준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0-60% 수준이다(그림 IX-6).



미세먼지 농도는 공기 세제곱미터(m³)당 먼지의 무게(마이크로그램)로 나타내는데, 2012년 서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각각 41 $\mu\text{g}/\text{m}^3$ 과 23 $\mu\text{g}/\text{m}^3$ 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 각각 44 $\mu\text{g}/\text{m}^3$ 과 25 $\mu\text{g}/\text{m}^3$ 으로 다시 올라갔다.

현재 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50 $\mu\text{g}/\text{m}^3$ 이다. [그림 IX-7]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연간기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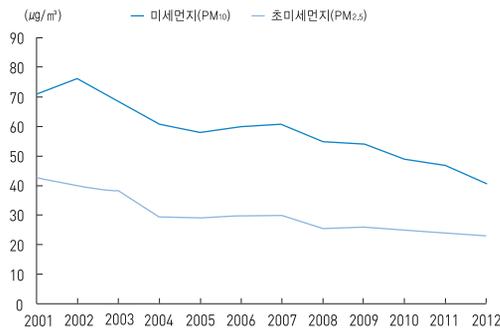
달성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곧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20 $\mu\text{g}/\text{m}^3$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mu\text{g}/\text{m}^3$ 을 넘으면 건강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 수준의 농도를 대기환경기준치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환경기준치보다 높은 잠정기준치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기준치는 잠정기준치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기준치 중 연간 평균농도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만성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급성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단기기준치(24시간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 단기기준치는 100 $\mu\text{g}/\text{m}^3$ 인데, 1년에 이 값을 초과하는 날이 3일 이내여야 단기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을 기준으로 1년 중 단기기준치 100 $\mu\text{g}/\text{m}^3$ 을 초과할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의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5일에 그쳤다. 여전히 대기환경기준(연간 3일 이하)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준치인 20 $\mu\text{g}/\text{m}^3$ 보다 낮아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공기 좋은 날'도 꾸준히 늘어나서 2012년에는

그림 IX-6 서울시 미세먼지(PM₁₀) 및 초미세먼지(PM_{2.5}) 농도, 2001-2012



출처: 서울특별시, 「2012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2013.

그림 IX-7 주요 도시 미세먼지(PM₁₀) 농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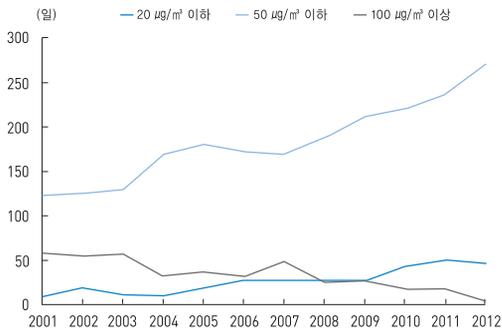


주: 1) 경기도는 5대 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의 평균값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2013.

48일에 이르렀다(그림 IX-8). 하지만 2013년 자료를 보면, $100\mu\text{g}/\text{m}^3$ 을 초과하는 날이 16일로 다시 증가하여 미세먼지 오염수준이 계속 개선될지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IX-8 미세먼지(PM₁₀) 대기환경기준치별 서울시 해당 일수, 200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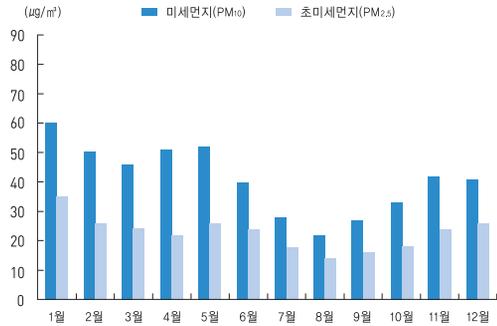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2012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2013.

미세먼지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 농도수준은 계절별로 큰 편차를 나타낸다. 미세먼지 농도를 계절별로 보면, 난방수요가 많은 겨울철과 황사가 불어오는 시기인 봄철에 높은 반면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에는 낮다(그림 IX-9). 따라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는 여름보다는 주로 겨울이나 봄에 자주 발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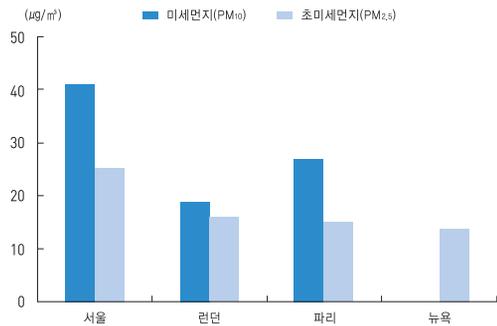
세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X-10). 비교시점인 2012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았던 해인 것을 감안하면 선진국 도시와의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IX-9 월별 서울시 미세먼지(PM₁₀) 및 초미세먼지(PM_{2.5}) 농도, 2012



출처: 서울특별시, 「2012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2013.

그림 IX-10 세계 주요 도시 미세먼지(PM₁₀) 및 초미세먼지(PM_{2.5}) 농도, 2012



출처: 환경부, 「우리건강을 지키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2014.

미세먼지 농도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2014년 예일대학의 환경법센터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가 있다. 환경성과지수는 환경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한다. 하나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각국의 초미세먼지(PM_{2.5}) 농도수준을 측정된 후에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산출한 국가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보



건기구의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국가별 초미세먼지 기준초과 정도이다. 이 두 가지 지표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초미세먼지 노출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지표인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점수는 해당 국가의 초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치가 세계보건기준치인 $10\mu\text{g}/\text{m}^3$ 이하일 때 100점으로 하고, 두 번째 지표인 초미세먼지 기준초과 점수는 $10\mu\text{g}/\text{m}^3$ 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100점으로 하여 국가별로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점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평가대상 178개 국가 중 171위에 머물렀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만점을 받았고 일본은 90.3점을 받아 128위를 차지하였다. 초미세먼지 기준초과 점수에서는 한국이

표 IX-14 주요 국가의 초미세먼지(PM_{2.5}) 오염수준, 2014

국가	PM _{2.5} 평균 농도		PM _{2.5} 기준초과지역 거주 인구 비율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한국	57.2	171	29.5	171
중국	2.4	178	0.0	174
일본	90.3	128	69.1	127
미국	100.0	1	94.2	97
영국	100.0	1	92.5	104
프랑스	96.0	119	77.3	118
독일	82.2	143	58.3	144
호주	100.0	1	100.0	1

출처: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http://www.epi.yale.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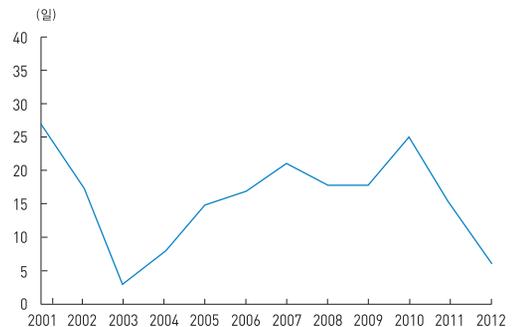
29.5점으로 171위에 머물렀고, 일본은 69.1점, 호주는 만점을 받았다. 중국은 두 항목 모두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X-14).

황사 발생현황

황사는 주로 봄철에 사막이나 황토지대에서 발원하여 발생한다. 황사는 토양에서 기원하는 먼지이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2.5-10 μm 로 상대적으로 크다. 2000년대 들어 황사 발생일수는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1년과 2010년에는 25일 이상 관측되었으나, 황사 발원지에 강설이 있었던 2003년에는 발생일수가 3일에 그쳤고 2012년에도 총 5차례의 황사가 발생하여 6일간 영향을 주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되는 약한 황사였다(그림 IX-11).

2012년에 한국에서 관측된 5차례의 황사는 모두 고비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그림 IX-11 황사 관측일수, 200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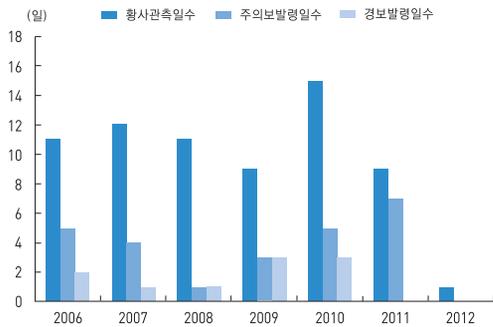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2013.



미세먼지(PM₁₀)의 시간당 최고 농도는 182-412 $\mu\text{g}/\text{m}^3$ 로 황사특보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황사특보는 미세먼지(PM₁₀) 농도를 기준으로 발령하는데, 1시간 평균농도가 400 $\mu\text{g}/\text{m}^3$ 보다 높게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1시간 평균농도가 800 $\mu\text{g}/\text{m}^3$ 보다 높게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황사특보 발령일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서울의 경우 2008년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1일 발령되었으며 2012년에는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그림 IX-12).

그림 IX-12 황사 관측일수 및 특보발령일수, 2006-2012



출처: 서울특별시, 「2012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201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다양한 건강피해가 발생한다. 심혈관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피해는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지만 어린이나 사

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병원을 방문할 만큼 심하지는 않더라도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은 없지만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피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망이나 입원과 같은 심각한 피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경미한 증상이나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피해를 본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단기적 오염에 의한 급성피해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때 발생하는 만성피해로 구분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급성 및 만성 피해들을 제시한 바 있다(표 IX-15).

표 IX-15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유형

구분	유형
급성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병원방문 (외래, 입원, 응급실 방문 등) ·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약물 사용 · 활동제한 · 결근 및 결석 · 급성증상(천명, 기침, 가래, 호흡기감염) · 생리적 변화(폐기능 저하 등)
만성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 · 만성호흡기질환 발생 · 폐기능의 만성적 저하 · 폐암 · 만성 심혈관질환 · 태아의 발달장애

출처: WHO, WHO Air quality guidelines: Global Update 2005, 2006.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370만 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주로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을 사인별로 분류해 보면, 허혈성심질환이 40%, 뇌졸중이 40%, 만성폐쇄성폐질환이 11%, 폐암이 6%를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급성하기도질환이 나머지 3%를 차지한다(표 IX-16). 이처럼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

분이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수 추정치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망자수는 약 1만 2,000명이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24명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특히 미세먼지 오염수준이 가장 낮은 호주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높다(표 IX-17).

표 IX-16 세계 대기오염 사망자의 사망원인 구성, 2012

사망원인	사망자수 (1,000명)	비율 (%)
심장질환	1,505	40.3
뇌졸중	1,485	39.8
만성폐질환	389	10.4
폐암	227	6.1
급성하기도감염	127	3.4
계	3,733	100.0

출처: WHO, *Burden of disease from Ambient Air Pollution for 2012, 2014.*

표 IX-17 주요 국가의 대기오염 사망자수, 2008

국가	사망자수 (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중국	470,649	35
한국	11,944	24
영국	13,604	21
미국	56,618	18
일본	23,253	17
독일	11,329	13
프랑스	7,535	12
호주	1,479	7

출처: 장하나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



03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세기 중반 이후 관찰된 지구온난화의 주요 동인은 인간 활동이다.
- 한반도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세기 말 평균기온이 5.9℃까지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보다 높게 나타나고, 폭염과 열대야 등도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변화로 인해 찌뜨가무시와 같은 감염병과 온열질환자 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기후변화는 농업과 어업에 종류별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벼 생산량 감소를 들 수 있고, 긍정적 영향으로는 기존 과수 북상, 아열대과수 재배, 참치류 어획량 증가 등이 있다.
- 지금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인류의 삶은 향후 20~30년간 기후변화 적응 노력과 행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관찰된 지구온난화의 주요 동인은 인류의 활동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위험과 피해는 줄이거나 피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찾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의 양상, 전망 및 영향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적응노력을 살펴본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는 건강, 물, 농업, 해양·수산, 자연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기후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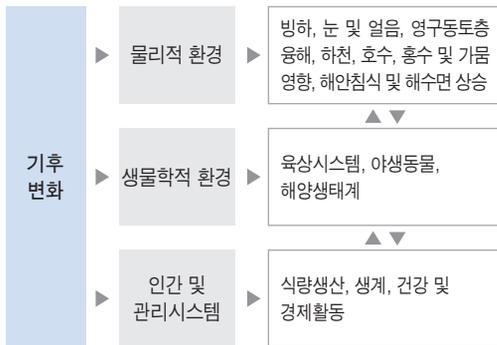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던 기후변화와 다르다.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이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6가지가 있고, 이들 중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지구온난화를 좌우한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40% 증가하였는데, 해양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0% 정도를 흡수하였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는 지구 복사열의 흡수를 높여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을 촉진한다.

기후변화는 빙하, 눈, 하천, 호수, 해양침식, 해수면 상승 등의 물리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들은 다시 야생동물, 산림, 해양산성화 등 생물학적 환경에 영향



을 주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는 건강, 식량생산, 경제활동 등 지구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인간 및 관리시스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IX-13).

그림 IX-13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계 및 인간계 영향



출처: IPCC, *Climate Change 2014: Impact,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2014.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영향과 위험은 지역과 계층, 그리고 준비정도에 따라 다르다. 유럽과 아시아, 북미 등에서 각기 다른 기후변화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 및 가뭄, 육상생태계 영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는 성, 계급, 인종, 연령, 경제적 능력, 장애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이 기후변화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제 지난 30년간(1981-2010년) 한반도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기후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평균기온과 강수량 및 해수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한반도의 평균기온

은 1.2℃ 상승(10년간 평균 0.41℃ 상승)하였으며, 남한(1.1℃)보다 북한(1.4℃)에서 더 크게 상승하였다.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각각 1.5℃와 1.7℃씩 상승하였다(표 IX-18). 지난 133년간(1880-2012년) 0.85℃ 상승한 지구 평균기온과 비교할 때 한반도의 기온이 더 많이 상승한 것이다. 강수량은 지난 30년간 78mm 증가(10년간 평균 25.87mm 증가)하였다. 해수면은 지난 43년간(1964-2006년) 약 8cm 높아졌는데, 이는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연간 1.9mm 상승한 수준이다.

표 IX-18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변화

	한반도	남한	북한
기온			
연평균			
평년값(℃)	11.0	12.5	8.5
변화 추세(℃/10년)	0.41 **	0.36 **	0.45 **
계절평균			
봄(3-5월)			
평년값(℃)	10.4	11.7	8.2
변화 추세(℃/10년)	0.25	0.23	0.28
여름(6-8월)			
평년값(℃)	22.7	23.6	21.2
변화 추세(℃/10년)	0.24	0.11	0.39
가을(9-11월)			
평년값(℃)	12.7	14.1	10.2
변화 추세(℃/10년)	0.49 **	0.43 **	0.52 **
겨울(12-2월)			
평년값(℃)	-1.7	0.6	-5.6
변화 추세(℃/10년)	0.56 *	0.57 *	0.47
강수량			
연평균			
평년값(mm)	1,162.2	1,307.7	919.7
변화 추세(mm/10년)	25.87	54.28	-25.19

주: 1) 평년값은 연간 일별 기후자료를 계절평균 또는 연평균으로 계산한 후 이를 30년간(1981-2010년)의 평균으로 산출한 값임.

2) 변화 추세는 30년간의 연별 또는 계절별 평균값들에 대한 선형회귀 직선의 기울기임. *은 95% 신뢰수준에서, **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나타냄.

출처: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12.

기후변화 전망

기후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4개의 대표 시나리오(RCP 2.6, 4.5, 6.0, 8.5)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RCP 8.5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중배출 상태를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한반도에서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배출될 경우(RCP 8.5), 21세기 후반(2081-2100년)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X-19). 그 결과 21세기 후반 평양은 현재 서귀포의 기온과 유사해지고 강원도 등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대부분과 황해도 연안까지 아열대 기후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IX-14). 폭염과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유지할 경우, 폭염일수는 현재 7.5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이고, 열대야는 21세기 후반에 40일 정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RCP 4.5), 21세기 후반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3℃로 예측되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RCP 8.5)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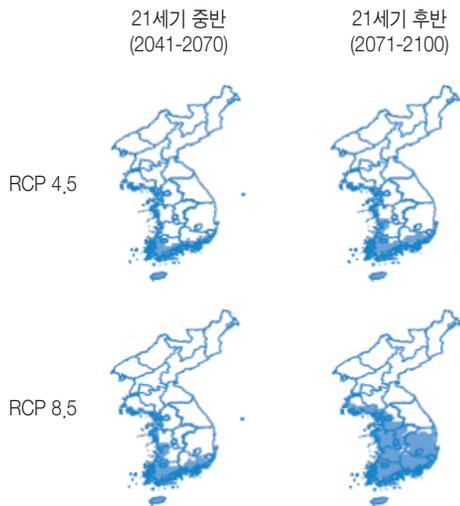
기온상승은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고, 폭염,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 발생도 1/3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표 IX-19).

표 IX-19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현재 기온값 (1986-2005)	21세기 중반 (2046-2065)	21세기 후반 (2081-2100)
평균기온(℃)	11.3	+ 3.3(+ 2.3)	+ 5.9(+ 3.0)
일최고기온(℃)	16.8	+ 3.3(+ 2.3)	+ 5.7(+ 2.9)
일최저기온(℃)	6.3	+ 3.5(+ 2.4)	+ 6.1(+ 3.2)
강수량(mm)	1144.5	+21.0%(+13.0%)	+18.0%(+20.0%)
폭염일수(일)	7.5	+ 7.4(+ 3.9)	+24.4(+ 6.1)
열대야일수(일)	2.6	+13.2(+ 6.6)	+37.2(+11.8)
호우일수(일)	2.2	+ 1.1(+ 0.9)	+ 0.8(+ 1.0)

주: 1)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치임. 괄호안의 수치는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치임.
출처: 기상청,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보도자료」, 2013.

그림 IX-14 한반도 아열대 기후구 변화 전망



출처: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12.



기후변화 영향

이 절에서는 한국(남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대책을 건강, 물, 농업, 해양·수산, 자연환경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

기후변화는 곤충 밀도, 알레르겐, 병원체 서식환경을 변화시켜 말라리아, 쯤쯤가무시, 천식, 알레르기 질환을 증가시킨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한여름 폭염은 호흡기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악화시켜 초과사망자를 증가시킨다.

쯤쯤가무시증은 2005년부터 급증하여 연평균 6,000명 이상 발병하고 2012년 현재는 8,604명이 발병하였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RCP 8.5), 21세기 후반에는 3만 6,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라리아 환자는 2007년의 2,227명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555명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라 말라리아 환자는 21세기 중반까지 증가하지만 21세기 후반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표 IX-20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병환자수 전망

	현재 (2012)	21세기 중반 (2050)	21세기 후반 (2100)
쯤쯤가무시증	8,604	30,646	36,522
말라리아	555	15,792	13,891

주: 1)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환경부, 「새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012.

다(표 IX-20). 이는 말라리아 발생 적정 기온대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매개체 질환 종합감시체계(Vector-Net)의 단계적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1,195명의 온열질환자 중 14명이 사망하였다. 폭염에 따른 초과사망자의 수는 21세기 후반에 전국적으로 3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IX-21). 폭염으로 인해 노인 등 취약인구가 영향을 받고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이들 중 상당수는 사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염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무더위 쉼터’나 ‘쿨링-포그시스템’(Cooling-fog System) 등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IX-21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초과사망자수 전망

	현재 (2013) 온열질환자수	21세기 중반 (2050s) 초과사망자수	21세기 후반 (2090s) 초과사망자수
전국	1,195	11,673	35,773
서울	54	2,149	6,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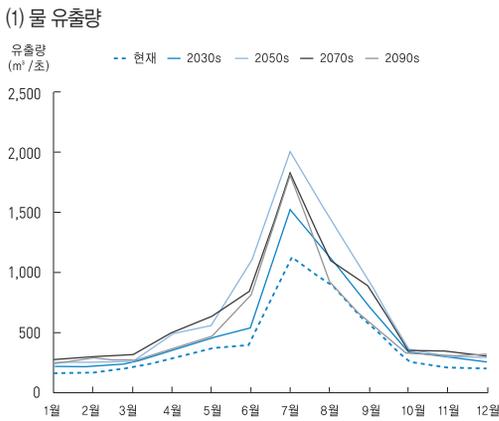
주: 1)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2013.
환경부, 「새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012.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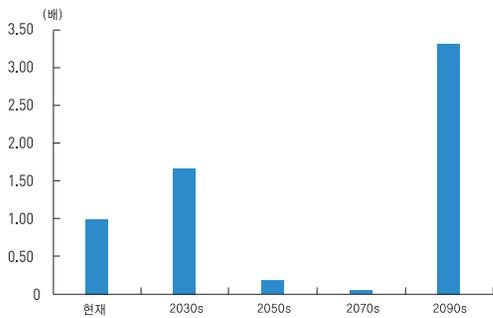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강우, 홍수 등 강우패턴의 비정상성이 증가하게 되면 홍수, 가뭄 등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RCP 8.5), 한강 유역의 연평균 물 유출량은 현재보다 최대 1.7배 증가하게 된다(그림 IX-15). 월평균 유출량은 현재보다 미래에 그 편차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여름철 유출량의 집중이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시간적 편중을 해결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

그림 IX-15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유출량 및 부족량 전망



(2) 현재 대비 물 부족량 비율



주: 1)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치임.
출처: 환경부, 「新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012.

구체적으로 한강 유역에 위치한 충주댐, 팔당댐, 소양강댐의 홍수량 변화를 살펴보면, 충주댐과 팔당댐의 경우 미래에 최고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표 IX-22). 한강대교 부근 등 일부 구간에서 홍수위가 제방고를 상회하여 홍수 위험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2011년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한 지역(한강대교 남단 등)에 제방여유고가 부족하거나 제방이 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IX-22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지점별 홍수량 변동계수 전망 (배)

		21세기 중반 (2041-2070)	21세기 후반 (2071-2100)
충주댐	100년 빈도 홍수	1.56	2.17
	200년 빈도 홍수	1.15	1.49
소양강댐	100년 빈도 홍수	1.12	1.13
	200년 빈도 홍수	1.11	1.12
팔당댐	100년 빈도 홍수	1.64	2.24
	200년 빈도 홍수	1.53	2.14

주: 1)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각 지점별로 빈도별 첨두홍수량에 대해 기준기간(2010년 이전) 대비 목표기간(2014-2070년, 2071-2100년) 모의홍수량(지속시간 48시간)의 변동계수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물안보 위기관리 정책 연구」, 2012.

농업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도 하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여기서는 벼, 고랭지 배추, 마늘, 사과, 포도, 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012년 현재 벼 생태형별 재배면적 비율은



조생종 11%, 중생종 4%, 중만생종 85%이다. 벼 생육조건을 현재와 똑같이 하고 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RCP 8.5), 21세기 후반에 한국의 벼 수량은 현재에 비해 조생종이 27%, 중생종이 34%, 그리고 중만생종이 3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가까운 미래인 2050년대에도 약 22-29% 정도의 벼 생산량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IX-23).

표 IX-23 기후변화에 따른 벼 수량성 전망

	(kg/ha)		
	현재 (1981-2010)	21세기 중반 (2050s)	21세기 후반(2090s)
조생종	6,860	5,356(78)	4,976(73)
중생종	7,439	5,271(71)	4,924(66)
중만생종	7,779	5,573(72)	4,927(63)

주: 1)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시기 조정, 시나리오 RCP 8.5의 기상조건 및 이산화탄소 변화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2) 괄호안의 수치는 현재 벼 수량성 대비 해당시기 벼 수량성의 비율임.
출처: 농촌진흥청, 「신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식량작물 환경적응 평가 및 적응지도 구축」, 2014.

고랭지 배추는 품질과 생산성이 기상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작물이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RCP 8.5),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기 적합한 지역은 21세기 중반에 현재의 7%, 21세기 후반에는 현재의 0.3%로 급격히 감소한다. 반면에, 난지형 마늘은 현재와 비교하여 21세기 중반에 4배, 21세기 후반에는 9배 정도 재배적지가 확대된다(표 IX-24).

벼, 고랭지 배추 등의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한 품종 및 재배기술 개선과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세계적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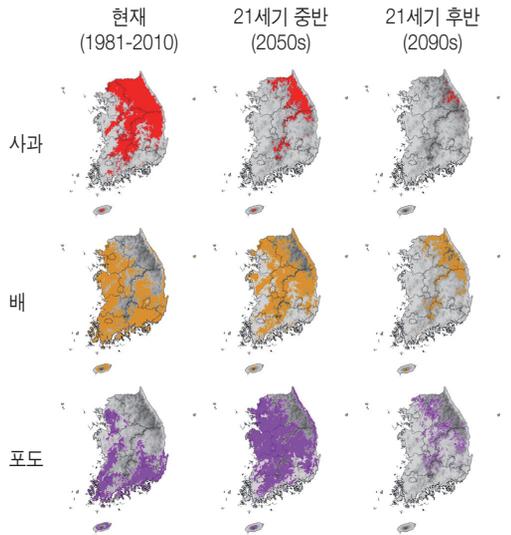
량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표 IX-24 기후변화에 따른 고랭지 배추 및 난지형 마늘 재배적지 변화 전망

	(ha)		
	현재 (1981-2010)	21세기 중반 (2050s)	21세기 후반 (2090s)
고랭지 배추	1,329,575	93,333 (7.0)	4,031 (0.3)
난지형 마늘	759,919	3,289,550 (433)	7,298,237 (960)

주: 1)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치임. 현재는 적온기준 재배적지 면적(최적지+적지)임. 고랭지 배추 재배적지 면적은 경위도, 고도, 지형 등은 반영하였으나 토지, 토성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배추 작기는 현재로 고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2) 괄호안의 수치는 현재 재배적지 면적 대비 해당 시기 재배적지 면적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신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012.

그림 IX-16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배, 포도의 재배적지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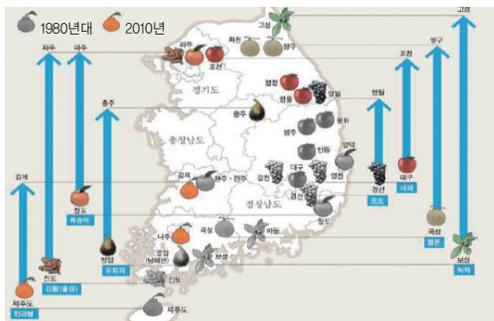


주: 1)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환경부, 「신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012.

사과의 기후적 재배적지는 2050년대까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21세기 후반에는 전 국토의 1%대로 급격히 감소한다. 배의 경우, 2050년대까지는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의 약 77%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21세기 후반에는 15%까지 재배적지가 감소한다. 포도의 재배적지는 현재 28%에서 21세기 중반 55%까지 증가하다가 21세기 후반에는 8% 수준으로 급감한다(그림 IX-16).

반면에 한라봉, 무화과, 녹차는 기존에 재배할 수 없었던 지역까지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구아바, 용과, 파파야 등 아열대 과일을 새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무화과는 충북 충주까지, 녹차는 강원 고성까지 북상하게 된다(그림 IX-17). 새로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 토양, 기상조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재배해야 할 최적 과수에 대한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작물재배선 북상에 따른 재배 작물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IX-17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과수의 작물재배선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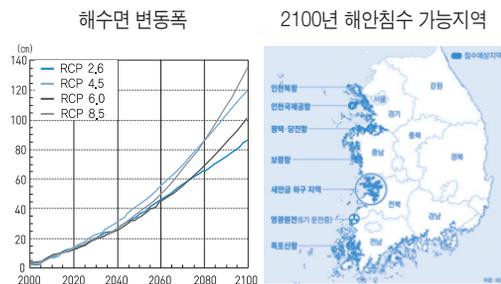
출처: 농촌진흥청, 「RDA 인테러뱅」 제17호, 2011.

해양·수산

해안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단지, 항만, 발전소, 관광 등 사회경제적 집중도도 높아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RCP 8.5), 21세기 말 해수면은 1.36m 상승할 수 있다(그림 IX-18). 해수면 상승(1.36m)과 100년 빈도 폭풍해일을 토대로 범람도를 산출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면, 도로와 철도는 전체 길이의 각각 6.2%와 5.8%, 국가산업단지 면적은 62.6%, 일반산업단지 면적은 32.7%, 공유수면 매립지 면적은 84.4%가 바닷물 범람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연안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100년경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은 4~6℃

그림 IX-18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폭과 해안침수 가능지역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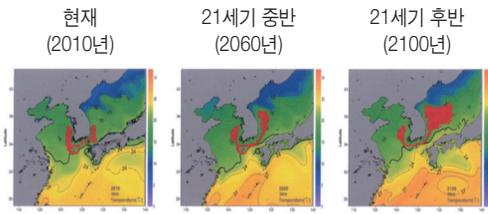
주: 1) 2100년경에 대한 해수면 상승치는 RCP 8.5 기준 0.85~1.39m로 나타남.

출처: 김태윤, 조광우, 2013, 「반경험시법을 이용한 미래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1호, pp. 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Ⅲ」, 2013.

상승하여 난류성 어류인 고등어, 참다랑어의 어획고가 증가하게 된다. 고등어 어장 분포에 대한 예측 결과, 2100년대에는 동해 전역으로 어장이 북상하는 대신 제주도 남부해역의 어장은 소멸하게 된다(그림 IX-19). 참치류(참다랑어 등) 어획량은 1982년 공식 어획량이 보고된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연근해 수산생물 분포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도 제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IX-19 기후변화에 따른 표층수온 분포 및 고등어 어장 분포 변화 전망



출처: 환경부, 「新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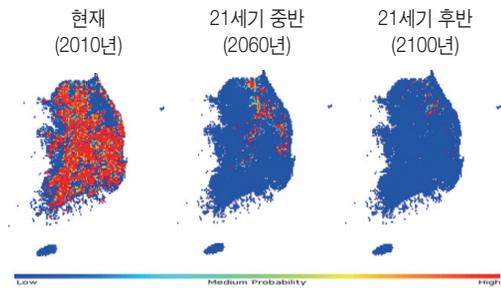
자연환경

기후변화에 따라 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등의 생육지는 점차 줄어들고 후박나무, 보리밥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난온대 활엽수림의 생육지는 북상하여 늘어나게 된다. 나비, 곤충, 야생동물 등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북상한다.

소나무의 경우 아고산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적응범위가 매우 넓은 수종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RCP 8.5), 소나무의 잠재생육지는 현재 전 국토의 49%에서 21세기 후반에 약 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잣나무의 경우도 21세기 후반 생육지 비중이 0.5% 수준으로 낮아진다(그림 IX-20).

그림 IX-20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서식지 변화 전망



출처: 환경부, 「新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012.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는 잠재생육지가 현재 193km²(전 국토의 0.1%)에서 21세기 후반 98km²(전 국토의 0.03%)로 줄어들어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후박나무의 잠재생육지는 21세기 후반 한반도 면적의 28.1%가 되어 현재보다 약 7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IX-25).

한국에 서식하는 조사대상 나비 158종 중에서 높은산세줄나비, 큰주홍부전나비, 대왕팔랑나비 등 30종은 2080년 무렵에 멸종될 위험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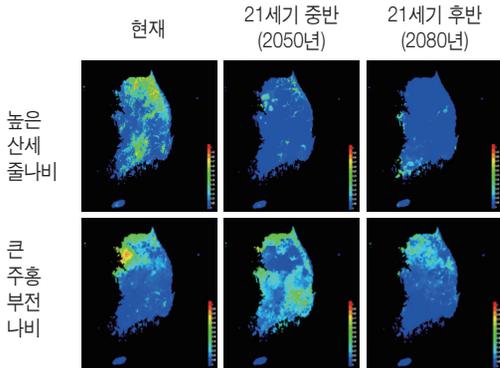
이러한 자연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기후변화 생물지표종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서식지 모형 개발과 서식적합성 지도(habitat suitability map)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X-25 기후변화에 따른 후박나무 및 구상나무 서식지 (잠재적 생육지) 변화 전망

	현재 (1971-2000)	21세기 중반 (2040-2069)	21세기 후반 (2070-2099)
후박나무	13,707 (4.1)	93,333 (27.2)	93,961 (28.1)
구상나무	193 (0.1)	254 (0.1)	98 (0.03)

주: 1)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치임.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국토면적 대비 서식지 면적의 비율임.
2) 구상나무의 잠재 생육지 면적은 21세기 중반 증가하였는데, 실제로는 분포하지 않는 Empty habitats(Tsuysma et al., 2011)가 예측되었기 때문임.
출처: 환경부, 「新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012.

그림 IX-21 기후변화에 따른 나비 서식지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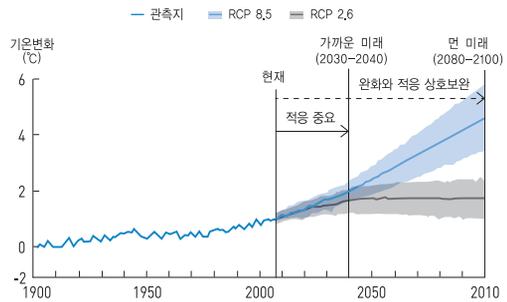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2013.

기후변화 적응노력

지금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멈춘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영향과 양상은 대부분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 데에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까운 미래(2030-2040년)에 우리의 삶은 기후변화 적응노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그림 IX-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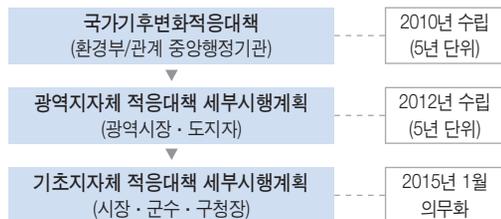
그림 IX-22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지구 연평균 기온 변화 전망과 적응의 중요성



주: 1) 기온변화는 1986-2005년 지구 연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할 때,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기준시점과 해당시점 간 기온 차이임.
출처: IPCC, Climate Change 2014: Impact,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2014.

한국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년)’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하였다(그림 IX-23).

그림 IX-23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체계 및 현황



주: 1) 광역지자체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2014년 상반기 완료 예정.



맺음말

기후변화는 건강, 물, 농업, 해양수산, 자연 환경 등에 여러 영향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벼와 고랭지 배추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대신에 구아바 등 아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고 한라봉, 후박나무, 참치 등의 서식지역은 확대된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인간, 산업, 자연환경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적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결합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후회복경로(climate-resilient path)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와 세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준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후회복경로를 구현하기 위한 시간과 잠재력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균형 있는 접근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Korean Social Trends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2014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 안전

- | | | | |
|----|--------------|-----------------|-----|
| 01 |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 이재열 서울대학교 | 300 |
| 02 |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09 |
| 03 |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 316 |

01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이재열 (서울대학교)

- 한국의 자연재해 피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불규칙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연재해의 피해는 여름철, 특히 8월에 집중하며 태풍과 호우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기술적이고 인위적인 재난에 따른 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높은 피해율을 보인다.
-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강력범죄에 따른 피해가 늘어났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었다.
-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사회적 위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연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재난을 자연재난이라고 칭하는데, 지진, 황사, 그리고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인위적 재난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체계의 오작동이나 인간적인 오류 혹은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는 여러 재난들이다. 대표적인 것들로 화재, 산업재해, 그리고 교통사고가 있다.

사회적 위험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체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범죄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과 양극화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자살도 늘었다.

이 글에서는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그리고 범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위험 문제를 다룬다.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사회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사회위험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계층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집단일수록 열악한 삶의 질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자연재난

해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는다. 특히 최근 들어서 봄부터 중국에서 오는 황사는 오염물질을 싣고 빈번하게 한반도를 뒤덮고 있어서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자연재해 중에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태풍과 강풍, 그리고 폭우이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과거 장마철에 집중하였던 강수량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또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게릴라성 및 국지성 호우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국의 기후가 아시아의 몬순형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 주된 자연현상이다. 지난 2006년의 태풍 에위니아, 2003년의 매미, 2002년의 루사 등은 모두 재산피해만 수조 원씩을 남긴 초대형 태풍이었다.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는 20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이 가장 컸다. 모두 6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270명의 사망자, 그리고 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그 후에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나 사망자와 이재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8년에는 637억 원의 재산피해에 11명의 사망실종자와 4,6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풍피해는 다시 늘어나서 2012년에는 1조 717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에 16명의 사망실종자,

그리고 1만 8,35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2013년에는 그 피해가 대폭 줄어들었다 (표 X-1).

표 X-1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사망실종자수 및 이재민수, 1995-2013

연도	재산피해액 (100만 원)	사망 실종자수	이재민수
1995	965,810	158	30,408
1996	751,723	77	18,686
1997	286,238	38	6,296
1998	2,114,882	384	30,308
1999	1,664,175	89	26,656
2000	62,859	49	3,665
2001	1,687,177	82	4,165
2002	8,237,608	270	71,204
2003	5,811,513	148	63,133
2004	1,529,258	14	30,446
2005	1,277,619	52	9,914
2006	2,343,238	63	2,883
2007	299,381	17	675
2008	69,774	11	4,627
2009	327,966	13	11,931
2010	451,236	14	76,110
2011	786,907	78	70,099
2012	1,071,774	16	18,356
2013	72,137	4	4,233

주: 1) 재산피해액은 2013년 가격 기준임.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 년도.

한국의 자연재해 피해는 거의 전적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이며, 일본이나 중국, 대만과는 달리 지진피해가 거의 없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화강암 암반 위에 얇게 덮여 있는 흩이 물을 많이 머금게 되면 산비탈 아래로 흘러가는 토류(土流)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산사태가 최근 빈번해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월별 자연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74건에 282명의 인명피해와 7조 3,19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 7월에 173명 (61.3%)의 인명피해와 2조 9,458억 원(40.2%)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연중 자연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7월 자연재해는 총 35건으로 호우 30건, 태풍 4건, 강풍 1건인데, 호우로 인한 피해는 인명 170명, 재산 2조 8,482억 원이고 태풍피해는 인명 3명, 재산 934억 원이며 강풍은 인명피해 없이 재산피해만 42억 원으로 집계된다.

표 X-2 최근 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건수와 인명 및 재산 피해, 2004-2013

	자연재해 발생건수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1억 원)
1월	13	-	544
2월	17	-	558
3월	15	1	7,702
4월	9	-	397
5월	3	-	9
6월	11	6	2,348
7월	35	173	29,458
8월	28	44	16,133
9월	14	32	9,176
10월	8	12	843
11월	7	-	121
12월	14	14	5,910
계	174	282	73,199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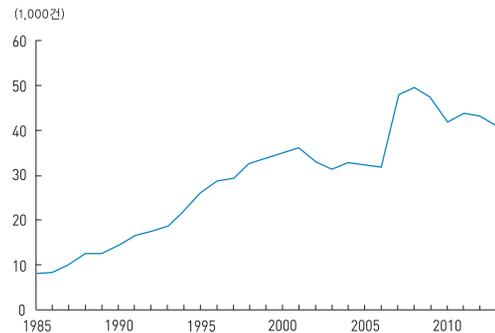
인위적 재난

화재

화재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인적 재난이다. 한국의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까지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1만 건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3만 건을 넘어섰으며, 등락은 있었지만 2007년에는 무려 4만 7,000건에 달하였다가 2010년 4만 1,863건, 2011년 4만 3,875건, 2012년 4만 3,249건, 2013년 4만 932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다(그림 X-1).

그림 X-1 화재 발생건수, 1985-2013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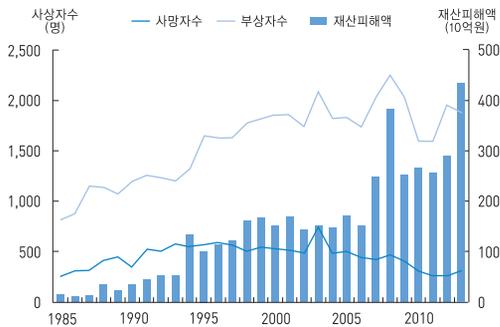
피해종류별로 보면 건축물화재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이 차량화재이며 그 외 선박이나 항공기 화재가 있다. 지난 10년간 화재는 대부분 건축물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축물 중에서도 일반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공동주택, 음식점 순이었다. 건축물화재로 인한 피해는 1997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화재 발생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화재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2000년 531명에서 2013년 30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부상자는 2008년 1,853명에서 2013년 1,877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000년 1,519억 원에서 2013년 4,344억 원으로 급증하였다(그림 X-2).

그림 X-2 화재 사상자수와 재산피해액, 1985-2013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 년도.

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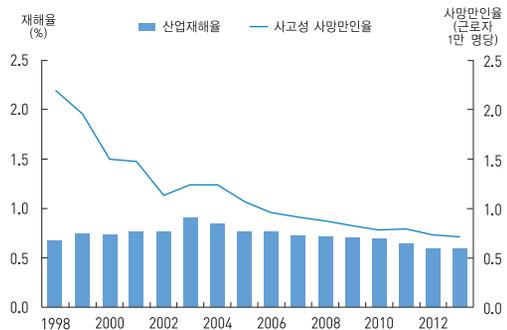
한국 사회가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의 아픔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활발하게 시행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부상, 직업병 등을 얻은 재해자도 늘어났다. 이러한 산업재해 건수와 재해자수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시행착오적 사고들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진 반면에,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를 의미하는 산업재해율은 0.68명에서 시작하여 계속 늘어났으나, 2003년 0.90명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0.59명까지 줄어들었다. 한편,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사망만인율은 1998년 2.19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0.71명으로 낮아졌다(그림 X-3).

2013년 산업재해 자료를 보면, 전체 재해자수는 9만 1,824명인데 재해유형별로는 넘어짐(19.2%), 끼임(16.0%), 떨어짐(15.0%), 절단·베임·찢림(8.4%), 물체에 맞음(8.2%) 등의 순으로 많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 중에서 47.3%가

그림 X-3 산업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 1998-2013



주: 1) 산업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2) 사고성 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근로자수) × 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건설업으로 가장 높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40.9%를 차지한다.

교통사고

최근 교통사고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1990년에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2,325명에 이르러 세계 1위 수준의 교통사고국이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망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1년을 정점으로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5,092명으로 최악의 시점에 비하면 그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부상자도 2000년 42만 6,984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3년에는 32만 8,711명으로 감소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로 보면, 1990년 33.1명을 정점으로 2000년에는 21.8명, 그리고 2012년에는 10.8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미국(10.7명), 폴란드(9.2명), 그리스(9.1명) 등과 더불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표 X-3).

표 X-3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970-2012

국가	1970	1980	1990	2000	2010	2012
한국	10.9	16.9	33.1	21.8	11.3	10.8
미국	25.8	22.5	17.9	14.9	10.7	10.7
폴란드	10.5	16.9	19.3	16.4	10.2	9.2
그리스	12.5	15.1	20.3	18.7	11.1	9.1
체코	20.2	12.2	12.5	14.5	7.6	7.1
벨기에	31.8	24.3	19.9	14.4	7.7	6.9
뉴질랜드	23.0	18.8	21.4	12.0	8.6	6.9
포르투갈	20.5	29.3	29.3	20.1	8.8	6.8
오스트리아	34.5	26.5	20.3	12.2	6.6	6.3
헝가리	15.8	15.2	23.4	11.7	7.4	6.1
이탈리아	20.5	16.4	12.8	12.4	6.8	6.0
캐나다	23.8	22.3	14.3	9.5	6.6	5.8
프랑스	32.5	25.4	19.8	13.7	6.4	5.8
호주	30.4	22.3	13.7	9.4	6.1	5.7
핀란드	22.9	11.5	13.0	7.7	5.1	4.7
독일	-	-	14.2	9.1	4.5	4.4
일본	21.0	9.7	11.8	8.2	4.5	4.1
스페인	16.2	17.5	23.3	14.4	5.4	4.1
네덜란드	24.6	14.2	9.2	7.3	3.9	3.9
아일랜드	18.3	16.6	13.6	11.0	4.7	3.5
덴마크	24.6	13.5	12.3	9.3	4.6	3.0
스웨덴	16.3	10.2	9.1	6.7	2.8	3.0
노르웨이	14.5	8.9	7.8	7.6	4.3	2.9
아이슬란드	9.8	11.0	9.5	11.5	2.5	2.8
영국	14.0	11.0	9.4	6.1	3.1	2.8

출처: International Traffic Forum,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4,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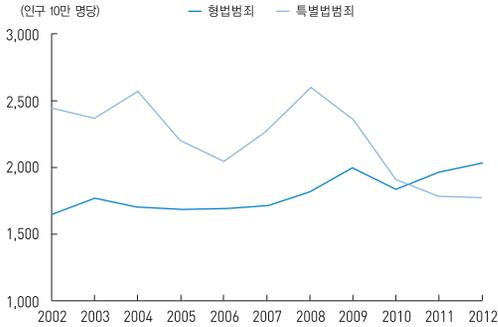
범죄

한국의 대도시는 야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범죄통계는 범죄에 대한 정의가 여러 차례 변화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기준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형법범죄는 통상 강력범이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을 포함하는데, 형법범죄 발생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039건의 형법범죄가 발생하였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별법범죄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X-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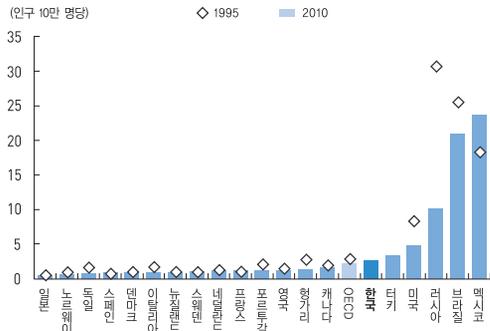
그림 X-4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2-2012



주: 1)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률은 2010년을 전후로 한국이 2.6건으로서 OECD 평균인 2.23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비교대상인 국가들 중 일본(0.4명), 독일(0.84명), 스웨덴(0.97명), 영국(1.17명)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4.75명), 브라질(21.02명), 멕시코(23.69명)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림 X-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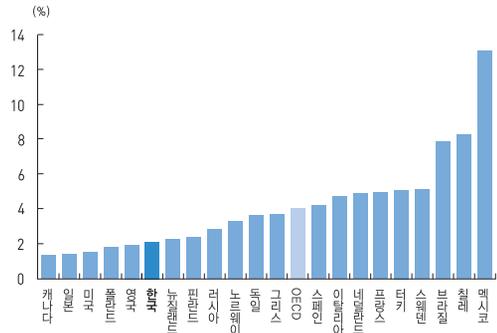
그림 X-5 주요 국가의 살인범죄율, 1995, 2010



주: 1) 살인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건수임.
출처: OECD,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2013.

2010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 범죄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피해율은 2.09%로 캐나다(1.31%), 일본(1.37%), 미국(1.50%) 등에 비해서는 높으나 OECD 평균인 4.01%에 비해 훨씬 낮다. 또한 멕시코(13.06%), 칠레(8.25%), 브라질(7.86%) 등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림 X-6).

그림 X-6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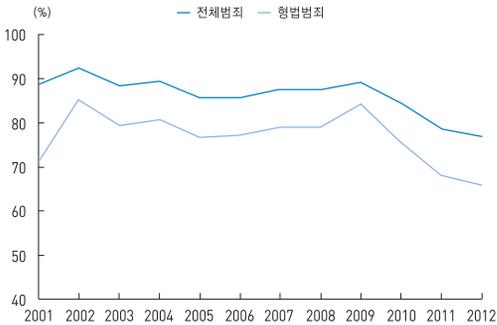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율은 각 국가의 전체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지난 12개월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2013.

전체 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검거건수의 비율인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1년에 88.8%이다가 2002년에 92.4%로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9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2003년 88.6%, 2004년 89.5%, 2005년 85.8%, 2006년 85.8% 등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검거율은 2007년 87.5%, 2008년 87.4%, 2009년 89.2%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2년 76.9%로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X-7).

그림 X-7 범죄검거율, 2001-2012



주: 1) 범죄검거율 = (범죄검거건수 ÷ 범죄발생건수) × 1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특별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1년 71.3%에서 2002년 85.3%로 검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03년 79.5%, 2004년 80.7%, 2005년 76.8%, 2006년 77.3%, 2007년 79.0%, 2008년 79.0% 등으로 큰 변화 없이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9년에는 84.2%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 65.9%로 지난 10년 동안 최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전체 범죄의 검거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잦아졌다. 공교육의 붕괴와 정보화로 인해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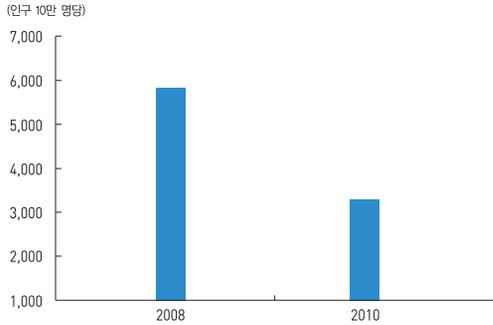
폭력이나 왕따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협박, 폭행, 집단따돌림 등)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09년 7.0%, 2010년 7.1%, 2011년 6.7%, 2012년 5.6%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초 피해 연령은 2009년 13세에서 2010년 12.9세, 2011년 11.4세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12세로 확인된다.

범죄피해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확인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범죄의 피해를 경험하는지를 가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조사 내용과 방법을 전면 개편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개인 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율은 조사대상 시점인 2008년 5,819명에서 2010년 3,315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8). 범죄유형별로 보면, 절도피해자는 같은 기간에 2,876명에서 1,534명으로 감소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도피해자는 262명에서 247명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253명에서 138명으로, 폭행과 상해 피해자는 384명에서 223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림 X-8 범죄피해율, 2008,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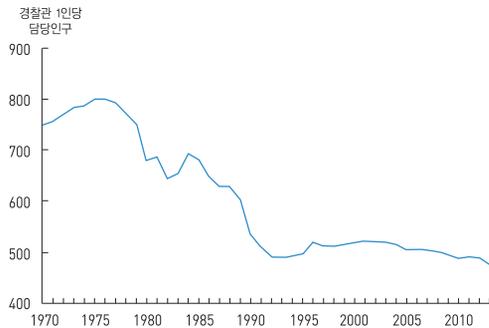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율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년도.

범죄방지 및 경찰력

경찰관수는 1970년 총 4만 3,003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0만 5,357명으로 지난 43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인구는 750명에서 477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9). 1998년 225개였던 전국의

그림 X-9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97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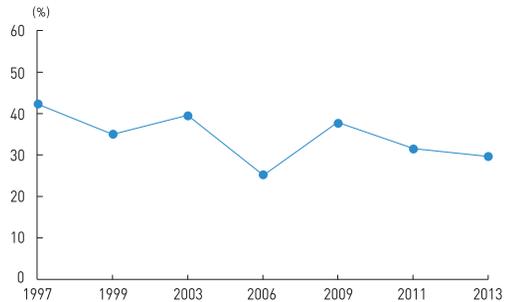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 추계인구 ÷ 경찰관 정원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통계」, 2011.

경찰서는 2013년 현재 250개가 되었고, 예산은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3조 4,800억 원에서 8조 1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경찰인력과 치안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증가하고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대하였음을 의미한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의 감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로 파악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통계는 비록 들쭉날쭉한 면이 있지만 199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7년에 42.4%가 두렵다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에는 29.7%만이 두렵다고 응답한 것이다(그림 X-10).

그림 X-10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97-2013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년도.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그리고 중·장년층보다는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층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의 경우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68~70%에 달해 두려움의 정도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40대 이상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40대 여성들의 58.1%, 50대 여성들의 50.3%, 60대 이상 여성들의 36.1%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유사한 경향이 2013년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지난 200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격년으로 시행되는 통계청의 안전 영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안전 수준에 대해 '매우

표 X-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2

	(%)		
	2008	2010	2012
전반적인 사회안전	8.2	11.3	13.5
자연재해	17.2	18.7	22.9
교통사고	5.7	8.0	9.2
화재	9.9	16.6	17.5
범죄위험(치안)	-	8.2	9.0

주: 1) 통계치는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안전하다'거나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8.2%, 2010년 11.3%, 2012년 13.5%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2010년에 처음 조사된 범죄·치안 분야에서도 '안전하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표 X-4).



02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년 1,000가구 중 34.9가구가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며, 인구 1,000명당 17.1명이 범죄피해를 당하였다. 지난 5년간 가구범죄와 개인범죄 피해율은 각각 24.6%와 55.6% 감소하였다.
- 2012년 인구 1,000명당 재산범죄 피해자는 27.1명이고 폭력범죄 피해자는 6.7명으로 재산범죄의 피해율이 폭력범죄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체 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 일반국민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범죄는 절도이지만,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전체 범죄 피해율의 감소는 절도피해율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 2012년에 발생한 범죄피해사건 중 22.1%만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범죄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신고율이 높지만, 성폭력범죄는 예외적으로 신고율이 매우 낮다.
-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 폭력범죄 피해자의 72.8%, 재산범죄 피해자의 41.5%가 범죄피해 이후 정신적인 후유증을 경험하였으며,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정신적인 후유증은 공황상태나 쇼크를 동반한 두려움과 무력감이나 자신감상실 등을 동반한 우울감이다.
- 단독주택가구, 집을 비워놓는 시간이 있는 가구, 집 자체나 주변에 방범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의 범죄피해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밤늦게 집에 귀가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범죄피해 위험성이 높다.

마약, 성매매와 같은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범죄자와 더불어 범죄의 중요한 당사자인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문제를 다루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잊혀지거나 주변적인 존재였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으로 고조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2005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에서도 피해자를 재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느 정도의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의 결과는 무엇이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보고인 공식적인 범죄통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서 기인한다.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사건만 집계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범죄들은 제외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식적인 범죄통계 집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범죄통계원표'는 196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여전히 범죄자와 범죄사건 중심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과 잠재적인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의 실태와 범죄피해와 관련된 취약



요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2년마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 경험과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파악하는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 2011년, 2013년에 수집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범죄피해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범죄로 인한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양식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범죄피해율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일반국민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피해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유형을 선별하여 조사하고 있다. 3차에 걸쳐 실시된 조사에서 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 및 부품 절도, 단순손괴, 자동차손괴, 강도, 주거침입강도, 단순주거침입, 협박, 폭행, 상해, 성폭력 등의 범죄들이 공통으로 조사된 바 있다. 여기서는 공통으로 조사된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범죄피해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나 자동차 관련 범죄와 같이 가구 단위로 피해를 입는 가구 범죄피해와 폭행, 상해 등과 같이 개인 단위로

피해를 입는 개인범죄피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X-5>를 보면, 조사대상 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에 1,000가구당 34.9가구가 주거침입절도, 강도, 자동차(부품)절도, 손괴 등의 가구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며, 1,000명당 17.1명이 소매치기, 폭행, 상해, 성폭력, 강도 등의 개인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가구범죄와 개인범죄 피해율 모두 감소하였다. 가구범죄 피해율은 2008년 1,000가구당 46.3가구에서 2012년

표 X-5 범죄유형별 피해자수, 피해건수 및 피해율, 2008-2012

범죄유형	피해자수(명)			피해건수(건)			피해율		
	2008	2010	2012	2008	2010	2012	2008	2010	2012
가구범죄	212	391	224	253	440	243	46.3	51.4	34.9
개인범죄	341	359	214	418	386	247	38.0	21.7	17.1
재산범죄	508	629	355	560	696	398	49.9	36.6	27.1
절도	417	490	254	459	528	278	41.5	27.9	18.8
손괴	73	102	83	75	115	87	6.8	6.5	6.8
주거침입	25	52	30	26	53	33	2.2	3.2	2.4
폭력범죄	104	121	79	111	131	92	10.5	7.8	6.7
협박/폭행/상해	51	42	55	53	45	63	5.4	2.8	4.7
성폭행	27	23	18	27	25	21	2.8	1.6	1.5
강도	31	60	6	31	61	8	2.9	3.6	0.6

주: 1) 조사대상 사례수는 2008년 4,710가구, 10,671명, 2010년 7,550가구, 16,557명, 2012년 6,330가구, 13,317명임.
 2) 가구범죄는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 주거침입기타, 자동차손괴, 자동차 및 부품절도 등을 포함함.
 3) 개인범죄는 협박, 폭행, 상해, 강도, 성폭력, 절도, 단순손괴 등을 포함함.
 4) 재산범죄는 절도(일반절도, 자동차 및 부품절도, 주거침입절도), 손괴(단순손괴, 주거침입손괴, 자동차손괴), 단순주거침입 등을 포함함.
 5) 폭력범죄는 협박/폭행/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침입강도) 등을 포함함.
 6) 범죄피해율 = (피해자수 ÷ 조사대상가구수 혹은 조사대상자수) × 1,000. 가구 혹은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고,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가구단위범죄가 포함된 경우에도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09, 2011, 2013.



34.9가구로 24.6%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에 개인범죄피해율은 인구 1,000명당 38.0명에서 17.1명으로 55.0% 감소하였다.

범죄피해는 또한 범죄로 인한 결과가 금전적 혹은 재산상의 손실인지 아니면 신체상의 침해인지에 따라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2년 인구 1,000명당 재산범죄 피해자는 27.1명이고 폭력범죄 피해자는 6.7명으로 재산범죄의 피해율이 폭력범죄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다(표 X-5). 전체 범죄피해에서 재산범죄는 81.2%, 폭력범죄는 1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5년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피해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피해율은 2008년 인구 1,000명당 49.9명에서 2012년 27.1명으로 45.7% 감소하였고, 이 기간 동안 폭력범죄 피해율은 인구 1,000명당 10.5명에서 6.7명으로 36.2% 감소하였다. 전체 범죄에서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83.5%에서 81.2%로 하락한 반면,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기간에 16.5%에서 18.8%로 높아졌다.

2012년 조사된 범죄유형 중 피해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로 인구 1,000명당 18.8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다음으로 손괴(6.8명), 협박·폭행·상해(4.7명), 주거침입(2.4명), 성폭행(1.5명), 강도(0.6명)등의 순이었다(표 X-5). 주거침입의 대부분이 절도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국민이 가장 많이 당하는 범죄피해

유형은 절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절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난 5년간 감소율이 매우 큰데 이것이 개인범죄와 재산범죄 피해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X-5〉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범죄유형에서 피해자수보다 피해건수가 더 많다. 이는 한 명의 피해자가 같은 기간 내에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를 ‘중복피해’라고 한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중복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2008년 0.6%, 2010년 0.4%, 2012년 0.4%로 감소하고 있다. 중복피해자가 당한 피해건수는 2008년에 전체 피해건수의 22.1%였으나 2012년에는 24.3%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2-3회 이상의 중복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범죄피해 신고

범죄피해자들은 다양한 사유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범죄사건만 집계하는 공식적인 범죄통계가 범죄피해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보고된 2012년 전체 범죄피해 중 22.1%만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재산범죄는 19.6%가 신고되었고 폭력범죄는 32.2%가



신고되어 폭력범죄의 신고율이 재산범죄보다 12.6%p 높다. 전체 6가지 범죄유형 중 협박·폭행·상해범죄의 신고율이 40.5%로 가장 높고,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가장 낮아 8.4%에 불과하였다(표 X-6). 대체로 범죄의 심각성이 클수록 신고율도 높으나 성폭력범죄는 예외적으로 낮다.

표 X-6 범죄유형별 피해신고율, 2008-2012 (%)

범죄유형	2008	2010	2012
전체범죄	17.9	22.4	22.1
재산범죄	17.9	22.0	19.6
절도	17.4	21.1	22.1
손괴	21.3	22.2	15.3
주거침입	15.4	30.6	11.9
폭력범죄	18.0	24.4	32.2
협박/폭행/상해	18.9	33.4	40.5
성폭행	11.1	27.0	8.4
강도	22.6	15.5	29.8

주: 1) 범죄피해 신고율 = (경찰에 신고한 건수 ÷ 피해건수) × 100.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09, 2011, 2013.

범죄피해 신고율은 20%대로 낮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5년 동안 그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폭력범죄의 신고율은 2008년 18.0%에서 2010년 24.4%, 2012년 32.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범죄와 손괴범죄의 신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2008년 11.1%에서 2010년 27.0%로 높아졌으나 2012년에는 8.4%로 급락하였다.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범죄의 경우 첫째 이유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고, 둘째 이유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8.1%로 가장 많다. 재산범죄의 경우 첫째에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5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둘째에서는 폭력범죄와 달리 ‘증거가 없었기 때문’(3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표 X-7).

표 X-7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 2008-2012 (%)

미신고 이유	폭력범죄		재산범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52.8	13.3	56.1	15.2
다른 방식으로 처리,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9.7	18.1	3.9	11.2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8.5	14.5	22.0	33.5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5.2	8.5	7.5	15.3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4.8	10.5	6.5	15.4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7.7	8.5	1.1	1.9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5.2	11.7	0.4	1.5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2.8	10.5	0.7	2.4
기타	3.2	4.4	1.1	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8년, 2010년, 2012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09, 2011,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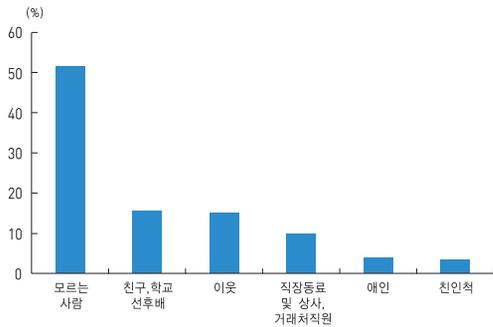
범죄피해의 특성과 결과

재산범죄와 달리 폭력범죄는 대면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



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의미있는 변수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인 경우가 51.5%이고 알고 지내던 사람은 48.5%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알고 있던 사람인 경우는 다시 친인척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친인척인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 피해의 3.5%이고 친인척 이외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인 경우가 44.9%이다(그림 X-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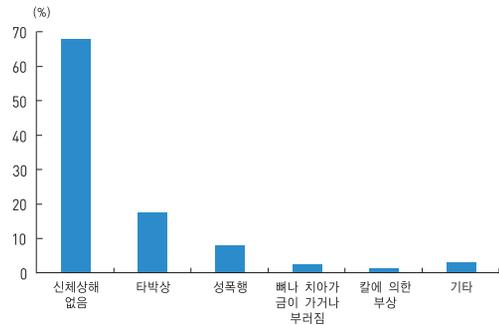
그림 X-11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08-2012



주: 1) 2008년, 2010년, 2012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09, 2011, 2013.

범죄피해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먼저 폭력범죄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폭력범죄 사건 중 가시적인 신체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32.3%에 불과하다. 폭력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신체피해가 없는 사건이 67.7%나 되는 것은 폭력범죄에 미수

그림 X-12 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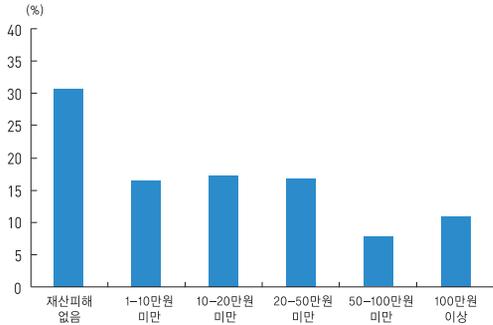
주: 1) 2008년, 2010년, 2012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09, 2011, 2013.

사건, 신체적인 공격 없이 폭행의 위협만 가한 사건, 말로 협박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신체피해로는 타박상이 1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성폭행 피해(8.1%)이다(그림 X-12).

다음으로 절도, 손괴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발생률과 피해규모를 살펴보자. 전체 재산범죄 사건 중 69.3%가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재산피해 발생사건의 평균 피해액은 현금과 물품을 합하여 64만 8,000원이다. 피해규모별로는 10만 원 미만이 16.5%, 10-20만 원 미만이 17.3%, 20-50만 원 미만이 16.8%로 50만 원 미만이 전체 재산범죄 사건의 50.6%, 재산피해가 있는 사건의 73.0%를 차지한다(그림 X-13).

범죄피해의 결과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나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혹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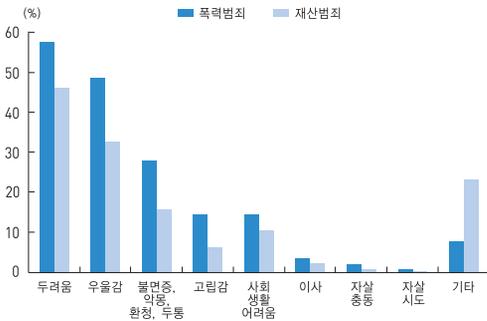
그림 X-13 재산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액, 2008-2012



주: 1) 2008년, 2010년, 2012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2) 재산피해액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분포하며, 평균 피해액은 648,000원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09, 2011,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1,987명 중 46.8%가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피해자의 72.8%가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였으며, 이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재산범죄 피해자도 41.5%가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X-14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2008-2012



주: 1) 2008년, 2010년, 2012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09, 2011, 2013.

폭력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 공히 범죄피해 이후 공황상태나 쇼크를 동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을 동반한 우울감, 불면증·환청·두통 등의 순이다. 폭력범죄 피해자는 가장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도 2.9%에 이른다(그림 X-14).

범죄피해 취약요인

범죄피해를 당하는 가구나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가구나 개인에 비해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이나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양식,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 등이 범죄피해의 취약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피해 취약요인을 밝히는 것은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가구범죄피해와 개인범죄피해로 나누어 이들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거침입 강도 및 절도, 주거침입손괴, 자동차(부품) 절도 및 손괴 등과 같은 가구범죄피해와 관련된 취약요인은 주택유형, 가구주변의 방범수준, 집을 비우는 시간 등이다. 범죄피해율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오피스텔 등의 거주자(3.9%),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3.7%)의 순이며, 아



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1.8%로 가장 낮다. 가구 자체나 주변의 방범수준도 가구범죄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관이나 창문의 이중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 출입카드, 도난경보시스템, 경비원, 집주변의 CCTV와 조명시설 등 방범설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성은 낮아진다. 평소 집을 비우는 시간도 가구의 범죄피해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을 거의 비우지 않는 가구에 비해 집을 비워놓는 시간이 긴 가구의 경우 범죄피해 위험성이 높다(표 X-8).

표 X-8 가구범죄 취약요인별 범죄피해율, 2012 (%)

취약요인	범죄피해율
주택유형	
단독주택	4.7
아파트	1.8
연립/다세대주택	3.7
기타	3.9
가구주변 방범수준	
없음	4.4
1-2개	4.4
3-4개	3.8
5-6개	2.1
7-8개	1.1
집 비우는 시간	
거의 비우지 않음	1.9
4시간 미만	3.8
4-8시간 미만	3.9
8-12시간 미만	3.2
12시간 이상	3.0

주: 1) 범죄피해율 = (피해가구수 ÷ 조사대상가구수) × 100.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13.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과 같은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늦은 귀가빈도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위험성은 높아진다. 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요인 중 밤늦게 귀가하는 빈도도 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밤늦게 귀가하는 빈도가 높은 경우 범죄피해 위험성이 높다(표 X-9).

표 X-9 개인범죄 취약요인별 범죄피해율, 2012 (%)

취약요인	범죄피해율
연령	
10대	3.4
20대	2.1
30대	2.2
40대	2.0
50대	1.6
60대 이상	0.4
교육수준	
무학	0.5
초등학교	0.5
중학교	1.2
고등학교	1.8
전문대	2.1
대학교	2.2
대학원 이상	3.9
늦은 귀가 빈도	
거의 매일	2.5
일주일에 2-3일	2.8
일주일에 하루	1.8
보름에 하루	2.2
한 달에 하루	1.0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0

주: 1) 범죄피해율 = (피해자수 ÷ 조사대상자수) × 100.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13.



03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은 주로 많은 승객을 운송하는 여객선, 열차, 항공기, 지하철 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발생했다.
- 한국에서 대형 인적재난은 200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다.
- 2000년대 들어 발생한 일부 재난들은 물리적 피해보다는 심리적 피해가 훨씬 컸고 이로 인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세월호 사고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고는 바다에서 발생한 해난사고였지만,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을 무시했던 우리의 관행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인적재난의 추이를 살펴보고 각 재난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안전수준과 재난 대처능력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성찰을 해보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는 인적재난의 일종이다. 인적재난이란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재난을 의미한다.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법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기본법이 개정·시행(2014년)되기 이전에는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했다. 법적으로 사회적 재난은 발전소, 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마비와 각종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일컫는다. 개정된 기본법은 기존의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통합하여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사회재난 가운데 하나인 인적재난을 가용한 통계자료와 사건기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형 인적재난 통계와 사례

한국에서 인적재난에 관한 통계는 소방방재청이 집계, 작성하여 「재난연감」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고 있다. 인적



재난 통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통계관리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인적재난 통계는 보고통계이자 국가승인통계이지만 지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이다. 작성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고 있는 23종의 인적재난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항공기, 승강기, 유·도선, 광산, 가스, 환경오염, 폭발, 공간 내 시설, 보일러, 해난사고, 전기(감전) 등 15종의 통계를 소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 등 8종의 통계를 소관하고 있다.

「재난연감」이 1996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통계자료를 찾기는 힘들지만, 인적재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표 X-10>은 손해보험협회가 2006년에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1950년 이후 5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인적재난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에서 일어난 대형 인적재난 중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남긴 재난은 1995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중에는 특히 세월호 사고와 같은 선박 사고가 많은 편인데, 이는 대형 선박의 경우 최고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싣고 운항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승객을 운송하는 열차, 항공기, 지하철 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대형 인적재난이 발생했다.

표 X-10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1950-2006

연도	사고	인명피해(명)
붕괴사고		
1995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508
선박사고		
1951	부산 여객선 제5편리호 침몰	80
1953	다대포 여객선 창경호 침몰	250
1956	삼천포 여객선 대신호 화재	55
1963	영암 가지도 여객선 연호 침몰	138
1967	부산-여수 여객선 한일호 침몰	89
1970	제주-부산 연락선 남영호 침몰	323
1976	동해 어부 조난	322
1993	서해 페리호 침몰	294
항공사고		
1982	제주 군용기 추락	53
1983	KAL 007 피격(소련)	269
1987	KAL 858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	151
1989	KAL 803 트리폴리공항에서 추락	80
1993	목포 운거산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66
1997	KAL 801 괌에서 추락	229
2002	김해공항 중국항공기 추락	129
화재사고		
1954	부산진 대화재	134
1960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62
1962	인천항만 화재	74
1971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163
1972	서울 종로구 시민회관 화재	53
1974	서울 대왕코너 2차 화재	88
1999	인천 호프집 화재	56
2003	대구 지하철 방화	192
열차사고		
1951	전남 쌍봉 열차 탈선	118
1951	순천-여수 열차 탈선	120
1952	경인선 기관 파열	68
1981	경북 경산 열차 충돌	54
1993	부산 구포 열차 탈선	78
폭발사고		
1977	이리역 화약 수송열차 폭발	59
1995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101
버스사고		
1971	청평댐 버스 추락	80

주: 1) 50명 이상 인명피해(사망, 실종)가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함.
출처: 손해보험협회, 「한국 손해보험산업과 함께 한 손해보험협회 60년사」, 2006.

대형 인적재난 발생 추이

한국 사회의 대형 재난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2014년에 지난 50년간(1964-2013년) 발생한 사망자 10인 이상의 대형 재난들을 집계한 바 있다. 이 기간 중 총 276건의 재난이 집계되었는데, 1980년대까지는 자연재난이 더 많았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인적재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재난은 2000년대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다(표 X-11).

표 X-11 대형 재난건수, 1964-2013

기간	자연재난	인적재난					
		전체	화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기	붕괴·폭발
1964-1969	18	16	2	10	2	1	1
1970-1979	49	39	7	20	5	0	7
1980-1989	57	21	6	5	2	4	4
1990-1999	21	24	10	3	3	2	6
2000-2009	12	14	7	4	1	1	1
2010-2013	2	3	1	0	2	0	0
계	159	117	33	42	15	8	19

주: 1) 10명 이상 인명피해(사망, 실종)가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FOCUS」, 2014. 7.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 대형 인적재난은 1990년대에 많이 발생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압축적 성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된 성장 일변도의 경제사회정책과는 달리 안전을 중시하는 규제와 문화는 상당히 체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이 1990년대의 집중

재난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1993년),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1996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재난 발생의 정점을 찍은 사건은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사고이다. 이 사고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50대 남자가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불을 질러 해당 객차와 맞은편에서 들어오던 객차까지 모두를 전소시킨 사고이다. 이 사고로 총 192명이 사망했고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소방방재청이 창설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수립되었으며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대형 인적재난은 1990년대에 많이 빈발했지만, 2000년대에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였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 대형 인적재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40명이 사망했던 인천 냉동창고 화재사고(2008년),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한 11명이 사망한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사고(2009년), 대학생 10명이 사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년) 등이 발생했고, 비록 사망자는 많지 않았으나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양양 산불사고(2005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2007년),



승례문 방화사건(2008년),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 등이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대형 인적재난이 꼭 인명피해가 큰 재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인명피해는 적더라도 엄청난 재산피해를 수반하거나 국민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는 재난 역시 대형 인적재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지역의 복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돕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이 제도의 도입 이래 2014년 세월호 사고까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횟수는 총 37회였다. 이중 대부분이 자연재난으로서 총 29회를 차지한다.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2014년 4월 20일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2013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2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인적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은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인적재난은 총 8건에 불과하며 <표 X-12>와 같다.

표 X-12 인적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995~2014

선포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피해내용
1995. 7. 19.	1995. 6. 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 인명: 사망 502명, 부상 938명 · 재산: 건물 1동, 차량 310대, 869개 업체 물품파손 등
2000. 4. 17.	2000. 4. 7. - 4. 15.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내 산불사고 화재발생 지역	· 재산: 건축물 801동, 가축 6,068두, 농기계 1,328대 등 1,701억 원 · 산림: 23,138ha(632억 원)
2003. 2. 19.	2003. 2. 18.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지역 - 대구시 중구 남일동 143-1번지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피해발생 지역	· 인명: 340명(사망 192명, 부상 148명) · 재산: 621억 원(지하철 324억 원, 중앙로역 246억 원, 인근상가 피해 174건 51억 원)
2005. 4. 7.	2005. 4. 4. - 4. 6. 산불 피해발생 지역인 강원 양양군 일원	· 이재민: 165세대 420명 · 재산: 230억 원
2007. 12. 11.	2007. 12. 7.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지역 -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내 유류유출사고 피해발생 지역	· 재산: [충청남도] - 어장피해: 11개 읍·면 473개소 5,159ha - 해수욕장: 4개면 15개소 [전라남도] - 김양식장: 7,905ha - 마을어장: 14,356ha [전라북도] - 양식어업: 1,831ha - 기타: 1,305건
2008. 1. 18.	2007. 12. 7.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추가 피해발생 지역 - 전남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내 유류유출사고 피해발생 지역	
2012. 10. 8.	2010. 9. 2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 지역인 경북 구미시	· 인명: 사망 5명, 검진·치료 연인원 12,243명 · 재산: 농작물 212ha(농가 412호), 가축 3,944두, 차량 1,962대
2014. 4. 20.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지역인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집계 중

출처: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2013.

대형 인적재난의 영향

재난관리에 있어 누구나 사전 예방적 정책 수립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항상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불감증을 꼬집곤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터진 후에야 변화를 시도한다. 이는 한편으로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인적재난이 가지는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안전관리가 철저하고 물샐 틈 없이 복잡한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재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상사고론’, ‘위험사회론’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결국 ‘완벽한 안전’은 불가능한 목표이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이후 다시는 비슷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재난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에 크게 기여했던 인적재난들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6월 29일)

무려 500명 이상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한국의 재난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고이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국민들은 당시까지 건설되었던 거의 모든 건물들의 안전 상태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건설,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들

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대형 시설물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설안전기술공단(현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벌이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충격이 더욱 컸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여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대형건물, 교량,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를 명시했고, 다양한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사고(1999년 6월 30일)

이 사고는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이다. 이 사고로 당시 수련원에 머물고 있던 유치원생 19명 등 총 23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5-6세의 유치원생들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고는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시설물 안전관리가 형편없다는 현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교적 대형 수련시설이었던 씨랜드수련원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만들어졌었고, 소방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당시 인솔 교사들은 유치원생들을 방치했었고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화작업이 매우 늦어졌었다. 씨랜드 사고 이후 정부는 다양한 안전규제들을 도입했다. 소방법 및 건축법을 개정하여 수련원 내장재료는 불연 혹은 난연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규정도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1년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고로 10명이 사망했고,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에서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시설물 화재안전 불감증은 개선되지 않았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2월 18일)

2003년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방화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재난의 하나로 기록될 만하다. 이 사고로 2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엄청난 재산피해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재난의 총괄적 관리와 조정을 위해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고 최초의 통합된 재난안전관리 법규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제정하게 된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지하철 내장재는 모두 불연 재료 바뀌게 되었고, 이는 2014년 5월 28일 발생한 서울 도곡역 지하철 방화사건이 아무런 피해 없이 쉽게 진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방 6마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하면서 1만

2,000톤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태안 인근 바다는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관련 수산업, 관광업 등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보상이 지연되면서 수산업과 관광업에 의존하던 지역주민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경제적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 한편,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지역에 모여들어 헌신적인 방제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이 사고는 재난대응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재조명한 기회가 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선체 외관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 9월 27일)

이 사고는 2012년 구미 4공단 입주 기업인 (주)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이송 작업 중 작업자 실수로 밸브가 열려 불산이 기체 상태로 누출, 확산된 사고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5명이 사망했고 소방관, 경찰관, 주변 주민 등 약 1만 2,000명 이상이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불산누출사고는 그 직접적 피해보다도 불산이라는 낯선 화학물질 원인의 재난이라는 충격과 공포가 더 커서 문제가 되었다. 실제 이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다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에 비하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사고는 화학물질을 둘러싼 관리주체와 재난 대응기관의 전문성 부족, 기관 간 협력 부재,



부실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 등의 문제를 부각시켰고,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맺음말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개발 중심의 압축적 성장 정책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형 인적재난이 발생하였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소방방재청의 설립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등 전사회적으로 안전관리 개선에 힘을 기울이면서 이전에 비하여 대형 인적재난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부실한 안전규제, 비효율적 현장대응, 전사회적 안전

불감증이 결합된 대형 인적재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실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지만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2008년)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2011년)는 실질적, 물리적 피해가 아닌 심리적 불안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남긴 사례로 기록되었다. 즉, 2000년대 들어서 발생한 몇몇의 주요 사건들은 국내적, 물리적 특징의 전통형 재난에서 국제적, 심리적, 정치적 특징을 가진 미래형 재난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광우병, 화학물질, 원자력 등의 사고는 그 여파가 쉽게 확인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쉽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국민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고들이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이미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이야기한 ‘위험사회’로 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4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 사회통합

- | | | | |
|----|----------------|-----------------|-----|
| 01 |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 한준 연세대학교 | 324 |
| 02 | 노년층의 사회통합 |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 337 |
| 03 |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44 |

01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준 (연세대학교)

- 2000년대 들어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 참여는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으로 약하며 악화되어 왔다. 사회적 고립은 특히 60세 이상의 집단에서 심화되고 있다.
- 대인신뢰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200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대 들어 완만하게 개선되어 왔다.
- 주관적 계층귀속감에서 스스로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계층 내(본인) 및 계층 간(자녀) 사회이동 가능성의 인식 격차가 커져서 상층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늘어난 반면 하층에서는 줄어 들었다.
- 투명성에 대한 인식은 2000년대 들어 개선되다가 2008년 이후 정체화하면서 상대적 순위가 낮아졌으며, 공정성이 낮은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와 정치활동인 것으로 나타난다. 관용성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 사회보장 지출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통합은 사회가 분열되어 갈등하는 정도가 낮고 차별과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통합된 사회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존재하며 이러한 규범과 규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 및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자각과 수용에 기반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기능적, 사회적 분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한 제도와 조직이 매우 복잡해져서 구성원들의 합의와 신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며 사회정책의 필요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최근 사회통합 영역의 동향을 사회·정치적 참여, 사회적 지지와 신뢰, 사회적 불평등 인식, 관용성과 공정성 인식, 그리고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그리고 갤럽인터내셔널의 국제조사인 「Gallup World Poll」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정치적 참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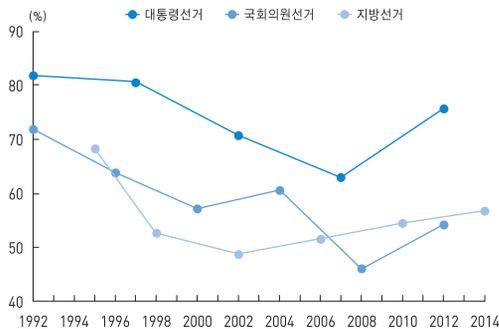
선거 참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



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 참여의 대표적 형태인 투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XI-1]과 같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992년 대선에서 81.9%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에는 80.7%, 2002년에는 70.8%, 그리고 2007년에는 63.0%까지 떨어졌다. 또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1992년 71.9%, 1996년 63.9%, 2000년 57.2%, 2004년 60.6%, 2008년 46.1%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다. 투표율 하락은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불신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하지만 최근 들어 투표율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5.8%로 2007년 대비 12.8%p나 상승하였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역시 54.2%로 2008년 대비 8.1%p 높아졌다. 2014년 지방선

거에서는 2010년 대비 2.3%p 상승한 56.8%를 보여주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한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투표율의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투표율 증가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20-30대 젊은 층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두드러진다.

사회단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공공의 이슈에 관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또한 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사회자본은 그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키워나갈 뿐 아니라 협동을 가능케 하고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까지 23.1%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40% 전후로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는 50%를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50대,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이상,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다른 인구집단보다 높아서 사회단체 참여를 통한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XI-1).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친목 및 사교 단체 참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기에 종교단체와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참여자

를 합하면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나 이익단체, 혹은 정치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XI-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참여율, 1999-2013 (%)

	1999	2003	2006	2009	2011	2013
전체	23.1	44.8	38.8	39.8	47.1	50.6
성						
남자	28.3	48.2	41.0	42.0	48.3	53.0
여자	18.3	41.6	36.6	37.6	45.9	48.3
연령						
20대 미만	11.5	23.7	19.3	22.0	32.6	36.0
20대	22.6	41.4	32.7	35.6	44.1	48.0
30대	26.3	47.1	39.4	40.3	46.2	49.2
40대	31.0	53.7	47.2	48.8	54.7	57.9
50대	27.5	54.9	48.7	49.7	55.8	59.9
60대 이상	13.5	37.1	34.6	32.0	40.5	44.1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5	34.5	29.9	27.1	33.9	36.3
중졸	16.3	38.5	32.3	30.7	41.4	43.1
고졸	26.2	45.8	39.6	39.1	47.1	51.0
대학교 이상	38.7	55.2	46.9	51.1	55.4	59.1
직업						
전문·관리직	45.0	59.0	51.6	55.5	59.7	63.2
사무직	32.0	52.8	44.2	51.3	55.5	60.6
서비스·판매직	22.6	46.0	40.2	42.8	50.4	53.4
농어업직	18.4	48.9	47.3	45.0	55.7	56.5
기능·노무직	21.6	46.4	38.8	39.0	45.1	50.7

주: 1) 사회단체참여율은 조사대상인구(만 15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자원봉사와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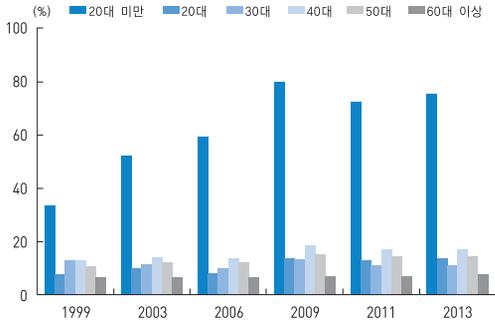
자원봉사와 기부는 사회의 공공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재능과 자원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와 기부는 사

회적 유대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 기여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9년에서 2006년까지 13-14%대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09년 19.3%, 2011년 17.6%, 2013년 17.7%로 높아졌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가 61.8%로 가장 활발했고, 그 다음으로 환경보전과 범죄예방 봉사활동(19.3%),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활동(13.8%), 국가 및 지역 행사 봉사활동(7.9%), 자녀교육 관련 봉사활동(7.6%), 재해지역 봉사활동(4.3%) 등의 순이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최근 나타난 자원봉사 참여율의 증가가 인구 전체에 의해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XI-2]에서 잘 나타나듯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봉사 참여율의 가파른 증가는 20대 미만 인구집단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학입학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려는 현실적 필요성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단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고학력자나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3년의 예를 보면, 대학 이상 학력자와 고등학교 학력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각각 16.8%와 13.4%이고, 전문·관리직 종사자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각각 18.3%와 13.3%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림 XI-2 연령별 자원봉사참여율, 1999-2013



주: 1) 자원봉사참여율은 조사대상인구(만 15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006년에 최초로 후원(기부) 항목을 조사했는데, 이를 통해 파악된 기부자의 비율은 2006년 전체 인구의 31.6%에서 2009년 32.3%, 2011년 36.0%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 34.5%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후원방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모금단체(57.8%)를 통한 후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단체(18.4%), 직장(17.3%), 대상자에게 직접전달(12.9%), 언론기관(12.2%) 등의 순이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후원활동은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입시생들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자원봉사활동과는 달리 후원활동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할 시기인 40대를 중심으로 30대와 50대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직업별로 비교할 때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후원활동 참

여율이 높아지는 반면, 그 밖의 직종에서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표 XI-2).

표 XI-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후원활동참여율, 2006-2013 (%)

	2006	2009	2011	2013
전체	31.6	32.3	36.0	34.5
성				
남자	34.3	34.2	38.3	37.3
여자	29.1	30.4	33.7	31.9
연령				
20대 미만	15.3	19.4	37.8	27.5
20대	19.2	23.2	25.5	24.8
30대	36.3	38.4	40.2	38.0
40대	42.2	42.9	45.7	44.9
50대	39.3	38.9	41.1	40.9
60대 이상	26.7	21.5	24.0	25.4
교육수준				
초졸 이하	21.7	16.5	18.9	17.6
중졸	25.6	23.7	35.6	29.1
고졸	30.7	29.1	30.6	29.9
대학교 이상	42.9	48.1	49.7	48.7
직업				
전문·관리직	48.5	54.8	56.6	58.2
사무직	43.0	51.0	55.2	56.4
서비스·판매직	33.0	33.9	38.0	34.4
농어업직	30.2	27.8	30.2	25.3
기능·노무직	31.3	29.0	34.4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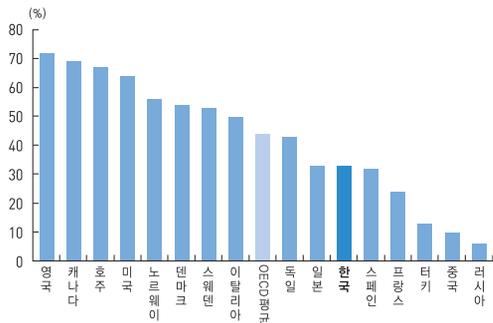
주: 1) 후원활동참여율은 조사대상인구(만 15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후원금(기부금)을 내본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러면 한국의 후원과 기부 활동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 [그림 XI-3]은 「Gallup World Poll」에서 2012년 자선단체에 지난 한달 동안 금전을 기부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이 44%인 반면,



한국은 33%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기부활동의 비율이 낮아졌지만 한국은 높아졌다.

그림 XI-3 주요 국가의 기부활동참여율, 2012



주: 1) 기부활동참여율은 각국 조사대상자(만 19-69세) 중 지난 한 달 동안 자선단체에 금전을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2014.

한 것이다. 집합행동의 논리에 따르자면, 시민적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규칙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대의제로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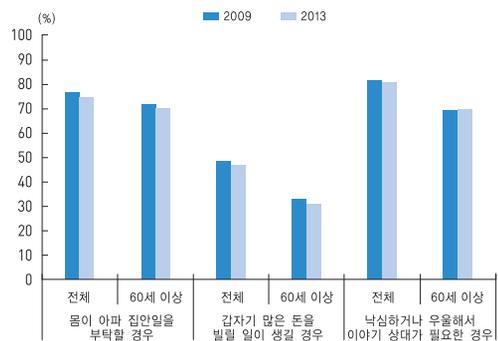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2009년부터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그림 XI-4]에 나타난 조사결과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변화

사회적 지지(support)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기반이 없이 고립된 사람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종류의 위협에 처해 있는 현대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불안정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신뢰는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재는 좋은 척도이다. 이는 사회자본이 가진 기능 중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의 원천이 되는 측면을 강조

그림 XI-4 사회적 지지 수혜율, 2009, 2013



주: 1) 사회적 지지 수혜율은 조사대상인구(만 15세 이상)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76.0%에서 74.7%로,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비율은 48.6%에서 46.7%로 낮아졌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특히 상황이 더 좋지 못한데,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도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71.7%에서 70.1%로, 급히 돈을 빌릴 곳이 있는 비율은 33.2%에서 31.0%로 줄어들었다. 다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이야기할 수 있는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휴대폰 등과 같은 미디어의 발달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25% 이상, 노인의 30% 가까이가 집안일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노인의 70% 가까이가 급한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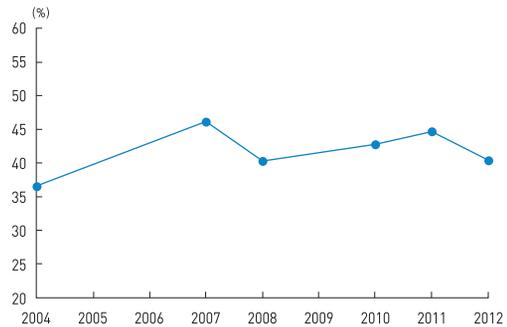
대인신뢰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일반화된 신뢰라고도 하는 대인신뢰는 나와 특수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2003년부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005년 이전과 2007년 이후 사이

에 응답항목이 바뀌기는 했지만 전반적 추세를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림 XI-5]에 나타난 조사결과는 2003년 이후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조금 상승했지만 2007-2008년, 2011-2012년 사이에 신뢰 수준의 하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8년에는 6%p의 신뢰 수준 하락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미국발 경제위기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XI-5 대인신뢰도, 2004-2012



주: 1) 설문문항은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등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 신뢰도는 조사대상자(만 18세 이상) 중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또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05, 2006, 2009년에는 조사된 설문문항이 달라 시계열 유지를 위해 제외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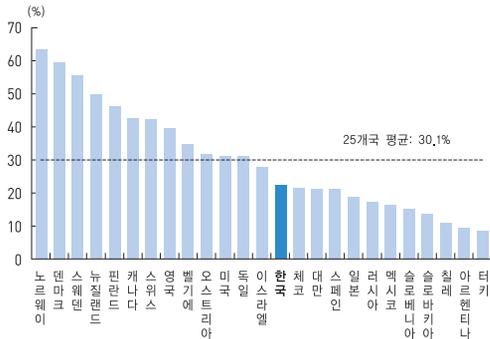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신뢰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해 2010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22.3%이다. 이는 비교



대상이 된 25개국 중에서 순위로는 14번째이며, 전체 평균인 3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림 XI-6).

그림 XI-6 주요 국가의 대인신뢰도,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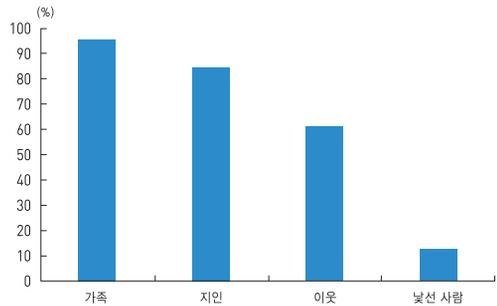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부터 '항상 신뢰할 수 있다'까지 5점 척도 (1-5점)로 조사되었음.
 2) 신뢰도는 해당 국가 조사대상자 중 '신뢰한다(4점+5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0: Environment III, 2012.

일반화된 신뢰의 수준은 또한 신뢰의 반경범위 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으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신뢰의 반경범위가 넓은 반면, 일반적 신뢰 수준이 낮으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신뢰하고 관계가 멀어질수록 불신하게 되어 신뢰의 반경범위가 좁아진다. [그림 XI-7]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신뢰의 반경범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족과 친척, 친구에 대해 80-90%가 신뢰하는 반면, 이웃에 대해서는 60-70%가 신뢰하고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10% 정도만이 신뢰하고 있어 신뢰의 반경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XI-7 대상별 대인신뢰도, 2013



주: 1) 설문문항은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 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9-69세) 중 '매우 신뢰한다'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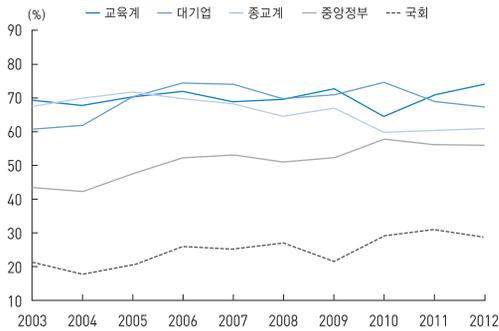
기관신뢰

한국인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대인 신뢰 수준보다 더 심각하다. [그림 XI-8]은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는 최근으로 올수록 매우 완만하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가장 낮은 신뢰를 받는 기관인 국회도 2003년 21.3%에서 2012년에는 28.7%까지 높아졌고, 그 다음으로 낮은 신뢰를 받는 중앙정부 역시 2003년 43.4%에서 2011년 56.0%까지 올라갔다. 2012년 현재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는 기관은 교육계와 대기업으로 각각 74.0%와 67.3%의 신뢰를 받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종교계는 신뢰 수준이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3년의 67.5%에서 2012년 60.9%로 낮아졌다.

그림 XI-8 기관신뢰도,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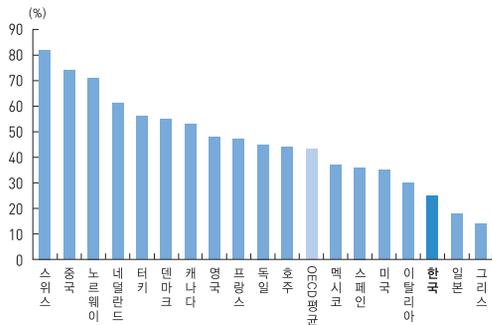


주: 1) 기관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8세 이상) 중 해당 기관을 이 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신뢰한다' 또는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한국의 기관신뢰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림 XI-9]는 2012년 「Gallup World Poll」에서 국제적으로 조사한

그림 XI-9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12



주: 1) 신뢰도는 각국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중앙정부에 대해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2014.

결과인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를 국가 간에 비교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한국이 25%로 OECD 전체 평균인 43%에 비해 크게 낮다. 하지만 다른 한편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반면, 한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계층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적 이동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사회계층 의식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계층귀속감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계층에 가까운지를 물어서 파악한 주관적 계층 귀속감은 2013년에 상층 1.9%, 중간층 51.4%, 하층 46.7%로 나타난다. 이를 1999년과 비교해

표 XI-3 가구주의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2013

연도	상층 (%)	중층 (%)	하층 (%)
1999	1.1	54.9	44.0
2003	1.4	56.2	42.4
2006	1.5	53.4	45.2
2009	2.7	54.9	42.4
2011	1.9	52.8	45.3
2013	1.9	51.4	46.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보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각 0.8%p와 2.7%p 증가한 반면에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p 감소하였다(표 XI-3).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본인과 자식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물어 본 결과는 '희망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일생 동안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본인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다. 둘째, 상층으로 갈수록 본인과 자식 세대의 이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층으로 갈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

2006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층은 2006년에는 58.0%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에는 69.2%가 높다고 응답하여 11.2%p 증가하였다. 중간층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4.7%에서 36.9%로 큰 변화가 없으며, 하층 역시 18.1%에서 17.0%로 거의 비슷하다. 계층 간 희망의 격차가 유지될 뿐 아니라 다소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본인 세대와 비슷하다.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층에서 59.9%로부터 62.9%로 증가했고, 중층에서 46.1%에서 47.3%로 약간 증가한 반면, 하층

에서는 32.0%에서 30.8%로 감소했다.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인식의 격차가 계층간에 커지고 있는 것이다(표 XI-4).

표 XI-4 가구주의 주관적 계층별 본인 및 자녀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2013 (%)

주관적 계층	본인 계층이동 가능성				자녀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2006	2009	2011	2013	2006	2009	2011	2013
전체	27.5	35.7	28.7	28.2	39.9	48.4	41.7	39.9
상층	58.0	74.2	65.3	69.2	59.9	74.5	59.3	62.9
중층	34.7	45.1	35.9	36.9	46.1	56.7	48.7	47.3
하층	18.1	21.0	18.9	17.0	32.0	35.9	32.8	30.8

주: 1) 본인 계층이동 가능성은 조사대상 가구주 중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자녀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은 조사대상 가구주 중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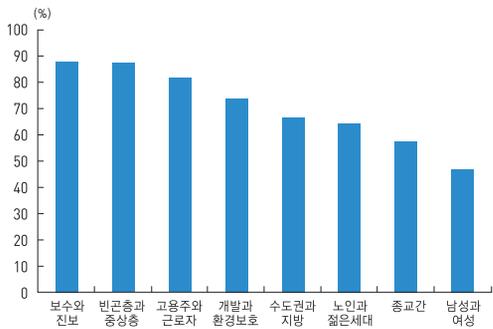
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사회적 이동이 제약되어 불평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은 사회적 갈등의 원천으로서 불평등의 중요성을 높인다.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빈부격차라고 응답한 비율이 28.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1.8%), 개인과 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21.2%), 개인과 집단 간 가치관 차이(11.6%), 권력집중(9.3%) 등의 순이다.



또한 다양한 집단별로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비율이 87.3%로 보수와 진보 간 갈등(87.9%)과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81.6%), 개발 대 환경보호 간 갈등(73.7%)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XI-10).

그림 XI-10 집단 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3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9-69세) 중 해당 집단간 갈등 수준에 대해 '매우 심하다' 또는 '약간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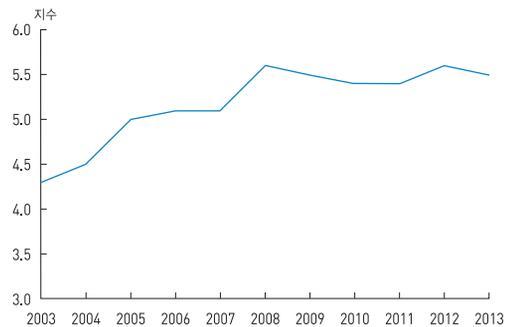
공정성과 관용성의 변화

공정성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매년 국가별로 청렴도 평가지수인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발표하는데, 이 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조사대상국에 거

주하는 전문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산출한다. [그림 XI-11]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에 대한 투명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이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투명성은 2008년까지 개선되어 왔지만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5.5점 수준에 머문다. 국가별 상대적 순위도 최근 낮아지고 있는데, 2009년과 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였고 2013년 현재 46위이다.

그림 XI-11 부패인식지수, 2003-2013



주: 1)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177개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수준을 0-1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것을 의미하고 10점에 가까울수록 투명한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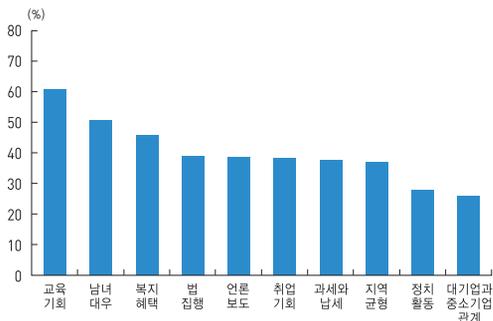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그러면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공정성이 가장 유지되고 어떤 분야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느끼는가?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각 영역별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4점 척도로 물은 결과, 공정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영역은 교육기회로 응답자들의 60.8%가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반



면, 공정성이 가장 낮게 평가된 영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로 응답자들의 26.0%만이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정성이 낮게 평가된 영역은 정치활동(27.7%), 지역균형(36.9%), 과세와 납세(37.6%), 취업기회(38.4%), 언론보도(38.6%), 법집행(38.9%) 등의 순이다(그림 XI-12). 교육기회와 남녀대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정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라는 점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림 XI-12 영역별 사회공정성에 대한 평가, 2013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9-69세) 중 해당 영역의 공정성 수준에 대해 '매우 공정하다' 또는 '약간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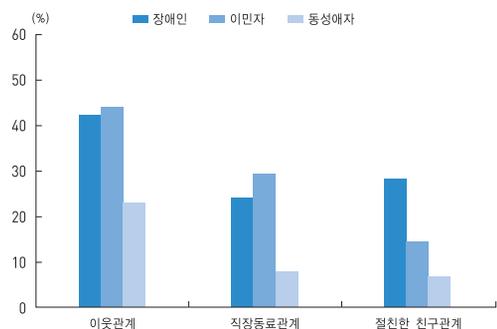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관용성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다양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의 충돌 외에도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이 높은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차이를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는 장애인, 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인과 이민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해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 등 다양한 집단 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림 XI-13]은 장애인, 이민자, 동성애자에 대해 각각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웃으로 장애인과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42.2%와 44.0%이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인 22.9%에 불과하다. 직장동료로는 이민자에 대해 29.4%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24.2%로 덜 관용적이다. 동성애자를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응답은 7.9%에 불과하다.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응답은 장애인이 28.2%로 가장 높고 이민자는 14.5%

그림 XI-13 장애인, 이민자 및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성 수준, 2013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9-69세) 중 장애인, 이민자, 동성애자를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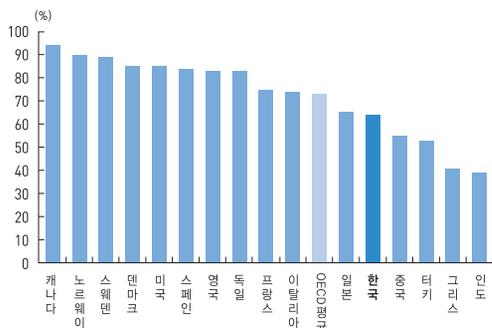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이며 동성애자는 6.8%에 불과하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장동료보다 친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이민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친구보다 직장동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한편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가장 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한국 사회는 얼마나 관용적인가? 2012년 「Gallup World Poll」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지역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얼마나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림 XI-14]에는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국가별로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가장 관용적인 사회는 캐나다로 94%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노르웨이로 긍정적 응답이 90%이다. OECD 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73%이며, 평균보다 높은 나라는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이다. 한편, 한국은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64%로 일본(65%)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XI-14 주요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관용성 수준, 2012



주: 1) 통계치는 각국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자신이 사는 지역이 이민자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2014.

사회보장의 변화

복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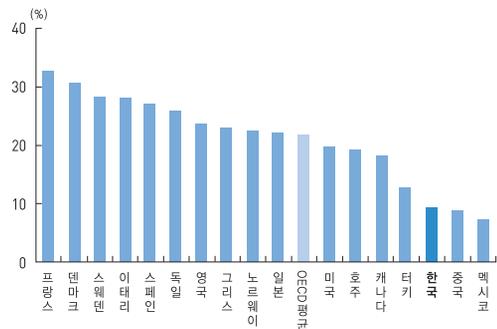
[그림 XI-15]와 [그림 XI-16]은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의 추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것이다. 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계산값들이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

그림 XI-15 GDP 대비 공공부문 복지지출 비율, 2000-2012



출처: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database), 2013.

그림 XI-16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공공부문 복지지출 비율, 2012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2014.



지출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OECD 전체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평균 2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10% 미만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 지출은 최근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고령화와 함께 국민의 복지 수요 증대를 고려하면 복지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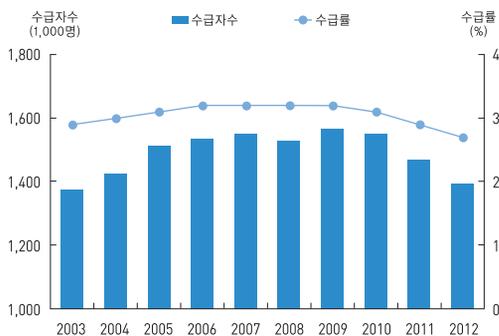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그림 XI-17]은 공공부조(公共扶助)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와 수급률을 보여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이나 재해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수급자수와 수급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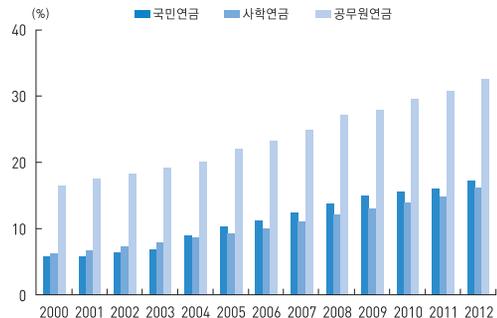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를 위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은 그 운 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에는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다. [그림 XI-18]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급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세 가지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수급대상자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공적연금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XI-1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수급률, 2003-2012



주: 1)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주민등록인구) × 10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년도.

그림 XI-18 공적연금 수급률, 2000-2012



주: 1) 수급률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임.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02

노년층의 사회통합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취업자는 30명이고 단체활동 참여자는 40명이며 봉사활동 참여자는 6명에 불과하다.
-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70명은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 그리고 30명만이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사회참여 3개 영역과 사회적 지원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지수에서 노인 100명 중 11명은 어느 한 영역의 활동이나 지원도 없는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고연령, 여성, 무배우자, 저학력, 저소득 및 인가구 집단의 노인은 매우 고립되어 있다.

한국의 노인은 대부분이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역할상실을 포함하는 4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산다. 사실,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노인의 삶을 이와 같이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 노인의 대부분이 이 4가지의 어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노인의 사회통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노인집단의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의 사회통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금전적(취업) 및 비금전적(봉사, 단체참여) 활동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 과정에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노년이 되어 역할 상실과 경제적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제약된다고 할 때, 노인의 다양한 활동 참여정도는 사회통합의 한 축이다. 둘째, 노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이다. 사회적 지원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이나 공적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일상적인 관계, 예를 들어 친지나 이웃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정재기, 2012). 즉, 노인의 사회통합은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질적 및 정신적 지원 가능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 활동과 참여를 경제 활동, 단체참여, 봉사활동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일상적, 재정적,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지표들의 합성 지표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자료를 비교하여 한국 노인의 봉사활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의 경제활동

〈표 XI-5〉는 지난 10년간 연령별 취업자 비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각 연령층의 취업인구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2013년 현재 15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약 59%가 취업해 있다. 연령층에 따른 취업인구 비율은 역U자 형태를 띠고 있다. 노년층을 보면 10명 중 3명이 취업 상태에 있으며, 노인 연령집단별로는 65-74세의 38%, 75-84세의 22%가 취업자이다. 85세 이상 집단에서도 5%가 취업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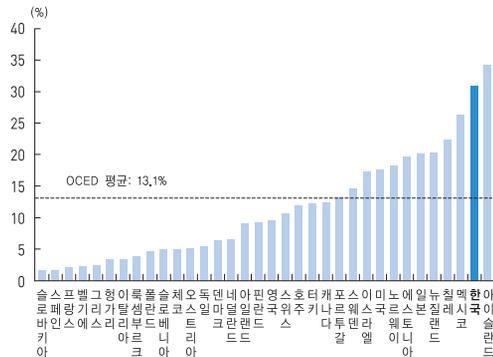
표 XI-5 연령별 취업자 비율, 2003-2013

연도	전체	15-19세	20-34세	35-64세	65세 이상
2003	59.7	7.5	63.2	72.3	31.6
2006	60.4	8.7	64.5	72.7	32.7
2009	55.8	4.8	58.9	69.3	27.1
2011	57.2	11.0	62.3	69.5	27.6
2013	58.8	8.4	61.0	72.8	30.9

주: 1) 취업자 비율은 해당 연령 인구 중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XI-19]에는 OECD 34개국 노년층의 고용률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 노인의 고용률은 30.9%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2번째로 높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10%p 이상 높고, 스위스나 프랑스보다는 20%p 이상 높다.

그림 XI-19 OECD 국가의 노년층 고용률, 2013



주: 1) 노년층 고용률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고용률만 보면 한국의 노인이 생산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취업노인의 50%가 농어업직, 30%가 기능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즉 한국 노인의 높은 고용률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한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한국 노인에게 취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향후 노년층으로 진입할 세대는 대부분이 평생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농어업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의 확대와 함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친목·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대표회 등)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묻고 있다. <표 XI-6>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을 보여준다. 지난 10년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사회단체 참여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15-19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노년층은 15-19세보다는 참여율이 약간 높지만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서는 낮다. 노년층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65-74세에서 47%, 75-84세에서 29%, 그리고 85세 이상에서 17%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65-74세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20-34세의 참여율과 거의 차이가 없다. 2013년 조사에서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지역사회모임 응답범주를 하나 더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전과 2013년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2003년과 2013년에 모두 0.2%로 같았다. 하지만 2013년에 전체 응답자의 2.4%가 1순위로 지역사회모임에 참여하였는데, 노인만 본 경우에는 7.5%가 1순위로 지역사회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단체활동 변화(2003년 31.7%에서 2013년 39.3%)는 지역사회모임 응답범주의 추가로 인

한 개연성이 크다. 즉 지난 10년간 노인 단체참여의 증가는 실제적 증가가 아니라 응답범주의 변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표 XI-6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2003-2013

연도	전체	15-19세	20-34세	35-64세	65세 이상
2003	44.8	23.7	42.9	52.4	31.7
2006	38.8	19.3	34.4	46.2	29.9
2009	39.8	22.0	36.5	47.3	27.1
2011	47.1	32.6	44.7	53.4	35.4
2013	50.6	36.0	47.9	57.1	39.3

주: 1) 사회단체 참여율은 해당 연령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율

<표 XI-7>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령별 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여준다. 전체 인구의 봉사활동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3.1%p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15-19세에서 23.0%p의 큰 증가가 두드러진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봉사활동 참여율이 약간 증가하였다. 1998년부터 청소년 봉사활동이 의무화된 것이 다른 연령집단과의 큰 차이를 초래했다고 추측된다. 또한, 2006년과 2009년 사이의 큰 변화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기 이후에는 봉사활동 참여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이는 학창기의 봉사활동 경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013년 노년층의 봉사활동 참여



표 XI-7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03-2013 (%)

연도	전체	15-19세	20-34세	35-64세	65세 이상
2003	14.6	52.4	10.0	13.0	5.6
2006	14.3	59.5	8.0	12.8	5.3
2009	19.3	79.8	12.5	16.5	5.3
2011	17.6	72.3	11.2	15.1	5.5
2013	17.7	75.4	11.8	15.1	6.2

주: 1) 봉사활동 참여율은 해당 연령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율은 6% 정도이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여성 노동인력이 증가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 Current Population Survey(CPS)의 봉사활동(단체를 통하거나 단체를 위한 공식적 봉사활동만 포함) 조사항목은 한국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봉사활동 항목보다 좁은 범위의 봉사활동 참여를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인구의 봉사활동 참여율은 2013년 25%로 한국보다 높다. 연령별로 보면 16-24세 22%, 25-34세 22%, 35-44세 31%, 45-54세 28%, 55-64세 26%, 그리고 65세 이상이 24%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봉사활동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경우 청·장년 시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2003년 55-64세 29%, 2013년 65세 이상 24%) 이 점이 한국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년층 대상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과거의 참여 경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가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봉사활동의 참여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대가 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사회적 지원

이 절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사회적 지원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의 여부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경우를 일상적 지원, 재정적 지원, 심리적 지원으로 규정하면, 2013년 현재 전체 응답자의 75%가 일상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47%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81%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연령 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2013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69.5%가 일상적 지원을, 67.7%가



심리적 지원을, 그리고 29.8%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표 XI-8). 이를 35-44세와 비교하면, 일상적 지원에서 약 5%p, 심리적 지원에

서 약 16%p,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서 약 21%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XI-8 연령별 사회적 지원 수혜율, 2011, 2013 (%)

	전체	15-19세	20-34세	35-64세	65세 이상
일상적 지원(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2011	75.9	82.8	81.2	74.4	71.5
2013	74.7	80.7	80.0	73.5	69.5
재정적 지원(많은 돈을 빌릴 일이 있는 경우)					
2011	48.4	59.3	59.8	45.7	31.5
2013	46.7	58.1	58.6	44.1	29.8
심리적 지원(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2011	80.9	86.8	87.7	80.2	67.9
2013	80.8	87.7	87.9	80.1	67.7

주: 1) 사회적 지원 수혜율은 해당 연령 인구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있는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XI-9〉는 노년층만을 성별로 비교한 것인데, 사회적 지원에 대한 남녀 차이는 크지 않다. 남성이 여성보다 일상적 지원에서 약 5%p 높고 재정적 지원에서도 약 3%p 높다. 심리적 지원에서는 두 연도에서 일관적인 경향이 보이지 않고 그 차이가 거의 없다.

노인의 사회통합

지금까지는 사회통합의 영역별로 연령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노년층의 사회통합 정도를 단일의 종합지수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통합지수는 취업여부, 단체 참여, 봉사활동의 3가지 사회활동과 일상적, 재정적, 심리적 차원의 3가지 사회적 지원 여부를 활용해 구성했다. 예로, 사회통합지수가 0이면 취업하지 않고, 사회단체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3가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사회통합지수가 6이면 그 반대의 경우이다. 이 지수를 이용하여 0인 경우를 '매우 고립'(11.1%), 1인 경우를 '거의 고립'(14.8%), 2와 3인 경우를 '거의 통합'(50.9%), 4-6인 경우를 '매우 통합'(23.1%)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XI-10〉은 이 분류에 따른 노인의 사회통합 정도를 연령, 성,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택점유

표 XI-9 노년층의 성별 사회적 지원 수혜율, 2011, 2013 (%)

	전체	남성	여성
일상적 지원(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2011	71.5	74.4	69.4
2013	69.5	72.4	67.5
재정적 지원(많은 돈을 빌릴 일이 있는 경우)			
2011	31.5	33.5	30.2
2013	29.8	31.6	28.6
심리적 지원(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2011	67.9	68.1	67.8
2013	67.7	67.0	68.3

주: 1) 노년층의 사회적 지원 수혜율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있는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XI-10 노년층의 연령, 성,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별 사회통합도, 2013 (%)

	매우 고립	거의 고립	거의 통합	매우 통합
연령				
65-74세	8.2	13.4	49.3	29.0
75-84세	15.0	16.8	53.1	15.1
85세 이상	20.1	18.9	55.9	5.1
성				
남성	9.2	12.7	48.1	29.9
여성	12.5	16.3	52.9	18.3
혼인상태별				
유배우자	8.0	11.8	50.9	29.3
미혼	39.3	16.4	29.7	14.6
사별	16.0	19.1	52.4	12.5
이혼	17.7	30.1	37.3	14.9
교육수준				
무학	17.8	18.7	51.5	12.0
초등학교	11.8	15.0	51.6	21.5
중학교	8.7	15.2	48.7	27.4
고등학교	7.0	12.1	51.8	29.1
대학교 이상	4.6	9.5	49.4	36.5
주거점유형태				
자기	7.8	13.5	52.4	26.3
전세	19.4	15.9	48.8	16.0
보증금 있는 월세	25.9	22.3	43.0	8.8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29.2	20.1	43.0	7.6
무상	18.6	21.8	47.0	12.6
가구원수				
1인	17.6	21.6	46.7	14.1
2인	9.7	11.5	50.4	28.4
3인	8.2	15.5	53.2	23.1
4인 이상	7.1	14.7	59.3	18.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0	17.9	50.3	15.8
100-200만원 미만	8.4	12.5	49.4	29.7
200-300만원 미만	5.1	11.1	54.1	29.7
300-400만원 미만	3.7	13.2	50.5	32.6
400-500만원 미만	3.7	8.0	54.7	33.6
500-600만원 미만	1.9	10.2	51.6	36.2
600만원 이상	0.7	7.9	59.9	31.5

주: 1) 사회통합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 단체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 여부, 그리고 세 가지 사회적 지원 수혜 여부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해당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합산점수가 0점인 경우는 '매우 고립', 1점인 경우는 '거의 고립', 2-3점인 경우 '거의 통합', 4-6점인 경우는 '매우 통합'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형태,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 등 다양한 특성별로 보여준다.

노년층의 사회통합 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65-74세의 8.2%, 75-84세의 15.0%, 그리고 85세 이상의 20.1%가 매우 고립된 상태에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9.2%, 여성의 12.5%가 매우 고립되어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덜 통합되어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사회통합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배우자와 비교해서 사별자와 이혼자는 거의 2배 정도 매우 고립되어 있고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미혼자는 거의 5배 정도 매우 고립되어 있다. 교육수준별로도 사회통합 정도가 다른데 학력이 낮을수록 고립도가 높다.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사글세에 사는 노인이 보증부월세나 전세, 자기 집에 사는 노인보다 사회통합 수준이 낮으며,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도 8% 정도는 매우 고립되어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도 사회통합 정도가 다르다. 1인가구에서는 17.6%가 사회통합 부재 상태에 있다.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사회통합이 더 잘 되어 있지만, 2인 이상 가구들 사이에서는 사회고립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놀라운 점은 4인 이상 가구에서도 약 7%가 매우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지는데,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6.0%가 매우 고립되어 있는 반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0.7%만



이 매우 고립되어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는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자료의 분석결과는 한국 노인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취업과 단체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과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 그리고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사람이 없는 매우 고립된 노인이 100명 중 무려 11명이었다. 이 6가지 활동과 지원 중 1가지만 해당되는 거의 고립된 노인도 놀랍게도 100명 중

15명이었다. 즉, 한국 노인 100명 중 25명은 매우/거의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 노인의 자살률과 이와 같은 노인의 낮은 사회통합 수준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공식적 복지 주체인 정부, 종교기관, 봉사단체의 역할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프로그램과 종교기관 및 봉사단체 간 유기적 연계에 기초한 정책은 사회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정재기. 2012.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2』. 통계개발원.



03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광역시도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그 순위에 큰 변화가 없었다.
- 남성 자살률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 자살률의 지역 간 차이는 상승기에는 감소하였고 하락기에는 증가하였다.
- 지역에 따라 성별 자살률 변화와 연령별 자살률 변화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 시군구 단위에서는 강원과 충남 및 충북의 군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고,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지난 10여 년간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뒤르켐(Emile Durkheim)에 따르면 자살은 사회의 유대와 통합이 붕괴되고 질서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상황을 사회질서 내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자살은 증가한다. 또한 자살은 역으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통합된 가치관을 약화시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살은 부족한 유대와 통합의 결과인 동시에 유대와 통합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순환의 고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살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자살률은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는데 특정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다가 낮아진 지역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자살률의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는 것은 자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살률의 광역 시도별 분포와 인구특성별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살률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자살률 양상을 비교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별 자살률은 연령별 자살률을 제외하고는 연령표준화 수치이다. 자살률은



연령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지역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란 자살자수를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보정한 수치로서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나타내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이다. 자살률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살률 증가비, 편차, 성비 등은 이 자료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광역시도의 자살률 분포와 변화

한국의 자살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정점에 달하였고 2012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는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의 자살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3년과 10년 전인 2004년 자살률을 비교하되 이 경우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가 간과되기 때문에 2010년 자살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지역별 자살률 비교에 앞서 전국 기준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24.2에서 2010년 28.7로 높아졌다가 2013년에는 25.1로 낮아졌다. 증감비로 보면 2004년 대비 2010년에 1.19배로 증가한 것이고 2010년 대비 2013년에는 0.87배로 감소한 것이다. 자살률의 지역 간 편

차를 알아보기 위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비를 계산해 보면, 2004년의 경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강원과 가장 낮은 서울의 비가 1.68배였으나 2010년에는 충남과 서울의 비가 1.52배로, 2013년에는 강원과 광주의 비가 1.48배로 각각 감소하여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XI-11).

표 XI-11 전국 자살률과 자살률 지역편차, 2004-2013

	2004	2010	2013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4.2	28.7	25.1
광역시도 간 자살률 편차(배)	1.68	1.52	1.48

주: 1) 자살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임.

2) 자살률 편차 = 자살률 최상위 시도 자살률 ÷ 자살률 최하위 시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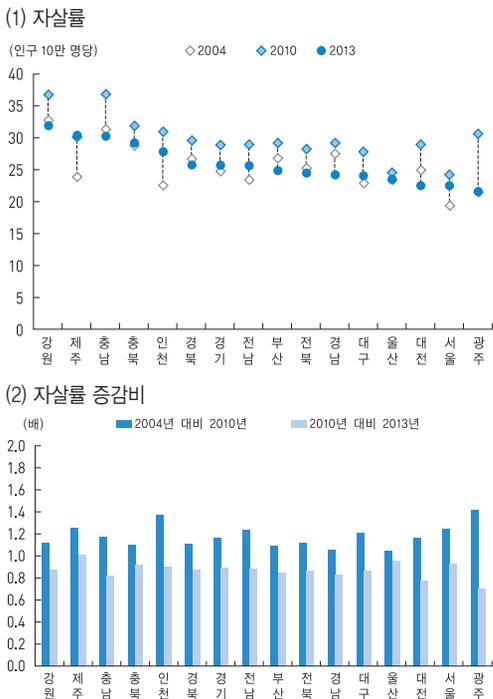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그림 XI-20]은 2004년, 2010년, 2013년의 광역시도별 자살률을 나타낸 것이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2004년에는 강원, 충남, 충북, 경남 등의 순서였고 2010년에는 충남, 강원, 충북, 인천 등의 순서였으며 2013년에는 강원, 제주, 충남, 충북 등의 순서이다. 이처럼 강원과 충남 및 충북은 꾸준히 자살률 상위 지역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2004년에 자살률 하위 지역이었던 인천과 제주가 2010년과 2013년에는 자살률 상위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살률이 낮은 지역은 2004년에는 서울, 광주, 인천, 대구 등의 순서였고 2010년에는 서울, 울산, 대구, 전북 등의 순서였으며 2013년

에는 광주, 서울, 대전, 울산 등의 순서이다. 서울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살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들도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낮다. 부산, 대전 및 경남은 자살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자살률 순위가 격동한 지역은 광주이다. 광주는 2004년에 15위로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이었다가 2010년에 5위로 급격하게 높아진 후 2013년에는 16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그림 XI-20 광역시도별 자살률과 증감비, 2004-2013



주: 1) 자살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임.
 2) 증감비 = 비교시점 자살률 ÷ 기준시점 자살률.
 3) 지역은 2013년 자살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자살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승기인 2004-2010년과 하락기인 2010-2013년 기간으로 구분하여 그 증감비를 살펴본다. 먼저 자살률 상승기인 2004-2010년 자살률의 증가비를 보면, 광주 1.42배, 인천 1.37배, 제주 1.26배 등으로 자살률 순위가 높아진 지역에서 증가비 역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서울이 자살률 순위는 낮게 유지하면서도 자살률 자체는 1.25배 증가하여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살률 증가비를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자살률 증가비가 낮은 지역은 울산(1.05배), 경남(1.06배), 부산(1.09배), 충북(1.10배) 등이다. 이 중 울산, 경남, 부산은 자살률 순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충북의 경우에는 자살률 증가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위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자살률 하락기인 2010-2013년의 자살률 증감비를 보면, 전국 자살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1.01배)는 유일하게 증가(1.01배)한 지역이다. 자살률 감소폭이 적은 지역은 울산(0.96배), 서울(0.93배), 충북(0.92배) 등이다. 충북은 자살률 증가폭과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고, 서울은 자살률 상승기에는 증가폭이 컸으나 하락기에는 감소폭이 적다. 한편, 자살률 감소폭이 큰 지역은 광주(0.70배), 대전(0.78배), 충남(0.82배), 경남(0.83배) 등이다. 이 중 광주, 대전, 경남은 자살률 순위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충남은 감소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살률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시도의 성별 자살률 분포와 변화

2004년, 2010년, 2013년 기간에 남성의 자살률은 각각 35.9, 40.0, 36.3이고, 여성의 자살률은 각각 14.2, 18.9, 15.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같은 기간에 남녀의 자살률 비는 각각 2.53배, 2.12배, 2.42배로 자살률 상승기에 줄어들었다가 하락기에 다시 커졌다(표 XI-12). 이는 여성의 자살은 자살률이 상승할 때에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고, 자살률이 하락할 때에는 남성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살률의 증감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4년 대비 2010년은 남성 1.11배, 여성 1.33배이고 2010년 대비 2013년은 남성 0.91배, 여성 0.79배로 여성의 증감폭이 남성보다 더 크다.

성별 자살률의 지역 간 편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4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강원과 가장 낮은 서울이 1.69배의 차이를 나타냈고, 2010년에는 강원과 서울이 1.60배, 2013년에는 강원과 대전이 1.4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남성의 자살률은 지역 간 편차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여성 자살률의 지역 간 편차는 2004년 충남과 광주가 1.66배, 2010년 충남과 울산이 1.48배, 2013년 강원·제주와 광주가 1.53배의 차이를 나타내어 자살률 상승기에는 감소하고 하락기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XI-12).

표 XI-12 전국 성별 자살률과 자살률 지역편차 및 성비, 2004-2013

	2004	2010	2013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남성	35.9	40.0	36.3
여성	14.2	18.9	15.0
광역시도 간 자살률 편차(배)			
남성	1.69	1.60	1.45
여성	1.66	1.48	1.53
자살률 성비(배)	2.53	2.12	2.42

주: 1) 자살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임.

2) 자살률 편차 = 자살률 최상위 시도 자살률 ÷ 자살률 최하위 시도 자살률

3) 자살률 성비 = 남성 자살률 ÷ 여성 자살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남성의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2004년에는 강원, 충남, 부산, 충북 등이었고 2010년에는 강원, 충남, 충북, 인천 등이었으며 2013년에는 강원, 충남, 제주, 충북 등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4년의 충남, 강원, 경북, 충북 등과 2010년의 충남, 강원, 제주, 충북 등 그리고 2013년의 제주, 강원, 충남, 충북 등에서 자살률이 높다. 충남, 충북, 강원은 남녀 자살률 모두 꾸준히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자살률이 낮은 지역은 남성의 경우 2004년의 서울, 대구, 광주, 전남 등과 2010년의 서울, 울산, 전북, 대구 등 그리고 2013년의 대전, 광주, 서울, 울산 등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4년의 광주, 서울, 울산, 인천 등과 2010년의 울산, 서울, 전남, 경남 등 그리고 2013년의 광주, 울산, 경남, 서울 등이다(그림 XI-21). 이처럼 자살률 하위 지역은 남녀 모두 대부분 광역시로 나타난다.

남녀 자살률 순위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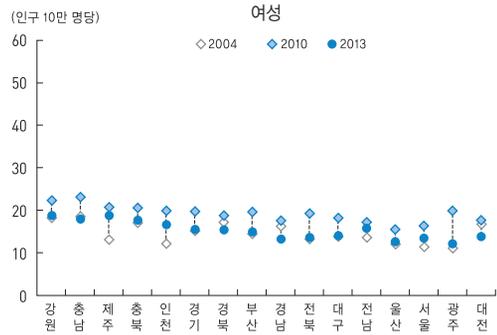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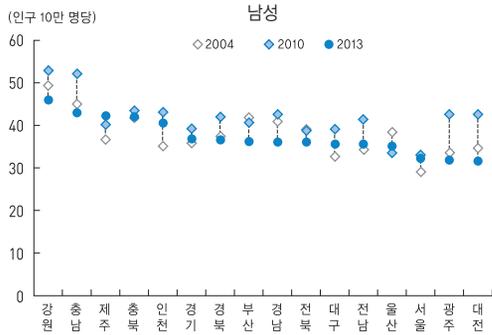
제주와 인천이다. 제주는 2004년에 남녀 각각 9위와 12위에서 2013년에 3위와 1위로 급상승하였고, 인천은 같은 기간에 남녀 각각 11위와 13위에서 남녀 모두 5위로 올랐다. 자살률 순위가 낮아진 지역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산(3위-10위-8위)과 울산(7위-15위-13위)이 큰 폭으로 낮아졌고 여성의 경우에는 경북(3위-10위-8위)과 대전(5위-12위-11위)의 순위가 낮아졌다. 한편 광주는 남녀 자살률의 순위

변동이 가장 심한데, 남성 자살률은 2004년 14위에서 2010년 5위로 높아졌다가 2013년에는 15위로 다시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에도 2004년 16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한 후 2013년에는 다시 전국 최하위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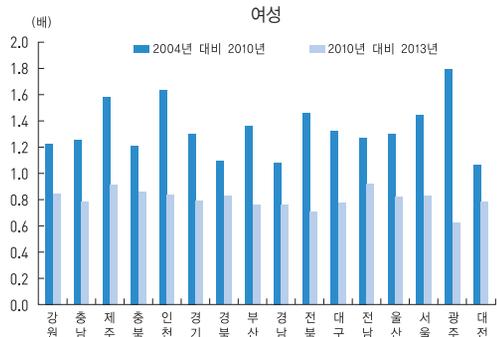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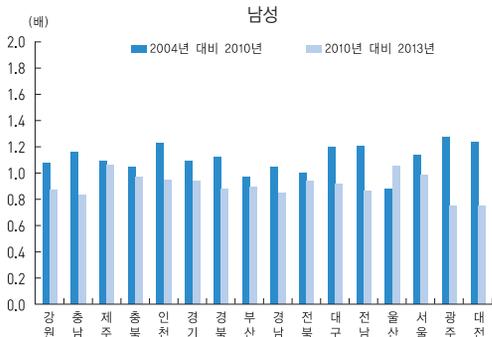
남녀 자살률 순위 변동에서 특징적인 점은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 예를 보면, 2004년에 남성 자살률은 9위였고 여성 자살률은 12위였는데 2010년

그림 XI-21 광역시도의 성별 자살률과 증감비, 2004-2013

(1) 자살률



(2) 자살률 증감비



주: 1) 자살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임.

2) 증감비 = 비교시점 자살률 ÷ 기준시점 자살률.

3) 지역은 2013년 남성 자살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에 와서 남성은 11위로 내려간 반면 여성은 3위로 크게 올랐다. 이후 2013년에 남성 자살률도 3위로 급상승하여 제주는 남녀 공히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제주의 남성 자살률은 2013년에 높아진 데 비해 여성 자살률은 2010년에 이미 상위권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제주 외에 부산, 울산, 경북, 대전 등도 자살률 변화가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부산(남성 3위-10위-8위, 여성 8위-8위-9위)과 울산(남성 7위-15위-13위, 여성 14위-16위-15위)은 여성 자살률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고 남성 자살률 순위만 크게 낮아진 지역이며, 경북(남성 8위-8위-7위, 여성 3위-10위-8위)은 여성 자살률 순위만 크게 내려간 지역이다. 대전(남성 12위-5위-16위, 여성 5위-12위-11위)은 2004년과 2010년에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 순위가 뒤바뀐 경우이다.

자살률 상승기인 2004-2010년의 성별 자살률 증감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기간에 남성 자살률은 전국적으로 1.11배 증가하였으나 울산(0.87배), 부산(0.97배), 전북(0.99배)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여성 자살률은 대전(1.06배), 경남(1.08배), 경북(1.09배), 충북(1.21배)이 전국 평균 1.33배에 비해 낮은 증가비를 나타내는 했지만 감소한 지역은 없다. 이 기간에 남성 자살률 증감비가 큰 지역은 광주(1.27배), 대전(1.23배), 인천(1.22배), 전남(1.21배)이고, 여성 자살률 증감비가 큰 지역은 광주(1.79배), 인천

(1.63배), 제주(1.58배), 전북(1.46배)이다. 여성 대비 남성의 자살률 증감비가 큰 지역은 대전, 전남, 경북이며, 남성 대비 여성의 자살률 증감비가 큰 지역은 전북, 제주, 부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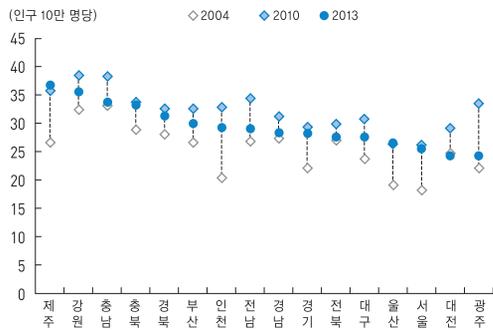
자살률 하락기인 2010-2013년의 성별 자살률 증감비를 살펴보면, 울산과 제주의 남성 자살률은 전국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각 1.05배 증가하였으며, 서울(0.98배)과 충북(0.97배)은 남성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여성 자살률은 증가한 지역이 없이 전남(0.92배), 제주(0.91배), 충북(0.86배), 강원(0.85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남성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전(0.74배), 광주(0.75배), 충남(0.83배), 경남(0.85배)이고, 여성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광주(0.62배), 전북(0.71배), 부산(0.76배), 경남(0.76배)이다. 전남과 강원, 대전과 충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살률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 반면, 부산과 전북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여성 자살률에 대한 남성 자살률의 비인 자살률 성비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울산, 광주, 전북, 부산이 가장 높았고, 2010년에는 경남, 대전, 전남, 강원이가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는 울산, 경남, 전북, 광주가 가장 높다. 성비가 높은 지역은 2010년의 강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자살률이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광역시도의 연령별 자살률 분포와 변화

여기서는 지역별 자살률 양상을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2004년 충남, 강원, 충북, 경북 등이고, 2010년 강원, 충남, 제주, 전남 등이며, 2013년에는 제주, 강원, 충남, 충북 등의 순이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이 낮은 지역은 2004년에 서울, 울산, 인천, 경기, 광주였고, 2010년에는 서울, 울산, 대전, 경기였으며, 2013년에는 광주, 대전, 서울, 울산이다(그림 XI-22). 이 같은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 순위는 전체 인구의 자살률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자살률 편차는 2004년 1.81배, 2010년 1.47배, 2013년 1.51배로 자살률 상승기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하락기에는 약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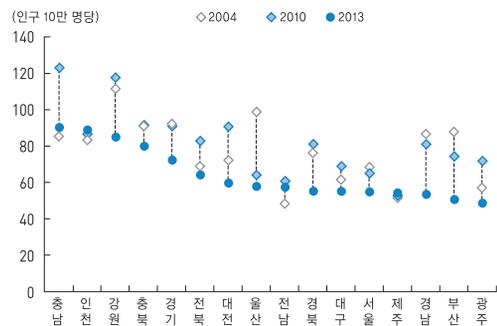
그림 XI-22 광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자살률, 2004-2013



주: 1)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지역은 2013년 자살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한편, 노인 자살률을 살펴보면 2004년 강원, 울산, 경기, 충북, 2010년 충남, 강원, 충북, 경기, 그리고 2013년 충남, 인천, 강원, 충북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노인 자살률이 낮은 지역은 2004년에 전남, 제주, 광주, 대구 등이었고, 2010년에는 제주, 전남, 울산, 서울 등이었으며, 2013년에는 광주, 부산, 경남, 제주 등으로 나타난다(그림 XI-23). 노인 자살률의 지역 간 편차는 2004년 2.28배에서 2010년 2.32배로 다소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1.85배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XI-23 광역시도별 노인인구 자살률, 2004-2013



주: 1)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지역은 2013년 자살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이처럼 강원, 충남, 충북 등은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과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모두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 순위는 전체 자살률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노인인구의 자살률 순위는 이와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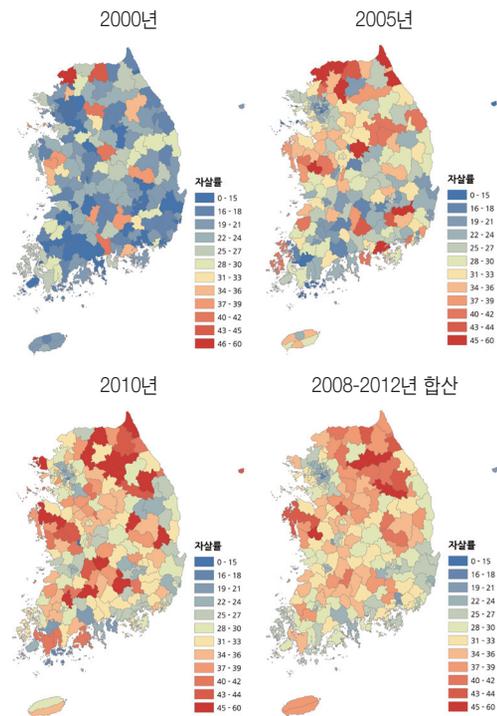
것이다. 특히 2013년 제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노인인구의 자살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였고, 2010년에도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 순위는 크게 높아졌으나 노인인구의 자살률은 하위권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04년과 2010년의 전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 순위에 비해 노인인구의 자살률 순위가 높은 지역도 일부 있는데, 울산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울산은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면서 노인인구의 자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2010년에는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노인인구의 자살률 순위가 낮아졌으나, 2013년에는 다시 중간 수준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기 역시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에 비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2004년과 2010년의 경제활동인구 자살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노인인구의 자살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13년에도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의 자살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2004년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 순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노인인구의 자살률 순위는 중간 수준이었고 2013년에도 경제활동인구의 자살률은 중간 정도의 순위에 머문 반면 노인인구의 자살률 순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시군구별 및 도농별 자살률 분포와 변화

여기서는 자살률의 분포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시군구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XI-2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에는 자살률 상위 지역 시군구가 전국에 고루 분포하는 가운데 경기 일부 지역의 자살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2005년에는 충남 및 충북과 강원 일부 지역, 강원도에 인접한 경기 지역에서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그림 XI-24 시군구별 자살률, 2000-2012



주: 1) 자살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나며, 2010년에는 이들 지역의 자살률이 더 높아짐과 동시에 전북 산간지역도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지난 2008-2012년 기간의 자살률을 합산하여 살펴보아도 강원, 충남 및 충북, 전북 산간지역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XI-13 자살률 상위 30개 시군구, 2008-2012년 합산 (인구 10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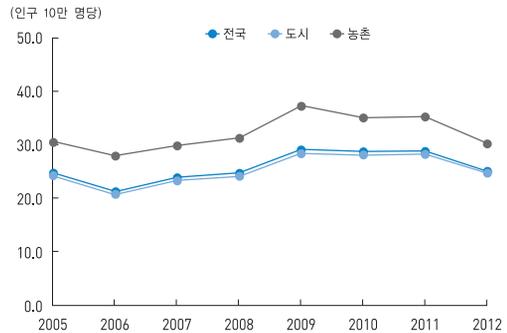
순위	상위		하위	
	지역	2008-2012년 합산 자살률	지역	2008-2012년 합산 자살률
1	강원 영월군	48.6	경기 과천시	16.9
2	강원 홍천군	46.2	서울 서초구	17.2
3	충남 청양군	44.8	충남 계룡시	18.1
4	충남 서산시	43.7	서울 송파구	19.2
5	충북 진천군	43.4	경남 진주시	19.3
6	충남 예산군	43.4	경북 마산시	19.7
7	강원 정선군	43.3	서울 종로구	20.2
8	충남 태안군	42.9	서울 동작구	20.7
9	강원 양양군	42.6	서울 광진구	20.9
10	강원 양구군	42.4	서울 양천구	21.1
11	전북 장수군	41.5	경기 군포시	21.4
12	강원 평창군	41.5	경기 의왕시	21.5
13	경북 예천군	40.1	서울 강남구	21.6
14	강원 속초시	40.0	서울 마포구	21.7
15	강원 횡성군	40.0	경기 안양시	21.9
16	경북 의성군	39.8	전남 순천시	22.0
17	경기 가평군	39.8	서울 서대문구	22.2
18	강원 철원군	39.2	전남 여수시	22.6
19	전남 함평군	38.4	경기 고양시	22.7
20	경남 함안군	38.4	대구 수성구	22.9
21	제주 서귀포시	38.4	서울 은평구	23.0
22	충북 제천시	38.4	울산 북구	23.3
23	강원 화천군	38.0	서울 성북구	23.3
24	강원 태백시	37.9	광주 남구	23.3
25	충남 홍성군	37.9	울산 중구	23.4
26	강원 고성군	37.9	서울 구로구	23.4
27	충남 보령시	37.7	서울 용산구	23.5
28	충북 괴산군	37.6	울산 동구	23.7
29	강원 인제군	37.5	서울 영등포구	23.7
30	경기 포천시	37.4	경기 성남시	23.8

주: 1) 자살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자살률 상위 30개 시군구와 하위 30개 시군구를 보면, 자살률 상위 지역은 대부분 군 지역이며 강원과 충남 및 충북에 많다. 반면, 자살률 하위 지역에는 군 지역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주로 서울, 경기, 울산의 시와 구 지역들이 분포해 있다(표 XI-13).

시군구별 자살률 분포를 통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지난 10여 년간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꾸준히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도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시와 구 지역을 말하며, 농촌은 군 지역을 말한다. 즉, 군 지역이 시와 구 지역보다 매년 5-10명 정도 높은 수치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그림 XI-25).

그림 XI-25 도시와 농촌의 자살률, 200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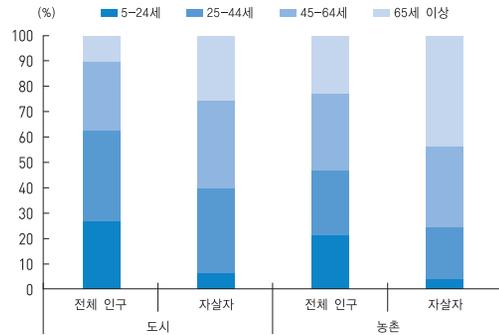
주: 1) 자살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임.
2) 도시는 시와 구 지역을 포함하고, 농촌은 군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자살자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도시의 경우 자살자 중 45-64세의 비율이 34.4%, 65세 이상의 비율이



25.8%로 전체 도시인구에서 같은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체 도시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9.7%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자살자의 비율은 일반 노인인구 비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농촌의 경우에도 45세 이상 자살자의 비율이 전체 농촌인구의 45세 이상 인구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지역의 45-64세 자살자와 65세 이상 자살자 비율은 각각 31.6%와 44.0%로 이들의 비율을 합하면 전체 자살자의 75.6%에 이른다(그림 XI-26).

그림 XI-26 도시와 농촌 자살자의 연령분포, 2010



주: 1) 도시는 시와 구 지역을 포함하고, 농촌은 군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0.



Korean Social Trends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2014 Glossary

Korean Social Trends 2014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부록 용어해설

I 인구

고령화지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수.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노년부양인구비: 부양연령(15-64세) 인구 100명당 피부양연령(65세 이상) 인구의 수.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성비: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의 수.

영아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아의 수.

인구순이동률: 전체 인구 중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자의 비율.

$$\text{인구순이동률(\%)} = \frac{(\text{전입인구} - \text{전출인구})}{\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사망자의 수.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출생률: 연간 출생아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출생아의 수.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중위연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연령.

총인구부양비: 노인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의 합.

$$\text{총인구부양비} = \frac{(\text{노인인구} + \text{유소년인구})}{\text{청장년인구}} \times 1,00$$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i=15}^{49} (ASFR)_i}{1,000}$$

II 가족과 가구

1세대가구: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 친척).

1인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

2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

3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가족돌봄휴직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국제결혼: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 간의 결혼.

기러기가족: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 생활하는 가족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임.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

다문화가족: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

분거가족: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일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

배우자 출산휴가제: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비혈연가구: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유배우 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유배우 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유배우 인구}} \times 1,0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이혼숙려제도: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 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 유예기간은 이혼의사 확인 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자녀가 없을 시 1개월로 두고 있음.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중 부 또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핵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혈연가구: 가족 또는 친족 관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III 건강

2주간 유병률: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

고위험음주: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인 음주.

건강수명: 건강 문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

걷기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공복혈당: 식사 전에 측정한 혈당 수치.

국민의료비: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 즉 경상 의료비와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비용.

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비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준(25kg/m², 30kg/m² 등) 이상인 인구의 비율.

생활건강증진약품(lifestyle-drug): 일반의약품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증상의 해소 및 감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유지나 증진, 외모의 개선 등과 같이 질병과 관계가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인 음주율: 2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성인 흡연율: 20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신체활동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연간손상경험률: 최근 1년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

유병률(preval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의 비율.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전문의약품: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주관적 건강상태: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상태.

중등도신체활동: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상태의 신체활동.

질병발생률(incid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활동제한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의 비율.

CT 스캐너(Computerized Tomography Scanner): 컴퓨터를 이용한 인체 횡단면 촬영장비.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 방식으로 신체 내 장기구조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촬영장비.

IV 교육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 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 교원 1인당 재적학생의 수.

다문화가정 학생: 국제결혼가정 학생(중도입국 학생 포함)과 외국인가정 학생.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존의 대학설립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로 1995년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유아교육: 종전에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년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일컬어 유아교육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장으로 영아교육과 유아(乳幼兒)교육을 통틀어 유아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경향이 있음.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

졸업정원제: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대학입시제도로써 신입생을 정원보다 30% 늘려서 뽑았다가 이후 원래의 정원대로 졸업시킨 제도.

중도입국 학생: 국제결혼가정 학생으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학생.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원율: 전국의 만 3~5세 유아 중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비율.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5~34세 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 가사도 하지 않는 자.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의 일환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프로그램.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가 만 9세와 만 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수학 및 과학 과목 학업 성취도 평가.

V 노동

간접고용: 근로계약 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의 고용형태로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하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형태.

경력단절여성: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활동인구: 만 15~64세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만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64세 인구}} \times 100$$

고용률: 만 15~64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64세 인구}} \times 100$$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 단위로 파악하여 산출함.

$$\text{근로손실일수} = \text{파업참가자수} \times \frac{\text{파업시간}}{\text{1일 근로시간(8시간)}}$$

근로시간특례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으로 사업장의 실태를 감안하여 초과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공중의 불편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됨.

노동생산성: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냄.

노동조합조직률: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비율로 나타냄.

무급가족종사자: 자신의 수입이 없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 18시간 이상 일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만 15~64세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해 있지 않으면서 실업상태에도 있지 않은 자.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등을 포함함.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고용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함.

상용근로자: 고용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임.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임시근로자: 고용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임.

저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 기준의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자영자·무급 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중위임금: 근로자를 임금수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정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특수고용: 사용자와의 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한시적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함.

VI 소득과 소비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 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가처분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말함.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디레버리지(deleverage): 보유한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끌어들이 이를 지렛대로 삼아 투자수익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레버리지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에 투자해 놓은 자산을 회수하는 등 부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이나 자산구입이 아닌 지출.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비자물가지수: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소비지출: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합한 금액.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적금이자, 주식배당금, 부동산임대료 등을 포함함.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라 부르며, 국가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산출함.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됨.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표시된 소득으로 화폐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시계열비교나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음.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됨.

한계가구: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져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큰 가구.

Ⅶ 문화와 여가

국내여행 이동총량: 만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국내 숙박여행 및 당일여행 일수의 총합.

문화누리카드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문화시설로 구분됨.

생활체육: 직업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스마트미디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기와 그 콘텐츠.

스마트폰 보급률: 1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스마트폰 이용률: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3개월간 1일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오락문화비: 문화생활비의 하나로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관입비, 휴가비 등을 포함함.

외래관광객: 외국인 입국자 중에서 외교, 방문, 동거, 거주, 군인, 영주의 자격으로 입국한 자를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

VIII 주거와 교통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공급자 시장: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하여 공급자가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는 시장 상황을 말함.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주택.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도로교통 혼잡비용: 도로에서 교통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으로 환산한 값.

멸실주택: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

보증부월세: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월세로 지불하는 임대방식.

삼포세대: 취업난, 고용불안, 전세 및 주택 가격 상승,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일컫는 말.

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 대출 없이 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가주택의 중위가격을 자가 가구의 중위가구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함.

신주택보급률: 기존의 주택보급률을 보완하기 위해 1인가구와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주택보급률.

에코 드라이브(eco-drive): 친환경운전, 안전운전, 경제운전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배기가스 감축, 교통사고 예방, 에너지 절약 등을 실천하는 운전행동.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지칭함.

소득대비임대료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월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임차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임.

월세전환율(월세이율):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자기점유율: 일반가구 중 자기소유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남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제외함.

전세가격지수: 주택 전세가격의 변동 폭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시점의 전세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하는 상대적 전세가격으로 국민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함.



전세수급지수: 국민은행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매달 조사하여 제시하는 지표.

$$\text{전세수급지수} = 100 + (\text{공급부족비중} - \text{공급충분비중})$$

주택가격지수: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시점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하는 상대적 주택가격으로 국민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함.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최저주거기준: 정부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 설비,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주택의 구조와 성능 및 환경 기준.

IX 환경

과불화탄소(PFCs):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으로 쓰이는 가스.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를 대체하여 쓰이고 있으나 이산화탄소(CO₂) 및 메탄(CH₄)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현상을 말함.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기후회복경로(climate-resilient path):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합친 발전경로를 의미함.

녹색성장: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 감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용량 유지와 함께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 간다는 개념임.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UN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회의'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 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역할 강화의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

람사르 협약: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기 위한 협약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됨.

메탄(CH₄): 무색, 무취의 가연성 기체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임.

무더위 쉼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일수와 빈도 증가로 인해 폭염 피해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노인, 임산부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도록 경로당과 금융기관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μ m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수소불화탄소(HFCs):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며, 대기권 내에서의 수명이 짧고 염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층권에서의 오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체물로 여겨지고 있음.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스모그: 도시의 매연을 비롯하여 대기 속의 오염물질이 안개 모양의 기체가 된 것.

아산화질소(N₂O): 상쾌하고 달콤한 냄새와 맛을 가진 무색의 기체로서 수술 시 흡입마취제로 사용됨. 지구 온난화에 이산화탄소(CO₂)의 230배에 달하는 영향을 미침.

아황산가스(SO₂):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임.

열대야: 최저 기온이 25℃ 이상인 무더운 밤.

오존: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km 지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 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의미함.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이 있음.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로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용지용수: 하천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

육불화황(SF₆): 플루오린과 황의 화합물로 1960년대부터 절연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인체에 무해하나 이산화탄소(CO₂),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임.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됨.

질소산화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함.

쁘쁘가무시병: 털진드기 유충에 있는 뿌뿌가무시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보다 작은 지름 2.5 μ m 이하의 먼지.

쿨링-포그 시스템(cooling-fog system): 정수 처리된 물을 고압으로 분무시켜 미세 물분자를 형성하고, 이 미세 물분자가 기화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추도록 만들어진 시설.

허혈성심질환: 일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있음.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

황산화물: 황(S)과 산소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황산염 등이 이에 해당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죽게 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에 해당됨.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정유·도로·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주로 발생함.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서 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 kcal임.



X 안전

가구범죄: 가구 단위의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주거침입 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 주거침입기타, 자동차손괴, 자동차 및 부품 절도 등을 포함함.

개인범죄: 개인 단위의 피해를 주는 범죄로 협박, 폭행, 상해, 강도, 성폭력, 절도, 단순손괴 등을 포함함.

국지성 호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며,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예보가 어렵고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음.

몬순형 기후: 겨울에는 대륙에서 대양, 여름에는 대양에서 대륙을 향하여 약 반년 주기로 변화하여 부는 계절풍에 의한 기후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남.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열대해양기단의 내습에 의하여 덥고 비가 많으며, 겨울에는 저온건조한 대륙기단의 내습으로 춥고 맑은 날이 많음.

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의 수.

살인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건수.

산업재해: 직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말함.

아열대성 기후: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건조해서 비의 양이 적고 눈은 거의 내리지 않는 기후로 중국의 화남 지역과 대만, 말레이반도, 브라질 남부 등지에서 나타남.

위험사회론: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다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이론.

재산범죄: 절도(일반절도, 자동차 및 부품 절도, 주거침입 절도), 손괴(단순손괴, 주거침입손괴, 자동차손괴), 단순 주거침입 등을 포함함.

정상사고론: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품과 구성원의

사소한 상호작용을 모두 알 수가 없고 그 상호작용이 이득이 될지 아니면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와 회피 조치를 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사고가 일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찰스 페로(Charles Perrow)의 이론.

직업병: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그 직업의 특수한 조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

특별재난지역: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폭력범죄: 협박·폭행·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침입강도) 등을 포함함.

형법범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을 포함함.

XI 사회통합

계층귀속감: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사회조사를 통해 상층, 중층, 하층 등의 범주 중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함.

공적연금: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공적연금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포함됨.

기관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그 사회의 중요 공적 및 사적 기관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대인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 일반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복지지출: 국가가 복지제도를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지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전 세계 177개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10점 만점의 지수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것을 의미함.

사적연금: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사적연금에는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운영주체인 개인연금이 포함됨.

사회보험: 국민의 생활불안(질병, 사고, 실직 등)이나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 원리를 적용한 국가보장제도로써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포함됨.

사회이동: 개인이 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며, 자신의 지위가 달라지는 수평적 이동과 자신의 지위에 비해 자녀의 지위가 달라지는 수직적 이동을 모두 포함함.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규범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김두섭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두섭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전광희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윤인진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김두섭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김정석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김두섭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2012	최솔기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2012	이민아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	정기선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2013	김현식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2013	송유진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2013	김정석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한경혜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경혜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이선이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이성용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홍승아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진미정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이혜경
	1인가구의 추세와 특성	2012	이윤석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2012	이윤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2012	송유진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2012	송유진
세대관계의 변화	2013	한경혜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2013	차승은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11	김태헌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교육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경근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김경근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김경근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채창균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강상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김경근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강상진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김경근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2011	서문희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2011	김경근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2011	김경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2011	김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2013	김경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13	황여정	
학생들의 스트레스	2013	황여정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장지연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장지연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장지연
	청년층 노동시장	2009	방하남
	노사관계의 변화	2009	방하남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방하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박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이규용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방하남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2011	홍승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2011	박시내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금수준 비교	2011	박영실/한승훈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2013	장지연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2013	전병유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찬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현송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현송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박정수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박찬임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박찬임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소득과 소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강석훈
	소득원천별 구성	2009	강석훈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이현송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정규승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이현송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유경원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2011	김신호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2011	김순미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2011	강석훈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2013	김진영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2013	이정민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2013	홍석철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셋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서우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서우석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최셋별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최석호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이호영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심수진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전종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2011	윤소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2011	최항섭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2011	서우석
	청소년 여가	2013	서우석
생활체육 참여실태	2013	황선환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2013	조현성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최진호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손경환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김재익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최진호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김호정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이창무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최진호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2012	이재훈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주거와 교통	주거안정성	2012	신인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2012	장세훈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2012	양광식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2013	손경환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2013	정의철
	교통복지실태	2013	이상민
건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조병희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정진주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권순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김명희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김홍수
	건강불평등	2010	조병희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2012	김중백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2012	김중백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2012	권호장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2012	박재현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2013	조성일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2013	김광기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2013	장세진	
환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김선희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종호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공성용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공성용
	친환경 소비성향	2009	윤순진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강성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2011	김해동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2011	박희제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2011	박진희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2013	조영탁
화학물질 노출실태	2013	신용승	
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2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이재열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안 전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이재열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윤옥경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민수홍
	산업재해의 변화	2010	이경용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민수홍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2	민수홍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2012	민수홍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2	박순진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2012	박순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2012	이경용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2013	민수홍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2013	김지선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장덕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 준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배 영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김 욱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장지원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장덕진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장덕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김병로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이희길
	한국의 노인자살	2012	이민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2012	김석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2	김석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2012	정재기
	한국의 공정성	2012	정재기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2013	한 준
	투표와 정치참여	2013	김석호
	(복 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정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정무권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2011	강신욱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2011	정순돌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2011	고경환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책임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손경환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희길 (통계개발원 사무관) 심수진 (통계개발원 주무관)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 이상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통계자료팀장)
연구보조원	남혜령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인턴연구원) 박상미 (통계개발원 연구보조원)

Korean Social Trends 2014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값 12,000원



9 772234 799203

ISSN 2234-7992